

목차

1. 퇴진특위 평가서	3 p
2. 주요 활동 정리	20 p
3. 의견서/성명/논평	33 p
4. 퇴진특위 좌담회	259 p
5. 사진	295 p
6. 타임라인	308 p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 위원회

1. 퇴진특위 평가서



■ 2016·2017 촛불항쟁의 의미와 쟁점에 관한 소고

2016년 가을부터 다시 등장한 촛불과 2017년 3월 탄핵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은 질문이다. 더구나 아직 ‘총체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다소 ‘이른’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탄핵 결정의 후과가 반영될 가장 주요한 사건인 ‘대선’과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결과가 모두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탄핵결정 이후에 한국사회 변화의 가장 주요한 축이 될 수도 있는 ‘개헌’논의가 어떻게 수렴될지도 미지수다. 물론 평가라는 작업이 문서 몇 종으로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지속적으로 재해석될 수밖에 없기는 하다. 그렇다고 현 시점까지의 중간평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교훈과 과제를 추출하는 작업을 지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우선은 부족하나마 지난 반년간의 역동적인 정세를 재조망 해보면서 촛불의 의미를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숙고해보아야 할 과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도대체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은 무엇이이었을까?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과 성격은 무엇이었는가?, 무엇 때문에 촛불은 이토록 뜨겁게 타오른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퇴진(탄핵)당한 것일까?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승리한 싸움이었다는 온당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제 시작이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중단없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의지의 선언만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쟁점들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1. ‘박근혜 게이트’의 의미

가. 부패비리의 구조

‘박근혜 게이트’는 최고위층의 부패와 비리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게이트’를 단순히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공공적 이해가 없는 행정수반과 그 최측근의 ‘해피망측한’ 부패비리와 국정농단이라는 식으로 묘사할 수는 없다. 현대의 부패비리 게이트 사건은 단순히 최고위층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벌을 축으로 한 정경유착의 연결고리와 청와대 검찰 등의 사정라인의 사유화(공적조직의 목인과 협조), 언론의 침묵이라는 부패비리의 트라이앵글이 뒷받침될 때만이 성립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기에 박근혜게이트 사건은 현재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취약성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불행히도 우리사회에서 대통령이 정치·행정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서 각종 이권을 향유하고 인사권을 남용한 것은 비교적 익숙한 풍경이다. 군부독재시대가 종식되었다는 문민정부 이후만을 보더라도 김현철(김영삼), 김홍일·김홍업·김홍결(김대중), 노건평(노무현), 이상득(이명박)은 모두 현직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혈육으로서 당시 대통령들의 현직 재임 기간에 부패·비리로 처벌을 받은 바가 있다. 그렇게 최측근의 비리가 드러낼 때마다 일련의 형사처벌이 뒤따랐고, 자연스럽게 정권의 위기가 심화되어 레임덕 현상을 가져온 것도 반복된 역사였다. 그러나 그 때마다 거대한 규모의 대중운동이 나타난 적도 없을 뿐더러, 정권이 실제 ‘퇴진(탄핵)’에 이른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만약 박근혜 정권이 가장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해석이 쉬울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박근혜 게이트가 이전 정권에서 발생한 각종 게이트보다 더 규모가 크고, 더 부패했다고 쉽게 단언할 수도 없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역대 가장 부패한 정권이 아닐 수도 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뜨겁게 촛불은 타오른 것이며, 박근혜는 퇴진하게 되었을까?

나. 박근혜 게이트의 이례성

물론 표피적인 수준에서 ‘박근혜 게이트’의 이례성이 있다. 우선 이전 정권들과 달리 부패와 비리의 공모자가 직접적인 혈육이 아닌 최씨 집안이라는 유사가족이었다는 다소간의 ‘자극’적인 요소가 있었다. 대중이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자가 부패비리 사슬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는 점은 종래 대통령 혈육의 비리에 대해서는 ‘묵인’내지 ‘방조’해주었던 대중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어떤 휘발성을 갖는 것이었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적어도 최측근 비리는 없을 것이라는 대중적 신뢰에 기반하여 당선되었고, 집권 이후에 보도되었던 최측근 비리 혹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부인했었던 점이 충격을 가중시킨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 편 어느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점도 이전의 게이트와 매우 달랐다. 이전의 부패 게이트들은 암묵적으로 대통령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심증’만 형성할 수 있는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게이트에서는 강력한 증거들이 언론보도 또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태블릿pc,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안중범 전 정책수석의 업무수첩,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불가능했었을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으며, 특히 미르 케이재단 등을 통한 주요한 뇌물공여가 대통령의 재벌총수 독대 전후에 이루어진 점 등은 상당한 대중적 파괴력을 갖는 팩트의 발견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자극적 요소들과 증거들만으로 박근혜 게이트의 이례성을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박근혜 게이트’는 무슨 사건이었다고 쉽게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방위적’이었다는데 특질이 있었다. 박근혜 게이트의 구성요소에는 ‘재벌의 뇌물로 인한 정경유착’,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공작정치’, ‘비선실세에 의한 인사개입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전경련-관제데모’, ‘입시비리’ 등 사유를 모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했다. 군부체제가 종식된 이후에도 다양한 부패비리 사건이 있었지만, 이토록 일거에 많은 일들이 일순간에 드러난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대통령의 철저한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무능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은, ‘박근혜 게이트’를 하나의 자극적인 사건·사고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하기에 이에 따른 사회적 충격의 효과는 시민의 대중적 저항과 정권 지지층의 이반을 불러오게 했다는 점이 짙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박근혜 게이트’의 총체적인 무능과 국정농단 때문에 역설적으로 촛불은 ‘사회의 변혁이나 변화’이라는 능동적 구호보다는 ‘헌정질서의 회복’이라는 구호를 ‘퇴진’과 함께 외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촛불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토록 뜨겁게 타올랐을까?

그러나 ‘박근혜 게이트’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적 성격에 대한 분석과 ‘박근혜 게이트’의 이례성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왜 2016년 가을 촛불은 이토록 열광적으로 출현한 것에 대한 설명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물론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었던 ‘박근혜 게이트’ 자체가 불러일으킨 대중적 분노는 일견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토록 뜨겁게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갔던 촛불항쟁의 과정을 돌아보면 조금 더 나아간 분석이 필요하다. 즉 현존하는 질서에 대해 강력한 대중적 저항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게 했던 기저요인들에 대한 인식이 동반되어야 하며, 아울러 촛불이 성장하는 역동적 과정에서 촛불 외부자들의 역할이 종전과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나아가 촛불과 사회운동은 어떻게 다르게 대응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촛불이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저요인들

우선 우리는 촛불의 기저요인에 대하여 장기화된 저성장 국면과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무능했던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심판이라는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19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논쟁에서 성공적으로 의제를 전유해왔지만, 그 후로

는 예상대로 무능했고 실패했다.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그 누구도 진면목을 알 수 없었던 ‘창조경제’ ‘통일대박’ 이야기만 있었고, 그 결과는 ‘헬

조선'으로 남겨졌을 뿐이다. 특히 산업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박정희 신화'를 정치적 유산으로 삼았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결과적으로 저성장과 양극화에 대해서 철저히 무능했었다는 것에 대한 누적된 분노와 심판이 촛불의 한 기제로 작동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박근혜 게이트가 작동하면서 특별히 '청년세대'의 분노를 자극했다는 점도 작동했을 수 있다. '청년세대'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수저론'이라는 형태로 팽배했던 상황에서 '정유라씨의 입학비리, 학사과정 관리의 부실' 등이 불거지면서 특별히 중고생을 포함한 젊은 청년층의 집단적 행동을 가져왔다는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아울러 촛불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의 시위 과정이 일정한 기여를 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분석은 8·90년대와 같은 학생운동의 대중적 토대가 소실된 상황에 도 불구하고 촛불에 청소년들과 20대가 적극적인 참여를 한 논거로 부각된다.

세 번째로 촛불의 한 원동력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부터 한국사회에서 더욱 부각되었던 '안전'을 열망하는 흐름도 놓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사회는 2016년 한해만 하더라도 구의역 참사,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 가슴기 살균제 사건, 사드배치에 따른 한반도 평화위기까지 사회전반에 '안전'에 대한 불안과 열망이 쌓여왔다. 특히 여전히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의문의 7시간'에 관한 대통령의 책임론이 크게 부각되었던 맥락과 더 나아가 '박근혜 게이트'가 드러나면서 세월호 조사위에 대한 부당한 관여,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적인 민간사찰 등이 청와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지시되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도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증이 될지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우선 촛불의 구호에서 양극화나 경제위기에 대한 담론이 널리 울려 퍼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 노동자운동의 결합도 아쉬운 점이 적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제위기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촛불'이라는 인식을 일종의 환원론으로 오해하게 할 여지도 있다. 또 중·고생 촛불은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 사건, 2003년 이라크 파병반대 시위, 2008년 광우병 시위 등에서도 꾸준히 존재해왔다는 점, 20대 청년층의 참여도 적지 않았지만 광장과 촛불에서 가장 두드러진 숫자였다고 단언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이전의 촛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안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 역시 2008년 광우병 시위에서는 새로운 변화였지만, 2016년의 시점에서 전혀 새로운 흐름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대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총체적 위기가 누적하고 있던 분노와 불만이 '박근혜 게이트'라는 사건과 만나서 대중적 운동으로 승화하게 한 기저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촛불항쟁이 격화되었던 역동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다양하게 촛불을 둘러싼 주체들의 내외적 역할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나. 촛불과 사회운동

- 2016·2017 촛불항쟁은 무엇이 달랐고, 무엇을 잘 하였는가?

역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촛불이었고, 가장 큰 성취를 이룬 것도 ‘촛불’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촛불은 또 무엇이 달랐고, 무엇을 잘 하였던 것일까? 우선 이번 촛불의 특질 중 하나는 정권의 ‘부패비리’사건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점이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언명과 달리 한국사회에서 부패 사안에 대해서 이토록 큰 규모의 촛불 혹은 사회운동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 2002년 이후 등장한 촛불은 대개 특정한 참사(여중생 장갑차 사건, 세월호 참사)나 정책(이라크 파병, 한미FTA)에 대한 반대가 주된 의제를 이뤘을 뿐이었다. 오히려 우리사회는 ‘부패’ 의제에 관해서는 항상 불충분한 수준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졌고 다만 필요한 경우 ‘특검’이라는 절차 정도로 정리하면서, 대중의 정치적 진출은 봉합되곤 했었다. 그러나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담론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워진 상황에서 작금의 현실이 개인의 무능과 노력 부족이 아니라, 기성의 구조와 기득권에 계 있다는 점이 보편적인 통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봉기’를 구성해 낸 것이 아닌가 싶다.

다음으로 촛불이 박근혜 게이트에서 대해서 분명하게도 ‘퇴진’이라는 ‘정치적’ 구호로 통일이 되었다는 점이다. 종래의 촛불은 통상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집행(이라크전쟁, 광우병과 한미FTA)이나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배경으로 하는 누구나 알게된 사건(세월호, 장갑차)에 사회운동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촛불이 결합한 것이 일반적인 정형이었다. 이처럼 촛불이 대항하고자했던 사안의 성격이 비교적 분명했기에, 오히려 퇴진이라는 구호로 사안이 귀결되거나 수렴될 수 없었던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정권의 총체적 부패와 비리, 무능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퇴진’이라는 구호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분노가 극대화되었을 때 구호로서 ‘퇴진’이라는 구호가 외쳐지지만, 그 구호가 대중적인 과급효과가 큰 울림과 설득력을 갖은 것은 오랜만이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의 사회운동은 다소 관용적으로 ‘퇴진’구호를 사용해 왔으나, 냉정하게 ‘퇴진’구호의 호소력이 높았던 적은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돌아보면 ‘물러가라’, ‘퇴진’, ‘하야’구호가 갖는 정당성과 호소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절차를 통해서 선출되었던 정권(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들이었다. 실상 김영삼 정권 이후에는 ‘퇴진’구호는 힘을 크게 받지 못했는데, 이는 문민 정부 이후 선출된 대통령들이 절차적 정당성은 갖추었다는 점, 군부정권과 같은 무단통치

행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점, 임기가 5년 단임으로서 퇴임이 자연스럽게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 사회운동 역량의 지속적인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진’보다는 선거를 통한 ‘심판’이나 ‘정권교체’의 구호가 설득력 있게 작동해왔고, 그러한 수렴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주장도 확산되어왔다. 그런데 이번 촛불항쟁은 ‘퇴진’으로 구호를 견결하고 흔들림 없이 채택했고, 그 구호가 탄핵을 통해서나마 성취되었다는 점은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운동이 기여자였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 촛불이 등장한 이후, ‘사회운동’의 역할과 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불편한 질문들이 존재해왔다. 2002년 촛불이 ‘깃발’없는 자들의 외침(‘모든 깃발을 내려라’류가 대표적이었다)에 관한 고민이 시작된 사건이었다면, 2008년 광우병 촛불의 경우 전혀 새로운 깃발들의 출현이 주는 또 다른 효과와 질문들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촛불과 집회의 외연은 확대되었으나, 종전의 ‘사회운동’은 그 위상과 지위가 모호해진 측면이 있었다. 거대한 촛불집회 속에서도, 종래의 ‘사회운동’은 집회와 문화제를 실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할 뿐, 운동의 진로를 고민하고 제안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왔었다. 그러나 이번 ‘퇴진행동’의 활동은 이전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획과 운영을 보여주었다. ‘퇴진행동’은 단순히 주1회 집중하는 토요일 집회와 문화제 및 거리행진을 다채롭게 준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 퇴진행동은 다양한 시민토론회와 서명운동, 캠페인 등의 활동을 준비하면서 촛불의 구심으로 자리했을 뿐 아니라, 재벌구속특위 시민참여특위 적폐청산특위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사회운동의 원심력도 보장하려고 하였다. 비록 ‘퇴진행동’이 촛불을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촛불이 지속되고 확산되는데에는 흔들림없는 ‘퇴진행동’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활동가들의 보이지 않은 헌신이 있었다는 점도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 촛불 외부의 행위자들의 대응

사실 비록 이번 촛불은 유례없는 규모와 기간으로 특징되지만, 결코 ‘준비된 싸움’이나 ‘기획된 집회’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렇게 촛불이 ‘점화’되고 ‘확산’되는데 ‘언론’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종전에 측근비리는 대부분 느슨한 의혹 정도가 언론에 의해 보도된 상황에서 검찰의 적당한 수사라는 형태로 전개되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결정적 증거물들이 검찰의 통제 바깥에 있는 언론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근혜 게이트’를 발굴하고 폭로한 것 중심적 역할을 한겨레와 같은 비교적 진보성향의 언론 뿐 아니라, 보수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와 JTBC 역시 선두에서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었든가에 대한 해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선일보와 JTBC에 의해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보수에 가까운 시



민들의 민심이반에도, 촛불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박근혜 게이트’가 워낙 전방위적인 부패비리 사건이었기에, 일거에 전모가 드러날 수 없었으므로 다종다기한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더 많은 촛불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었다는 특징도 빼놓을 수 없다.

다음으로 대통령 본인이 사안을 관리하는데 정치적으로 상당히 무능했었다는 점을 꼽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을 전면적으로 부인해왔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적어도 측근비리만은 없을 것이라는 대중적 신뢰를 무기로 당선되었고, 집권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측근비리(문고리3인방, 십상시, 만만회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부인했을 뿐 아니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엄단하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아울러 사건의 면모가 드러났던 순간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음모론적으로 사안을 인식하는 대응을 함으로서 ‘불합’할 수 있었던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당의 균열을 가져온 것도 특기할만한데,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분당되고,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후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주요 야당의 대응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미진했었던 점도 오히려 촛불이 더욱 타오르는 계기를 부여했다는 역설도 짚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 야당은 ‘퇴진’과 ‘탄핵’을 레토릭으로만 사용하면서 촛불을 ‘관리’하려고 했었고, 이 때문에 ‘명예로운 퇴진’, ‘거국중립내각’ 등의 해결을 도모했었다. 이러한 야당의 ‘동요’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회피성 돌파’와 만나면서 오히려 더 크나큰 촛불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또 법원과 경찰의 변화된 자세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촛불의 특질로 ‘평화시위’를 부각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주류언론에서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상찬하는 입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촛불은 ‘폭력시위’였고 2016·2017은 ‘평화시위’였다고 묘사하는 것은 분명한 왜곡이다. 우리는 바로 1년 전인 2015년에 공권력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했던 결과가 고 백남기님의 선종으로 이어진 비극을 잊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변한 것은 촛불과 사회운동이 아니라, 법원과 경찰이었다. 초기 국면에서 청와대 인근으로의 집회금지처분에 대하여 기각을 판단한 법원의 변화된 태도와 수 없이 많은 촛불에 대하여 경찰이 종전과 달리 보여준 차분한 대응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촛불이 안심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화된 법원과 경찰의 태도는 역으로 이전보다 더 큰 촛불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에서 기인했다고 이해해야 할 듯하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잘 투영된 것은 결과적으로 촛불항쟁 중간 과정에서 시작된 ‘특검’이

었다고 볼 수 있다. 언론과 국회의 조사, 검찰 특수본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체가 불분명했던 많은 의혹과 쟁점들은 특검의 기대 이상의 활약에 힘입어 실체적 진실로 드러나게 되었고, 촛불에도 힘을 주었던 것이다. ‘사법의 정치화’의 극단적 형태가 ‘특검’이라는 역설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특검의 활약은 인사권자에 휘둘리지 않고 민주적 통제가 발현되는 ‘검찰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줬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작지 않다 할 것이다.

3. 퇴진에서 탄핵으로의 궤도수정

2016·2017 촛불항쟁은 ‘탄핵’인용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정권 퇴진이라는 작지 않은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애초에 촛불이 ‘탄핵’을 초기부터 전면에 내세웠던 것은 아니다. ‘탄핵’이 유효한 경로로 선호되지 않았던 이유는 다소 복잡적이었다. 국회에서의 탄핵발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 헌법재판소 구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과에 대한 의문, 6개월간 이어질 수 있는 탄핵절차의 시간적 지연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문제를 사법 절차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탄핵’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다.

때문에 ‘탄핵’은 깊게 고려되지 않았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촉발된 정세가 진정 ‘퇴진’내지 ‘탄핵’이라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단조차도 어려웠다. 오히려 특검 등을 통해 미진한 수위의 형사처벌,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과 식물정부화, 대선 국면으로의 조기전환이 이라는 전개를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박근혜 게이트’ 초기국면에서 쟁점을 선도했던 조선일보가 ‘거국중립내각-개헌-조기대선’이라는 ‘질서있는 퇴진’의 시나리오를 자신감 있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역시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다소 모호한 수사를 사용했었던 점도 유사한 인식 틀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절대 스스로 퇴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중의 확신과, 이에 대응하여 다른 경로가 없다고 생각한 원내 중심의 거국내각 수용과 같은 정치공학적 셈법들이 춤을 추는 교착상태가 지속되자 이에 분노한 촛불은 ‘탄핵’으로 경로를 수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탄핵 발의라는 민의를 국회가 일차적으로 대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2016년 12월 3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촛불이 등장하면서 사태는 12월9일 탄핵 발의 가결로 정리되었다.

이는 상당히 독특하고 이례적인 국면 전개였다. 정치적 논쟁과 타협으로 정리되어야 할



사안을 사법적 절차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가져온 현행 헌법재판 제도의 유형 중에서도 가장 ‘정치적인’ 사법심판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탄핵’ 절차를 최종적인 국면에서 촛불대중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촛불이 정치적 힘의 역관계에서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촛불이 대의 민주주의를 압박하여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가 ‘탄핵발의’ 외에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현재의 촛불이 현존하는 헌정질서의 틀 안에서만 위력적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쟁점을 남긴다.

4. 촛불의 성취는 무엇이었는가?

2016년 가을 촛불이 등장했고, 이후 격렬하게 확대되었으며 중국적으로 탄핵인용이라는 형태로 촛불항쟁은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개에는 사건의 복잡성과 그 과정의 역동성,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힘의 역관계(형세)가 반영된 것이었다. 2016·2017 촛불항쟁은 종전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구호를 전면화했고, 특히 죽어있던 퇴진구호를 전면에 내세웠을 뿐 아니라,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전의 촛불과 달리 ‘승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이 성취를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가장 주류적 해석은 헌법 제1조가 현실화되었다는 견해인 듯하다. 87년 항쟁은 대표자를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민주주의 성립의 비가역적 사건이었다면, 2017년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표자라고 중대한 헌법위반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며, 비로소 ‘민주공화국’의 완성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다.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숙고할 쟁점은 대표자를 권좌에서 끌어낸 경로가 ‘탄핵’이라는 공화주의적 방식이었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민주주의와 민주사회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 형식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볼 필요도 있다. 만약에 단순히 헌법 제1조가 실현된 것에 만 강력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면, 이후 더 많은 민주와 민주사회를 위한 경로는 어떻게 추출되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평가를 남기기 어렵게 하는 난점이 생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우리사회에 헌정 질서가 수립된 이후 주요한 시민항쟁 중에서 4.19혁명과 87년 민주화 항쟁이후 세 번째 승리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또한 틀린 이야기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가 5.16 군사쿠데타와 87년 노태우 당선과 같은 반동의 역사까지 아울러 깊으면서, 이번 촛불항쟁의 귀결점이 ‘죽을 써서 개에게 주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지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대중의 해방적 저

항운동을 단순히 정치권력의 교체를 염원하는 목소리들로 국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또 다른 역사적 의미로, 우리사회가 드디어 ‘박정희 신화’와의 기나긴 싸움을 끝낸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없이도 박근혜 체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박정희 체제 및 신화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 박정희의 생물학적 정치적 후계자에 대한 정치적 심판으로만 쉽게 대체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역시 일면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때문에 위 세 가지 견해는 모두 일정한 진실을 담고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2016 2017 촛불항쟁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했고, 정권의 위기에 대하여 ‘질서있는 퇴진’으로 수렴시키려고 했던 보수분파의 기획도 분쇄했다는 점에서 ‘승리’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정당했지만, 단기국면에서는 패퇴했던 촛불이 승리했다는 소중한 경험을 스스로 각인할 수 있었던 것도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아직 근본적인 체제의 구조, 일상의 민주주의가 구축되기 위한 기획과 실천이 지속되지 않는 한, 기성질서의 무능과 균열을 틈탄 일시적 우세로만 기억될지도 모른다. 바꾸고 싶은 사회로의 이행은 촛불항쟁과 박근혜 정권퇴진으로 달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면, 촛불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취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다 발본적으로 사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5. 승리한 촛불 그러나 반복되는 난점

촛불은 광장과 거리의 정치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비-조직적 대중의 평화적 봉기를 상징한다. 2002년에 시작된 촛불은 대중의 광장으로의 진출을 의미하며, 15년 동안 반복해서 출현했다. 그런데 촛불이 등장한 이후로 반복해서 몇 가지 숙제가 있었다.

우선 의제 확장성의 차단이다. 언제나 촛불이 출현했을 때마다 최초의 의제를 넘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될 필요성이 주장되었지만 실제로는 효과적인 확산은 언제나 실패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 촛불이 퇴진구호라는 보다 정치적 목표를 슬로건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여전히 퇴진이라는 최초의 합의외에 여타의 목소리는 제대로 울려 퍼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특검법을 제외한 어떠한 개혁입법과제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2016 2017 촛불항쟁의 결과도 ‘의미있는 사회구조적 변화’까지 이끌어냈다고 다는 ‘헌정질서의 회복’수준에서 머물렀다는 점에서 촛불이 가진 어떤 확장성의 한계를 반증한 것이라는 냉정한 진단이 필요할지 모른다.



두 번째로는 촛불과 사회운동의 관계이다. 촛불이 등장이후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회운동의 역할론에 관한 의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운동체들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블록,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표상되는 민중운동 블록,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운동, 복수의 진보정당 운동, 다양한 풀뿌리운동 단체들 등) 비록 촛불(문화제)을 ‘형식적으로 기획’하고 ‘실무’를 준비하는 역할을 헌신적으로 감당하지만, 그 이상을 기획하거나 담보할 수 있는 역량과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누구도 그날 촛불에 얼마나 결집할지 알 수가 없고, 누구도 그날의 판을 예단하거나, 중단기적인 운동의 활로를 기획하는 책임을 질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회운동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거리의 정치(촛불)과 제도의 정치(정당) 가운데 서 있는 사회운동은 그렇다면 어디서 쇄신과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할까? 사회운동의 일익으로서 민변이 자리한다면 함께 새겨보아야 할 질문이다.

세 번째로 촛불이 정치적 주체화·조직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촛불의 주인공들은 점차 늘어났지만, 그 촛불의 목소리가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출현을 의미하거나 새로운 조직의 확장으로 이어진 적이 없다는 역설이다. 다시 말해 촛불은 언제나 광장이었을 뿐, 일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촛불의 구호가 급진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일상의 민주주의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7 8 9 노동자대투쟁에서 드러났던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성과와 비교하자면 그 차이가 더욱 부각된다. 촛불이 축제가 아니라 해방이자 혁명이라고 지칭하려면, 우리 일상의 공간인 직장, 학교, 가족 등에서 민주적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조직형태가 출현할 수밖에 없을텐데 아직까지는 이번 촛불항쟁에서도 그런 단초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촛불정신과 촛불민심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필요한 것이다. 촛불정신과 촛불민심은 진정 보다 넓고 깊은 민주화를 위한 변화, 자기해방을 위한 기획을 열망하는 것일까? 촛불을 통해서 주체화된 시민들은 종래의 법체계와 이데올로기를 의문시하면서 (헌)법을 넘어서, 또는 (헌)법에 갇히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일까? 이번 촛불항쟁 과정에서 사회운동에서 나름 야심차게 준비했던 ‘시민의회’ 또는 ‘시민권리선언’의 기획이 기획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수준의 큰 호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촛불이 사회변화의 어떤 가능성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해방의 언어와 기획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더 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점이 촛불을 쉽게 시민혁명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6. 촛불항쟁이 남긴 법에 관한 두 가지 쟁점

이번 촛불항쟁의 특징 중 하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특검과 탄핵 등의 사법적 심판 절

차가 대단히 주요한 쟁점으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촛불항쟁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법’과 ‘법치’등에 관해서도 여러 쟁점을 낳았다. 그 가운데서도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압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우선 ‘탄핵’이라는 경로를 통해 대통령의 퇴진이 이뤄진 것의 의미이다. 사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잃은 상황이라도 탄핵과 같은 사법절차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파면되는 예가 많지는 않다. 때문에 해외에서도 금 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결정에 대단히 주목하고 있다. 비록 탄핵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등의 반응이 있지만, 탄핵결정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것이 전반적인 국민의 여론인 점도 상당히 시사적이다. 때문에 이번 탄핵결정을 두고 ‘법의 지배’가 공고히 된 사건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그러나 탄핵절차를 통한 퇴진이 갖는 함의는 결코 간단치가 않다. 우선 현행 탄핵 제도 자체가 민주적인가?라는 전통적 질문이 있다. 행정수반이 집권운영과정에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상실한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국과 같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의회에 의하여 탄핵이 이뤄지는 방식, 또는 국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파면할 수 있는 ‘소환’제도에 비해서 우리 헌정질서가 예정한 탄핵제도는 사실 민주적 원리보다는 공화주의적 경향에 친화성을 갖는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헌법재판 및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어왔고, 특히 현행 정당해산심판 제도와 탄핵제도가 그 정점을 이뤄왔다. 때문에 대통령 퇴진이라는 정치적 문제를 탄핵절차라는 사법절차를 경유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이 존재했었다. 그렇다면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상호간의 힘의 교착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도로 사법절차를 동원하는 ‘정치의 사법화’현상을 ‘법의 지배’라는 이름으로 찬미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까?

이러한 의문은 결국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적절한 관계라는 전통적인 질문을 소환한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초기 성립할 때 헌정주의의 회복 또는 성립이 민주주의의 과제로서 제기되어왔지만,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 안착화되는 단계에서는 종종 헌정주의와 갈등 관계를 갖는다. 더구나 이번 사태는 현존 헌정질서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제는 국민주권 및 대의제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 탄핵제도 역시 의회를 통해서 발의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제도로서 현행 헌법이 구축한 제도다. 그런데 이러한 현행 헌정질서가 촛불(인민주권)을 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축약하자면 박근혜 게이트와 그에 대응하는 촛불 과정에서 ‘헌정 질서의 위기’가 드러난 국면이 있었고, 이를 넘어서 고자했던 인민주권의 자기해방적 운동이 촛불이라는 이름으로 개시되었다. 그런데 촛불은 헌법 너머까지는 이야기되지 못했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선에서 멈추었다. 결과적으로 촛불이라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인민주권의 운동이 헌정주의 질서 안에서 제약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이 2016·2017 촛불항쟁을 손쉽게 혁명이라고 평가할 수 없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긴장을 발전적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할 수 있는 경로로서 더 민주적인 헌정질서의 구축을 외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닐까? 특히 탄핵절차를 경유하게 되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취약, 대통령 탄핵시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 결핍과 같은 현행 헌법의 비민주적 요소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현재의 헌정질서를 더 민주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아닐까?

아울러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은 ‘대의제’와 ‘거리의 정치’라는 대당으로도 표출된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의제가 충분히 합목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교정하고 견인하는 역할로서 ‘촛불’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필요한 것은 ‘촛불’이 아니라 ‘정당’을 군주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상화라는 주장이 되풀이 되어왔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는 구조적 한계·제약들에 관한 지적을 외면할 수도 없다. 대의제의 한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선출된 자들이 대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 현재의 정당질서 및 선거제도가 국민의 다종다기한 목소리들을 온전히 담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 사회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는 세계체제로 경제(법)단위가 통합되어 가는 현실에서 국민국가의 자율성이 제약당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어왔다. 아울러 현대 국가에서는 의회에 비하여 행정부의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추세도 간과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렇다면 촛불과 같은 인민주권이 보다 더 확장하면서 대의제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발의와 소환 등으로 상징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하는 것은 아닐까?

나, 촛불항쟁에서의 법동원 현상

법의 지배가 확산되면서 사회운동의 법동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입법 운동, 공익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 등이 대표적인 사회운동의 활동양식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조응하여 민변 역시 활동의 영역과 형태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온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항쟁 국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다. ‘특검’과 ‘탄핵’이 주요한 사법적 수단으로 채택되었고, 특검이 왜 필요한지, 특검의 수사방

항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탄핵이 왜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전문가적인 조언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민변은 박근혜 게이트와 탄핵, 촛불과정에서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였다. 검찰과 특검 수사 및 형사재판과 탄핵 과정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논평과 성명,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해서 법률가단체로서 고유의 기능을 충분히 다하려고 하였다. 또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사법적 대응과 인권침해 감시 역할을 도맡았으며, 주요한 법률 이슈에 대하여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시민과 호흡하려고 하였다. 또 퇴진행동 법률팀으로의 결합을 통해서 법원 앞 천막농성까지 수행하는 현장성을 보임으로써 사회운동단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이러한 역할은 2008년 촛불에서부터 본격화된 민변의 적극적 능동적 대응의 전통을 이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민변은 특검·재판·탄핵 등의 사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개입하는 전문성을 발휘하는 영역과 시민들과 더 호흡하려는 현장성을 갖추기 위하여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지점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전문성을 갖춘, 더 현장성을 갖는 민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지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탄핵·특검 등을 거치면서 두드러질 수 밖에 없었던 사회운동의 법동원 현상과 민변의 역할에 어떤 후과는 없을까? 혹시 우리는 박근혜 체제에 대한 심판을 친박에 대한 정치적·사법적 심판으로 축소시킨 것은 아닐까? 사실 지배계층이 총체적으로 연루된 부패비리를 사법적 수단을 통해 규명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법기관은 현재의 주요한 지배원리를 전제한 상태에서 법 논리 내에서의 ‘일탈과 남용’을 규제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탄핵과 특검 등을 통해서 사법적인 해결방식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은연중에 구조화된 부패 사슬과 총체적인 모순은 내버려 두게 된 것은 아닐까? ‘박근혜 게이트’의 문제가 개별 기업과 특정 세력의 ‘불법행위’라는 문제틀로 축소된 것은 아닐까?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고 새로운 정치이념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과제가 도외시된 것은 아닐까? 결과적으로 정치의 공간에서 촛불시민의 능동적 개입이 확보되기 보다는, 정서적 대리만족에 머물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회운동의 법동원 현상은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 법률가에 의한 지배로 나타나는 문제로 이어지게 하는데 기여하는 역설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일도양단의 정답은 없겠지만, 법을 통한 사회변동을 추구하는 사회운동의 경향성은 더욱 커져갈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긴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7. 그리고 민변



그리고 이러한 의문들은 민변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도 다시금 이어지게 만든다. 과연 민변은 법률가단체로서 자기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일까? 오히려 민변도 법률과 법리에 관한 전문성에 기반한 목소리와 실천을 담보하는 것을 넘어서, 촛불이 무엇을 발언하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야 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 무능력했던 것은 아닐까? 민변이 정당은 아니니까, 민변이 일반적인 사회운동단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방기되었던 지점은 없는 것일까? 돌아보면 민변 20주년에 즈음하여 있었던 서울신문 보도에서 한상희 교수는 “민변 스스로 성격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했던 바가 있었다. 민변 30주년을 내다보자는 지금 시점에서 민변은 이 지적에 충분히 답하고 있을까? 사회운동의 범동원 현상이 과잉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것과 중별적으로 민변의 역할이 확장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런 측면에서 촛불항쟁을 계기로 다시금 민변의 정치적 지향, 조직적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와 동요, 불철저함이 다시금 토론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민변이 사회운동의 선두에 서야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률가단체로서의 민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변이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오히려 사회운동의 일익을 담당하는 공간이자 단체로서의 전체사회 변화에 대한 고유한 관점의 부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들은 남는다.

그러니까 ‘민주사회’를 위하여 민변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장기적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하며, 어떤 질문들이 제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총론적으로 모을 필요는 없는 것일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모든 사회운동의 과제를 민변이 다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다. 따라서 민변이 선봉에서 운동을 선도하고, 주도하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다만 민변도 더 많은 고민과 토론 속에서 어떤 내적인 수준에서의 질적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꼭 민변이 더 높은 수준의 결사체가 되어야 한다거나, 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한다는 당위론으로 귀결되지 않는 더 많은 토론들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6·2017 촛불을 경유하면서 민변이 다시 확인한 과제가 있다면, 최저선의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동시에, 더 많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한 질문들을 발굴하며 쟁점을 확산시켜나가는 역할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민변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토론과 숙의의 필요성이 아닐까? 이러한 긴장과 준비 없이는 촛불 이후를 민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까? 예컨대 자유주의 정권 하에서의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 보수정권 하에서는 차이가 적게 드러났던 민주와 진보의 차이 문제 등에 대해서 10년 전에 겪었던 뼈아픈 실패와 오류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리

라 보증이 있을까? 물론 필자가 던진 질문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촛불항쟁에 대한 평가가 ‘승리적 평가’로 끝날 수 없고, 무언가가 촛불과 사회운동 그리고 우리사회에 과제로 남겨졌다면 민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일까 이제 퇴진특위 백서를 발간하면서, 민변에게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감각이 사라지질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다시 출발점에 서 있다.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 위원회

2. 주요활동정리

1. 들어가며¹⁾

숨 가쁜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심판으로 파면되고 구속되기까지 약 6개월²⁾이 걸렸다. 반년의 시간을 돌이켜본다.

본격적인 퇴진투쟁은 앞선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 민변의 투쟁은 박근혜가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대선 바로 다음날 열렸던 2012년 민변 송년회. 박근혜의 당선으로 모두가 침울했다. 그러나 모든 회원들은 멈추지 않기로 결의했고,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씬 없이 정권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시민들과 연대하여 저항했다. 박근혜 정권은 꺾이지 않는 지지율에 힘입어 탄압으로 일관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이 드러날 때 민변은 치열하게 싸웠고,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며 민주노총을 침탈할 때 민변은 노동자와 연대하였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국가의 총체적 무능이 드러날 때 민변은 희생자들을 가슴에 품고 진상규명과 특별법을 위해 싸웠다. 백남기 어르신이 경찰의 물대포에 사망할 때 병원을 지키며 눈물을 삼켰다. 정권은 탄압의 강도를 높였지만, 그만큼 힘이 약해졌다.

철옹성 같았던 박근혜 정권이 막을 내렸다. 이는 전적으로 촛불의 힘이다. 민변은 수많은 촛불 중 하나였다.

2. 퇴진특위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민변은 재벌 문제를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감시·비판해왔다.³⁾ 2015년 삼성그룹의 3대세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2015. 7. 17.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였다. 2015년 당시에 민변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반대운동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합병에 찬성하였고, 결국 합병은 성사되었다.

그런데 2016. 5. 30.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0.35:1)에 따른 주식매수가격이 잘못되었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변·참여연대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을 근거로 2016. 6. 16. 이재용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하

1) 본 글은 민주변론 2017년 상반기 호에 게재된 ‘퇴진특위와 미완의 촛불혁명’의 글과 같음.

2) TV조선이 2016. 7.중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지만, 이는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고, 9.20.자 한겨레 보도가 기폭제가 되었기에 이를 시작시점으로 잡는다.

3)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김용철 변호사 양심선언 및 삼성특검 사건 등에서 민변은 다양한 고소 고발 및 여론확산 활동을 한 바 있다.

[참고] 이진희 삼성회장 횡령·뇌물 혐의 고발, 한겨레, 2007. 11. 6.



였다.⁴⁾ 이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와 최순실이 동 합병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아무런 수사를 벌이지 않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발생후 특별수사본부에 사건을 이관하였다.

2016. 9. 20. 한겨레가 처음으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민변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인식하였다. 앞서 이재용을 고발한 사업의 연장선에서 김남근 부회장을 중심으로 송상교, 박정만, 김종보, 김종휘 변호사가 속칭 ‘미르팀’을 구성하였다. 미르팀은 전두환·노태우 뇌물사건 및 일해재단 사건과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이재용, 정몽구 등 및 재벌총수들과 안중범을 뇌물죄 등으로 고발하기로 하고 준비를 시작하였다. ‘미르팀’은 국회 안민석 의원실과 정보소통체계를 갖추면서 공개가능한 원자료를 입수하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였다. 당시 정기국회 국정감사기간이었기에 더 많은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를 취합하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2016. 10. 26.경 고발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2016. 10. 24. JTBC는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았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했다.⁵⁾ 고영태가 “최순실은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게 취미”라고 말한 사실이 10. 20. 보도되었지만⁶⁾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그럴리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10. 24.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단독 보도 이후 정국은 소용돌이 빠져들었다.

미르팀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사건이 단순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이 어우러진 헌법파괴행위로 인식하고 그동안 준비한 고발장을 근거로 2016. 10. 2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60쪽에 이르는 동 의견서는 2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범죄성립과 관련된 법적 분석은 향후 “뇌물죄로 처벌하라”는 대중적 주장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그 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검찰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고, 별도 특검 수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범죄혐의로 뇌물죄를 적용하였다. 이는 민변의 최초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

민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국헌문란의 중대사건으로 인식하고 회원들의 총의를 최대한 모으기 위해 2016. 11. 2.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1. 3. 박

4) 민변·참여연대, 이재용·이부진 등 삼성 3남매 검찰 고발 왜?, 로이슈, 2016. 6. 16.

5) [단독] 최순실 PC 파일 입수...대통령 연설 전 연설문 받았다, JTBC, 2016. 10. 2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40632&pDate=20161024

6) [단독] '비선의 비선' 고영태 "최순실, 연설문 고치는 게 취미", JTBC, 2016. 10. 20.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37544

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변은 박근혜 퇴진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3. 퇴진특위의 활동

위 총의에 따라 민변은 회원들에게 특별위원회 참여를 요청하였다. 60명이 넘는 회원들이 동참의 의사를 밝혀왔다. 2016. 11. 8. 특별위원회 준비모임을 가진 후 11. 10.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 변호사, 부위원장 권영국, 이재화, 김도형 변호사, 이하 퇴진특위)’가 공식적으로 발족하였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퇴진특위가 가장 중점에 둔 사업은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었다. 또한 민변 내외부적으로 퇴진특위의 활동을 알리고, 다른 단위(대표적으로 퇴진행동 및 지방변호사회)들과 연대하면서, 민변 고유의 집회 대응 활동을 전개하는 활동이 필요했다. 나아가 최순실에 대한 범죄혐의에서 뇌물죄가 빠져있고⁷⁾, 최순실 형사재판의 자료들이 박근혜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었으므로 공판과정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다. 이에 수사대응팀(팀장 박정만), 공판대응팀(팀장 윤복남), 기획소통팀(팀장 좌세준), 대외협력팀(강문대 사무총장 담당), 집회대응팀(팀장 백주선)⁸⁾ 등으로 내부적인 팀별체계를 갖추었다. 이후 퇴진특위는 박근혜가 2017. 3. 10. 파면된 후 2017. 3. 20.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하였다.

퇴진특위는 집회참석, 성명·논평·의견서 발표, 각종 토론회 및 언론 대응 등 다양한 색의 활동을 하였다. 한정된 지면상 주요 활동 내역을 정리해 본다.

▷ 2016. 11. 8. 특별위원회 준비모임

- 약 30여명의 회원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신청하여 준비모임을 가졌다. 준비모임은 특별위원회의 이름을 ‘박근혜 정권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정하고, 위원장으로 백승헌 변호사를 추대한 후, 팀별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이후 총 약 60여명의 회원들이 퇴진특위에 합류하였다. 이후 퇴진특위는 설연휴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을 계획·실행하였다.

7)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상 최순실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과 사기미수였다.

8) 집회대응팀은 민변 자체의 집회를 조직 운영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고, 매주 열리는 촛불집회 전반에 대한 대응은 주로 퇴진행동 법률팀에서 담당하였다.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 집회제한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등에 대한 대응은 초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담당하였다가, 추후 법률팀이 담당하였다.



- ▷ 2016. 11. 10. 퇴진특위 공식 출범 및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대한민국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다.
- ▷ 2016. 11. 11.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박근혜 퇴진 요구
 - ‘전국변호사비상시국모임’의 한 축을 담당하여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면서 서울 지방변호사회부터 서울중앙지검까지 행진하였다. 전국 3,288명의 변호사들이 시국 선언에 동참하였다.
- ▷ 2016. 11. 12. (토) 제3차 범국민행동

민변은 2016. 10. 29. (토)부터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인 2016. 3. 11.까지 매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 11. 12 촛불집회는 퇴진특위가 출범하고 공식적으로 참가한 첫 집회로서 처음으로 100여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였다. 민변은 약 1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였고,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통해 연행자 23명을 접견하였다.
- ▷ 2016. 11. 14. [논평] 박근혜 대통령의 7대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은 11. 3. 최순실을 구속하고 11. 8. 삼성 서초사옥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었고, 특검 도입이 가시화 되는 상황이었다. 민변은 7대 중대범죄를 제시한 후 7대 수사원칙을 제시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여론을 확산하였다.
- ▷ 2016. 11. 15. [논평] 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 국회는 11. 14. 특검법을 통과시키기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사안의 성격상 최소 100일 이상의 수사기간이 필요하고 수사기간연장승인 권한이 대통령에게 유보되어 있는 점, 청와대 압수수색을 가로막을 형소법 제110조, 111조에 대한 적용 배제가 누락된 점을 비판하였다. 민변의 우려는 추후 현실이 되었다.
- ▷ 2016. 11. 15.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과 함께 이재용 등을 뇌물죄로 고발
 - 앞서 2016. 6. 16.자 이재용 등에 대한 고발은 업무상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박근혜, 최순실 등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위 사안을 뇌물죄로 다시 고발하였다.
- ▷ 2016. 11. 16. [논평] 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 최순실에 대한 기소시점이 임박하는 시점이었다. 당시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직권남용과 사기미수였는데, 가장 핵심인 뇌물죄로 의율하고, 박근혜와의 관계를 철저히 수사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건의 본질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는 추후 특검의 수사 방향으로 기능하면서 수사결과에 반영되었고, 박근혜의 구속 사유로 이어졌다.

▷ 2016. 11. 18. [카드뉴스] 박근혜 국정농단을 낱알이 파헤치기 위한 7대 수사원칙

- 전국적인 퇴진운동이 전개되고 검찰 특수본의 수사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11. 14.자 의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엄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였다. 이후 퇴진특위는 수차례 카드뉴스를 만들어 시민들과의 소통에 주력하였다.

▷ 2016. 11. 21. [의견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 검찰은 2016. 11. 20.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3인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뇌물죄로 의율하지 않고 직권남용과 강요죄 만을 적용한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정경유착의 주범인 재벌을 피해자로 위치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최순실·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각종 인사개입 등의 직권남용, 이대 입학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죄 등이 누락된 한계를 보였다. 퇴진특위는 검찰 수사결과와 한계를 지적하여 정경유착의 본질을 알리고 뇌물죄 처벌의 여론을 확산하였다. 추후 검찰의 수사결과는 특검의 수사결과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 2016. 11. 26.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국회가 본격적으로 탄핵소추에 착수하였다. 퇴진특위는 박근혜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 53쪽의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탄핵소추사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였다. 민변이 밝힌 탄핵사유, 즉 1) 민주공화국의 원리 및 국민주권주의 위반, 2) 대의제 위반, 3) 법치주의 위반, 4) 각종 범죄행위, 5)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 6) 위헌·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상당히 반영되었고,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

▷ 2016. 11. 26. 변호사 결의대회 및 제5차 범국민행동

- 변호사비상시국모임은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었고, 민변 약 65명의 회원이 결의대회 및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 2016. 12. 3. 제6차 범국민행동



- 국회 탄핵소추 결의를 앞두고 약 230만명(사상 최대)의 인원이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민변 회원들도 다수 참가하였는데, 집결지(세종문화회관 계단 위)로 집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인파가 모였기에 집계가 불가능하였다.
- ▷ 2016. 12. 6. [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 퇴진특위는 국회 청문회를 모니터링하였다. 재벌총수들은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후 특검은 국회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들을 수사하였고, 재판이 시작되고 있다. 재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은 특검의 한계이자 검찰의 과제로 남았다.
- ▷ 2016. 12. 8. 국회 비상국민행동 (국회 앞)
 -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탄핵의결을 촉구하였다.
- ▷ 2016. 12. 9. [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탄핵절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촛불을 통한 전국민적 저항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 2016. 12. 15. [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 2016. 12. 9.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날 피청구인 박근혜 측에게 12. 16.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첫 준비기일은 12. 22.로 예정되었다. 민변은 탄핵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신속한 심리진행을, 국회에 대하여 공정하고 민주적 방법에 의한 대리인단 구성을 촉구하였다.
- ▷ 2016. 12. 19.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불법개입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고발
 - 故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민변에 대한 탄압을 지휘하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민변은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활동을 침해하고 감시한 것을 유신시대의 불법공작으로 인식하고 특검에 대하여 김기춘을 고발하였다.
- ▷ 2016. 12. 19. 최순실 공판 모니터링 시작
 - 최순실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 해당 재판은 향후 박근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고, 공판대응팀이 직접 방청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전개하였다.
- ▷ 2016. 12. 22. 민변 ‘탄캐스트’ 방송 시작
 - 탄핵정국에서 민변은 충정로에 위치한 병커1의 녹음시설을 빌려 ‘탄캐스트’란

이름으로 팟캐스트를 통해 탄핵절차와 특검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민변의 '탄캐스트'는 2017. 3. 17.까지 매주 총 13회 방송되었다.

- ▷ 2017. 1. 2. [논평] 박근혜 대통령, 할 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임하고 현재 심판에 출석하라
 - 박근혜는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본인의 말을 뒤집은 가운데 2017. 1. 1.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자기변명을 늘어놓았다. 퇴진특위는 이러한 박근혜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 ▷ 2017. 1. 11.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에 대해 소명하자, 퇴진특위는 故김영한 비망록을 근거로 신빙성을 비판하고, 현재판례를 근거로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였다.
- ▷ 2017. 1. 18. [성명]법 앞에 예외 없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구속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1차 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권영국 변호사와 민주법원은 1. 19. 법원 앞에서 영장재청구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1. 19.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재벌 앞에 무릎꿇은 사법부를 비판하였다.
- ▷ 2017. 1. 24. [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측의 무더기 증인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지연전술이 노골적으로 펼쳐졌다. 이런 상황에서 피청구인측 주장의 허점을 논박하고 신속한 심리 진행을 촉구하였다.
- ▷ 2017. 2. 2. [성명]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
 - 1월이 지나면서 피청구인 박근혜측은 '각하론'을 주장하면서 태극기집회를 열어 여론의 반전을 도모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민변은 피청구인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2. 8.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민변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 ▷ 2017. 2. 4. 천막농성단 서울중앙지검-강남역 삼상전자 본관 집회·행진
 - 권영국 변호사가 중심이 된 천막농성단은 2017. 1. 20.~2.4.까지 천막농성을 하며 법원 앞 투쟁에서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였다. 특검의 영장재청구 방침이 알려



지면서 천막농성을 정리하기로 하였고, 마지막으로 법원삼거리부터 강남역 삼성본관까지 행진을 하며 박근혜 퇴진과 이재용 구속을 주장하였다. 퇴진특위는 동 집회·행진에 동참하였다.

- ▷ 2017. 2. 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계획 발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 고발
 - 문화예술인 46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박근혜, 김기춘, 조운성 등 공무원 개인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별 각 1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기춘 등을 고발하였다.
- ▷ 2017. 2. 9. [의견서] 박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수수한 뇌물죄 수사 관련
 - 이재용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된 법리 검토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하였다. 이는 특검의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 ▷ 2017. 2. 17. [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다. 이는 재벌권력에 대한 법치의 우위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되었다.
- ▷ 2017. 2. 17. [카드뉴스] 영화·드라마로 보는 박근혜 범죄의 재구성
 - 태극기집회로 상징되는 박근혜 옹호 세력의이 결집하고, 탄핵심판에서의 대리인들이 지연전술을 펴나가면서 박근혜 동정론이 일음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퇴진특위는 영화·드라마의 장면을 차용하여 박근혜의 범죄행위를 재치있게 표현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누적 조회수 약 4,900)
- ▷ 2017. 2. 21. - [박근혜전권 퇴진 특위][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 특검 수사기간이 2. 28. 종료될 예정인 상황에서 황교안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민변이 초기 특검법이 도입될 당시부터 우려했던 상황이었다. 결국 황교안은 2. 27.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하였다. 그러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고, 현행 체제에 대한 비판 의견이 고조되었다.
- ▷ 2017. 3. 7. [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 황교안은 특검 수사기간을 결국 승인하지 않았다. 특검은 2. 28. 수사를 종료하였고, 3. 6.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의 혐의사실에 대한 내용을 검찰로 이관하였다. 특검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는데, 이에 반하여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에 임할 것인지 우려되었다.

- ▷ 2017. 3. 10. [성명]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박근혜를 파면하는 결정을 하였다. 퇴진특위는 이를 환영하는 한편,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의 탄핵소추 사유를 탄핵 결정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 ▷ 2017. 3. 20. [의견서] 민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5대 수사과제 발표 (퇴진특위 마지막 의견 발표)
- 검찰 1기특수본의 수결과와 특검의 수사결과는 뇌물죄 부분에서 서로 달랐고, 이는 추후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검찰의 2기 특수본의 수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인수받은 후 다시 수사에 착수하는 시점에서 특검 수사의 한계와 검찰의 수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였다.
 - 박근혜에 대한 혐의사실에서 특검은 검찰 1기 특수본이 수사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수사결과에서 특별한 견해를 밝히고 있지 않다. 검찰 1기 특수본과 특검의 수사결과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퇴진특위는 박근혜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을 촉구하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검찰 1기 특수본			특검		
	혐의사실	적용 범죄		혐의사실	적용 범죄
1	[미르·케이스포츠 관련]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	직권남용, 강요 (최순실, 안종범)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 2800만원), 미르재단(125억원), 케이스포츠재단(79억원) 등 총 220억2,800만원을 지급	제 3 자 뇌물제공
			1	최순실과 공모하여 이재용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독일 비텍스포츠(코어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41억 6,125만원을 송금하고, 말 구입비용 등으로 41억 6,251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77억9,735만원을 지급	뇌물수수
2	[롯데그룹 관련]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하여 롯데에 대	직권남용, 강요		특검 수사결과는 따로 없음	



	하여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 70억원 강요. (최순실은 자신의 '더블루케이'가 시설 운영 및 수익사업을 맡는 계획을 세움)				
3	[현대차그룹 관련]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 최순실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강요	직권남용, 강요		특검 수사결과는 따로 없음	
4	[포스코그룹 관련]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하여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두케터 대표 한상규를 상대로 지분 양도를 강요 ⁹⁾ , 포스코를 상대로 포스코 펜싱팀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의 더블루케이에게 펜싱팀매니지먼트를 맡기도록 강요	직권남용, 강요 및 강요미수		특검 수사결과는 따로 없음	
5	[KT 관련]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하여 KT를 상대로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 신혜성을 전무와 상무로 채용하게 하고, 최순실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주도록 강요.	직권남용, 강요		특검 수사결과는 따로 없음	
6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최순실·안종범과 공모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를 상대로 장애인스포츠탄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	직권남용, 강요		특검 수사결과는 따로 없음	
7	최순실·정호성과 공모하여 정호성으로 하여금 정부출범 이후에도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말씀자료 등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을 통해 최순실에게 유출하였는데, 그 중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있음.	공무상비밀누설		특검 수사결과는 따로 없음	
8	조원동과 공모하여 CJ 이미경 부회장이 사퇴하도록 압박	강요미수		특검 수사결과는 따로 없음	
9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문형표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직권남용

			있도록 챙기라고 지시하여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도록 함 ¹⁰⁾	
10			[블랙리스트 사건]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등과 공모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심사 에 부당 개입하여 19명의 후보자가 예술위 책임심의 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9,473명에 달하는 지원배제리스트(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각종 지원이나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함.	직권남용, 강요
11			최순실, 김상률, 김종덕 등과 공모하여 문체부의 노태강 전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	직권남용, 강요
12			김기춘, 김종덕 등과 공모하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공무원 최규학 기획관리실장, 김용삼 중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 실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	직권남용, 강요
13			최순실과 공모하여 2016년 1월 안중범에게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을 만나 이상화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의 승진을 청탁하라'고 지시	직권남용
14			최순실이 미얀마 공정개발 원조(ODA) 사업과 관련하여 박근혜를 통해 주미얀마 대사로 삼성전기 출신 유재경을, 코트라 임원 출신 김인식을 코이카 이사장으로 임명하게 한 후, MITS Korea 인호섭 대표로부터 미얀마 K-Town 프로젝트 사업과정에서 수익을 얻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MITS Korea 주식 15.3%를 취득	(최순실) 알선수재
15			[비선진료를 실시한 김영재 등에 대한 특혜 의혹]	※ 박근혜 조사 미비

9) 검찰의 최순실·안중범에 대한 공소장에는 포레카 지분 양도 강요 부분에서 박근혜와 공모하였다는 서술은 없으나, 박근혜가 관여되어 있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10) 특검수사결과 및 문형표 공소장에는 박근혜와의 공모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박근혜의 지시를 받았다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음.



4. 나가며

퇴진특위는 공식출범한 2016. 11. 8.부터 활동을 종료한 2017. 3. 20.까지 총 132일 동안 성명/논평/보도자료/의견서/카드뉴스 등을 총 42회¹¹⁾를 게시하면서 박근혜 퇴진 운동에 동참하였다. 이와 같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단체 메신저(텔레그램)를 통해 활발하게 토론을 진행하면서 내부 의견을 모아냈다. 통상 후배와 각 팀장이 초안을 작성하고 내부 회람하면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이 완성하였다.

민변의 촛불집회 참여에 있어 퇴진특위는 구심점이 되었다. 이번 사태는 유독 법적 절차 및 논쟁이 많이 벌어졌는데, 퇴진특위의 분석과 의견은 전체 퇴진운동에서 법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통령이 깊이 개입된 사건이란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사의 범위, 특검법안에 대한 입법론과 해석론, 탄핵소추 후의 자진사퇴에 대한 대비, 제2특검법안 직권상정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내부적 법리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지만, 전체 회의를 통해 의견이 조율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란 이름에 걸맞게 퇴진특위는 반민주적 박근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법률전문가로서의 사건 분석과 의견 제시를 통해 퇴진운동에 연대하였다. 비록 박근혜는 파면되었지만 재벌·정경유착으로 표상되는 오래된 폐습을 근절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사회감시와 보다 건설적인 대안제시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11) 퇴진특위의 명의를 아닌 민변 명의로 성명/논평 등이라도 퇴진특위의 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모두 포함하였고, 민변 홈페이지 게시글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활동의 기준에 따라 집계 숫자는 달라질 수 있음.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 위원회

3. 의견서/성명/논평



[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 대통령 스스로 자백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2016. 10. 27. (목)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 비리로 촉발된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까지로 끝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국헌 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인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이미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3. 민변은 이 사건의 본질을 ‘헌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합니다.

첫째, 우리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파괴행위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기구가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는 공화국 이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일개 사인이 대통령의 당선 이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계속하여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 까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중요 사안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고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권력 뒤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림자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정부의 정치 행위 곳곳을 좌우하고 심지어 그 권력을 발판삼아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을 출연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가 이 정부 내내 계속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였습니다. 추악한 국정농단의 주요 매개고리로 고질적 ‘정경유착’이 악용되었고, 그것이 이 사건을 더욱 파괴적 헌법질서 파괴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기업과 전경련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여 거액의 돈을 출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원하던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조치, 특별사면 등 대가를 받아갔습니다. 이는 과거 일해재단과 같은 청와대/전경련/재벌기업간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그 명목과 관계없이 ‘포괄적 뇌물’의 수수행위이고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에 해당합니다. 청와대, 대기업, 전경련이 돈을 매개로 특혜와 대가를 주고받고 중요한 경제정책을 왜곡시켜 버린 ‘정경유착’의 본질은 놓칠 수 없는 사안의 본질입니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 (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8조)합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4. 대통령과 청와대도 수사의 대상이 된 지금 국정원 대선개입, 정윤희 문건 유출 등 수많은 사건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덮어 왔던 검찰에게 사건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고, 이미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특검 실시를 수용하 기로 했습니다. 향후 특검이 실시되거나 국정조사가 시행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범위, 수사대상에 하나의 성역도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첫째,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아니라 이 정부 하에서의 불법 부당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문제되는 사건에서 파생된 여러 의혹 불법행위를 모두 발본색원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수사대상에 있어서 당사자들 모두 어떠한 예외도 없어야 하고,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한 것이 아닌 이상 지금 당장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검찰은 이미 크나큰 불신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특검 실시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특검이 활동할 때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에서 검찰은 그와 같은 한계 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남은 수사를 진행,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5. 특검이든 무엇이든 수사가 헌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석하는 시간벌기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여야는 특검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특검 등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의 본질을 밝히고, 특검수사 및 진실 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 사과제와 수사 촉구사항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가. 이번 의견서에서 민변은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에 대한 범죄 성립, 재단 설립과 정의 포괄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성립, 출연 과정의 각 기업 대표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재단 설립 및 설립된 재단 자금의 유용과 관련한 최순실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성립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벌 대상 규정과 혐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



시하였으며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첨부 의견서 참조)

<청와대 등 문건 유출과 관련한 형사처벌 혐의 내용>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성립(의견서 5쪽)

-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 시나리오 사전유출
- 최순실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수집탐지죄’ (제11조) 해당
- 군사기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시나리오를 제공한 청와대 관계자는 동법상 군사기밀누설죄(법 제12조 제1항) 해당.
- 대통령이 위 누설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군사기밀누설죄 공범에 해당 가능성.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탐지·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 조(누설)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와대 또는 외교부 관계자의 외교상기밀누설죄 성립(의견서 7쪽)

-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 사전유출
-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외교상 기밀이 담긴 문서가 일반인인 최순실에게 누설됨. 누설자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누설죄 해당
- 대통령이 위 누설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외교상기밀누설죄의 공범 해당 가능성

○ 청와대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의견서 9쪽)

- 44개의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의 파일 중 ‘공무상 비밀’ 해당 파일 일체
- 2014. 3.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의 경우, 공개 하루 전 최순실에게 전달되 었고, 전달 당시 비공지의 사실이었던 점, 드레스덴 연설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통일 대박론’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아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연설문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이 담겨있어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인 점, 위 연설문이 일반인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유출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공무상 비밀’에 해당.
- 직접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

-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따라 위 죄 공범 해당 가능성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의견서11쪽)

-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된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진술
- ‘대통령 보고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된다면, 정호성 또는 이를 유출한 청와대 소속 성명불상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로 처벌
-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따라 대통령이 공범 해당 가능성
- 한편 최순실은 ‘대통령 보고자료’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지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를 회의에 참석한 차은택 등에게 누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19조에 따라 처벌 가능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③ 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최순실, 안중범 청와대 수석 등이 미르재단 자금모집과 설립 등을 주도한 사실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의견서 12쪽)

-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음.
- 유사성 : ①재벌 기업들의 재산 출연 과정, ②모금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③출연자들의 이사회 배제, ④ 재단과 관련된 기록의 날조
- 본건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임. 안중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재단설립과모금을 기획 주도한 사실, 전경련이 조직적으로 재단 설립을 주도한 사실, 최순실이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 정부 차원에서 재단 설립을 지원한 사실, 재단의 사업이 청와대와 관련된 사실 등에 비추어 포괄적 뇌물죄 성립.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2016. 10. 20.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에서 이점을 시인한 셈임.
- 재단의 설립 및 모금과정에 깊이 개입한 안중범, 이승철, 최순실 등은 재벌기업들로



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하여 재벌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취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 기업 대표들은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 133조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

○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재벌기업에게 이미 설립된 미르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에 따른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의견서 39쪽)

- 재벌기업이 청와대 요구로 제3자인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형식을 중시한다면, 이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음.

- 제3자 뇌물공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 당시 기업과 전경련은 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경련의 요구에 부응하여 강도 높게 입법처리를 시사하고 있었음. 각 재벌그룹도 SK, CJ그룹 및 건설회사 등은 그룹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두산 등은 면세사업 진출, 대림산업과 GS건설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부영건설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인 상황이었음.

- 재단 출연 대가로 기업과 전경련은 일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각종 법률들 통과와 개별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행정 조치 등 대가관계를 수취한 정황이있음.

○ 재단 출연 기업 대표들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의견서 49쪽)

- 재벌기업 대표들은 회사의 자금 수익, 수십억 원을 각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안종범과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던 바,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

○ 최순실의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의견서 50쪽)

- 케이스포츠재단의 돈이 불법적으로 최순실이 지배하는 비텍 또는 (주)더블루케이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바, 수사를 통하여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돈이 비텍과 (주)더블루케이에 유입된 것이 밝혀진다면, 이를 용인한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관계자는 재단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하여재단의 자금을 유용하고,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

- 최순실은 이미 언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자로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해당 가능성

나. 민변은 향후 특검이 실시될 경우, 기존 검찰 수사의 한계를 넘어 사안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수사과제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10대 수사과제와 수사촉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의견서 53쪽 이하)

○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강력한 수사 촉구

- 기업, 전경련, 재단, 그리고 최순실 등은 사건 발생 전후로 대량의 문서를 파쇄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바,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고, 증거인멸 시도의 주도자를 밝혀내어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여야 함.

○ 이 사건 10대 수사 및 진실규명 과제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 10대 수사과제>

1. 청와대 및 정부 문건인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 ‘대통령보고자료’와 같은 중요 문건들이 사전에 최순실에게 전달된 경위 - 누가 어떻게 전달하였고, 최순실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대통령이 이에 관여한 정도가 무엇이었는지, 언론보도로 확인된 이후 시기에도 최순실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을 사전에 전달받았는지
2. 사건 발생 후 기업과 재단, 전경련, 최순실 등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구체적 내역 및 그러한 증거인멸을 하게 된 결정주체와 과정이 무엇인지
3.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구성, 모금, 내부인사 기용 등에 관하여 청와대와 안종범, 최순실이 어떠한 공모를 거쳐 관여하였는지 그 의사결정 주체와 과정 - 최순실이 청와대 의사결정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직접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문화재단 설립 사안에 문화수석이 아닌 안종범 경제수석이 관여한 경위가 무엇인지 4. 기업들이 다른 기부와 달리 이 사건에서만만큼 유독 빠른 시간 내에 일사분란하게 거액의 기부금을 출연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회사의 재산을 출연함에 있어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5. 전경련이 개별 기업들에 대하여 각 재단에 출연할 것을 독촉하고, 문제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설립허가를 진행하였던 바, 전경련이 이 사건에 관여한 구체적 내역과 경위가 무엇인지
6. 재단 설립을 전후하여 기업과 전경련이 정부에 요구하였던 숙원사업들과 재단 출연이 어떤 관계가 있었으며 출연 전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7. 불과 하루 사이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설립허가 절차가 이루어진 이유와 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누구인지
8. 재단의 이사회가 기업관계자를 배제하고 특정인사로 구성된 경위가 무엇이고, 특정 인사가 이사장 및 이사로 선임된 경위는 무엇인지 9. 두 재단이 설립 후 빠른 속도로 각종 국가 사업에 특혜를 받고 진입한 경위가 무엇이고, 특혜받은 구체적 내역이 무엇인지
10.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알려진 최순실 등 사인(私人)이 사안에 관여한 구체적 내용과 경위가 무엇인지. 특히 재단의 돈과 직원이 최순실 및 최순실 설립 회사에 사적으로 유용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와 실제 용도가 무엇인지

○ 청와대 및 각 기업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필요성

- 10. 26. 검찰은 최초 고발 후 28일이나 지난 후에야 전경련, 재단, 최순실의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미흡함.
-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급함. 청와대와 각종 정부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내역 및 유출된 방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함.
 청와대 사무실 및 서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등 사이의 이메일,
 청와대 내부 전산기록에서 보안 USB를 통해 변환된 기록 내역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함.

- 재단에 출연한 개별 기업 사무실과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함.

<강제수사의 대상>

1. 청와대의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내역 및 유출된 방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청와대 사무실 및 서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등 사이의 이메일, 청와대
 내부 전산기록에서 보안 USB를 통해 변환된 기록 내역 등
2. 전경련이 각 기업체에 보낸 공문 등 지시사항의 입수
3. 각 기업이 재단에 출자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자료, 기타 출자 여부를 판단한 내부 판단 자료
4. 기업 본사가 각 계열사 또는 담당자에게 지시한 내역 관련 내부 공문등 자료
5. 각 기업이 재단에 출자한 돈의 입금시점, 입금명의자, 입금한 금원의 출처
6. 각 기업과 전경련이 미르, 케이재단 설립 전후로 정부를 상대로 개별 기업 및 전경련의
 요구사항을 청탁한 구체적 내역과 자료 {노동개혁 5 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처리, 검찰조사(롯데), 각종 기업의 부실불법 으로 인한
 책임논란(한진해운, 삼성), 특별사면 등}
7. 재단설립과 관련한 개별 기업, 전경련, 재단의 금융거래 내역 일체
8.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경련을 통한 법인설립 허가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를 위반하여 설립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내부 공문 및 자료
9. 각 재단 설립 후 재단의 수입, 지출 내역에 관한 금융, 회계자료

○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조사 실시, 출국금지 조치 확대, 신변 구속의 필요성

- 대통령을 포함하여 청와대 안중범 경제수석, 문고리 3인방등 청와대의 사건
 관계자들, 최순실과 그들의 측근, 전경련, 개별 기업 등 사안의 핵심 관계자들이 서로
 진술을 맞추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관계자들을 소환
-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
- 특히 최순실이 사건 초기부터 독일로 도피하여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바, 최순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구속수사
-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확대. 현재 재단관계자 10여 명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여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및 전경련의 재단 관계자, 개별 기업의 재단 관계자,
 안중범 수석 및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확대

의견서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 비리로 촉발되어 최순실 게이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까지로 확장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청와대와 대통령까지도 수사의 대상이 된 지금 검찰 수사로는 진실규명이 어려우므로 특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고 야당은 물론 여당도 특검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특검 등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의 본질을 밝히고, 특검 수사 및 진실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 아 래 -

I. 서론 : 이 사건의 본질 - 정경유착과 국정농단/헌법질서 파괴행위	3
II.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성립	5
III. 청와대 또는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외교상기밀누설죄 성립	7
IV. 청와대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9
V.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11
VI. 최순실,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미르재단 자금모집과 설립 등을 주도한 사실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	12
1. 정치권력을 돈으로 사는 정경유착의 발본색원	12
2. 일해재단 사건과의 유사성	14
3. 전두환, 노태우 뇌물수취 사건에서 정립된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	19
4. 박근혜 대통령 및 청와대 차원에서 각 재단 설립이 기획·추진되었던 사실	21
5.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재단설립과 모금을 기획·주도한 사실	24
6. 전경련이 조직적으로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사실	26
7. 최순실이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	28
8. 정부 차원에서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을 지원한 사실	33
9.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의 사업이 청와대와 관련된 사실	34
10. 소결 - 성금, 선의의 출연 등 명목과 무관하게 포괄적 뇌물죄 성립	38
VII.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재벌기업에게 이미 설립된 미르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에 따른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	39
1. 제3자 뇌물공여죄의 법리	39
2. 청와대 경제수석이 자금모집을 할 당시 전경련이 주도하여 정부에 요청하고 있던 청탁내용	40
가. 서 설	
나. 일반해고 등의 노동법 개정 (소위 '노동개혁 5대 법안')	
다. 소위 '원샷법(기업구조조정특별법)'의 제정촉구	
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제정	
3. 각 재벌그룹이 정부에 요청하고 있던 청탁	46
가. SK, CJ 그룹의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복권	
나. 삼성, 두산 등 재벌기업들의 불리한 상황 및 정권의 호혜에 대한 대가	
4. 소 결 - 재벌기업들의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출연과 전경련·재벌기업의 청탁의 관련성	48
VIII. 재단 출연 기업 대표들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49



IX. 최순실의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50
1. 독일회사 비택과 관련된 의혹	50
2. 독일의 ‘더블루케이’와 한국의 ‘(주)더블루케이’에 대한 의혹	51
3.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	52
X. 수사과제 및 수사 촉구 사항	53
1.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강력한 수사 촉구	53
2. 이 사건 10대 수사 과제	55
3. 청와대 및 각 기업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필요성	58
4.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조사 실시, 출국금지 조치 확대, 신변 구속의 필요성	59

1. 서 론 : 이 사건의 본질 - 정경유착과 국정농단/헌법질서 파괴행위

- (1) 최순실은 국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등에 업고 국정에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2016. 10. 24.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파일> 보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10. 25. 스스로 최순실의 국정 개입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국민 모르게 최순실에게 넘겨 대신 행사하게 하였습니다.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자체의 부정입니다.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권세를 휘두르는 한 개인의 국정 개입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 (2) 권오현(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재벌기업들의 각 대표이사들(이하 “권오현 등”)은 소위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결탁하였습니다. 권오현 등은 자신들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대가를 얻었거나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습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서, 이는 권력을 사유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 (3) 이번 사안의 본질은 우리의 헌법질서를 뿌리까지 흔들어 놓을 정도로 심각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첫째, 우리 헌법 제1조가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파괴행위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기구가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는 공화국 이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일개 사인이 대통령의 당선 이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계속하여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 까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중요 사안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고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권력 뒤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림자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정부의 정치 행위 곳곳을 좌우하고 심지어 그 권력을 발판삼아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을 출연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가 이 정부 내내 계속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였습니다. 추악한 국정농단의 주요 매개고리로 고질적 ‘정경유착’이 악용되었고, 그것이 이 사건을 더욱 파괴적 헌법질서 파괴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기업과 전경련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여 거액의 돈을 출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원하던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조치, 특별사면 등 대가를 받아갔습니다. 이는 과거 일해재단과 같은 청와대/전경련/재벌기업간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그 명목과 관계없이 ‘포괄적 뇌물’의 수수행위이고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에 해당합니다. 청와대, 대기업, 전경련이 돈을 매개로 특혜와 대가를 주고받고 중요한 경제정책을 왜곡시켜 버린 ‘정경유착’의 본질은 놓칠 수 없는 사안의 본질입니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8조)합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 (4) 이러한 헌법질서 파괴행위, 민주공화국의 심각한 위기 앞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번 사건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까지 핵심 수사대상이 된 마당에 그간 국정원 대선개입, 정윤희 문건 유출 등 수많은 사건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덮어 왔던 검찰에게 사건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고, 이미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특검 실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검이 실시되거나



국정조사가 시행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범위, 수사대상에 하나의 성역도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 (5) 이하 이른바 최순실 파일의 범죄 성립, 재단 설립과정의 포괄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성립, 출연 과정의 각 기업 대표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재단 설립 및 설립된 재단 자금의 유용과 관련한 최순실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성립을 살펴보고, 향후 핵심 수사 과제 및 수사촉구 사항을 개진합니다.

2. 최순실과 관계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성립

- (1) 한 언론매체는 2016. 10. 25.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 시나리오(이하 ‘이 사건 시나리오’라고 합니다)를 받아 봤으며, 이 사건 시나리오에는 국가안보 기밀, 외교 안보, 경제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담겨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위 시나리오에는 최근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 접촉했다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단독] “북 국방위 비밀접촉” 안보 기밀도 최순실에게…, jtbc, 2016. 10. 25.

- (2) 대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 군사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6조), 그 해제는 해제 예고일자의 도래로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예고문에 의한 해제와 공개 등의 사유로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되는 긴급해제로 구분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국방부장관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안정책회의의 회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한 때부터 군사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군사기밀의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해제되었거나 국방부장관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 한 비록 군내부에서 그 사항이 평문으로 문서수발이 되었다거나 군사기밀사항이 장비제작의 장비설명 팜플렛, 상업견적서요구공문에 기재되어 배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참조)

- (3) 이 사건 시나리오에 기재된 ‘현안 말씀’이란 항목에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으로서 해야 할 말들이 정리되어있으며, 그 중 지금 남북 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 최근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접촉을 했다는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즉, 위 대법원의 판시에 비추어보면 우리 군이 북한 최고의 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와 비밀접촉을 했다는 것은 지정된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위 내용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국민에게 공개되지도 않았으므로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정보가 이 사건 시나리오에 일부 내용으로 기재되어 최순실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4) 또한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접촉을 했다는 내용에 비추어보면 최순실과 위 내용을 최순실에게 전달하거나 전달을 지시한 관계자는 위 정보가 군사기밀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5) 민간인에 불과한 최순실은 군사기밀이 포함된 이 사건 시나리오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비공개 단독회담이 예정된 시간보다 앞선 2012. 12. 28. 10:58경 미리 전달받았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는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으며, 위 조항은 기밀누설의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최순실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됨이 마땅합니다. 아울러 위 군사기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시나리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한 청와대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누설죄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대통령이 위 누설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청와대 또는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외교상기밀누설죄 성립

- (1) 한 언론매체는 2016. 10. 25.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입수해서 분석한 파일(이하 ‘최순실 파일’이라 합니다)중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에 해당하는 파일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단독] 외교부 등 정부부처 공식 문건도 최순실 손에..., jtbc, 2016. 10. 25.

- (2) 대법원은 “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외교상의 기밀이라 함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며, 외국에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정책상 그 사항의 존재 또는 진위 여부 등을 외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으로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참조).
- (3) 최순실 파일에 담긴 호주 총리와의 통화참고자료라는 문건은 당시 길라드 호주 총리와 통화하기 14시간 전에 최순실이 받았습니다. 파일작성자 아이디는 외교통상부의 영어 약자인 ‘MOFAT’ 였고, 이는 외교통상부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주 총리와의 통화참고자료는 외교통상부 내에서 누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4)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호주총리와의 통화참고자료는 박근혜 대통령이 길라드 호주 총리와 통화하기 전까지는 공지의 사실로 볼 수 없으며, 외국인 호주와의 관계에서 비밀로 하거나 적어도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자료이므로, 호주총리와의 통화참고자료는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합니다.
- (5) 외교통상부에서 외교상 기밀을 담당하는 관계자 또는 청와대에서 이를 일반인인 최순실에게 전달하거나 전달을 지시한 청와대 관계자는 최순실에게 외교상의 기밀인 호주총리와의 통화참고자료를 누설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즉 최순실에게 호주 총리와의 통화참고자료를 누설한 청와대 관계자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관계자를 확인하여 수사하여야 할 것이고, 대통령이 위 누설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청와대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 (1) 한 언론매체는 2016. 10. 24. 소위 최순실 파일을 공개하였고, 이 파일은 44개의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포함해 총 200여개의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날인 2016. 10. 25.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 며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체계

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 고 해명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통하여 대통령 연설문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점을 시인하였습니다.

- (2) 대법원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 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협하기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판결 참조)

- (3) 2014. 3.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은 공개 하루 전 최순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위 판결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 ① 위 연설문이 최순실에게 전달된 당시에는 비공지의 사실이었던 점,
 - ② 드레스덴 연설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통일 대박론’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아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연설문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이 담겨있어 그것이 공개되기까지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인 점,
 - ③ 위 연설문이 공개되기 전에 일반인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유출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 등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합니다.

- (4) 또한 최순실이 미리 받아 열어 본 파일에는 연설문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의 자료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자료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이므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 (5) 소위 최순실 파일에는 청와대 비서실 핵심 참모가 최종 수정한 것으로 확인된 문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충실성이 요구됩니다. 더구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청와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그 권한과 직책의 무게에 비추어 더 높은 수준의 충실의무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에서 일하는 관계자가 누설하거나 누설을 지시한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대



단히 높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국정 전반에 걸쳐 최고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그 연설문의 내용의 변경은 국정 최고의 의사결정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최고의사 표현인 연설문을 고쳤다는 것은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 (6) 만일 위 공무상비밀의 누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또는 묵인 속에 전달된 것이 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직접 유출한 청와대의 관계자를 밝혀내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 (1)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 인터뷰에서 이성한은 “최순실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30cm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가 놓여 있었으며 자료는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들로 거의 매일 밤 청와대의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들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은 이런 모임을 주제별로 여러 개 운영했으며,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자문회의 성격이었고, 차은택은 항상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 “최순실, 정호성이 매일 가져온 대통령 자료로 비선모임”. 한겨레, 2016. 10. 25.

- (2) 이성한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위 인터뷰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고, ‘대통령 보고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된다면, 정호성 또는 이를 유출한 청와대 소속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¹²⁾위반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한편 최순실은 ‘대통령 보고자료’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을 지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를 회의에 참석한 차은택 등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19조¹³⁾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최순실,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이 미르재단 자금모집과 설립 등을 주도한 사실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

가. 정치권력을 돈으로 사는 정경유착의 발본색원

- (1) 정경유착(政經癒着)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권력을 특정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경제력집중과 탈세, 부정부패, 법과 정의의 실종 등을 낳아 그 자체로 망국적인 것입니다. 특정 재벌들이 요구하는 경제정책이 때로는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통한 균형있는 경제발전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위반하거나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전 등 공익적 가치와 배치되기도 합니다. 공론의 장에서 공개된 토론과 논쟁을 거쳐 채택되어야 할 경제정책이 정경유착의 음습한 통로를 통해 채택된다면 그로 인한 경제의 왜곡과 법과 정의의 실종은 뒤로 하더라도 국가정책의 신뢰 자체가 상실되어 국가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불신이 확산됩니다.
- (2)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961년 7월 재벌기업들이 ‘부정축재자 처벌’을 피하는 대신 ‘경제재건에 헌신할 것’을 약속하며 발족한 ‘경제재건촉진회’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전경련은 그 시작부터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을 돕는 것과 동시에 재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익단체입니다.

그 뒤로도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을 전경련이 주도하여 모금한 사실이 ‘5공 청문회’에서 드러났고,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비자금 사건으로 재벌총수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95년 11월 3일 전경련은 음성적 정치자금을 내지 않겠다는 전경유착 단절선언을 반복하였습니다.

1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③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하지만 전경련의 ‘단절 선언’은 허무했습니다.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불법대선자금 사건(차떼기 사건) 등 재벌기업들은 강제적이든 아니든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정경유착은 ‘단절’ 되기는커녕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 (3) 2015년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경련과 함께 재벌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의 자금을 모아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들로 하여금 각 재단들이 운영된 소위 ‘미르 사건’ 의혹은 재벌기업들과 정치권력의 정경유착 행태가 깊게 뿌리박혀 쉽게 근절되기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 (4) 일본의 경우 ‘경단련’이라는 대기업이익단체가 오랜 기간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단련도 2010년 3월 8일 대기업이익에 합치하는 정책평가를 통해 정치헌금을 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미국 등을 참조해 총수 개인 헌금을 확대하겠다는 ‘정경유착 단절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서구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종종 대형 뇌물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와 같이 재벌 대기업들과 정치권력 사이의 정경유착이 고착화 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유착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로 대처하여 정경유착의 고질병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 (5)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은 두 손바닥이 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손뼉과도 같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물로 삼아 돈을 받고 처분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반민주적이고 부패한 정치세력이 한쪽 손바닥입니다. 다른 쪽 손바닥은 ‘푼돈을 들이더라도 큰 돈을 벌어보자’는 식의 재벌대기업들의 욕심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스토리의 권력형 비리도 문제지만,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묻어 피해자인 양하는 거대경제권력의 문제가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형 비리의 이면에는 친재벌정책 등 경제적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뇌물을 제공해온 거대경제권력이라는 더러운 토양이 있습니다. 이 두 손바닥이 다시는 부딪치지 못하게 하는 것, 국가권력이 돈에 의해 팔려 다니는 이 불행한 반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한 ‘필벌’ 뿐일 것입니다.

나. 일해재단 사건과의 유사성

- (1) 소위 5공 비리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일해재단은 1983. 10. 9.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발사건으로 순직한 희생자들의 유족에 대한 지원과 장학사업을 위하여 1983. 12. 경 설립되었습니다.¹⁴⁾ 당시 일해재단은 ‘순국사절 및 부상자와 국가유공자 자녀

14) 일해(日海)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로서, 일해재단은 1985년 말에 연구소 건물이 완공되고,

교육을 위한 장학금 지원’ 과 ‘86·88 국제경기에 대비한 우수 선수 및 체육 지도자 육성 지원’ 을 설립 목적으로 삼아 최순달 전 체신부장관, 정수창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정주영 현대그룹회장, 구자경 럭키금성그룹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양정모 국제그룹 회장 등 국내 정상급 재벌 그룹 회장 등 7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 일해재단은 1984년에 185억 5,000만 원, 1985년에 198억 5,000만 원, 1986년에 172억 5,000만 원 그리고 1987년에 42억 원 등 총 598억 5천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1988년 제13대 총선 이후, 일해재단은 5공비리의 대표적 사건으로 취급되어 5공비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5공 특위’ 라고 합니다)의 조사대상이 되었습니다.

(3) 위 5공 특위 청문회에서 일해재단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냈다 장세동의 증언과 달리 전 국제그룹 회장 양정모,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 기업인들은 ‘반강제적으로’ 기금을 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특히 정주영은 처음 23억 원은 (아웅산 묘지 폭탄테러 사건으로 인해) 순국하신 분들의 위로금이라 생각해서 자진해서 냈지만, 2차, 3차는 “정신적 강제성을 느꼈다” 고 말하였습니다.

※ 국회 5공비리특위 일해재단 청문회 내용 정리[김성수], MBC, 1988. 12. 14.

(4) 결국 일해재단 사건을 보면, 전두환을 비롯한 당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특히 전두환의 최측근이었던 장세동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직접 기업총수들을 만나면서 반강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였고, 다수의 기업들이 ‘잘 보이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했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5) 아래를 보면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사건>은 <일해재단 사건>과 닮은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 유사성 ① [재벌 기업들의 재산 출연 과정]

이 사건에서 재벌 기업들은 기업자산 순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일해재단과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은 공통적으로 ‘경제계의 자발성’ 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일해재단 모금과 설립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장세동은 5공 특위 청문회에서 “강제모금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1986. 1.경 ‘일해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소했습니다. 13대 총선 후 여소야대 상황이 되고 5공 비리가 불거지면서 일해연구소는 세종연구소로 명칭을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되고 있을 필요도 없었다. 경제인들 스스로가 상호협의 조정해 결정했다.” 고 밝혔으나, 이를 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내라고 하니까 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 냈다...그 다음부터는 내기가 힘들어 졌으나 그렇다고 안 낼 수도 없었다.” (1988. 11. 9. ‘일해재단 청문회’ 중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발언) 고 하여 모금 과정의 강제성을 폭로하였습니다. 장세동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또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금을 출연한 건설업체들은 정작 비슷한 시기에는 자신들이 설립한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는 약정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만 출연하거나 아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는 약정액 납부를 신속히 완료한 것과 확연히 대조되는 부분이며,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모금 과정에 일정한 권력 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추단케 하는 정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6. 10. 20.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신이 기업인들과 소통하여 논의과정을 거쳐 문화체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당부하였고, 이에 기업인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이다’ 는 취지로 자신의 관여를 자인한 바 있습니다.(이하 ‘3. 박근혜 대통령 및 청와대 차원에서 각 재단 설립이 기획추진되었던 사실’ 참조)

(나) 유사성 ② [모금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일해재단 사건>에서는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 장세동이 모금 과정에 적극 개입하였고,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사건>에서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안종범이 적극 개입하였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다) 유사성 ③ [출연자들의 이사회 배제]

<일해재단 사건>에서 거액의 금원을 출연한 전경련 소속 재벌기업들은 정작 이사회에서는 배제되었고, 전두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연자인 기업들과 모금을 직접 담당하였던 전경련은 완전히 배제된 채, 미르재단의 경우 김형수 연세대 교수가, 케이스포츠재단의 경우 정동구 전 한국체육대학 총장이 각 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형수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직속의 문화융성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정동구 전 한체대 총장이 취임 1달여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다” 며 사임함에 따라 정동춘 CRC운동기능회복센터원장이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정동춘은 최순실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 유사성 ④ [재단과 관련된 기록의 날조]

재단과 관련된 기록은 일해재단과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모두 감춰지거나 조작되었습니다. 일해재단 청문회에서 국회에 제출된 일해재단의 경리장부(회계장부)가 청문회를 앞두고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내부자들의 증언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자금을 받고 기업들에게 써준 영수증의 서명 역시 날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인가 관련 서류(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등)와 일부 직인 역시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조작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마) 차이점

일해재단의 경우, 전두환 전대통령측은 구체적으로 주는 것 없이 받기만 했다 면,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사건>에는 거래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재벌대기업이 원하는 경제정책이라는 구체적인 거래대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래대상은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실제 2013년 7월 17일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이사회 의 업무감독 기능강화’,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감사회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방식 도입’,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 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2013. 8. 28. 재계 총수와 만난 자리에서 재계총수들의 우려를 듣고는 상법개정안은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은 중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거래대상은 재벌대기업이 원하는 노동개혁5대법안,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몇 가지 입법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대가로 뇌물이 오고간 정황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이후 2015년 말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설립되고 모금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모금이 한창이었던 때인 2016. 1. 18.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운동’에 직접 서명하기에 이릅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VII. 2.청와대 경제수석이 자금모집을 할 당시 전경련이 주도하여 정부에 요



청하고 있던 청탁내용’ 참조)

(6) 이처럼 <일해재단 사건>과 이 사건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사건>은 모두 정권에 의해 기획·실행되었고, 권력형 정경유착의 비리라는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일해재단 사건에서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 장세동이 전경련을 통해 모금을 했던 행위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고, 그저 당시 서울시장 염보현과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양재동 77의1 부지 17,200㎡를 공용 청사 부지로 지정 공고하게 하고, 일해재단 사무처장 김인배로 하여금 이사회 결의 없이 일해재단 영빈관을 건축하게 하였다는 것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하였습니다.¹⁵⁾ 하지만 이와 같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는 ‘정경유착’이라는 본질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수박 겉핥기식 수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7) 2016년 10월 현재 온 국민들은 이 사건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사건>에 대해 깊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단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주어진 각종 특혜나 이를 관철시킨 최순실의 비상식적 위세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아닌 사람에 굴종하는 공권력, 최순실에게 알아서 특혜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들을 바라보며 정의와 평등의 가치가 훼손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수십억 원을 출연하면서도 정작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려 하고, 정권으로부터 각종 이권을 챙기면서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전두환, 노태우 뇌물수취 사건에서 정립된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

(1) 대법원¹⁶⁾은 전두환, 노태우 뇌물수취 사건¹⁷⁾에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정립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을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 감독하여 정부의 중요 정책을 수립 ·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 등 각종 재정 ·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서업의 인 · 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15) 해당 사건 중 장세동의 직권남용과 경호실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법원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16)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17) 전두환에 대한 추정가액은 2,205억원, 노태우에 대한 추정가액은 2,629억원입니다.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도 역시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
- ③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위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 ④ 대통령에 대한 금원 공여의 취지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집행하고 금융·세계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데에 있었던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도 앞서 본 대통령의 직무와 그 금원의 공여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즉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서, 직무의 범위는 특정될 필요가 없고, 대가관계 역시 구체적일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뇌물수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은 “부패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회의원에게도 위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4)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사건에서도 포괄적 뇌물수뢰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습니다.

라. 박근혜 대통령 및 청와대 차원에서 각 재단 설립이 기획·추진되었던 사실

(1)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0. 20.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처음으로 언급하였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 ① “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두 축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것은 전 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과거 산업화시대처럼 관 주도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축을 이끌어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② “기업들도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시장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것이 곧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되며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 ③ “외국순방 때마다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한 여러 기업들과 그동안 창조경제를 함께 추진해온 기업들이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뜻을 같이하게 됐다”,
- ④ “물론 이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논의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면 지난(해) 2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바가 있고, 또한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 대표를 초청한 행사에서도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이 바로 문화콘텐츠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복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 ⑤ “이에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다“
- ⑥ “과거에도 많은 재단들이 기업의 후원으로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해 왔는데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재단 설립의 경과이다“

등과 같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경과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 박 대통령, 청와대 주도 미르·K재단 설립 시인, 프레시안, 2016. 10. 20.

- (3)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논의과정을 거쳤다. 이에 기업들이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부탁한 바도 있다. 이에 기업인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이다. 전경련이 나서고 기업인들이 이에 동의해 설립된 것이다.’ 는 것이 됩니다.

- (4) 위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경제수석 등 청와대의 핵심인물들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모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정

도가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과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의 진술은 서로 다릅니다.

이승철은 2016. 9. 23.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은 기업들이 한류 덕을 보면서 문화 사업에 기여한 게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 자발적으로 설립한 재단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고, 안종범에게는 출연규모나 방법 등이 거의 결정됐을 시점에 알려줬을 뿐 사전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청와대 개입설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전경련 소속 기업들에게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를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이승철의 진술과, 서로 교감이 있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은 상반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한 자백이라는 점에서 이와 배치되는 이승철의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진술은 그만큼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6)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와대의 개입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 ① “과거에도 많은 재단들이 기업의 후원으로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한” 것은 해당 민간 재단(또는 단체)을 만든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노력을 기울여 기업의 후원을 얻어내고 투명하게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익법인들은 이 사건처럼 청와대-정부-전경련의 조직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 아래 만들어지지 않았고, 고유한 사회적 공익사업이 아니라 청와대의 사업을 거의 전담하지도 않았습니다.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은 창립된 후 지금까지 청와대 관련 사업 말고는 여타 주목할 만한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 ② 진실로 “관 주도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했다면, 기존의 수많은 민간단체들과 협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식적입니다. 이미 한식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한식재단이 있고, 태권도 전과 관련해서는 국기원도 있습니다.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고 해외에 알리려는 수많은 법인들이 존재합니다. 스포츠나 태권도와 관련된 민간단체들도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설명에는 “굳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¹⁸⁾

18) 2015. 12. 31. 기준 문체부소관 법인은 총 1,452개에 이르고, 그 중 재단법인은 334개, 사단법인은 1,076개에 이릅니다. 한류의 해외 홍보와 관련된 법인으로는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한류문화인진흥재단, 한외국인친선문화협회, 한중문화관광미디어총연합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연구원, 세계한류학회, 한국관광개발원 등이 있고, 한식의 해외 홍보와 관련된 법인으로는 한식재단, 한국음식문화연구원, 세계미식문화연구원, 한국음식관광연구원, 한국음식관광협회 등이 있고, 태권도와 관련된 법인으로는 국



③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주도로 설립된 재단들은 당초 취지에 맞게 해외순방 과정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소위 코리아 프리미엄을 전 세계에 퍼트리는 성과도 거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성과를 거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은 전경련의 일방적이고 전격적인 해산 선언에 따라 해체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이미 벌어진 현실은 모순적입니다.

(7) 오히려 청와대가 기획하고 전경련이 나서면서 재벌대기업들이 이에 돈을 모은 민간 재단은 앞서 살펴본 ‘일해재단’이 거의 유일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 안중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재단설립과 모금을 기획·주도한 사실

(1)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바와 같이 청와대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모금 과정에 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안중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있습니다. (안중범은 2016. 10. 21.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전화하였던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2) 청와대 수석, 즉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은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상 대통령비서실장의 지휘에 따라 담당 분야별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비록 차관급이라고는 하나, 대통령을 가장 가깝게 보좌하는 공무원으로서 담당 분야에서 수석비서관의 의견은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행정각부의 차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갖습니다.

(3)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체육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행정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2015년 당시 김상률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담당할 일이지 안중범 경제수석이 담당할 일이 아닙니다.

(4)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과 같이 청와대가 문화융성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전경련이나 미르재단과 접촉한 것이라면, 안중범은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열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안중범은 국정감사에서 기업들이 순수하게

기원,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코리아태권도예술단,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등이 있고, 스포츠와 관련된 법인은 대한체육회, 국제스포츠협력센터 등 물경 156개(체육관광정책실 소관 법인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각 재단들에 기부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진실로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안종범이 전경련에 얘기해 일괄적으로 기업들에 할당해서 자금을 출연하도록 하였다는 대기업 관계자의 진술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종범은 국정감사에서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 (5) 결국 재벌기업들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은밀하게 전경련을 통해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안종범, 전경련, 각 기업들 사이에 모종의 비밀스러운 대가관계가 존재했던 것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바. 전경련이 조직적으로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사실

- (1) 전경련은 이승철의 지휘 아래 직접 재벌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약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미르재단은 2015. 10. 27. 설립허가를 받은 지 단 2개월만에 486억원을 (2015년 12월 기준), 케이스포츠재단은 2016. 1. 13. 설립허가를 받은 지 단 약 7개월만에 288억원을(2016년 8월 기준) 각기 모았습니다.

※ 대기업들은 왜 신생재단 2곳에 774억을 냈나, 조선닷컴, 2016. 9. 23.

두 재단은 모두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미르재단 약 2개월, 케이스포츠재단 약 7개월) 동안 774억원을 모은 것입니다. 특히 미르재단이 모은 486억원은 작년인 2015년 대한적십자사가 받은 기부금보다도 많은 돈이고, 문화분야에서 독보적인 모금액에 해당합니다.

- (2) 전경련은 2016. 10. 25. 대기업에 긴급협조공문을 보내,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 반드시 내일 팔래스 호텔 모임에 참석하라’고 전달했고, 대기업 담당자들은 다음 날인 10. 26. 서울 팰래스 호텔에 모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적성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5시 세종시에서 상경한 문화체육관광부 주무관이 미르재단 설립 관련 서류를 수령하여, 바로 다음 날인 27. 오전 재단설립허가가 결재되었습니다. 전경련은 미르재단 설립허가가 결재된 지 2시간도 안 되어 미르재단 발족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전경련은 미르재단 설립허가가 27일 당일 날 것을 알았다는 듯이 당일 오후 2시에 전경련은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3) 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체부가 허가한 12개 재단법인이 설립 신청을 하고 허가받기까지 최장 98일, 평균 27.9일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허가 신청 하루만에 설립허가를 내 준 곳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경련이 주도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절차는 설립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이해적인 배려 속에 이해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고위 권력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회, 400억 미르재단 하루 만에 줄속 허가, 재단법인 허가 평균 한 달 걸려, 경기인터넷뉴스, 2016. 9. 11.

- (4) 심지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회사들은 정작 자신들이 기부를 약속한 공익재단에는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등은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 550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실제로는 2.9%인 16억 원만 냈습니다.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은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던 74개 건설업체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제재 조치를 감면받은 뒤 8월19일 대한건설협회 주도로 ‘자정 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열고 같은 해 12월 설립한 기금 규모 2천억원의 공익재단인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까지 독촉을 해도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독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수십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단독] 미르·K에 ‘쾌척’ 건설업체들, 자기 재단엔 약속한 돈 3%도 안 냈다, 한겨레, 2016. 9. 24.

- (5) 게다가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은 회사 재산을 제3자에 출연하는 것과 관련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두 재단에 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 노웅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내부 규정 어겨“, 서울경제, 2016. 9. 26.

포스코는 케이스포츠재단 설립허가일(2016. 1. 13.) 보름 후인 1. 28. 이사회를 열어 30억 원을 출연하기로 의결하였는데, 그에 앞서 재정 및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는 포스코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미르재단에 30억 원을 출연할 때에는 재정 및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015. 11. 6. 이사회 결의만으로 미르재단 기금 출연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KT는 이사회 규정상 10억 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인 경우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사회 의결은 없었습니다. 삼성물산도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 이사회에 부의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사회 의결은 없었습니다.

- (6) 재벌기업들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약속한 기부금은 내지도 않고, 자신들이 입은 정책적 수혜를 사회적으로 나누어야 할 의무마저 부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 이사회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급조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는 수억,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은 문화융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대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넉넉히 추단됩니다.

사. 최순실이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

- (1) 최순실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최태민의 다섯째 딸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음봉사단 총재를 맡고 있던 시절 최태민은 새마음갯기운동본부 본부장을, 최순실은 새마음대학생 총연합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되고 이듬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옆을 지킨 사람은 최순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생을 시작할 때에는 최순실의 전남편 정윤희가 비서실장을 맡았고, 소위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은 정윤희가 발탁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개명전 정유연)의 승마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의 특별감사를 지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진술에 따르면 특별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문체부 체육국장과의 체육정책과장을 경질시킨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혈육보다 믿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최순실+박근혜 ‘40년 우정’ 동영상 발굴, 뉴스타파, 2016. 9. 29.

- (2) 최순실은 2016년 초부터 자신이 잘 아는 주변의 체육인들에게 케이스포츠재단의 취지를 설명하며 재단 이사장 등의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포츠재단 1대 이사장이던 정동구는 단 한 달 만에 사임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6년 2월 케이스포츠재단 2대 이사장에 취임한 정동춘은 최순실이 5년간 단골로 드나들었던 서울 신사동 소재 운동기능회복센터 원장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정동춘 이사장과 함께 운동기능회복



센터를 공동 운영한 적이 있는 성명불상의 이씨는 “저도 최순실님으로부터 (케이스포츠재단 참여) 제의를 받았다.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따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다”며 “정 박사님(정동춘 이사장)은 인품도 훌륭하고 스펙도 준비가 된 분이니 최순실님이 제안을 하셨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이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케이스포츠재단이나 전경련과 공식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최순실이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3) 최순실은 미르재단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르재단 이사로 선임된 김영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취임식 때 입은 340만원 상당의 한복을 만든 디자이너였는데 조용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순실이 한복을 주문했고, 이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 미르·K스포츠 이사진에 '최순실 라인'... 비선 실세의 그림자, 한국일보, 2016. 10. 2.

- (4) 미르 재단을 기획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는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은 최순실과 각별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차은택은 2016년 초 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으면서 현 정권의 문화계 비선실세로 지목을 받아왔습니다. 차은택은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는데, 초기 미르재단 이사 7명 중 3명이 문화융성위원회의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미르재단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초대 이사장인 연세대 김형수 교수와 3명의 이사 등 총 4명이 차은택의 추천을 통해 이사장 및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차은택 본인도 이사진 선임과정에 개입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TV조선 단독]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미르재단' 좌우, TV조선, 2016. 7. 27.

또한 차은택의 측근인 (주)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홍탁은 차은택이 자신을 대표로 앉혔고,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며, 그 재단은 확실한 조직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김홍탁 대표의 발언이 녹취된 시점은 2015년 3월인데, 그로부터 약7개월 후인 2015. 10. 27. 미르재단이, 10개월 후인 2016. 1. 13. 케이스포츠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주)더플레이그라운드는 설립된 지 두 달 만인 2015. 5. 문체부가 진행하는 국책프로젝트를 따내기도 하였고,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당시 케이스포츠재단 산하 태권도 시범단 ‘K스피릿’ 공연 진행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 [단독] 차은택 측근 녹음파일…“돈줄은 재단이라“, JTBC, 2016. 10. 5.

- (5) 미르재단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1년입니다. 그런데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관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2016년 9월초 미르재단의 경우 3명의 이사가 사임을 하고 3명이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케이스포츠재단도 마찬가지로 사무총장 역할을 맡았던 정현식 이사, 김기천 감사, 이철원 연세대 교수도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나머지 이사 전원이 사의를 표한 상태입니다.

※ 1년도 안된 미르재단, 이사 3명 교체…그 안에선 무슨 일이?, 한겨레, 2016. 9. 21.

나아가 미르재단의 초대 이사장인 김형수 교수는 정작 본인이 대표권을 가진 초대 이사장이면서도 “미르재단의 태동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모른다“, “재단의 일은 상근하는 사람들이 주로 한다“, “재단 이사장직은 결재권한도 없는 비상근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직에서 최근 사임한 이철원 교수는 ” 자문 역할을 하러 간 것이라 재단 내부의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 “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었고, 각 재단 이사들이 외부의 압력과 무관하다면, 의혹제기 국면이라 하여 사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전임 이사장마저 ” 결재권한이 없었다 “고 말하는 것은 각 재단이 이사회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각 이사들이 어떻게 선임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2016. 10. 21.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에콜 페랑디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최순실씨와 차 감독이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 감독은 나를 호출해 회의를 진행했고 예산 사용과 사업 방향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다”, “차 감독이 호출해 회의실에 가 보면 그 자리에는 항상 최씨가 있었다.”, “사업 초창기에 한 여성이 나타나 모든 사안을 결정하길래 그 정체가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최씨였다” 고 진술했습니다. 미르재단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이 최순실을 지목한 것입니다.

※ “대통령이 관심 보인 에콜페랑디…최종 결정권자는 최순실·차은택” 미르재단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최순실과 차은택 전 문화, 중앙일보, 2016. 10. 21.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전현직 관계자들에 의하면, 최순실은 재단에서 일할 이어나 직원을 모집할 때 “재단이 체육과 문화에서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어



느 쪽에서 일할지는 나중에 결정해서 알려주겠다”고 하고, 채용한 이후에도 “보안이 중요하다. 은밀하게 해야 한다. 외부에 알리지 말라”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 “최순실, VIP관심사항…블루K 블루는 청와대라고 말해”, 한겨레, 2016. 10. 20.

(6) 최순실은 자신의 딸 승마선수 정유라와 함께 지분 100%를 보유한 ‘더블루케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케이스포츠재단의 자금을 빼돌리려고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케이스포츠재단의 한 관계자는 “재단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더블루K의 ‘블루’가 청와대를 의미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언론에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7)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최순실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 관여하였던 것은 사실로 봄이 상당합니다.

아. 정부 차원에서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을 지원한 사실

(1) 미르재단은 2015. 10. 26. 설립허가 신청 다음날인 2015. 10. 27에, 케이스포츠재단은 2016. 1. 12. 설립허가 신청 다음날인 2016. 1. 13에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습니다. 두 재단은 모두 설립허가를 신청한지 단 하루 만에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2) 특히 미르재단 설립허가절차는 주무부서이자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개입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미르재단 설립허가절차의 실무를 맡았던 문화체육관광부 김모 주무관은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2015. 10. 26.에 있었던) 서울 출장 목적은 전경련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기 위해서였”고, “전경련 측에서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연락이 와 과장에게 보고했더니 서울에 가서 받아오라고 지시했”으며, “미르재단 외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측을 찾아가 서류를 받아온 적은 없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 문체부 거짓말, 주무관 미르재단 관련 서울출장 허위로 드러나, 노컷뉴스, 2016. 9. 28.

나아가 김 주무관이 전경련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다음 문체부 공무원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오후 5시에 서류를 받은 김 주무관은 그날 저녁 8시7분 서

류를 문체부 서울사무실에서 내부 시스템에 등록했고, 8시10분 사무관이, 8시27분 과장이 세종청사에서 각각 원격 결재를 마쳤으며, 이튿날 오전 8시9분 콘텐츠정책관의 결재를 거쳐 오전 9시36분 재단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 [단독] 문체부, 미르 설립 허가때 ‘초고속 출장서비스’, 한겨레, 2016. 9. 28.

(3) 문체부는 전경련이 주도한 설립절차를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미르재단은 2015. 10. 27. 현판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현판식과 같은 행사는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미르재단은 이미 10. 27. 이전에 법인설립허가절차가 완료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4)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과 문체부는 법인허가절차와 관련하여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음이 넉넉히 추단되는바, 안종범이 문체부를, 이승철이 전경련을, 최순실이 미르재단을 각기 통제하면서 재단설립 과정을 통모하여 주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자.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의 사업이 청와대와 관련된 사실

(1)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은 수백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였으면서도 외부로 크게 드러나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업에는 그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2) 미르재단의 첫 사업은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 에콜 페랑디 한식과정을 만드는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요리 행사에서 “프랑스 에콜 페랑디 안에 한식 과정을 만들게 된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고 말하면서 미르재단의 MOU 체결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미르재단은 에콜 페랑디와 MOA까지 체결하였습니다. 일반 민간재단의 사업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언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3) 미르재단은 에콜 페랑디와의 사업과 관련된 ‘페랑디-미르학교’를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홍보·체험 시설인 서울 중구 필동에 위치한 ‘한국의 집’에 개설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인 미르재단은 ‘한국의 집’이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국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사용 목적’을 적용하여 국유재산법이 정하고 있는 연감임대료를 1/2로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일반 민간재단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법령을 어겨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미르재단이 대단한 뒷배경을 가졌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이유입니다.

※ 미르재단의 ‘갑질’, 한겨레, 2016. 9. 22.

- (4) 미르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당시 선보인 ‘코리아 에이드 사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코리아 에이드 사업’은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동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앞두고 개발한 새로운 한국형 개발협력(ODA) 모델이라고 정부가 홍보해온 대외원조 사업 모델인데, 미르재단은 이 코리아 에이드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인 2016. 1. 20. 이화여대측과 케이밀 시제품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이튿날인 21일부터 청와대와 외교부가 주도하는 코리아 에이드 TF 회의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케이밀 사업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에서 핵심적인 것인데, 미르재단은 케이밀 사업에 쓰인 가공식품 개발사로 이름을 올렸고, 사업 홍보대행사 선정과 정에도 관여하였습니다. 일반 민간재단 인사가 공공기관의 홍보대행사 선정 평가에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 [단독]미르재단, 박 대통령 아이디어인 ‘K-밀 사업’에까지 관여, 경향신문, 2016. 9. 23.

※ 미르, 정부 역점사업도 한발 앞서 개입, 한겨레, 2016. 9. 25.

- (5) 심지어 미르재단은 케이-밀 사업과 관련하여 특혜를 입었고, 이러한 김재수 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시절 제공되었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2016. 10. 29.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원래 케이-밀 사업은 한식 해외홍보와 ODA 핵심 공공기관인 농식품부 산하 한식재단과 한국농어촌 공사가 사업 추진 핵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정작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들 기관은 각 빠지고 미르재단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르재단의 문화기획·콘텐츠사업팀장인 직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채 케이-밀 사업 홍보대행 용역계약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홍보대행 업체 선정에도 관여하였습니다. 나아가 김재수 장관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시절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가장 공들인 사업 중 하나에 풀 페랑디에 한식수업을 개설하는 것이었는데, 미르재단은 설립된 지 불과 1개월만에 해당 사업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 [농해수위 국감]미르재단-김재수-aT 연관 의혹 ‘십자포화’, 머니투데이, 2016. 9. 29.

※ 김재수가 공들인 사업 꿀꺽한 미르 그 결정적 순간에 대통령이 있었다, 오마이뉴스, 2016. 10. 12.

- (6) 미르재단은 케이타워 프로젝트에도 등장합니다. 케이타워 프로젝트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2016. 5. 2. 테헤란에서 대한민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포스코 이앤씨(E&C), 이란의 교원연기금이 이란 내 한류문화를 교류할 문화·상업·업무 시설 개발 협력 추진을 위해 이란에 케이(K)타워를, 서울에 아이(I)타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이란 양국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케이타워 사업과 관련해, “한류교류증진의 주요 주체는 한국 내 16개 대기업이 공동 설립한 미르재단이 될 것임” 이라고 적시¹⁹⁾되어 있었습니다. 케이타워 프로젝트는 한-이란 정상외교의 공동성명에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무회의 보고에서 “브이아이피(VIP) 관심사로서 한-이란 공동 선언문에 포함돼 적극적인 추진이 불가피하다” 고 보고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일개 재단이란 것은 ‘특혜’가 아니고서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한-이란 ‘K타워 프로젝트’ 도 “미르재단이 사업 주체”, 한겨레, 2016. 10. 4.

- (7) 케이스포츠재단은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 때 공식 태권도 시범 공연을 주관하였습니다. 설립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신생 재단이 국기원을 제치고 중요 태권도 행사를 담당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태권도 시범단은 실제로 모 대학 소속이고 케이스포츠재단은 섭외를 담당하였으며, 시범공연의 기획, 행사진행 등은 차은택의 지인 김형택이 대표로 있는 더플레이그라운드가 맡았습니다.

※ [TV조선 단독] 케이스포츠, 대통령 순방행사 참여, TV조선, 2016. 8. 4.

- (8) 이처럼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한 공식행사와 사업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재단, 국기원 등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사업단위들을 제치고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재단이 이처럼 깊숙이 정부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정권 차원의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9) 지금도 수많은 중소기업이나 기관들은 어떻게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쌓기 위해 구슬같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전경련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굵직한 국가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한 사업을 따냈습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비리와 특혜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 2016.10.04. 한겨레, <한-이란 ‘K타워 프로젝트’도 “미르재단이 사업 주체”> <https://goo.gl/L58X0S>
검색일 : 2016.10.14.



차. 소 결 - 성금, 선의의 출연 등 명목과 무관하게 포괄적 뇌물죄 성립

- (1) 전경련은 소속 재벌기업들이 선의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기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본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권오현 등이 교부한 금원의 성격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뇌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2) 안종범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분야와 관련하여 수많은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정부의 중요 경제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그리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여하고,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이 금품을 수수하면 곧바로 뇌물수뢰죄가 성립하고, 안종범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3) 권오현 등은 ‘문화융성’을 위해 기부한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권오현 등은 한 편으로는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에 기부를 하지 아니하면 정부 차원에서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아래 기부를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전경련 차원에서 요구하는 각종 친재벌적 경제·노동정책들이 원활하게 국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재벌총수의 특별사면이나 검찰수사 무마 등 개별 재벌 기업들의 기대를 이루려는 목적 아래 기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의 직무와 금품 공여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 (4)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모금과정에 깊이 개입한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은 재벌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하여 권오현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고, 권오현 등 기업 대표들은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혐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7. 안중범 청와대 수석 등이 재벌기업에게 이미 설립된 미르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에 따른 제3자 뇌물공여죄의 성립

가. 제3자 뇌물공여죄의 법리

- (1) 대법원은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인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 (2)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행위자와 공동정범인 들 이외의 법인으로 보는 경우, 들의 행위가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3) 제3자 뇌물공여죄의 경우 형법 제129조와 달리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경련의 이승철과 재벌기업 대표이사인 권오현 등은 안중범과 청와대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나. 청와대 경제수석이 자금모집을 할 당시 전경련이 주도하여 정부에 요청하고 있던 청탁내용

1) 서 설



- (1)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이 이루어졌던 2015년도 하반기와 2016년도 상반기, 전경련은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2) 특히 전경련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경련의 요구에 부응하여 강도 높게 입법처리를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 (3)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 13. 직접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호소하였고,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같은 날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 (4)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 18. 직접 위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서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위 서명운동에 대해 “관제서명이다”, “충성경쟁을 한다”는 비판이 야기되었습니다. 국가정책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입법추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할 대통령의 직무에 배치되는 행태입니다. 재벌대기업이 요구하는 입법은 그 상대방인 노동자와 서민다수의 이해관계에는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양자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어 왔고 역대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라도 양자 사이의 중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중 한쪽 편을 들어 적극적인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 (5) 이처럼 전경련이 요구하고 청와대가 부응한 경제정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일반해고 등의 노동법 개정 (소위 ‘노동개혁 5대 법안’)

- (1) ‘노동개혁 5대 법안’이란 정부가 추진하는 총 다섯 개의 법안을 합쳐서 일컫는 말로써,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 해당합니다.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쉬운 해고를 위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지침이 아니라 법으로 못 박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 그러나 노동계와 야권은 이를 ‘노동개혁법’이 아닌 ‘노동악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저성과자로 분류하여 해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소위 ‘값싸고 손 쉬운 해고’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었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기준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동의 없이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규직마저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전경련이 요구하는 노동개혁 5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통제력과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 보호 입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경제계와 노동계는 극심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3) 전경련이 요구하는 노동법 개정안들은 모두 사용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전경련 자체가 사용자들의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발표한 정책과 전경련의 요구사항이 이처럼 일치한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청와대는 일방에 치우쳤습니다. 청와대가 지향하는 정책이 전경련의 요구와 일치할 수는 있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극명하기 나뉘고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 청와대는 조정자의 입장에서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면서 찬반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2016. 1. 13. 기간제근로자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테니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만이라도 처리해 달라고 야당을 설득할 정도로 위 노동개혁 법안의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조정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였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소위 ‘원샷법(기업구조조정특별법)’의 제정촉구

(1) 소위 원샷법은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명목으로 정부에 입법을 촉구하고, 위 법안에 대한 제정방안 의견을 마련하여 정부 측에 공식 건의하기도 한 3년 한시의 특별법입니다. 원샷법에 따르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에는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적용이 완화되는 특례가 제공됩니다. 또한 원샷법과 연계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법률입니다.

(2) 전경련은 국내외 경기부진에 따른 한계기업 수의 증가와 국내 주력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계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



업의 사업재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샷법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전경련은 원샷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근거로 한국 주력 산업의 위기 상황,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약세, 글로벌 수요 둔화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과잉공급 상황에서 국내 공급이 축소될 경우 국내시장에서 외국 기업의 경쟁력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통합도산법 등으로 가능하므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 (3) 원샷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제16조 ‘소규모 합병에 대한 특례’ 조항입니다. 위 규정은 쉽게 말해 작은 회사와 합병할 땐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원샷법은 상법상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늘리는 것으로써 손쉽게 합병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샷법에 따라 합병과 같은 의사결정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할 경우,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얹힌 회사는 별 무리 없이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원하는 대로만 운영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럴 경우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주주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것입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돕겠다는 선의가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원샷법과 삼각분할합병과 역삼각합병 등 벤처기업의 M&A를 원활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까지 더해지면 재벌가의 경영권 승계만 쉬워질 뿐이었습니다.

- (4) 원샷법은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업구조 개편으로 기업에게 상당한 세제 혜택을 주는 법률입니다. 기업들 내에서도 원샷법에 의한 사업구조 개편 시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우려하여 사회적 공론이나 합의가 충분히 마련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원샷법은 전경련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부의 강한 의지로 2016. 2. 12. 공포되었고, 2016. 8.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원샷법에 따라 합병 등이 승인된 최초의 3개 기업 가운데 2개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이었습니다.²⁰⁾

4)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제정

- (1) 전경련은 2014년 상반기부터 보건·의료, 문화·관광, 금융·보험 등 5개 분야 94개 과제에 대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건의를 시작으로 현재까

20) 원샷법 '1호 승인', 3개 중 2개가 박근혜 친인척, 프레시안, 2016. 10. 11.

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3법’ 중 가장 핵심적인 법안입니다. 위 법안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하게 하는 내용이 중심에 있습니다. 정부는 위 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뜬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의료·보건 분야는 물론 교육·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산업 영역을 신성장동력으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합니다.
- (3) 문제는 위 법안이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의료 민영화 문제,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을 서열화시킬 수도 있는 투자재방형 학교 설립 문제 및 국제학교 자율화 등의 문제에 더하여 공공영역 전 부문에서 민영화 바람이 불게 하는 가장 선제적인 조치라는 것입니다.
- (4) 이미 각 정부 부처는 영세 서비스업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구조조정안을 세웠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2018년 유통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도·소매, 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 업종의 퇴출전략 추진”이 정책목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워져 있습니다.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등 신사업 육성”일 정도입니다. 영세 도·소매업주들이 시장에서 퇴출된 자리를 외국계 또는 대기업 복합품목 유통점이 메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본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일부 대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대신 동네 시장까지 국내외 서비스 대기업들이 장악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5) 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위기로 투자할 곳을 찾기 힘든 재벌들의 돈벌이 통로를 의료에서 찾겠다는 발상입니다. 세금도 전혀 혹은 거의 물리지 못하는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위기시에 자본이 투자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경제위기 시기에 재벌들은 그나마 서민들이 의존하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영리화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영역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경련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각 재벌그룹이 정부에 요청하고 있던 청탁



1) SK, CJ 그룹의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복권

- (1)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방침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언했던 원칙을 뒤엎고 국가발전과 통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경제인에게 특별사면을 행사하였습니다. SK그룹 회장 최태원은 회삿돈 460억 원을 횡령하여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지만 2008. 8. 사면을 받은 것에 이어 2015. 8. 또 사면을 받았고, CJ그룹 회장 이재현은 252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115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되었지만 약 1년만인 2016. 8. 사면을 받았습니다.

- (2)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업체들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32억 8천만원을 기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15 사면업체의 재단 출연기금 납부액 현황>

기업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액	
	액정액	납부액	미르	K스포츠
삼성물산	150억	10억	15억	-
지에스건설	150억	3억	5억 9천만	1억 9천만
대림산업	150억	3억	6억	-
두산중공업	100억	-	-	4억
계	550억	16억	32.8억	

(자료 : 조달청, 미르, K스포츠 재단 공시 자료)

출처 : 2016.10.06. 김현미 의원

- (3) 위 표를 살펴보면 특별사면 시행 후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 각 150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삼성물산과 지에스건설, 대림산업은 16억 원만을 기부한 반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는 총 28억 8천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두산중공업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4억 원을 기부하였지만,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는 한 푼도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위 건설업체들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지난 해 있었던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삼성, 두산 등 재벌기업들의 불리한 상황 및 정권의 호혜에 대한 대가

- (1) 삼성그룹은 이진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하여 삼

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의 주식매수가격 결정에 따라 불합리한 합병비율로 주가가 산정되고 합병이 진행되었던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내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하면서 삼성그룹의 이익에 복무하였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던 삼성그룹에게 이러한 정치적 호혜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 (2) 두산그룹, 신세계그룹은 2015. 11. 14.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면세점사업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이를 위한 치열한 경쟁전이 있었는데, 면세점 사업 경험이 없는 두산그룹이 면세점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하였습니다.
- (3) 2015. 하반기 대림산업과 GS건설은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부영건설의 이종근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 소 결 - 재벌기업들의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출연과 전경련·재벌기업의 청탁의 관련성

- (1)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2) 정부의 정책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수 국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하고 합리적인 의견 교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15년도 하반기 재벌기업들은 노동자·서민들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만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결정·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합리적 토론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통해 일방적이고 신속하게 정책이 정해지도록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사면의 혜택을 보답하여 향후에도 사면의 혜택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거나, 검찰 수사가 무마되기를 기대하는 등 정치권력으로부터의 특혜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부응하여 재벌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앞장 서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노동자들의 반대 및 파업을 불온한 것으로 매도하거나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여 탄압하는 것은 재벌기업들의 요구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공무집행은 공정성을 상실하였고, 사회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재벌기업 편들기식 직무수행은 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사 정부의 정책 내용이나 입법 촉구 등의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각종 법률들(노동법 개정, 원샷법 제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개별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행정이 펼쳐지는 등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 관계가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재벌기업들의 청탁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청탁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 (3) 결국 안종범과 최순실은 청와대 경제수석의 직무에 관하여 이승철, 권오현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뇌물 774억원을 공여하게 하였던 것이므로,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의 혐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8. 재단 출연 기업 대표들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 (1) 대법원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3.04.25. 선고 2011도9238 판결)
- (2) 권오현 등은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수익, 수십억 원을 각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안종범과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던 바, 앞서 본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습니다.

9. 최순실의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가. 독일회사 비텍과 관련된 의혹

(1) 비텍(Widex Sports GmbH, 이하 ‘비텍’이라 합니다.)은 2015. 7. 17. 유한회사로 설립되었으며, 그 주주는 최순실과 그 딸인 정유라(Chung, Yoora) 단 두 명으로 최순실은 17,500 유로, 정유라는 7,500 유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텍은 자본금 합계 한화로 약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회사로서, 1인만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는 승마코치로 있는 정유라의 승마코치로 알려진 크리스티앙 캄플라 데입니다. 비텍은 2016년 6월경 독일에서 3성급 호텔인 ‘하트슈타인 하우스’을 인수해 ‘비텍 타우누스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직후인 2016년 1월, 재단 사무총장인 정현식은 4대 그룹 관계사 중 하나를 찾아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비인기 종목 유망주를 후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80억 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 지원사업은 독일기업인 비텍이 맡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의하면 케이스포츠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80억 원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으면 비텍이 사업을 대행하는 구조여서 결국 비텍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최순실이 그의 딸 정유라가 독일에 서 임대계약을 한 승마장 대표 프란츠 예거에게 삼성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해 승마선수 육성 차원에서 2000만유로(200억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단독] ‘대기업 80억’ 요구했던 사람은 K스포츠재단 정현식 사무총장, 경향신문, 2016. 10. 21. 삼성, 정유라에 200억 원 투자 계획...재단 설립 논의, JTBC, 2016. 10. 24.

나. 독일의 ‘더블루케이’와 한국의 ‘(주)더블루케이’에 대한 의혹

(1) 2016. 1. 12. 한국에서 케이스포츠재단 설립보다 하루 먼저 (주)더블루케이가 설립됩니다. (주)더블루케이의 등기부상에 최순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조직도상 대표이사 위에 위치하고 있는 회장이 최순실이고, 그는 회사의 실제소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한국 (주)더블루케이가 설립된 이후, 독일회사 더 블루 케이 유한책임회사(The Blue K)가 2016 2. 29. 설립되었는데, 최순실이 100% 지분을 소유(25,000 EUR)하고 있으며, 주소는 먼저 설립된 독일회사 비텍과 동일(Schöne Aussicht 9 -13 61389 Schmitten)합니다.

(3) 독일회사 ‘더 블루 케이’와 한국회사 (주)더블루케이는 회사의 주요 구성원들이



케이스포츠재단의 직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들은 정유라가 머물 호텔을 구입하려고 나섰던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케이스포츠재단 인재양성본부의 박현영 과장은 정유라의 독일 숙소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관여했고, 케이스포츠재단 직원인 노승일은 정씨 일행의 독일 현지 생활을 도왔으며, 대한승마협회에 정씨에게 승마장 대여 및 훈련을 지도하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 (4) 고영태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으로 독일회사와 한국회사 모두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다닌 가방을 만든 ‘빌로밀로’ 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 두 회사는 모두 케이스포츠재단의 돈을 합법적으로 독일에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로 최순실의 오랜 심복들이 일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 최순실 측근들, K재단 출근도장 찍고 블루K 가서 일해. 한겨레신문 2016. 10. 19.

다.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

- (1)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케이스포츠재단의 돈이 불법적으로 최순실이 지배하는 비텍 또는 (주)더블루케이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정황은 합리적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 ① 최순실이 지배하는 비텍은 자본금이 약 3,000만 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독일 현지의 3성급 호텔을 인수하였습니다.
- ② 케이스포츠재단이 직원이 1명밖에 없고 검증된 실적도 없는 비텍에게 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프로젝트 진행을 맡기려고 하였습니다.
- ③ 한국회사 (주)더블루케이 설립 직후 하루만인 2016. 1. 13. 케이스포츠재단이 설립되고, 그로부터 2달이 되지 않아 독일회사 더 블루 케이이 설립되었습니다.
- ④ 케이스포츠재단의 직원이 최순실이 지배하는 두 회사를 위해 근무하였습니다.
- ⑤ 관계자 역시 ‘케이스포츠의 돈 되는 수익성 사업을 더블루케이에게 맡겨줘 유럽으로 돈을 보내려 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2) 최순실은 자기 명의로만 국내에 부동산 등 300억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상술한 비텍 타우누스 호텔을 비롯하여, 정유라 명의로 구입한 바이센베르크 주택, 원네 하우스지히트 주택, 슈미텐 브롬바흐의 승마학교 인근 주택 총 부동산 네 채를 2015. 11. 이후 잇따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 부동산의 총 매입가격은 약 20억 원입니다.

※ 최순실 독일 호텔·주택 4채...매입자금 20억 어디서 났나, 중앙일보, 2016. 10. 25.

- (3) 최순실은 위 부동산들을 미르 설립 직후인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에 걸쳐 단기간에 사들였으며, 그 금액에 비추어 케이스포츠 재단의 돈이 비텍과 (주)더블루케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 (4) 케이스포츠재단의 돈이 비텍과 (주)더블루케이에 유입되었을 정황이 있는 만큼 하루빨리 압수수색을 통하여 각 재단 설립 후 재단의 수입, 지출 내역에 관한 금융, 회계자료를 확보하여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최순실이 설립한 비텍이 14개에 이르는 다른 회사를 슈미텐에 등록한 사실이 독일 언론에 의하여 밝혀지고 언론에 드러난 곳은 청산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최순실 독일 법인, 14개 더 있다”, SBS뉴스, 2016. 10. 26.
- (5) 수사를 통하여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돈이 비텍과 (주)더블루케이에 유입된 것이 밝혀진다면, 이를 용인한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의 관계자는 재단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하여 재단의 자금을 유용하고,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6) 최순실은 이미 언론에 언급된 바와 같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순실이 각 재단 관계자의 자금 유용에 적극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최순실은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수사과제 및 수사 촉구 사항

가.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강력한 수사 촉구

- (1) 국회와 언론을 통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최순실의 재단 사유화, 나아가 청와대 기록의 유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 기업, 전경련, 재단, 최순실 등 핵심 관계자들마다 실체적 진실 발견과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2) 지난 9. 28. 하루 사이에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한 재벌기업에서 재단 관련 서류를 일제히 파쇄하고 이메일 등 자료를 삭제했으며, 미르 재단에서도 임직원들이 대량으로 문서를 파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사건 초기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에 비추어 그 후 압수수색 등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 “미르·K재단 문건 모두 없애라” 문서파쇄 증거인멸, 한겨레, 2016. 9. 30.



(3) 한편 전경련은 지난 9. 30.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해산하고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사유가 정해져 있고²¹⁾, 공익법인의 해산은 이사회²²⁾의 의결사항이며, 그 재산도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거나 감독관청의 허가를 거쳐 동일목적의 다른 재단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단의 해산을 결정할 아무런 법적 지위와 권한이 없는 전경련이 나서서 재단을 해산하겠다는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며, 재단의 실체가 전경련이 깊이 관여하여 만들어낸 정경유착의 산물임을 웅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는 재단의 실체를 없앴으로써 재단의 설립과 운영 관련 각종 자료를 모두 인멸하고 재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새로운 증거인멸 시도인 것입니다.

(4) 재단 설립과정과 설립된 재단의 운영 모두에 깊이 관련된 최순실은 사건 발생 후 국내에 있던 여러 사무실을 서둘러 정리하고 독일로 출국하였고, 현재는 언론의 취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 행방이 분명치 않습니다. 최순실은 한국과 독일 모두에서 증거인멸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무실을 정리하고 사무실에 있는 관련 자료를 파기하였습니다. 더블루K 국내 법인 사무실도 증거인멸에 착수하여 대량으로 문서를 파쇄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중 한 사무실에서 최순실이 처분을 맡기고 간 짐 중에서 언론에 의해 발견된 컴퓨터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한 청와대와 정부의 주요 문서파일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최순실은 독일 현지에 설립한 더블루K 유한회사와 비텍에 대한 조기 청산작업을 현지 로펌에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 [단독] 최순실, 獨로펌에 '더블루K·비텍 청산' 의뢰, 2016. 10. 24. 매일경제.

21)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판례문헌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2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이사회¹의 기능)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무상대부)한다.

- (5) 본 의견서 작성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증거인멸 시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증거인멸 시도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혀내어 형사처벌 대상인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나. 이 사건 10대 수사 및 진실규명 과제

- (1) 이 사건은 우리의 헌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선 오랜 기간 근절되지 않는 청와대/전경련/재벌기업간 ‘정경유착’ 사안으로서 재벌기업이라는 특정 경제세력의 국민경제에서 가져가는 몫을 늘리려는 기획과 담합의 산물입니다.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의 몫만을 늘이는 것이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에 한발을 걸친 자들의 소득만을 보장하기 위한 기획입니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자 특정 경제세력의 독주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력 남용을 목적으로 한 거대경제세력의 독주를 권력자와 그의 오래된 지인 따위가 돈을 받고 밀어 주었다는 것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의 민주화’를 극도로 저해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유지되는 정경유착의 검은 돈 위에서 아무 대책도 없는 최순실이 재단은 물론이고 대통령 뒤에서 국가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이 드러난 했던 국기문란 사건인바, 정경유착과 개인의 국기문란이 결합한 공화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인 것입니다. 정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건을 성역없이 수사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래 주요 10대 수사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 10대 수사과제>

1. 청와대 및 정부 문건인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의 보고는 대통령의 휴가 관리, ‘대통령보고자료’와 같은 중요 문건들이 사전에 최순실에게 전달된 경위 - 누가 어떻게 전달하였고, 최순실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대통령이 이에 관여한 정도가 무엇이었는지, 언론보도로 인된 이후 시기에도 최순실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을 사전에 전달받았는지
2. 사건 발생 후 기업과 재단, 전경련, 최순실 등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구체적 내역 및 그러한 거인멸을 하게 된 결정주체와 과정이 무엇인지
3.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구성, 모금, 내부인사 기용 등에 관하여 청와대와 안종범, 최순실이 어떠한 공모를 거쳐 관여하였는지 그 의사결정 주체와 과정-최순실이 청와대 의사결정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 직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문화재단 설립 사안에 문화수석이 아닌 안종범 경제수석이 관여한 경위 무엇인지
4. 대기업들이 다른 기부와 달리 이 사건에서만만큼 유독 빠른 시간 내에 일사분란하게 거액의 기부금을 출연



- 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회사의 재산을 출연함에 있어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5. 전경련이 개별 기업들에 대하여 각 재단에 출연할 것을 독촉하고, 문체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설립허가 진행하였던 바, 전경련이 이 사건에 관여한 구체적 내역과 경위가 무엇인지
 6. 재단 설립을 전후하여 기업과 전경련이 정부에 요구하였던 숙원사업들과 재단 출연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7. 불과 하루 사이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설립허가 절차가 이루어진 이유와 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구인지
 8. 재단의 이사회가 기업관계자를 배제하고 특정인사로 구성된 경위가 무엇이고, 특정인사가 이사장 및 이사 선임된 경위는 무엇인지
 9. 두 재단이 설립 후 빠른 속도로 각종 국가 사업에 특혜를 받고 진입한 경위가 무엇이고, 특혜받은 구체적 역이 무엇인지
 10.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알려진 최순실 등 사인(私人)이 사안에 관여한 구체적 내용과 경기가 무엇인지. 특히 재단의 돈과 직원이 최순실 및 최순실 설립 회사에 사적으로 유용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와 실제 용도가 무엇인지

다. 청와대 및 각 기업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필요성

- (1)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미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부터 사건 관계자들이 접촉하여 사안을 축소하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여 왔고, 앞으로도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될 것입니다. 관계자 진술 뿐 아니라 금융과 회계 관련 자료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돈의 흐름과 그 대가 관계를 파헤쳐야 하는 수사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 (2) 10. 26. 검찰은 최초 고발 후 28일이나 지난 후에야 전경련, 재단, 최순실의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는 미흡합니다. 무엇보다 청와대, 개별 기업의 사무실과 관련 자료, 디지털파일, 이메일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청와대와 각종 정부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내역 및 유출된 방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여야 합니다. 청와대 사무실 및 서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등 사이의 이메일, 청와대 내부 전산기록에서 보안 USB를 통해 변환된 기록 내역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단에 출연한 각 기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제수사의 대상>

1. 청와대의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내역 및 유출된 방법,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청와대 사-

실 및 서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 등 사이의 이메일, 청와대 내부 전산기록에서 보여진 USB를 통해 변환된 기록 내역 등

2. 전경련이 각 기업체에 보낸 공문 등 지시사항의 입수
3. 각 기업이 재단에 출자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자료, 기타 출자 여부를 판단한 내부 판단 자료
4. 기업 본사가 각 계열사 또는 담당자에게 지시한 내역 관련 내부 공문 등 자료
5. 각 기업이 재단에 출자한 돈의 입금시점, 입금명의자, 입금한 금원의 출처
6. 각 기업과 전경련이 미르, 케이재단 설립 전후로 정부를 상대로 개별 기업 및 전경련의 요구사항을 청탁한 구체적 내역과 자료{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처리, 각종 기업의 부실불법으로 인한 책임논란(한진해운, 삼성), 특별사면 등}
7. 재단설립과 관련한 개별 기업, 전경련, 재단의 금융거래 내역 일체
8.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경련을 통한 법인설립 허가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를 위반하여 설립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내부 공문 및 자료
9. 각 재단 설립 후 재단의 수입, 지출 내역에 관한 금융, 회계자료

라.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조사 실시, 출국금지 조치 확대, 신변 구속의 필요성

- (1) 성역없는 소환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청와대 안중범 경제수석, 문고리 3인방등 청와대의 사건 관계자들, 최순실과 그들의 측근, 전경련, 개별 기업 등 사안의 핵심 관계자들이 서로 진술을 맞추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관계자들을 소환하여야 하고, 소환을 위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므로 구속수사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 (2) 특히 최순실은 사건 초기부터 독일로 도피하여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바, 최순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구속수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출입국관리법은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재단관계자 10여 명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들 외에도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및 전경련의 재단 관계자, 개별 기업의 재단 관계자, 안중범 수석 및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이들이 외국에 도피하거나 출국 후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속하게 출금금지 조치를 취하고 소환 조사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2016. 10.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성명] 검찰은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

- 2017. 11. 1. (화)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와대 주요 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의 행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개탄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수장인 청와대는 국정농락의 진원지이자 본무대이다. 항간에는 박근혜 정권을 일컬어 무당정권이라 칭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교세력에 놀아나 온갖 국가적 기밀과 보안사항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최순실은 문체부 인사에 개입하고 대기업에 거액의 돈을 갈취하는 등으로 국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청와대의 비서진들이 하수인으로 참여하였다.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가 법의 규정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를 내세운 진실은 폐의 작태에 다름 아니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두 규정 모두 범죄와 관련 없는 군사상 기밀 또는 공무상 기밀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혐의자가 자신의 피의사실을 감추라고 있는 규정이 아니다. 최순실에게는 준 청와대 자료를 왜 검찰에게는 못 준단 말인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그나마 청와대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해석도 엉터리다. 우선 이 두 규정 모두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핵심적 사항인 민주적 정당성을 의문케 한다. 이 보다 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다음으로 청와대가 내세우는 제110조 제1항의 경우 이 조항의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가 국가기관으로서 청와대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과 각급 비서관실이 공간적 사무적으로 구획되어 있다. 국가안보실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 일 수는 있어도 청와대 전부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 일 수는 없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청와대의 비서관이 일하는 사무공간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을 방패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동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압수만 금지하고 있을 뿐 수색 자체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다. 수색조차 저지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태다. 또한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라는 문언과 제106조 제1항의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이라는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검사가 직무상 비밀에 관하여도 수색을 할 수 있고, 다만 청와대는 그 수색 대상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을 뿐,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진입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지금까지 국가기관, 특히 그 수장이 피의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 국가기관이 이 규정들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만일 이러한 논리가 통용된다면, 뇌물받은 국가기관의 수장, 직권을 남용한 국가공무원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이 조항을 무기로 하여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례로 악용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온당한 처사이며, 합당한 법 해석인가?

우리 모임은 청와대가 본말이 전도된 이런 논리를 들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에 맞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추악한 시도의 일환으로 본다. 이에 우리는 검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문언에 합당하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청와대의 철저한 시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금도 언론은 이 엄중한 시기에 청와대의 비서에 불과한 신임 민정수석만을 주시할 뿐 검찰의 총수를 주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태는 검찰의 업보이다. 정치화된 검찰의 해악은 그 해악대로 시정할 때가 있을 것이지만, 지금 검찰이 이전의 과오를 씻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 그것이 지금 당장 검찰이 해야 할 일이다.

[논평] 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야3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 2017. 11. 1. (화)

우리 모임은 이미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을 임기 중 면해줄 뿐, 수사 진행에는 법적으로 어떤 장애가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헌법과괴행위를 자행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만이 현 시기 수사의 핵심 과제다. 이러한 핵심 과제를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어떤 시도도 헌정질서 문란 행위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민의 거센 퇴진 요구를 받아 청와대 비서관을 교체하면서 유독 민정수석 만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재경으로 즉각 임명하였다. 이것은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겠다는 공개적 선언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력기관 통제 등 인사와 정보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하며 특히 청와대가 고위 검찰을 얹혀 검찰을 통제하는 통로가 되어왔고 그것이 권력의 집중과 왜곡을 가져왔다. 우병우 수석이 그것을 낱알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민정수석은 폐지되거나 원래 취지에 맞게 민심을 수렴하는 기구로서 축소되어야 할 개혁 대상일 뿐이다.

그런 민정수석으로 다름 아닌 대표적 정치검사 최재경을 임명한 것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최재경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 내곡동 사저 땅 헐값매입 사건 무혐의결정,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에서 정치적 결정으로 일관하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승승장구한 정치검사이고, 검찰 장악력이 높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대통령의 방패막이로 나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아설 과제를 수행하기에 더없는 적임자인 것이다.

이미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민정수석에게 주어진 과제란 대통령의 방패가 되어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뿐이다. 최재경 민정수석이 있는 한 이미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검찰 또는 향후 특검수사에 개입하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하라.

아울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1월 1일 최순실씨 비선실세·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특별법에 의한 별도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바, 우리 모임은 새누리당이 특검에 의한 진상 규명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이번 사태에 관하여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 대신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전적으로 온당하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을 주장하나, 그 특별검사의 임명권이 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궁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의혹의 몸통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새누리당 역시 작금의 비상상황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나아가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야3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 바란다. 그것이 그간 박근혜-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에 부역 내지 방조해 온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그 중대한 과오를 씻는 최소한의 자세라는 점을 지적해둔다.

[성명] 헌법유린 헌정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 2016. 11. 3. (목)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언론을 통해 이미 드러난 사실과 본인의 자백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기간 헌법을 위반한 가운데 국정을 운영하였고 관련자들은 국가시스템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채우는데 급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행위는 형사적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나아가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고 민주공화국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그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민심을 거슬러 계속 통치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자 및 가담세력이 물러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권력사유화 및 국정농단의 공모자와 가담세력들이 우리사회에 끼친 해악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크고 깊다. 온 국민이 망연자실,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주적 헌정질서의 정상화이다. 그러나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개헌을 주도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것은 국헌문란 상태의 지속이자 확대일 뿐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이번 사태의 명명백백한 진실규명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위를 보전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한, 불가능하다. 벌써부터 검찰은 최순실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권이 격동하는 국제질서, 위기에 처한 경제, 분출하는 사회적 요구 등에 대처하여 내치와 외치를 담당하기는 어렵다.

헌정질서의 회복, 사회의 평온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대통령의 퇴진 이후 과정은 헌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대통령의 퇴진은 결코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퇴진 이후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수립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 역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또 하나의 헌정질서이다. 지금의 헌법파괴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려면 헌법이 예정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될 뿐 다른 방도가 있지 않다.

<우리의 다짐>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권력의 모든 시도에 맞서 우리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왔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이 바로 그것이다. 2016년 오늘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국민주권 원칙을 확인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논 평]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꼬리자르기의 들러리가 되려는가?

-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적용 누락을 비판한다.

- 2016. 11. 3. (목)

검찰은 며칠 사이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긴급체포 등 수사 진행에 있어서 강도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납득되지 않는 것이 많다.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최순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사기미수죄, 안종범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는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재단 설립과정의 본질적 행태인 ‘뇌물수수’를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재단 설립을 대통령이 추진하였음은 대통령 스스로 시인하였고, 안종범 역시 대통령 지시를 받아 재단 설립을 하였다고 밝혔다. 최순실이 대통령은 물론이고 독자적으로 기업과 접촉하여 돈을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배후에 권력이 있음을 눈치챈 기업들은 전경련을 매개로 일사분란하게 출연을 했고, 그 후 전경련과 대기업에게는 각종 규제완화 등 숙원사업, 특별사면 등이 되돌아갔다. 이런 행태를 보면 이 사건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뇌물 사건이요 정경유착 사건인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 이미 이와 같은 성질의 기업 모금 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성립하여 모금한 대통령과 재벌들이 처벌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물론 안종범과 최순실의 행위는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직권남용은 뇌물죄 성립에 있어 부수적인 것이고 구성요건, 형량 등에서 한계가 있어 사안의 본질을 드러내는 죄명이 될 수는 없다. 우리 모임이 지난 10월 26일자 의견서에서 뇌물죄 외에 직권남용죄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의 뇌물죄 적용 누락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첫째, 뇌물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반면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직권남용죄로 기소되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면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다. 현 상황 만을 기준으로 보면 774억의 재단출연금과 롯데그룹 70억원 추가 수수 등에 관여한 최순실, 안종범에게



적용될 형량이 턱없이 낮은 것이다.

둘째,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는 규정이다(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만이 적용되면 반대로 재벌기업들은 일방적으로 강요를 당한 피해자가 되어 버리고,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이들이 과연 피해자인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재벌기업들은 돈을 낸 만큼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에 돈을 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앞으로도 뇌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수사 대상에게 미리 걱정 말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어서,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셋째,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혐의를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직권남용죄에서는 재단설립의 강제성 등 절차가 주로 문제되므로 안중범이 주범이 되고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생긴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에서 안중범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등의 일을 하였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넷째, 대법원은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대법원 1991.12.27. 선고 90도2800 판결)된다고 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최소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필요성·상당성이 있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직권남용죄만을 적용하는 것은 안중범, 최순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줄 우려가 있다.

대통령의 헌법질서 파괴행위가 날날이 밝혀진 뒤에도 하루가 멀게 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2015. 7. 24. 청와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대기업 총수 17명 가운데 7명을 차례로 독대하였다. 안중범이 부영그룹 회장을 만나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요구하고 기업에서는 세무조사를 도와달라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결들인 보도도 나왔다. 뇌물죄는 요구,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처벌되므로 이 역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한편 최순실이 귀국 후 소환되기 전 하루 사이에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미 전두환, 노태우가 재임 중의 뇌물수수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적당한 틀로 사건의 꼬리를 자르려 들지 말고 대통령 본인과 재벌기업

들의 뇌물죄 수수, 정경유착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 2016. 11. 4. (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는 낯익은 유채이탈 화법이자,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책임 전가와 회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짜놓은 각본 안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대한 착각이다. 우리 국민은 이미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었고 앞으로도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범죄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국정농단 체제하에서 임명된 법무부장관과 기존 수사지휘부가 과연 자신의 주군을 헌법파괴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진정 의문이다. 대통령직 사퇴 없이는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엄정한 조사가 될 수 없는 이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불가 이유로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강조하였으나, 안보 위기는 적대외국으로 뭉친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멈춘지는 이미 오래며, 급기야 오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로 떨어졌다.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처럼 이 사건은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들’로부터 특정 개인이 이득을 취한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과 재벌이 협잡한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이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호텔에서 삼성·현대를 비롯한 재벌총수들을 직접 만나 모금을 강요했고, 그 결과 재벌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은 무려 약 800억원에 이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스스로의 공약을 뒤집은 채 선심 쓰듯 재벌총수들의 사면을 단행했다. 2016년 1월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악법 통과를 국회에 ‘지시’ 하고, 전경련이 주관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의 범국민 서명운동에 직접 서명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자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 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검찰 수사는 봐 주기 수사일 뿐이고 그에 대한 수사 협조 공언은 봐 주기의 사주 또는 구걸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은 특검의 수사를 통해 낱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대한 재벌들의 비자금 헌납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아 처벌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여 정부 중요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20년 전의 대법원 판례는 헌법을 유린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선언이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 진정성 없는 사과와 감성적 호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모임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그 길 뿐임을 다시 선언한다.



[논평] 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시기이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라.

- 2016. 11. 4. (금)

오늘 경찰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했다. 행진 코스로 신고한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가 집시법 제12조의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경찰이 든 이유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와 같은 설명은 적법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이며, 집회·시위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는 그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되며, 집회·시위의 금지와 해산은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야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따라서 경찰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집회의 행진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할 것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그 동안 경찰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정부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 금지통고를 해왔는데, 이는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태도에 불과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은 국민 누구나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하게끔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지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무단으로 넘겨 그로 하여금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게 한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권리가 더욱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번 집회의 목적은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집회를 함에 있어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화문 광장을 포함한 그 일대만큼 적합한 곳은 없다. 또한 민주공화국의 정체(政體)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이번 집회 개최의 정당성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 결국 경찰의 이번 금지통고처분은 정당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법의 형식을 빌려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고, 평화적인 집회의 진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허용될 수 없다. 불의한 권력에 저항해온

우리 국민들이 또 다시 새로운 장을 쓰려고 하고 있다. 경찰이 그 장도를 막아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논평]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 2016. 11. 8. (화)

삼성, 현대, SK 등 재벌들은 약 800억 원 상당액을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에게 제공하였다. 대통령과 최씨 일족의 강요가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재벌들이 군소리 없이 일사분란하게 거액을 제공한 점과 그 이후에 대통령과 정부가 친기업적 정책들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구체적 대가까지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벌들이 과연 어쩔 수 없이 위 돈을 제공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부영은 7~80억 원의 지원을 요구한 K스포츠재단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고, CJ는 차은택 주도의 K컬처밸리 조성에 참여를 약속한 후 이재현 회장의 특사를 이끌어냈다.

재벌 중 출연금이 가장 많았던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현 비텍스포츠 전신)에게 직접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지원했고, 이 돈으로 최순실은 딸인 정유라에게 10억 원 상당의 말을 사주었다. 이러한 지원 사실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삼성은 하나, 둘 사실이 드러나자 이내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한 것이라 해명했으나, 이 역시 거짓에 가깝다.

첫째,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원을 받은 유망주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단 한명이다. 둘째, 삼성이 노조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지원을 약속받고 최순실에게 2,200만 유로(약 280억 원)의 자금은 물론 최순실이 계획하던 스포츠센터 건립 자금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는 코레스포츠 공동대표의 진술에 비추어 ‘승마협회차원에서의 지원’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왜 삼성이 최순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가진 독일인 공동대표에게 최순실측은 ‘정유라가 한국 대통령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기까지 했다. 셋째, 지난해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은 직접 호텔에서 회동을 가졌으며, 이 사건이 터지자 삼성전자 사장과 전무가 최순실 귀국 직전 최순실 모녀가 머물던 독일로 극비리에 출국하기까지 했다. 넷째, 삼성의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공교롭게도 노조와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산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하고, 경영권 세습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던 시기와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 다섯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황유미씨 가족에게 입막음을 위해 단 돈 500만 원을 건넨 삼성이, 이들에 대한 배상에 9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던 삼성이, 이상과 같이 단시간에 거액의 자금을 전격적으로 지원한 사실까지 보태면, 삼성의 해명은 납득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최순실에 대한 지원은 전형적인 제3자 뇌물공여에 가깝다.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말하는데, 아래와 같이 재벌들의 헌납행위는 뇌물죄 성립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우선,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대통령의 업무가 국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막강하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바, 재벌기업 자금 모금을 대통령이 지시하였다는 안중범의 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다이어리를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은 충분하다. 또한 기업체의 활동에 대하여 법령상 직·간접적으로 방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재벌들이 의식한 상태에서 자금을 출연, 지원하였다는 것을 추단케 하는 정황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넘쳐나고 있으므로 대가관계를 인정함에도 부족함이 없다.

나아가 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은 위법한 것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고, 청탁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여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07. 01. 26. 선고 2004도 1632 판결), 재벌들의 최순실 모녀에 대한 헌납이 이루어지던 당시를 전후로 한 세무조사 무마청탁, 재벌총수 사면, 경영권 승계 등 각 재벌들의 현안 해결이 절실했던 점과 전경련 주도 서명운동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으로 화답했던 점을 종합하면, 당장이라도 검찰은 부정한 청탁 존부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더욱이 검찰이 앞서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에서 “앞으로도 회사를 잘 도와달라”는 한진그룹 임원의 진술을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제3자인 진경준 처남이 100억 원 대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기소한 전례에 미루어 보면, 검찰이 사안 별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이상 재벌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 전원을 기소함에 무리가 없다.

오늘 검찰은 삼성에 대한 8년만의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나, 헌납에 가담한 다른 재벌 모두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여론에 떠밀려 행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다른 재벌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경유착 가담 재벌 모두에 대한 압수수색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초기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서 행해진 대대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또 다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측근 및 재벌들의 뇌물범죄가 언론을 통해 대부분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다시 미궁에 빠질 것을



염려하는 바이며, 재벌들에 대한 조속한 압수, 수색을 통해 증거인멸행위를 차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도자료]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 ‘박-최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가 헌법 유린과 중대범죄인 이유 밝히고,
퇴진 이후 헌정질서에 대해 토론할 예정

-2016. 11. 9. (수)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0일(목)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 함께그리는대한민국

1. 취지와 목적

-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 초유의 국정농단 행위에 불구하고 검찰이 최순실 개인의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한다는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 역시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민사회와 법률전문가들은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상의 원리를 침해하고, 어떠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0일 (목) 10시, 민변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 함께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

○ 프로그램

- 인사말 : 정연순 변호사(민변 회장)

- 발제1 :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대



통령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

- 발표2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가
- 발표3 :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
- 토론 :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문의 : 참여연대(담당 김희순 간사 02-723-0666) · 민변(담당 이수연 간사 02-522-7284)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 2016. 11. 10. (목)

-첫 일정으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0일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헌, 이하 ‘특위’)를 발족했다.

민변은 초유의 국정문란, 헌법파괴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10일 발족하였다. 특위는 앞으로 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
순실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
차와 방향에 관한 분석 및 입장 발표 ②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③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참여 및 현장 인권침해 감시 등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별도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
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
며 지난 8일 첫 회의를 가진 후 특위를 발족하였다.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특위는 첫 일정으로 10일 오전 10시부터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
여연대, 함께그리는대한민국과 공동주최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
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송기
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과 대
통령 중대범죄행위의 의미, 정국수습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정치상황의 전
개에 대해 각 발제를 진행하고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민주헌정질서 파괴상태가 현 사



태의 본질이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이미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의 정권 퇴진 후 헌정질서 혼란에 대한 우려는 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 뜻을 모았다. 또한 현 사태는 특정 개인의 비리, 실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고 이를 통해 헌법을 파괴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11일 예정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대회와 12일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한편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관계자들의 혐의를 분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 2016. 11. 10. (목)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가 한곳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청와대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대통령이 그 범죄의 정점에 있는 지휘자였다.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미르·케이재단도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졌다. 심부름꾼 안종범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면서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얘기했다. 대통령은 2015년 7월 청와대 오찬에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재단 지원을 촉구하고 재벌총수 7명과는 독대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삼성 등 재벌과 전경련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최순실, 차은택 관련 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에 재벌 총수 몇 명을 독대하였다. 국가의 외교, 군사기밀까지 담긴 문서가 최순실에게 사전 보고되고 수정된 것도, 거대한 뇌물을 조성하여 최순실에게 안긴 것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따져보아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첫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행위를 보자. 청와대의 주요 문건 등 200여 개의 파일이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서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통령은 행위의 ‘주범’으로서 전달된 각 문서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된다.

①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와 비밀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②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44개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 파일중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 성을 가진 파일을 전달한 부분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문서를 하나씩 전달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이른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예컨대, 정호성이 매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또는 파일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에 해당한다(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둘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재단 등을 설립한 행위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

⑤ 대통령이 한편으로 최순실, 한편으로 안중범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직접 나서서 재벌 총수와 독대까지 하면서 출연을 요구하고, 안중범에게 지시하여 출연금을 받아내고, 문체부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재벌들도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인식하고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권한인 특사, 특혜를 받았다. 대통령도 시인하고 안중범도 이를 인정했다.

이러한 출연금 수수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나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포괄적 뇌물이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고, 다만 재단출연금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되거나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한 것이면 수뢰죄, 재단을 제3자로 보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 재단 출연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774억원으로서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고(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받는다. 대통령이 이를 기획, 주도하였으므로 대통령 본인이 안중범 등에 대한 뇌물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셋째, 그밖에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범죄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⑥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하여 CJ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

을 행사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강요죄’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⑦ 안중범은 어제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광고사 인수전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안중범을 통하여 광고사 인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이 역시 위 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위에 열거한 것만 해도 ①부터⑦까지 7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10개 죄목에 이르고, 여기에 200개의 파일 및 ‘대통령보고자료’ 제공 등을 제공할 때마다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혐의 내용은 100개를 넘을 수도 있다.

위 범죄들은 하나같이 형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엄히 처벌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하고, 그중 공무상비밀누설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 등은 정해진 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처벌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 (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9조)하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헌법 전문)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헌법 제119조 제2항)를 추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그런 대통령이 이처럼 막중한 헌법적 의무를 내던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다. 위에 열거한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헌정질서 파괴’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모습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는 단지 깊은 분노에서 나온 주장을 넘어, 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행한 범죄행위가 너무나 중대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통령이 무엇보다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청와대와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등을 수사한들 그 정점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결코 제



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불소추특권의 해석, 수사 장소나 방법을 놓고 검찰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과 정당한 처벌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파괴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 전제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2016. 11. 14. (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016. 11. 10.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에 관하여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군사기밀, 외교상기밀, 국무상비밀, 대통령기록물을 누설, 유출한 일련의 국정농단 행위가 각 별로 범죄를 구성하고, 최순실과 안중범을 통하여 재단설립을 빌미로 재벌들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금액을 수수한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하며, 재벌 경영진에 퇴임 압박요구와 광고사 강탈시도 역시 각 행위별로 직권남용죄 내지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음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제 7대 중대범죄 혐의를 낱알이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7대 수사원칙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

첫째, 피의자신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대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식 입건한 뒤, 참고인인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한 후 피의자신문절차를 개시한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이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퇴진이 전제되어야 함은 이미 주지한 바이다.

둘째, 대질신문이다. 이미 구속된 안중범이 뇌물수수행위에 관한 ‘대통령 지시’를 얘기하고, 정호성도 문건의 유출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임을 진술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기 위한 문체부 인사 관여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시’ 언급이 있는 이상, 안중범, 정호성, 차은택, 최순실 등에 대한 대질신문을 철저히 시행한다.

셋째, 영상녹화를 위한 소환조사이다. 여러 행위자들과의 대질신문 조사가 필수적인 이 사건에서 서면조사는 있을 수 없다. 또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지인 청와대 방문조사 역시도 결코 있을 수 없다. 범죄지에서 어찌 범행에 대한 추궁이 가능하겠는가? 오로지 소환조사만 가능하며,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기록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대질신문과 영상녹화 등의 수사절차 실현을 위해 현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외에 다른 대안으로서의 조사장소를 찾기는 어렵다.

넷째, 범죄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장조사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종료된 지난 달 30



일 이후 안중범과 정호성, 차은택이 구속되고, 여러 행위자들에 의한 추가 진술과 범행 등 새로운 수사대상들이 생겨나고 있다. 언론은 태블릿PC와 전 민정수석 김영환의 비망록까지 확보했으나, 검찰은 뒷북수사로 인해 미르, K스포츠재단, 전경련, 삼성을 압수수색하고서도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우병우 휴대전화에서조차 필요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정논란 범죄지 청와대이다. 집무실, 부속실 할 것 없이 범죄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재개 및 현장조사가 급선무이다.

다섯째, 재벌총수와와의 독대에 대한 수사이다. 재벌총수와 대통령의 독대가 몇 차례에 걸쳐 있었으니, 각 시기별로 서로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가 문서로써 행해져야 한다는 헌법 제82조에 반하여 이루어진 독대가 아닌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 관련 책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여섯째,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이다. 현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는 개인비리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른바 ‘비선실세 정윤희 문건유출 사건’ 당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또 최순실과 그의 딸을 위해 부역했던 문체부 차관 김종과 정경유착 고리의 핵심을 자처했던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이들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 없이는 결코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

마지막 일곱째, 남김 없는 여죄 수사이다. 7대 중대범죄 혐의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국정원 여론조작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는지, 친일과 신분세탁을 위해 아버지 연합 등 관제대로 자금지원행위를 전경련에 요청한 사실은 없는지, 피지 못한 꽃들이 차디찬 파도에 수장된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은 없는지, 직권을 남용하여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개편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독일 수사기관이 먼저 개시한 최순실 자금세탁혐의와의 연관성은 없는지, 그 끝을 알 수 없도록 계속 드러나는 평창 동계 올림픽 이권개입 의혹, 사드배치 등 방산비리 의혹 등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또 다른 여죄가 없는지 여부를 철저하고도 남김없이 수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는 오로지 이상과 같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혀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대국민 앞에 발표한 이상 관련 자료 임의제출 등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그동안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사과”

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민주주의 파괴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임은 하루 속히,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고, 대질조사를 실시하며, 수사 전과정 영상녹화를 위해 소환조사를 단행할 것과 헌정 파괴 범죄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재개, 재벌총수 독대에 대한 수사, 관련자들 전원 구속 및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끝).



[성명] 박근혜는 100만 촛불이 비춘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

- 2016. 11. 14. (금)

박근혜 대통령은 들었는가? 100만 촛불의 함성을! 보았는가? 100만 촛불의 분노를!

지난 11월 12일 국정농단과 정격유착에 분노하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염원을 담은 100만 국민의 촛불이 청와대를 뺨박이 둘러쌌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곳곳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촛불이 타올랐다. 한반도뿐만이 아니다. 바다 건너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 10개국 37개 도시에서도 교민들이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가 전 세계를 환히 밝혔다.

숫자와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질이다. 촛불을 든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기망하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에서 터져나온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숭고한 희생의 가치를 짓밟아 온 현실의 엄중함에 분노했고, 피땀어린 역사의 행진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주권자로서 ‘대한국민’이 가지는 권력을 명백히 확인했다. 100만 촛불 민심이 입을 모아 외친 것은 ‘2선 후퇴’ 따위가 아니다. 오로지 ‘박근혜 퇴진’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철저한 처벌을 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령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서는 총체적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지난 4년은 어떠했는가.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엄중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 앞에서도,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바다에 잠기는 동안 전국을 울렸던 눈물과 제기된 수많은 의혹 앞에서도, 메르스(MERS) 늑장 대응에 가해진 매서운 비판과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교과서’ 논란 앞에서도, 오랜 세월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싸워 왔으나 정부에 의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강요당한 역사의 산 증인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 앞에서도, 쌀값 보장을 외치다 초고압 물대포에 피 흘리며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죽음 앞에서도, 공적인 울타리 없이 빈곤의 늪에 빠져가는 청년들·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 앞에서도, 박근혜 정권은 ‘불통’하였을 뿐 아니라 안보 위기를 고조시켜 문제 제기하는 자들을 ‘중북’으로 몰았으며,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며 민주주의를 압살해왔다. 한편으로는 ‘창조경제’, ‘통일대박’과 같은 허황된 말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조롱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삶’보다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절망공화국, ‘헬조선’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지금 터져 나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공익’이 아닌 ‘특정 사인’의 이권이 국정을 좌지우지해왔음을, 중대한 정책적 결정들이 탄탄한 국정 철학과 합리적 토론이 아닌 특정인의 사적 욕망에 의하여 지도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청산되지 못한 독재와 민중 탄압의 역사가, 정경 유착의 뿌리 깊은 고리와 기득권 카르텔이 정권의 기망행위를 지탱해 왔음을 말해준다. 이대로는 안 된다.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이와 같은 명징한 인식 하에 촛불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정치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엄중히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퇴진하라. 촛불이 하나 하나 모여,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뜨거운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논평] 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 2016. 11. 15. (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재의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오로지 수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특검에 의한 수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1. 대통령이 특검 임명과 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 탄핵사태에 처한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에 실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는 2명, 특별검사보 후보는 8명의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여,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에게 그 임명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실질적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특검임명절차는 국민의 여망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는 길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법안은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법으로서 기본정신이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

2.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재량에 맡겨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정윤희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명시적인 수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법안은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중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해석론에 의지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의 수사대상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수사의 범위가 특별검사에게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의지가 없으면 명시된 사항 이외의 수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

그 동안의 반복된 특검 수사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 사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기하고 박 대통령도 법적으로 수사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특검에게 수사 ‘의무’를 법으로 명령해야 마땅하다.

3. 특검 권한이 크지 않다.

특검의 강제수사권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기밀과 압수)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제1호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에 관한 의혹 사건이고 그 외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수사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포함한 관공서는 물론 군사기밀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빌미로 한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한 사실에서 보았듯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이 거부당하면 수사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특검의 수사는 그 순간 막혀버릴 것이다.

따라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특검 수사대상의 특성상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법안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 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사를 ‘준비’ 하는 기간까지 수사기간에 어물쩍 포함시키는 셈법도 이해가 되지 않거니와,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 그 연장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이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수사기간을 70일로 정하는 것은 너무 짧고, 적어도 100일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도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 승인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

5. 그 외에도 상당한 문제 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1)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다(법안 제3조 제3항). 이는 2014. 3. 18.에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지나친 자격 제한이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선택의 폭을 더욱 줄이는 방안이다.

2) 또한 법안 제4조 제4호에서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설특검법에서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과거 단 한순간이라도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까지도 결격사유로 못을 박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임이 분명하다.

3) 수사인력도 부족하다. 이 번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최대 25명이다. 이와 같은 수사인력의 구성은 현재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31명의 검사로 꾸려져 있는 것보다 적다.

4)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 사이의 혼선을 방지할 조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검의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검찰의 기존 수사와 공소유지는 중단시키고, 검찰은 수사와 공소유지의 업무를 특검에게 모두 인계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안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그 외에도 문제될 수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6. 결론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실효성 있고 정당한 특검법이 되기 위하여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 하고, 정치권은 즉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률안에 합의하여야 한다.



[논평] 대통령의 변호인 유명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한 민변의 논평

-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라 -

-2016. 11. 15. (토)

1. 국민들의 요구대로 하면 변호인의 우려는 해결된다.

유명하 변호사는 금일 오후 3시경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조사시기와 방법에 대해 “검찰은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된 뒤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고,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가능한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여러 번 받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누구나 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일반인들이 누리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 이상의 수사상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조사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실무적으로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통령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면서, 왜 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특혜를 주장하는가?

그리고 국민들은 헌법의 기본 정신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한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퇴진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변호인은 본인의 의뢰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를 여러 번 받을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고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된 뒤에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요구대로 대통령의 직에서 퇴진하면 된다. 대통령은 당장 퇴진한 뒤 수사에 적극 임하여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는 무시한 채 헌법정신을 운운하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엄중함을 망각하고 대통령 자리를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확대해석, 악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식물 대통령을 두고도, 국민들의 생활과 국가 공동체는 질서있고 헌법정신에 부합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가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논리로 대통령이 조사받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에 다름아니고 필경 국민의 공분을 더 키우게 될 것이다.

2. 대통령은 적극 모든 수사에 제한 없이 임하라.

변호인은 “이 사건의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그 의지를 밝혔다. 그에 따라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강제수사에 임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믿고 헌법정신에 맞게 조사시기 등을 조율해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는 누가 봐도 대통령 본인이다. “이 사건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부터 조사하라”고 선언하면서 자진출두하여 수사에 적극 임했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가 이틀간 강제수사를 받으며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국민 모두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듯 첫 날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불응인으로 철수되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청와대 옆에 있는 연무대에서 일부 자료를 제출 받았을 뿐,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 근거한 청와대의 불응인으로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고 둘째 날 역시 청와대가 임의제출한 자료를 7개의 상자에 담아 가지고온 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수집자료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충분한 것인지, 과연 내실있는 수사가 될지는 의심스럽기만 하다. 게다가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순실의 태블릿 피씨 보도 일주일 전에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최순실과의 관련성 등을 전면 부인하는 계획을 세운 의혹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밝혀진 다음에 대통령을 최소한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또 다른 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대통령은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 만약 그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싶다면 수사상 특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사와 특검의 소환이 몇 차례가 되든 언제든 협조해야 한다. 오히려 현재 여야 합의안이라고 보도되고 있는 특검법안은 조사대상 및 범위의 광범위함, 사안의 예민함, 자료 수집의 어려움 등에 비춰 볼 때 매우 취약한 법안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농단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그 권한과 인적 구성, 기간 등에 있어 훨씬 더 강화된 법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야는 제대로 된 특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협상에 임하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은 퇴진해야 마땅하다.

3. 대통령은 현재 수사 대상자이지 수사 지휘자가 아니다.

대통령은 현재 검찰조사를 요구받는 수사의 대상이다. 그런데 변호인은 대통령이 조



사의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수사의 주체인 양 행세하였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처럼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지위를 헛갈리고 있을 것인가? 우리 모임은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신이 행한 행위와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은 말미에 여야가 합의한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오늘 다시 확인되었듯이, 대통령에 의존하는 특검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게 될 뿐이다. 현재 여야합의된 특검법안에서 대통령의 개입 여지를 줄이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폭 수정된 특검법안이 논의되어야만 한다.

[논평] 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2016. 11. 16. (일)

정국이 시시각각 출렁이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민간인이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권을 챙겨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큰 축인 최순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코 앞에 다가와 있다. 최순실 구속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직권남용, 사기미수이다. 만약 검찰이 이 혐의만을 인정하고, 그 외 군사기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횡령·배임죄, 직권남용 가담 또는 업무방해죄, 최근 불거진 의료법 위반행위,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등 국정을 농락한 혐의를 누락한 채 기소한다면 이는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검찰은 수사의 핵심인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저하는 낌새다. 최순실에 대한 뇌물죄 기소는 공무원인 대통령의 관여를 전제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뇌물범죄를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일 터이다.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시 모금을 강요당한 대기업들은 단순히 정치권력에 눌린 피해자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오히려 저마다의 잇속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증뢰자들이다.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의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송금한 시기와 맞물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시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합병에 찬성한 것을 국민들더러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인가.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립된 판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을 매개로 삼성,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뇌물 수수자는 최순실이지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생관계에 있었음은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 스스로 그 각별함에 관하여 밝히기까지 했다. 이에 더해 두 재단과 최순실 측근의 건물 및 대통령 사택의 위치 등을 종합하면 퇴임 후 박근혜 대통령의 노후자금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최순실은 형법 제129조 수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설령 단순수뢰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직무에 관하여 이승철, 재벌총수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이 지배하는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과거 제주도지사가 관광지구지정을 원하는 건설회사로부터 복지재단(재단이사의 처가도지사) 출연금 형태로 30억 원을 수수하여 제3자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사례(대법원 2007. 0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와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기업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으며 자신이 다니던 절에 시주금을 제공하게 한 사례(대법원 2006. 05. 16. 선고 2004도3424 판결)에 빗대어 보면,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위 합병시기를 전후하여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고자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이에 가공한 최순실 역시도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최순실을 기소함에 있어 뇌물죄를 빠뜨리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여야 한다. 대통령 변호인의 새로운 농단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즉각 엄중한 경고를 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이미 수사와 언론을 통해 이번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 것으로 분명해지는 이 마당에 뇌물죄 적용없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이는 박근혜-새누리당-재벌-검찰로 연결되는 권력의 카르텔을 자인하는 것이고, 헌법과괴 농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다. 우리 모임은 이미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를 언급한 바, 그 모든 혐의에 최순실이 공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질조사를 위해서라도 당장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

이미 국정은 참담한 수준이고, 국민들은 절망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몇몇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겸허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만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출구가 될 것이요,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만이 검찰이 해야 할 시대적 책무일 것이다.

[논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여 수사하라

- 2016. 11. 17. (목)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국정혼란 상황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하며 스스로 검찰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항상 자신은 ‘신뢰의 정치인’임을 강변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199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검사는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등으로 범죄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사사건으로 수리하는데, 내사결과 피내사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입건을 하게 되고, 입건 이후에는 혐의자가 피의자로 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143조).

우리 모임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중대범죄행위 수사를 위한 7대 원칙을 밝히며, 그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건 및 피의자 신분으로의 특정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검찰은 박대통령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만 처우하면서 청와대에 수사 협조를 통사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박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 최순실이 지배하는 재단법인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출연하였다는 혐의가 검찰에게는 단순 풍문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기밀 누설과 사기업체 경영진 퇴진압박 및 문화체육계 농단 등 여러 곳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구속된 자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가 검찰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혐의발견 즉시 피내사자를 피의자로 전환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신병을 확보하여야 하는 임무는 검찰의 법률상 의무이자 막중한 사명이다.

또한,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 이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공백과 헌법수호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나, 국정공백은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그 원인이 중대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정식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소환요구를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으로서 내사, 입건 절차 등을 거치지 아



니하더라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때 바로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대통령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이 된 이상 피고발인이 되는 것이지 단순한 참고인인 것은 아니다(검찰사건 사무규칙 제2조). 검찰도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피의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검찰은 원칙에 맞게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하여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대통령에게 피의자로서의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헌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된 이 시국에서, 검사 하나 하나가 초심으로 돌아가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이 사건 진실규명에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논평]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
- 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 2016. 11. 20. (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그리고 대통령의 혐의가 과연 이것 뿐인가

검찰은 오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오늘 수사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1)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기소가 누락된 점, 2)문서유출에 대하여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 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정호성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 기소에 그친 점, 3)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하여 횡령이나 배임죄 기소가 누락된 점, 4)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이 빠진 점, 5)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누락된 점 등은 지난 9월 29일 최순실 등에 대한 고발이 있었던 때부터 53일을 수사한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다. 검찰 수사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며 향후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것이다.

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검찰이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적시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기소된 3인이 대통령과 공모관계’라고 밝혔다. 돌이켜보면 전직 검찰총장조차 ‘권력의 개’를 언급할 정도로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최근까지 대통령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청와대 압수수색 조차 관철시키지 못하였으며, 대통령을 예우한다며 참고인으로 무기력한 요청을 하다가 대면조사 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검찰이 당장 기소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적은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며, 그만큼 검찰조차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도저히 덮을 수 없을 만큼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심각하였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제 이 사건 국정농단이 청와대-최순실 등-재벌기업이라는 삼각동맹을 축으로 한 조직적 범죄였으며, 대통령이 그 모든 범죄의 기획자요 주도자(주범)임이 분명해졌다. 두 차례나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선의’와 ‘측근들의 잘못’을 내세운 대통령의 변명



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임한 역사적 선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닉슨은 사임 연설문에서 “국가의 이익은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해야 함”을 이유로 사임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의사를 밝히는 것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밝힌 “헌법준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마지막 직무이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모임은 일관하여 본건 핵심이 정경유착이요 뇌물죄 기소임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의 핵심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에 대하여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직권남용, 강요죄만을 적용하였다. 롯데에 대하여 추가로 70억원을 받았다고 돌려준 행위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사안의 본질이 빠진 껍데기 기소에 불과하다.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는 것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사이의 금전을 매개로 한 정경유착을 외면하여 대기업들을 희생자로 만들어주는 것일뿐더러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의 처벌 범위가 턱없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한 채 대기업 측을 피의자로 적극 수사하지도 않았고 제공자와 수수자 양쪽 모두의 증거인멸 사태를 방조하였다. 게다가 안종범의 메모와 여러 진술을 통하여 2015. 7. 대기업 독대와 당시 각 기업들로부터 오너 총수 부재, 삼성의 합병 건, 쉬운 해고 등 이른바 노동개혁 등 현안 민원사항을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런 민원이 정부정책으로 진행되는 등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여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직권남용’ 틀에 빠져 누장, 부실수사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서유출, 재단 자금 유용, 인사개입 등에 대한 혐의 적용이 매우 미진하다

청와대 문서유출에 대하여 검찰은 정호성에 대해서만 47건의 공무상비밀 누설죄로 기소하였다. 드레스덴 연설문 등 외교기밀이 포함된 문서에 대해서는 외교상 기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특히 최순실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수집탐지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벼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만 기소하고 다른 혐의를 누락함으로써 사안을 축소하였다.

최순실이 재단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재단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죄 기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최순실이 더블루케이를 내세워 K스포츠재단 연구용역 제안한 부분만을 사기미수로 기소한 것은 최순실의 주도성을 희석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그 밖에 최순실, 안종범 등의 수많은 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강요 행위, 이대 입학 비리 등에 대하여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검찰 수사 결과, 조금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미진하고 실망스럽다

검찰은 대통령 수사에 대한 소극적 태도 끝에 주범이요 몸통인 대통령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기소하게 되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검찰은 최근까지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 움직이지 않았고,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확보된 것에 비추어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조차 하지 않아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었으며, 그 결과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못한 채 수사 방향과 결과를 모두 노출시킨 채 수사결과를 본 후에 수사방향을 알고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검찰 수사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검찰은 이미 최초 고발 후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한 채 눈치만 보면서 그 사이 혐의자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방조하였고(눈치보기 수사), 직권남용죄의 틀에 제한하여 사안의 본질인 정경유착 뇌물죄 수사에 미온적이었으며(틀에 맞춘 수사), 청와대 압수수색 포기, 대통령 피의자 소환 포기, 우병우 황제수사 등 권력 앞에 무기력했고(성역에 고개 숙인 수사), 재벌총수들은 주말에 몰래 참고인으로만 조사하였으며(재벌 봐주기 수사), 박근혜 게이트와 세월호 7시간 등 수많은 대통령의 의혹에 대하여 전면적 조사가 아니라 수사 범위 축소에 골몰하였다(절끔절끔 수사).

우리는 특검이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것을 기대하고 특검 수사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검찰은 뇌물죄 등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하나 검찰의 한계가 명확한 이상 향후 특검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특검은 역사상 처음으로 특검 대상 피고인들이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특검법이 발효되어 업무를 시작하는 사례가 된다. 따라서 수사의 혼선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찰은 특검 시행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향후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검이 개시되면 특검법에 적시된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나,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자료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수사경위 등을 충실하게 특검에 이양해야 한다. 특검수사 대상 첩보내용도 특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특검의 수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검법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부실수사와 공소제기에 대한 비판에서 더 나아가 권력수사에 대한 검찰의 취약성은 영원히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검찰은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에 반드시 이양해야 한다. 최순실 등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특검에서 계속 수사하여 추가 기소 가능성이 크므로 공소유지권을 특검에 이양하여 검찰과 특검의 공소유지가 따로 이루어지는 혼란이 발생하면 안 된다.

향후 특검은 주범인 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특권도 없이 강제수사를 포함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재벌과 전경련에 대하여 뇌물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 대한 철저한 추가 수사와 대통령의 공모에 대한 대질 수사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대통령의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 이번 특검은 다름 아닌 ‘대통령 박근혜’ 특검이다.

[보도자료]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 의견서 발표

- 2016. 11. 21. (월)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검찰은 2016. 11. 2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1) 이번 수사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포함한 7개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행위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대통령이 단지 공범이 아니라 ‘주범’의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일방적 피해자인 것으로 묘사하여 직권남용, 강요죄 만으로 기소하고 뇌물죄 기소를 누락하고 말았습니다.
 - (2) 중요한 수사 과제였던 1)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2)문서유출에 대하여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 3)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 4)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5)이대 입학 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역시 누락된 한계가 있습니다.
3. 이에 중대범죄혐의가 확인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이제 명백해졌으므로 즉각 퇴진하여야 합니다. 한편 검찰 수사의 한계는 향후 특검에 의하여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11. 20. 이에 대한 논평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중대범죄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를 발표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모임은 오늘 이번 검찰 공소 제기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특검 수사 과제를 밝히기 위하여 별도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I. 검찰 공소제기 개요

II.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출연 행위 및 롯데의 70억 원 추가 출연 행위



1. 기소 내용

2. 기소에 대한 검토

가. 뇌물죄 누락의 문제점

나. 대기업의 출연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므로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기소하여야 함

Ⅲ. 기밀누설죄와 기타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검찰의 기소 내용 정리

가.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 공모 범죄 6건(직권남용, 강요)

나.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공동범행(강요미수)

다. 피고인 정호성,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라. 피고인 최순실의 단독범행(사기미수, 증거인멸 교사)

마. 피고인 안종범의 단독범행(증거인멸 교사)

2.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 공모 직권남용 부분

3. 청와대 등 문서유출에 대하여

가. 공소내용

나. 기소의 문제점

4. 재단 자금 유용 혐의 기소 누락

5.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누락

6. 정유라 부정입학 기소 누락

7. 삼성으로부터 출연 부분 기소 누락

Ⅳ.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검찰 수사일지

가. ‘정윤희 문건 파동’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나. 이석수 특감의 내사와 해임 사이, 사라진 내사보고서

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늑장 전개

2. 지금까지 검찰수사의 문제점

가. 눈치보기 수사

나. 틀에 맞춘 수사

다. 성역에 고개숙인 수사

라. 재벌 봐주기 수사

Ⅴ. 향후 특검의 중요성과 수사 과제

1. 검찰은 특검수사에 협조해야 함.

2.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에 반드시 이양해 함

3. 특검의 수사 과제

5. 특검이 실시될때까지 검찰은 남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특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향후 검찰 및 특검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를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 [의견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검토 의견서.
(끝)



[의견서] 검찰의 최순실 등 3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검토

- 2016. 11.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 특별위원회

<목차>

- I. 검찰 공소제기 개요
- II.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출연 행위 및 롯데의 70억 원 추가 출연 행위
 1. 기소 내용
 2. 기소에 대한 검토
 - 가. 뇌물죄 누락의 문제점
 - 나. 대기업의 출연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므로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기소하여야 함
- III. 기밀누설죄와 기타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검찰의 기소 내용 정리
 - 가.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 공모 범죄 6건(직권남용, 강요)
 - 나.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공동범행(강요미수)
 - 다. 피고인 정호성,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 라. 피고인 최순실의 단독범행(사기미수, 증거인멸 교사)
 - 마. 피고인 안종범의 단독범행(증거인멸 교사)
 2.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 공모 직권남용 부분
 3. 청와대 등 문서유출에 대하여
 - 가. 공소내용
 - 나. 기소의 문제점
 4. 재단 자금 유용 혐의 기소 누락
 5.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누락
 6. 정유라 부정입학 기소 누락
 7. 삼성으로부터 출연 부분 기소 누락
- IV.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검찰 수사일지
 - 가. '정윤희 문건 파동'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 나. 이석수 특감의 내사와 해임 사이, 사라진 내사보고서

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녹장 전개

2. 지금까지 검찰수사의 문제점

가. 눈치보기 수사

나. 틀에 맞춘 수사

다. 성역에 고개숙인 수사

라. 재벌 봐주기 수사

V. 향후 특검의 중요성과 수사 과제

1. 검찰은 특검수사에 협조해야 함.

2.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에 반드시 이양해 함

3. 특검의 수사 과제

I. 검찰 공소제기 개요

- 검찰은 2016. 11. 2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함.
- 검찰 수사 결과는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포함한 7개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행위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대통령이 단지 공범이 아니라 '주범'의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일방적 피해자인 것으로 묘사하여 직권남용, 강요죄 만으로 기소하고 뇌물죄 기소를 누락함.
- 최순실 등의 혐의혐의 사실 중 1)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2)문서유출에 대하여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 3)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 4)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5)이대 입학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누락되었음.

II.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출연 행위 및 롯데의 70억 원 추가 출연 행위

1. 기소 내용

- 대통령, 안종범, 최순실의 공모로 ①16개 대기업이 미르재단에 486억 원, ②K스포츠재단에 288억 원 합계 774억 원을 출연받은 행위
- 직권남용죄, 강요죄 기소
 - 출연기업 들이 대통령, 안종범, 최순실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출연금을 납부하였다고 봄



-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 비서관의 직권을 남용(직권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전경련 임직원,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등으로 하여금 486억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강요)로 기소.

2. 기소에 대한 검토

가. 뇌물죄 누락의 문제점

- 본건은 정경유착 사안이므로 뇌물죄를 적용하여야 하나, 검찰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만을 적용함.
-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직권남용만 적용되면 돈을 낸 재벌들은 일방적으로 출연을 강요를 당한 피해자가 되어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게 됨.
- 뇌물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반면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뿐이며,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면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한 실정이어서 처벌 수위가 턱없이 낮아지게 됨.

나. 대기업의 출연에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므로 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기소하여야 함

-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에서 대법원은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하여 포괄적 뇌물죄 법리를 인정함. 대통령이 사실상 최순실과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퇴임 후 실질 관여를 염두에 두고 재단을 조성한 것이라면 이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죄로 기소할 수 있음
- 이와 달리 재단이 법적으로 대통령과 구별되는 제3자라고 본다면, 제3자뇌물제공죄에 해당함. 대법원은 제3자뇌물제공죄와 관련,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되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

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견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함.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 안중범의 메모, 진술 등을 통하여 2015. 7. 24. 대통령이 7개 그룹 총수들과 독대를 한 사실, 독대 직전에 대통령이 안중범에게 지시하여 대기업들에게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내달라고 한 사실, 이때 SK, CJ는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해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 현대자동차는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 등의 민원사항을 제출하고 안중범이 이를 정리하여 메모한 사실이 확인됨. 나아가 그후 출연그룹의 민원사항인 오너의 특별사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이른바 ‘노동개협 5법’의 적극 추진, 원샷법 등 규제완화 시행 등이 이루어짐. 또한 2016. 2.에도 다시 대통령 독대가 있었음. 따라서 재단 출연을 앞두고 재벌기업들이 각자 제출한 민원사항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언급하지 않고 기업측이 일방적으로 강요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함.
- 수뢰액이 1억 원을 상회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적용. 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 가능.

Ⅲ. 기밀누설죄와 기타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검찰의 기소 내용 정리

검찰은 재단 설립 관련 직권남용 기소 외에 아래 혐의로 기소함

가. 최순실, 안중범, 대통령 공모 범죄 6건(직권남용, 강요)

- 최순실 지인 운영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그룹에 납품계약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직권남용, 강요
- 최순실이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그룹이 5건의 광고를 수주하도록 직권남용, 강요
-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 강요
- 포스코가 2017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직권남용, 강요
- KT가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강요



- 그랜드코리아레저(GKL)-선수-더블루케이 3자간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케 하고 전속계약금 및 에이전트 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직권남용, 강요

나.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공동범행(강요미수)

- 최순실, 안종범은 송성각, 차은택 등과 공모하여(대통령은 공모에서 누락)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측에게 포레카 지분 80%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다. 피고인 정호성, 대통령의 공동범행(공무상비밀누설)

-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47건의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피고인 정호성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순실에게 전달하는 등 대통령과 공모하여 47건에 대한 공무상비밀 누설

라. 피고인 최순실의 단독범행(사기미수, 증거인멸 교사)

- 사기미수 : 피고인 최순실은 자신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체육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과 실적이 전무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연구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스포츠재단에 7억원 상당의 2건의 연구용역제안서를 제출하여 연구용역비 7억여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 등 반대로 미수에 그침
- 증거인멸 교사 : 피고인 최순실은 2016. 10. 25. 독일에서 측근에게 더블루케이 컴퓨터 5대의 은닉 및 완전한 폐기를 지시하여 증거인멸 교사

마. 피고인 안종범의 단독범행(증거인멸 교사)

- 피고인 안종범은 2016. 10. 중순경 검찰 조사를 앞둔 이승철에게 전화를 걸어 이승철의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하여 폐기시킴
- 피고인 안종범은 자신의 보좌관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하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함

2.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 공모 직권남용 부분

- 위 직권남용이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행위임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으나, 위 혐의에서 기업 측이 일방적으로 강요당한 피해자인지, 대가성을 가진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추가 검토 필요
- 특히 2016. 5. 롯데그룹에게 추가로 70억원을 지원받았다가 압수수색 전날 돌려준 행위의 경우, 대통령이 2016. 3. 14. 신동빈 회장을 단독면담하고, 출연 당시 롯데

그룹 신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수사 대상이었으며, 롯데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롯데그룹 측에서는 수사 관련한 민원 현안이 있었음. 2016. 6. 9. 롯데그룹 압수수색을 하루 앞두고 70억원을 돌려준 것 역시 출연금과의 대가성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뇌물죄(제3자뇌물제공죄)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함.

3. 청와대 등 문서유출에 대하여

가. 공소내용

- 청와대 문서유출에 대하여 검찰은 정호성에 대해서만 47건의 공무상비밀 누설죄로 기소.

나. 기소의 문제점

- 검찰은 청와대 문서유출행위에 대해 정호성의 공무상기밀누설죄 외에 드레스덴 연설문 등 외교기밀이 포함된 문서에 대해서는 외교상 기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특히 최순실에 대해서도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수집탐지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벼운 공무상 비밀누설죄(법정형 징역 2년 이하)로만 기소하고 다른 혐의를 누락함으로써 사안을 축소함.
- 군사기밀보호법 상 탐지수집죄는 주체가 제한이 없고,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행위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음. 최순실이 대통령인수위 시절 대통령과 이명박 전대통령의 독대자료 중 북한과 3차례 비밀 접촉한 사실 등의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받아 본 행위는 군사기밀 탐지·수집죄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야 함.(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등 외교문서를 최순실에게 누설한 것은 형법상 외교상기밀누설죄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에 포함하여야 함(형법 제113조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통령 보고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바, 이를 최순실에게 전달한 정호성과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죄(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제14조.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순실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 내용을 지득하여 회의참가자들에게 누설한 누설죄(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30조 제3항, 제19조.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금고)에 해당할 수 있음.

4. 재단 자금 유용 혐의 기소 누락



- 검찰은 최순실이 운영하는 (주)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 약 7억원의 용역비를 받아 편취하려고 한 행위를 사기미수로 기소하였음.
- 검찰은 K스포츠재단 내 최순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연구용역 제안이라는 수단(편취)만을 문제삼았으나 (주)더블루케이 뿐 아니라 K스포츠재단 역시 최순실이 인사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지배관계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함(공소사실 축소).
- 특히 횡령액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특경법 제3조에 의해 가중처벌되어야 함.

5.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누락

- 검찰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사적 신임을 등에 업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에 개입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에도 이를 기소에서 누락하였음.
- 최순실은 대통령인수위 시절부터 대통령의 비서진, 정부부처의 장차관, 베트남대사 등 외국대사, 공기업인 KT의 임원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인사에 개입하였다는 정황과 증거가 나오고 있음.
- 이러한 인사개입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해당하며, 이로써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됨.

6. 정유라 부정입학 기소 누락

- 검찰은 최순실이 그의 딸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사정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강요죄에 해당함에도 기소에서 누락하였음.
- 그러나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재학 당시 특혜 제공을 인정하고 입학취소를 요구하였음.
- 따라서 최순실은 위계 내지 위력으로서 이화여자대학교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에 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강요죄를 추가로 기소해야 함.

7. 삼성으로부터 출연 부분 기소 누락

- 검찰은 최순실과 정유라가 대표로 있는 코레스포츠를 통해 자문료 명목으로 280만 유로(약 35억원)를 받고, 이후 다달이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음에도 공소사실에서 누락하였음.

- 그러나 삼성이 코레스포츠에 위 금액을 송금한 시기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당시 엘리엇 헤지펀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합병에 찬성하여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을 용이하게 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등 대가성이 인정됨.
- 추가 기소시 검찰은 위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뇌물죄 공소사실에 포함시켜야 함.

IV.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검찰 수사일지

가. ‘정윤희 문건 파동’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 2014. 11. 28.자 세계일보 보도²³⁾를 통해서 정윤희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의 각종 인사개입과 국정농단을 감찰한 청와대 보고서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이를 단순 ‘문건 유출’ 사건으로 처리하여 수사함.
- 2015. 1. 7. 위 감찰보고서 작성자인 박관천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최순실이 비선실세임을 폭로하는 진술을 하였고²⁴⁾, 검찰이 당시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한일 전경위의 휴대전화에는 최순실 관련 비리 내용이 들어있어 이를 알았음에도 묵인한 사실이 최근 드러남.²⁵⁾
- 최근 드러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문고리 3인방’ 등이 조직적으로 관련사실을 은폐하여 화를 키웠고, 당시 수사는 ‘부실수사’를 넘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키운 ‘범죄적 수사’였음을 알게 함.²⁶⁾

나. 이석수 특감의 내사와 해임 사이, 사라진 내사보고서

- 2016. 7.경 대통령 직속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정에서 안중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관여한 혐의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사를 진행함. 이 특감은 2016. 8. 18.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 내사는 중단됨.²⁷⁾
- 그 후로 우병우와 이석수 전 특감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꾸려진지 73일이 지나도록 우병우를 소환하지 못하고 있었음.²⁸⁾ 검찰은 2016. 8.

23) 2014. 11. 28. 세계일보, 정윤희 ‘국정개입’은 사실

24) 2015. 1. 7. 동아일보, 박관천의 황당한 권력서열 강의

25) 2016. 11. 11. 중앙일보, 정윤희 문건 수사 때 우병우의 민정비서관실서 회유했다

26) 2016. 11. 13. 세계일보, ‘권력서열 1위 최순실’ 진술 듣고도 무시

27) 2016. 9. 22. 한겨레, 이석수 특감, ‘K·미르 출연금 중용’ 안중범 수석 내사했다

28) 문화일보, 2016. 11. 4.檢이 불러도 무시하는 우병우, 옷 벗고도 무소불위?



29. 특감 사무실 압수수색 때 특감 내사보고서 등을 가져가 보관중이었는데, 그 내사보고서에 들어있었을 안중범, 우병우 등의 의혹에 관한 수사는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음.

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늑장 전개

- 2016. 9. 29. 한 시민단체가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와 관련하여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 관련자들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을 형사8부에 담당함.
- 2016. 10. 20.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단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벌하라”고 지시한 후에야 비로소 재단 설립을 인가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최씨 등 재단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조회에 나섰지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최순실, 차은택 등 핵심인물이 출국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이 중요문서들을 파쇄하는 것을 방치하였음.
- 2016. 10. 26. 검찰은 사건접수 약 1달 만에 관련 사무실(최순실 씨 주거지, 차은택 씨 주거지, 전국경제인연합, 더블루케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 때 이미 두 재단은 해산된 지 한 달 가까이 되었음.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9. 30. 두 재단을 해산하겠다고 밝힘.²⁹⁾
- 2016. 10. 29. 검찰은 안중범, 정호성, 김한수 등의 청와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수사협조 거부로 결국 철수함.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을 뿐,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 근거한 청와대의 불응인으로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함. 이튿날 검찰은 재집행을 추진하여 상자 7개 분량의 압수물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지만, 이는 ‘빈상자’ 논란이 일만큼 형식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놓임.
- 2016. 10. 30. 최순실이 인천공항에 입국하였는데, 검찰은 31시간동안 최순실이 자유롭게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은행에서 돈을 빼돌리는 것을 방치함. 검찰은 10. 31. 시중은행 8곳에 최순실 관련자들의 계좌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도, 정작 최순실과 딸 정유라 등 주요인물들은 제외한 채 차은택과 법인들의 계좌만 들여다봄.³⁰⁾
- 그 외 전경련 부회장의 거짓 진술에 대한 소극적 대응, 재벌 총수 7명에 대한 주말 비공개 소환조사³¹⁾, 우병우 황제소환 논란³²⁾ 등 검찰은 실망적인 행태를 보여옴. 심지어 검찰이 11. 10. 우병우의 자택에서 압수한 핸드폰은 강통 전화기였음.³³⁾
- 특히 대통령 수사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주범이요 몸통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29) 뉴시스, 2016. 10. 26. 27일만에 미르재단 등 ‘뒷북’ 압수수색 실효성 논란

30) 한겨레, 2016. 11. 3. ‘최순실 31시간’ 은행 창구서 돈 빼갔다

31) 뉴시스, 2016. 11. 13. 검찰, 대기업 총수 ‘주말·비공개 소환’...“국민 경제 영향 고려”

32) 조선일보, 2016. 11. 7. 팔짱끼쳐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33) 조선일보, 2016. 11. 12. 아니나 다를까, 우병우 핸드폰에 아무 것도 없었다

하지 못한 채 관련자들을 먼저 기소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됨. 상당한 기간동안 검찰은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안종범과 정호성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확보된 것에 비추어 대통령에게는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었고, 그 결과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한 채 수사방향과 결과를 모두 노출시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말았음.

2. 지금까지 검찰수사의 문제점

가. 눈치보기 수사

-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에 대한 사건 접수 이후 수사 착수를 미루며 20여일 동안 정국의 흐름의 눈치만 봄. 그동안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수석 전반과 비선실세로 거론되는 자들, 재벌총수들 등을 전면적으로 일제 조사하지 아니하고, 여론의 추이에 따라 여론의 초점이 된 자만 그때 그때 수사하는 모습을 보임.
- 그럼으로써 전경련의 이승철 등은 재단 해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재벌들도 그에 맞추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가짐.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김기춘, 정윤희 등 청와대 전/현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요원함.

나. 틀에 맞춘 수사

- 처음부터 직권남용죄의 틀로 제한하여 이 사건의 핵심 본질인 정경유착을 밝히는 뇌물죄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이었음.

다. 성역에 고개숙인 수사

- 청와대 압수수색 포기, 우병우 황제소환, 대통령 피의자 소환 포기 등 검찰이 대통령의 권력기구에 머무르고 마는 성역에 고개숙인 수사를 진행하여, 이는 공정한 수사기관의 사명을 띤 검찰 스스로의 신뢰를 실추시킴.

라. 재벌 봐주기 수사

- 검찰은 재벌 총수들을 주말에 몰래 불러 참고인으로만 조사함. 이들 기업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재단 모금에 응한 피해자인 것처럼 처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사 시작단계부터 봐주기식 수사로 흘러갈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임.
- 2016. 11. 8. 검찰은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정유라 씨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 삼성에 대한 8년만의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나, 이는 여론에 떠밀려 행하는 생색내기엔 불과하고 오히려 다른 재벌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보여주기



기식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V. 향후 특검의 중요성과 수사 과제

1. 검찰은 특검수사에 협조해야 함.

- 1) 특검이 개시되면 특검법에 적시된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나,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자료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수사경위 등을 충실하게 특검에 이양하고,
- 2)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검법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 3) 특검수사 대상 첩보내용도 특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특검의 수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
- 4) 그렇지 않으면 이번 부실수사와 공소제기에 대한 비판에서 더 나아가 권력수사에 대한 검찰의 취약성은 영원히 낙인찍히게 될 것임.

2.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에 반드시 이양해 함

이번 박근혜-최순실 특검은 역사상 처음으로 특검 대상 피고인들이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특검법이 발효되어 업무를 시작하는 사례가 되는데, 이를 고려하여 특검법이 입안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공소유지권도 특검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1) 최순실 등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뇌물죄 등에 대해서 추가기소할 가능성이 크고
- 2) 기소된 범죄 내용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유력한 증거가 더 발견되어 최순실 등의 재판에 제출될 필요가 있으며,
- 3) 공소유지권을 특검에 이양하지 않을 경우 한 재판에서 검찰과 특검이 공소유지를 각각 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3. 특검의 수사 과제

향후 특검은

- 1) 주범인 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특권도 없이 강제수사를 포함하여 철저히 수사하여야 함.
- 2) 재벌과 전경련에 대하여 뇌물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여야 함.
- 3)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 대한 철저한 추가 수사와 대통령의 공모에 대한 대질 수사를 하여야 함. 세월호 당시 해경해체 등 최순실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 개입 여부에 대해 적극적 수사를 실시하여야 함.
- 4) 국정농단 관련 우병우, 김기춘 등의 관여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여야 함
- 5)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대통령의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함.(끝)

2016년 11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의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2016.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 특별위원회

<목 차>

I. 서 론 -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3
II. 탄핵소추의 핵심사유 - 대통령 박근혜의 주요한 헌법위반의 점	4
1. 민주공화국 원리 및 국민주권주의 위반	5
2. 대의제 원칙 위반	6
3. 법치주의 원리 위반	6
III. 대통령 박근혜의 위법 행위 - 탄핵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의 점	8
1.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자금 모집 행위	8
가. 주요 사실	8
나. 검찰의 기소 - 대통령이 직권남용, 강요죄의 공동정범	8
다.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9
라. 제3자 뇌물제공죄(특가법상 뇌물죄)가 탄핵소추 발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2. 재단 설립 후 추가적으로 자금 모집 행위	14
가.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행위	14
나. 부영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 및 약속한 행위	15
다. 삼성이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최순실의 회사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원)를 지원하도록 한 행위	16
라. CJ가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차은택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행위	18
3. 권력을 남용하여 최순실, 차은택 등에게 특혜와 이권을 준 행위	19
가.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최순실, 차은택 관련 회사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도록 한 행위 (검찰 공소장 기재)	19
나.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재단에 각종 사업 이권을 준 행위	20
4.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지시 행위	22
가. 주요 사실	22
나. 법률 위반	22
5.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원과 기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23
가. CJ 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지시한 행위 -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3
나. 권한을 남용하여 문체부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한 행위	23
6. 청와대 문건 등 기밀을 사인(私人)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행위	24

가. 주요 사실	24
나. 법률 위반	25
7.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	25
IV.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 위반	27
1. 국민주권주의 잠탈	27
2. 대의제 원칙 위반	28
3. 직업공무원제도 훼손 및 공무원 임면권 남용	29
4. 문화국가원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32
5. 국민 보호 의무 위반	33
6. 국민의 재산권 무단 침해 및 자유시장경제질서 교란	36
7. 은밀한 국정 운영에 따른 행정의 공공성·공개성 침해 (부서제도 잠탈)	38
8.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민주화 원칙 잠탈	40
9. 대통령의 본질적 의무 불이행	41
V.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과연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	42
1.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42
2.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43
3.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인지	46
VI. 결 론	49
VII. 보 론 : 몇 가지 쟁점	50
1. 탄핵소추서에 공소장 이외 위법행위를 적시할지 여부	50
2.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서의 입증전략	50
3. 국민의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의 중대성	52



11. 서 론 -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헌정사상 최초의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고, 연일 계속되는 새로운 뉴스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은 백만촛불로 이어졌고,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4%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하루빨리 이러한 사태를 바로잡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나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대통령은 ‘내가 뭘 잘못했나’는 태도로 청와대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빌붙은 일부 정치인들은 마녀사냥 운운하면서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득이 남은 최후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의회에서 탄핵절차에 들어가자 더 이상의 국정혼란과 국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스스로 퇴진을 결심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탄핵절차 시작 전이나 진행 도중이라도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취임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하는 절차를 단호하게, 확고하게 진행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이 땅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아래로부터 시작된 ‘시민혁명’을 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는 전국 방방곡곡의 구호는 이제 두 헌법기관에게는 “박근혜를 탄핵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는 구호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국회의원이나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도, 국회의원에게도, 헌법재판관에게도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이 나라를 경영하라고 권한을 위임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한 뜻에 따르지 않는 부적격한 대통령, 부적격한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민이 부득이 직접 소환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률가로 구성된 우리 모임에서는 대통령 탄핵절차를 앞두고, 이에 일조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떠한 탄핵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의견서가 탄핵소추서의 형식을 갖춘 초안은 아닐지라도, 탄핵소추서를 작성하고, 향후 탄핵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12. 탄핵소추의 핵심사유

- 대통령 박근혜의 주요한 헌법위반의 점

가. 민주공화국 원리 및 국민주권주의 위반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공화국 원리 및 같은 조 제2항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대한민국 조직의 가장 근본적 조직원리로서 (1) ‘공화국’은 군주 한 사람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다수 구성원들에 의해 공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사가 결정되는 체제를 말하고, (2) 이러한 의사형성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은 자격을 갖춘 국가의 대표들(국회의원, 대통령 등)에 의해 공개적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국가의 공적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격도 없는 비선실세가 사적 이익을 위해 밀실에서 국정을 농단하게 허용하고 조장하였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자격 없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고 전횡한 전제주의와 하등 차이가 없고,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상 가장 근본적인 민주공화국 원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한편,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는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에 의한 권한위임을 망각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인적인 연고가 있는 제3자에게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맡기고, 각종 인사와 예산정책에 개입하게 하고,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국민주권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나. 대의제 원칙 위반

대의제 민주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속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정에 관여하고 민주사회를 실현합니다(헌법재판소 1994. 7. 29. 93헌가4 등). 나아가 참정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 제24조와 대표 중 특히 대통령에 대한 선출방법을 규정한 헌법 제67조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에 뽑힌 국민의 대표자만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의논해 결정하라는 원리입니다.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인 대의제는 선거에 의하여 뽑힌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위임취지에 맞게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위임받은 권력을 개인적 연고자에게 마음대로 떠넘겨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게 하고, 각종 정상외교나 국무회의 일정 등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맡기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는 대의제 원리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 법치주의 원리 위반

“정당한 법을 통한 통치”라는 법치주의 원리는 헌법 제75조 법률유보의 원칙, 제12조 적법절차원리 제11조 법 앞의 평등의 원리,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등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현대헌법의 기본원리입니다.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은 이러한 법치주의 원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배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우선의 원칙과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서만 발동할 수 있고, 행정작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공적인 행정기구와 행정절차가 아닌 최순실, 차은택 등을 비롯한 비선조직들에게 군사상, 외교상, 공무상의 기밀을 전달하여 비선조직을 통해 국정방향을 논의하고, 이러한 비선조직들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여 부여한 권력에 편승하여 대통령 연설문의 작성이나 재단의 설립 등의 구체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하였습니다. 심지어 비선조직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을 좌천시키거나 사임하도록 하고 자신들에 우호적인 인사를 문화체육부의 장관과 차관에 임명하도록 하는 등 행정기관의 인사에까지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여 법치주의원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행위와 개별적 헌법위반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13. 대통령 박근혜의 위법 행위

- 탄핵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의 점

가.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자금 모집 행위

1) 주요 사실³⁴⁾

- (1) 대통령은 비선 실세인 최순실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단을 만들기로 하고, 이에 따라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최순실과 공모하여,
- (2) 2015. 7. 24-25. 7개 대기업 대표를 단독면담하고, 안중범에게 지시하여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승철에게 재단 설립 추진을 위하여 전경련 소속 대기업에게 출연을 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재단 명칭을 ‘미르’로 하고 그 밖에 임원진, 조직표, 임원진 등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대통령이 이를 안중범에게 지시하고, 10. 27. 재단 설립을 위하여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 날인을 받고 설립허가 서류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설립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식으로, 16개 그룹으로부터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486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받고,
- (3)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최순실, 안중범과 공모하여 16개 그룹으로부터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재단 출연금으로 288억 원을 출연 받아, 합계 774억 원을 출연 받았습니다.

2) 검찰의 기소 - 대통령이 직권남용, 강요죄의 공동정범

검찰은 위 행위에 대하여 2016. 11. 20. 최순실, 안중범을 기소한 공소장(이하 “공소장”)에서 아래와 같이 대통령이 최순실, 안중범과 형법상 직권남용죄³⁵⁾와 강요죄³⁶⁾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최순실, 피고인 안중범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 비서관의 직권을 남용(직권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전경련 임

34) 세부내용은 검찰의 2016. 11. 20.자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이하 ‘최순실’로 통칭함) 등 3인에 대한 공소장 참조

35)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원,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486억 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공소장 제11면)

3)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전두환, 노태우 전(前)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여 포괄적 뇌물죄 법리를 인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최순실과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재단을 실질적으로 최순실과 함께 소유하거나 적어도 퇴임 후의 소유 및 실질 관여 의사로 재단을 설립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대기업들이 재단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을 낸 것이 대통령과 구별되는 제3자에 대한 금원 제공이라고 본다면, 위 행위는 ‘제3자 뇌물제공죄’(검찰의 죄명표현으로는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특가법’)상 뇌물죄로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 뇌물제공죄와 관련,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 되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인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검찰의 공소사실 및 현재까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아래의 사실이 확인됩니다.

▷ 2015. 7. 24. 대통령은 7개 그룹 총수들과 독대하였습니다. 독대 직전에 대통령이 안중범에게 지시하여 대기업들에게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SK, CJ는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 현대자동차는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 등의 민원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안중범은 이를 정리하여 메모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습니다.(안중범의 메모, 진술 등) 위 대통령 독대에서 CJ 손경식 회장은 사면논의가

있었고 사면을 기대하고 출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³⁷⁾

- ▷ 2015. 7.경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 아래 2.항 기재 참조)
- ▷ 2015. 10. 27. 미르재단 설립일에 대통령이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 출연기업의 민원에 부응하는 ‘시정 연설’을 발표하였습니다.³⁸⁾
- ▷ 2016. 1. 13.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발표{첫째, 노동 개혁법 처리, 둘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하고, 같은 날 전경련이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 발족하고 범국민서명운동 시작한 후 1. 18. 대통령이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에 직접 서명하는 등 출연기업과 전경련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 ▷ 2016. 2. 18. 대통령은 삼성 등 재벌과 전경련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최순실, 차은택 관련 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에 재벌 총수 몇 명을 독대하였습니다.³⁹⁾
- ▷ 대통령은 2016. 2.경 SK 최태원 회장을, 3. 14. 롯데 신동빈 회장을 독대하였습니다.
- ▷ 롯데와 SK는 2015. 11.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 운영중이던 면세점 사업권을 상실하였는데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2016. 4. 관세청이 서울 시내 4곳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을 밝혔습니다.⁴⁰⁾ 이에 따라 롯데, SK가 추가 면세점 신청을 하였습니다.⁴¹⁾
- ▷ 위 기업들 중 재단 출연 전후로 기업들의 민원사항인 오너의 특별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 8. 13. SK 최태원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되고, 2016. 8. 12. 사면이 어려워보였던 CJ 이재현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 ▷ 대림산업은 2015. 8. 15. ‘부정당업자’에서 사면되어 입찰참가 제한에서 풀려났고, 2016. 5.경 대통령 이란 순방 이후 이란에서의 철도·댐 사업권에 관한 수조원 대의 가계약을 맺었으며, 2016. 9.경 미르재단 이사교체시 대림산업 직원 출신 2명이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⁴²⁾
- ▷ 대통령 스스로 2016. 10. 20.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신이 기업인들에게 문화체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당부하여 기업인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이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이어서, 2016. 10. 24. 대국민 담화에서 재단 설립이 자신의 관여 하에 진행된 것임을 시인하였습니다.

37) 대통령 CJ회장 독대서 사면 얘기 나와. KBS. 2016. 11. 17.자

38) (i) 경제 활성화법 처리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ii)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iii)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39) [단독] 박대통령 올 2월18일에도 ‘총수 독대’ 드러나...검찰 수사. 한겨레. 2016. 11. 9.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9426.html#csidxd8b788fdc17aaf88b6c5c36ebee



따라서 설령 16개 그룹 전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대가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출연행위는 제3자 뇌물제공죄의 ‘부정한 청탁’에 부합합니다.⁴³⁾

4) 제3자 뇌물제공죄(특가법상 뇌물죄)가 탄핵소추 발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노무현 전(前)대통령 탄핵사건).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따라서 탄핵소추의결서에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해당 사실관계가 어떻게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⁴⁴⁾

‘직권남용’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강요죄’도

9554

40) [단독]檢,영장에 “뇌물죄” 처음 명시…박 대통령-기업 공범되나. 국민일보. 2016. 11. 25.자

41) 의혹투성이 면세점 추가… 檢칼날 ‘롯데’ 정조준. 롯데, 잠실면세점 회복에 그룹 총력 기울여…靑·최순실 상대로 로비 의혹 가능성 제기돼. 머니투데이. 2016. 11. 25.자

42) 일요경제, ‘최순실 정국’ 뉴스타파가 대립산업을 주목한 이유... “현정부 최대수혜” vs “기부 기사 빼면 사실 아냐”(2016. 11. 3.) <http://www.ilyo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47>

43) 검찰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는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한 사정 때문으로서 검찰은 이후 제3자 뇌물제공죄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도 검찰의 수사는 진행 중이라서 향후 소추서 제출시까지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소추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44)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 전원재판부)

이러한 헌법재판소 심결례에 따르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제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실관계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여 법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충실히 제시하고, 이는 특가법상 뇌물죄(제3자 뇌물제공)에 해당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이후 밝혀진 증거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사에 반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직권남용죄나 강요죄의 상대방은 강요나 두려움으로 의사에 반하여 행동하였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통령은 대기업들을 독대까지 하면서 현안과 요구를 전달받고 출연을 받았고, 출연 후에 각 기업들의 목은 현안인 사면, 합병, 쉬운 해고 등 이른바 노동개혁 규제완화, 면세점 추가 신청 등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거액의 금전을 매개로 한 대가라는 정경유착의 전형이며 과거 5공화국 ‘일해재단’의 수법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출연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만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며 위 재단 출연행위는 포괄적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재단의 수취액이 1억 원을 상회하므로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중처벌되어 법정형 최대 무기징역형에 해당합니다(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취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소추의결서에 위에 언급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그러한 재단 출연 행위가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진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만 기재해도 되고, 이후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대기업들이 의사에 반하여 출연행위를 한 것으로 볼 경우, 그 경우 법률 위반 사항으로 직권남용죄 보다는 공갈죄(제3자에게 출연하게 한 경우는 형법 제350조 제2항의 공갈죄)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⁴⁵⁾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⁴⁶⁾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나. 재단 설립 후 추가적으로 자금 모집 행위

45)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행위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케이스포츠재단의 체육시설 건립 사업 및 자금조달 계획을 전달 받고 안중범에게 지시하여 2016. 3. 10. 롯데 신동빈 회장을 단독면담하고 그에 따라 케이스포츠에 70억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습니다. 2016. 3.경 케이스포츠재단은 롯데에 70억 원을 추가로 낼 것을 요구하고, 롯데가 그에 따라 2016. 5.경 70억원을 재단에 추가 출연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롯데 압수수색 실시 바로 전날인 2016. 6. 9. 케이스포츠재단은 70억원을 돌려주었습니다.(세부 내용 공소장 참조)

검찰은 2016. 11. 20. 공소장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최순실, 안중범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직권남용, 강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행위는 특가법상 뇌물죄(제3자 뇌물제공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①대통령이 2016. 3. 14. 신동빈 회장을 단독면담하고, ②면담 직후 안중범에게 롯데그룹이 체육시설 관련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상황을 챙기라고 지시하였고, ③출연 당시 롯데그룹 신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수사 대상이었으며, 롯데 관련 세무조사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등 수사 관련한 현안이 있었고, ④면세점 사업권 상실 후 면세점 재확보가 큰 현안이었고, ⑤2016. 6. 9. 롯데그룹 압수수색을 하루 앞두고 70억 원을 돌려준 것 역시 지원금과 현안의 대가성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소추의결서에 대통령의 법률위반 사항으로 특가법상 제3자 뇌물제공죄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검찰 공소장 기재와 같이 롯데가 의사에 반하여 출연행위를 한 것으로 볼 경우,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죄 보다는 ‘공갈죄’ (제3자에게 출연하게 한 경우는 형법 제350조 제2항의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2) 부영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 및 약속한 행위

2016. 2. 26. 안중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케이스포츠재단 관계자와 함께 이종근 부영 회장을 만나서 케이스포츠재단이 부영에게 하남의 거점 체육 인재 육성사업으로 70억원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부영은 그 조건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편의를 봐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⁴⁷⁾

47) [단독] 안중범, 부영 회장과 “70억 지원” “세무조사 편의” 뒷거래. 한겨레 2016. 11. 2.자

부영은 2016. 2. 17. 케이스포츠재단에 이미 3억원을 출연하였던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의 재단 설립 추진 및 최순실의 케이스포츠재단 관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케이스포츠재단이 70억원의 공여를 요구하고 부영 이부영 회장이 그 대가로 세무조사 편의를 요청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제3자 뇌물 제공죄는 뇌물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만으로 처벌하므로 위 행위는 제3자 뇌물요구죄 또는 약속죄에 해당합니다.

3) 삼성이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최순실의 회사에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원)를 지원하도록 한 행위

삼성은 미르 재단에 125억원, 케이스포츠재단에 79억원 합계 204억원을 출연한 것 외에도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현 비텍스포츠 전신)에게 직접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원)를 지원했습니다. 구체적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 2015. 3.경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⁴⁸⁾
- ▷ 2015. 3. 26.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11.43%(17,848,408주) 보유 공시
- ▷ 2015. 3. 27.~5. 22.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지속적 매도(2,941,962주 순매도)
- ▷ 2015. 5.~6.경 최순실이 독일에 법인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 ‘말과 관련한 사업을 하며 삼성이 후원한다’고 알려짐⁴⁹⁾
- ▷ 2015. 5. 26. 구 삼성물산, 합병관련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합병비율 1대 약 0.35)
- ▷ 2015. 6. 4.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공시, “합병비율 삼성물산에 불리, 합병반대”, 삼성전자 등 보유주식 현물배당 가능하게 정관변경 요구 주주제안서 삼성물산에 제출
- ▷ 2015. 6. 9. 엘리엇, 삼성물산 및 이사진 상대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 ▷ 2015. 6. 9.~6.말 기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 일부에게 전화하여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전화를 하여 압력을 행사⁵⁰⁾
- ▷ 2015. 7. 3.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반대 권고
- ▷ 2015. 7. 3.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추가 취득으로 11.61%(18,671,098주) 보유
- ▷ 2015. 7. 7.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 홍완선, 내부 반대에 불구하고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하여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또는 재추진 가능성을 문의⁵¹⁾
- ▷ 2015. 7. 17. 구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국민연금 합병 찬성,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2대 주주로서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합병이 부결되었을 것임)⁵²⁾
- ▷ 2015. 7. 17. 최순실, 독일 현지에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 설립⁵³⁾, 주주는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2인이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25,000유로(한화 약 3천만원)⁵⁴⁾
- ▷ 2015. 7. 24. 박근혜 대통령, 대기업 총수 17명이 참석한 청와대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 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가 끝난 후 이재용 기업인 7명을 독대



- ▷ 2015. 8. 삼성 박상진이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을 직접 만나 자금지원 등 논의.⁵⁵⁾
 - * 코레스포르츠가 독일 현지 승마협회에 전지훈련 지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에 약 186억 원을 삼성이 지원하기로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음.⁵⁶⁾ * * 한편 박상진이 회장인 승마협회는 같은해 10월경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종목에 3년 반 동안 186억원을 지원하고 비용 전액을 삼성그룹이 지급하는 내용의 유망주 육성 로드맵을 만들.
- ▷ 2015. 9.~10. 삼성전자, 코레스포르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 체결 및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국내 B은행 독일 현지 법인 지점 및 여러 독일 은행을 통하여 송금⁵⁷⁾. 이 돈 가운데 10억원 넘는 돈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 V'를 사는데 쓰였으며, 이 말은 정유라가 단독으로 훈련에 이용함. 이외에도 삼성이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를 코레스포르츠에 송금하였다는 보도도 있음.⁵⁸⁾
- ▷ 2015. 10. 26. 삼성계열사들 미르재단에 125억 원 입금
- ▷ 2015. 10. 27. 미르재단 설립, 같은 날 박대통령 '시정 연설' 발표
- ▷ 2016. 1. 12. 삼성계열사들 케이스포츠재단에 79억 원 입금
- ▷ 2016. 1. 13.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 ▷ 2016. 2. 18.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임원 몇 명을 비공개로 청와대로 불러 독대, 독대한 재벌대기업은 삼성과 에스케이, 부영, 롯데, 포스코 등일 가능성이 큼.⁵⁹⁾
- ▷ 2016. 2. 25. 삼성생명공익재단(이사장 이재용)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를 취득⁶⁰⁾

48) 삼성은 1988. 6. 실업승마단을 창단하였으나 2010년 승마선수단을 해체한 이후 2014년까지 승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한화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회장이 2014. 6.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한지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임기가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나 물러났다.

49) 한겨레21, “최순실과 삼성 독일에서 수상한 관계” 제1135호(2016. 11. 7.)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2611.html

50) 한겨레, “문형표 전화로 독립성 의심받는 국민연금”(2016. 11. 17.)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0847.html

51) 이목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사실조사에 근거함. 삼성물산 합병 전 이재용과 국민연금의 만남, 논란 계속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비율 문제 알고도 찬성... 삼성가에 8천억 이익 안거” 비즈니스포스트, 2015. 10. 6.

52)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 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53) 이후 2015. 11. 코레스포르츠는 이름을 비텍스포츠로 바꿈

54) 매일경제, “최순실 모녀 獨기업은, 직원 단 1명, 매출 불분명한 ‘겉데기 회사’” (2016. 10. 18.자)

55) SBS, “[단독]삼성, 정부 지원 약속받고 280억 지원 계획” (2016. 11. 6.자 방송)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74256&oid=N1003874450&plink=REL&cooper=SBSNEWSEND

56) SBS “[단독] 미리 짠 삼성-최순실... 사실상 ‘정유라 프로젝트’” (2016. 11. 8. 방송)

57) 조선일보, “[단독] 삼성이 독일로 보낸 35억, 최순실 딸 명마 구입, 관리에 쓰였다” (2016. 11. 2.자)

58) 한겨레 “삼성, 최순실씨 독일 법인에 매달 80만유로 송금” (2016. 11. 2.자)

59) 한겨레 “박대통령 을 2월 19일에도 ‘총수 독대’ 드러나, 검찰수사”(2016. 11. 9.자)

60) 공익법인은 면세로 증여받은 주식을 매각한 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증여세 면제됨에도 공익사업이 아닌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을 위해서 계열사 주식취득에 사용함으로써,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당국은 과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CJ가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한 외에 별도로 차은택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행위

CJ는 2개 재단 출연금⁶¹⁾ 외에도 최순실 측근 차은택 주도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투자 명목으로 1조원이 넘는 투자계획을 실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⁶²⁾.

- ▷ 최순실이 2014년 6.~9.경 사이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예산 400억원 규모의 문화창조융합센터 계획을 작성.
- ▷ 차은택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서 초대 본부장을 맡음. 2014~2019년 사이 6,112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 사업은 서울과 경기도 일산, 제주 서귀포를 잇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만들겠다는 것임.
- ▷ 2016. 2.경 서울 상암동 CJ E&M 본사에서 열린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축하함. 이곳에 문화창조융합센터도 마련됨.
- ▷ 같은 날 CJ E&M은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에 1조4,000억원 규모의 한류 테마파크 ‘K컬처밸리’를 조성하는 투자의향서(LOI)를 경기도에 제출. 문화창조융합센터장은 강명신 CJ그룹 상무가 맡음. 강 센터장은 차씨에 이어 2기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고, 지난 9월 미르재단 이사에 선임됨.
- ▷ CJ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건 이재현 회장이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던 시기인 2014. 6.경부터 2016. 6.경까지와 겹침. 이재현 회장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 나옴.

다. 권력을 남용하여 최순실, 차은택 등에게 특혜와 이권을 준 행위

1)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최순실, 차은택 관련 회사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도록 한 행위(검찰 공소장 기재)⁶³⁾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하여 특정기업으로 하여금 최

61) 이미 CJ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8억원과 5억원을 출연했다(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 참조).

62) 중앙일보, CJ가 1조4000억 투자한 K컬처밸리는 차은택 주력 사업(2016. 11. 2.)
<http://v.media.daum.net/v/20161102023203477>

63) 세부적 사실관계는 검찰 공소장 기재 참조



순실, 차은택이 관련된 회사에게 재산적 이익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공소장 기재 사실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최순실 지인 운영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그룹에 납품계약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한 행위
- (2) 최순실이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5건의 광고를 수주하도록 한 행위
- (3) 포스코가 2017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
- (4) KT가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한 행위
- (5) 그랜드코리아레저(GKL)-선수-더블루케이 3자간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위촉 계약’을 체결케 하고 전속계약금 및 에이전트 비용을 지급하게 한 행위

검찰은 공소장에서 위 (1)~(5) 행위에 대하여 최순실, 안종범과 대통령이 공모한 직권남용, 강요죄로 판단하였습니다(세부내용 공소장 제13~26면 참조). 그러나 위 각 행위들은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만약 현대자동차그룹 등의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강요를 당한 피해자라면 ‘공갈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2)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재단에 각종 사업 이권을 준 행위

2016. 5. 1.~3. 대통령 이란 방문 당시, 정부는 설립 6개월도 안 된 미르재단을 공모 절차 없이 ‘케이타워 프로젝트’ 사업 주체로 선정하여 동행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기원이 아닌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하여 케이스피릿 태권도 시범단이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일정에 동행하여 태권도 시범을 하였습니다.

2016. 5. 25.~6. 4.까지 박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 프랑스 방문 당시, 미르재단은 대통령이 발표한 식품 개발 원조 사업 ‘케이밀 사업’을 맡았습니다. 이 사업 용역입찰 과정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미르재단은 입찰 공고 전부터, 이화여대 산학협력단과 케이밀 사업 핵심 제품 중 하나인 쌀과자 등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미르재단은 6월 프랑스 순방 때 에콜 페랑디와 함께 한국-프랑스 융합요리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위 재단은 대통령이 생겨난지 얼마 되지 않아 국가의 주요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경험과 전문적 역량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검찰 역시 최순실을 사기미수죄로 기소하면서 ‘최순실은 자신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체육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과 실적이 전무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연구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케이스포츠재단에 7억 원 상당의 2건의 연구용역제안서를 제출하여 연구용역비 7억여 원을 편취하려 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국가의 주요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재단을 위하여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는 직권남용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입찰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경우 입찰방해죄⁶⁴⁾에 해당합니다.⁶⁵⁾

라.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지시 행위

1) 주요 사실

2015. 2. 17.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포레카(포스코의 광고 자회사)가 대기업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회장 권오준과 김OO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은 안종범은 그 무렵 포스코 권 회장에게 전화해 ‘포레카 매각절차가 진행중인데 모스코스(최순실이 설립한 광고회사)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2015. 3. 5. 김모에게도 같은 취지로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안종범과 최순실이 송성각, 차은택 등과 공모하여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측에게 포레카 지분 80%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⁶⁶⁾

2) 법률 위반

검찰은 위 사실에 대하여 최순실, 안종범을 강요미수의 공범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대통령도 안종범에게 포레카 인수에 대하여 지시를 내린 사실, 그 즈음 최순실이 설립한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하려 하였던 사실, 안종범이 대통령 지시를 받고 포스코와 포레카에 모스코스 인수 협조를 요구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안종범 역시 ‘포레카 강탈 시도’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광고사 인수전에 개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포레카 인수 및 지분요구에 대하여 최순실, 안종범과 공범 관계임이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64)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5) 궁극적으로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정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반한 것이다.

66) 검찰 공소장 제26~28면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로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위 사실에 대하여,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유로 강요미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⁶⁷⁾(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며,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음)의 공동정범(적어도 교사범)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 권한을 남용하여 공무원과 기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

1) CJ 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지시한 행위 -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013. 7. 초경 박근혜 대통령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이미경 부회장을 그만두게 하라”고 지시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조원동은 2013. 연말경 전화로 “너무 늦으면 진짜 저희가 난리가 납니다. 지금도 늦었는지 모릅니다”, ‘VIP 뜻이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여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였습니다.⁶⁸⁾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강요죄’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됩니다.

2) 권한을 남용하여 문체부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한 행위

박근혜 대통령은 2013. 5.경 청와대 지시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대회 성적을 둘러싼 시비를 조사했던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이 최순실측과 승마협회 쪽 모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올리자, 같은 해 8.경 유진룡 당시 장관을 청와대로 부른 뒤 수첩을 꺼내 두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며 좌천 인사를 지시하여 노태강 체육국장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좌천시켰습니다. 2016. 초경 대통령은 노 전 국장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고 말하여 강제퇴직을 사실상 종용하고 그 결과 문체부의 압박 끝에

67)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8) MBN "부회장 물러나야 CJ 산다" 청와대, 대기업 오너도 교체(2016. 11. 4.)

<http://v.media.daum.net/v/20161104112943437#none>

2016. 7.경 노 전 국장 등을 명예퇴직시키고 비슷한 시기 진 전 과장도 명예퇴직하였습니다.⁶⁹⁾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강요죄’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에 해당합니다.

바. 청와대 문건 등 기밀을 사인(私人)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행위

1) 주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2013. 01.경부터 2016. 04.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담긴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거의 매일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를 최순실에게 전달하게 하고, 최순실이 이를 건네받아 차은택 등 비선 회의에서 검토하였습니다.⁷⁰⁾

2) 법률 위반

검찰은 이를 대통령과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동범행으로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의 성격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에 추가로 아래의 범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에 해당합니다.

- (1)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 관련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 누설죄’에 해당합니다(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이른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예컨대, 정호성이 매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또는 파일을

69) '나쁜 사람' 지목 문체부 노태강 前국장·진재수 前과장 소환, 뉴스1, 2016. 11. 12.자

70) “최순실, 정호성이 매일 가져온 대통령 자료로 비선모임”. 한겨레, 2016. 10. 25.자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에 해당합니다(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한편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⁷¹⁾

사.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즉각 수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임무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최소한의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형법 제122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유기의 법률위반행위는 곧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바, 상세한 내용은 헌법위반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14.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 위반

가. 국민주권주의 잠탈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군주나 귀족국가가 아니라 국가와 지배의 정당성이 국민에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민주공화국에서 “공화국”은 군주 한 사람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다수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공선에 대한 헌신 속에서 국가의사가 결정되는 “공화국”임을, “민주”는 그 공화국의 정치적 내용이 공개된 과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형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이란 ‘그 정치적 내용이 민주적으로 형성되는 공화국’으로 규정 지을 수 있겠고, 더 구체적으로는 ‘국민과 국가의 공적 이익을 위해 공개된 과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국가’라고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즉, 헌법 본문 맨 앞에 위치한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조직형태나 기본적 가치질서에 대해 이룬 가장 중요한 합의로서, 헌법개정절차에 의해서도 바꿀 수 없는 헌법의 핵심인 것입니다⁷²⁾.

또한 헌법 제1조 제2항은 국민주권주의의 근거조항으로서 오로지 국민만이 주권자의 지위에 있고, 통치의 정당성 또한 국민으로부터 비롯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는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독립된 힘인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은 대통령에게 ‘주권’에서 나오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외에는 그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대신 행사하거나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의 행사에 헌법적 근거 없이 다른 이들의 개입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⁷³⁾.

앞서 법률위반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닌 이른바 ‘비선실세’로 통칭되는 최순실 측근들이 정치권력에 맞닿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기초로 국가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문화체육부 등 국가권력 조직 구성에 관여하거나, 특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거나, 문화체육계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길을 터주었습니다.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을 뿐인

72)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문,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 4쪽

73) 임지봉, 같은 글 5쪽



비선실세가 공공선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밀실에서 국정을 농단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묵인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반헌법적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순실 측근은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입수하여 고치고, 인사, 예산 책정 등 대통령의 각종 국정행위에 무소불위로 개입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국민주권주의와 양립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⁷⁴⁾.

나. 대의제 원칙 위반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헌법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정에 관여하고 민주사회를 실현합니다(헌법재판소 1994. 07. 29. 93헌가4 등).

참정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 제24조와 대표 중 특히 대통령에 대한 선출 방법을 규정한 헌법 제67조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에 뽑힌 국민의 대표자만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의논해 결정하라는 대의제 원리의 헌법적 근거입니다⁷⁵⁾.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선출된 헌법기관이 아닌 비선실세가 군사기밀, 외교상 기밀 혹은 국무회의 심의사항들을 대통령 비서관을 통해 보고받았습니다⁷⁶⁾. 국가의사의 의논 과정이나 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 또는 묵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헌법 제66조는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시키고 있고,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및 감사원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운영 통해 정부 내 헌법기관에 의한 절차적 견제권과 법치행정에 따른 국정수행을 무력화시켰으므로⁷⁷⁾ 이 역시 중대한 헌

74) 임지봉, 같은 글 5쪽

75) 임지봉, 같은 글 5쪽

76) 이 의견서 법률위반 부분 6. 청와대 문건 등 기밀을 사인(私人)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행위 참조

77) [긴급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 김중철 연세대학교 교수 발제문 18쪽

법위반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 직업공무원제도 훼손 및 공무원 임면권 남용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이 정치과정에서 승리한 정당원에 의하여 충원되는 엽관제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상의 제도적 보장을 통하여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헌법 제7조 제1항)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헌법재판소 1997. 04. 24. 95헌바4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최순실 측근의 문제점을 비롯한 승마계의 파벌을 지적한 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감사에 나섰던 소속 공무원들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하여 한직으로 떠밀더니 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불러 “이 사람들이 아직도 공직에 있느냐”며 자리에 물러나게 하였습니다⁷⁸⁾.

오로지 자신의 측근을 위해 충성을 강요하고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내치기까지 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앞서 살펴본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행위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에 따라 소임을 다하여야 할 공무원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악용한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입니다.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에게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구성원인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헌법재판소 2004. 05. 14. 2004헌나1),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공무원 임면권은 앞서 살펴본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와 함께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대통령 비선실세의 사사로운 욕망을 채워주거나, 정권의 치부를 감추

78) 이 의견서 법률위반 부분 5. 나. 권한을 남용하여 문체부 공무원의 인사권을 남용한 행위 참조



기 위해 행사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추천한 차은택의 스승 김종덕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위 차은택의 외삼촌인 김상률을 청와대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각 임명함으로써⁷⁹⁾ 이후 최순실 및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이 문화계를 축대발로 만들고, 문화·광고산업 관련 각종 이권에 개입하도록 함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⁸⁰⁾. 뿐만 아니라 2013. 6.경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을 위반으로 기소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내 혼외자 의혹을 앞세워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눈 밖에 난 검사들을 좌천시키기에 이르렀고⁸¹⁾, 결국 정권에 충성하는 인사들이 검찰요직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감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4. 12. 이른바 ‘정윤희 문건유출 파동’을 수사하던 검찰이 문건의 내용은 외면한 채 청와대의 수사가이드라인에 따라 문건의 유출경위만을 문제 삼아 진실을 덮은 것이야 말로⁸²⁾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공무원 임면권을 비선실세의 탐욕을 위해 남발하거나,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남용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라. 문화국가원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69조 대통령 선서 중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전문에서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9조에서도 문화국가 조성을 위해 국가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고, 이들 기본권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 원리의 불가결의 조

79)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69559.html

80) <http://www.nocutnews.co.kr/news/4688768>, <http://www.nocutnews.co.kr/news/4690010>

8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4/2016112490037.html

82)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0520.html

건이 됩니다(이상, 헌법재판소 2004. 05. 27. 2003헌가1 등). 또한 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는 예술창작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예술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예술창작의 자유는 창작소재, 창작형태 및 창작과정 등에 대한 임의로운 결정권을, 예술표현의 자유는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 1993. 05. 13. 91헌바17).

박근혜 대통령은 2014. 광주비엔날레 당시 대통령을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걸개그림(세월오월) 전시를 김기춘 비서실장,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을 통해 무산시키고⁸³⁾,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지원하지 말아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의 명단,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⁸⁴⁾ 문화계 길들이기에 나서는 등 헌법이 보장한 예술창작,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탄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측근인 최순실 주변 인물들을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에 앉혀⁸⁵⁾ 여론조작을 시도⁸⁶⁾하는 등 문화국가 조성이라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대통령의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심지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체육계 전반을 차은택을 비롯한 최순실 측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마. 국민 보호 의무 위반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가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01. 16. 90헌마110).

8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102241005&code=910100

84)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0/2016111090176.html

85)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50993

86) <http://www.sedaily.com/NewsView/1L3WHD62V0>



우리 국민 모두는 피지 못한 꽃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서 숨져간 2014. 04. 16. 그날의 참사를 기억합니다. 세월호 관련 그 날의 중요시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08:52 세월호 탑승 학생 신고가 전남소방본부에 최초 접수
- 09:18 세월호 좌현으로 50°정도 기울어짐
- 09:19 언론사 YTN이 사고사실을 속보로 보도
- 10:00 잘못된 안내로 인해 구조가 지체되던 중 침수가 시작되어 승객 대피
- 10:31 뱃머리를 제외하고 사실상 완전 침몰

그런데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접수가 된 시점부터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긴급하게 수습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09:53경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10:00경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각 서면보고를 받은 후, 10:15, 10:22경 두 번에 걸쳐 국가안보실장에게, 10:30경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통화기록이나 서면보고자료 등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공개하라는 국민의 알권리에 기초한 요청을 여전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대형 참사의 징후가 이미 언론을 통해 전국에 전파되는 등 1분 1초가 시급했던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면이 아닌 서면을 통해 보고받은 후 전화 몇 통으로 사건을 수습하려 했던 점을 국민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이 선호하던 바로 그 ‘서면보고’ 때문에 구조에 전념해야 할 해경지휘부는 구조활동이 아닌 보고서면 만들기에 급급했고, 그럴수록 사상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만약 그 때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있는 집무실로 이동한 후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 관료들을 소집하고, 사건의 경위와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한 뒤 구조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대형 참사는 결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는 위 10:30경부터 국가안보실장에게 구조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전화하였다는 14:11경까지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참사상황을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목도하며 비통함에 젖어들고 있었는데, 사고로부터 한참이 지난 17:15경이 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들니까” 였습니다. 위

급한 상황에서 긴급하고도 중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결정권자가 피해상황도, 피해규모도, 구조진행상황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고 있던 이정현은 2014. 04. 21. KBS 보도국장 김시곤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KBS 9시 뉴스의 논조가 과장된 것이라며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였고, 같은 달 30.에도 KBS 9시 뉴스가 해경이 해군의 잠수 작업을 통제해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도하자 다시 위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뒤늦은 마감뉴스에는 위 뉴스가 보도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앞서 법률위반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이 대형 참사 앞에 놓여있었던 상황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취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부작위는 분명한 직무유기이자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에 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하여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행위 역시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청와대 홍보수석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정권홍보 방송으로 전락시키고 진실을 축소·은폐시킨 행위야말로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여야 할 언론의 자유를 형해화시킨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기본권임을 전제할 때 이는 곧 대통령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바. 국민의 재산권 무단 침해 및 자유시장경제질서 교란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은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헌법 제23조는 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동시에 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써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3. 07. 29. 92헌바20).

또한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임을 천명하고 있는바, 이는 기업의 생성·발전·소멸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기업자유 의 표현이자 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며, 헌법 제126조 역시도 사영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라야 할 이치이므로, 설령 공권력이 나서지 않아 국가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법률의 규정이나 긴급명령 등 비상조치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지(헌법재판소 1993. 07. 29. 89헌마31),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공권력이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하거나 기업을 강탈하거나 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행위로 기소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최순실과 그 일당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광고회사를 차린 후 자신의 측근을 심어 놓은 대기업으로부터 광고수주를 통해 돈을 벌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최순실은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차은택이 추천한 이동수, 신혜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015. 1.과 8.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이동수’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되도록 KT회장에게 연락할 것과 ‘신혜성도 이동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하였고, 안종범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자 위 두 사람은 KT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었습니다.

또한 2016. 2.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가 KT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안종범은 KT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고, 결국 최순실의 측근까지 심어진 KT는 심사결격 사유가 있던 플레이그라운드를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플레이그라운드는 2016. 03.부터 같은 해 08.까지 5억 1,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인 최순실, 차은택이 포스코 계열사의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2015. 02. 17. 안종범을 통해 포스코 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며⁸⁷⁾, 2013. 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앞세워 CJ

87) 이 의견서 법률위반 부분 중 4.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지시 행위 참조

그룹 부회장 이미경의 퇴진을 강요한 의혹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상과 같이 사기업 경영에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여 비선실세의 사사로운 이익을 관철시킨 행위는 헌법이 천명한 재산권 보장 및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부정한 헌법과괴 행위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하거나 기업 강탈을 시도한 것이므로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조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한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입니다.

사. 은밀한 국정 운영에 따른 행정의 공공성·공개성 침해 (부서제도 잠탈)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헌법 제82조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문서로 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그 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부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서제도는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부서권자로 하여금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부서권자로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는데 헌법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서 없이 행해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학계에서 견해가 다투어지나, 유력한 견해⁸⁸⁾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헌법위반으로서 탄핵사유가 되며, 대통령은 국법상의 행위를 할 때 당연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부서할 기회를 고지하여야 하므로, 대통령이 고의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게 부서할 기회를 봉쇄하거나 부서행위를 방해하고 독단적으로 국법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책임까지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법률위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삼성 이재용, 현대 정몽구, 롯데 신동빈 등 재벌총수들과 공식적인 간담회 외에 이른바 ‘독대(獨對)’ 즉 단독 면담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단독 면담 전후로 재벌총수들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장악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에 뇌물로 의심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출연했습니다. 행정부 수반과 재계의 총수가 대면하는 자리는 공식, 비공식을 불문하고 국법상의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자리에 참석하여 면담 내용을 문서화하고 반드시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필수불가결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총수들

88) 정종섭, 헌법학원론 초판 1032쪽



사이에 수 차례에 걸친 단독 면담이 거듭되는 동안 언제, 누구와 면담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왜 부서 없이 비밀리에 회동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관해 아무런 문서도, 부서도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부서제도의 헌법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부서제도를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탄핵사유에 해당하고, 당시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모두 헌법 위반의 공범으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민주화 원칙 잠탈

헌법전문 중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헌법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법에서 정한 행정기구나 법적 절차가 아닌 비선조직이 국정방향의 논의와 인사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사적이익까지 취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헌정질서 유린행위입니다.

이 사건을 다른 한편에서 보면 또다시 정치권력과 경제계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밀접히 관계를 맺는 정경유착(政經癒着)의 폐습이 또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정경유착의 결과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권력을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면 탈세와 부정부패, 특혜시비 등 법과 정의가 실종되고 특정기업집단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어 시장지배력의 남용 등 경제왜곡현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라고 규정한 것과 제119조 제2항에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정경유착의 폐습과 그에 따른 경제의 왜곡상황을 경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⁸⁹⁾.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안종범을 동원하여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직접 나서서 재벌총수와 단독 면담까지 하면서 출연을 요구하였으며,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출연금을 받아내고,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설립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재벌들도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인식하고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거나, 사면을 받거나, 경영권을 원활하게 세습하거나, 세

89) 김남근, 대한변협신문 2016. 11. 14.자

무조사를 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헌법이 경계한 사회적 폐습, 정경유착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다시금 등장한 것이며, 헌법이 천명한 경제민주화 원칙에 역행하는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재벌과의 협잡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헌법기관으로서의 직위를 부여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대통령의 본질적 의무 불이행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상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제2항,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제24조, 제67조,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시킨 헌법 제66조,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헌법 제78조, 문화국가 조성원리에 관한 헌법 제9조, 제22조,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국가의 재해에 대한 국민보호노력의무에 관한 헌법 제34조 제6항, 재산권 및 사유재산보장,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제126조, 부서제도에 관한 헌법 제82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도록 한 헌법전문, 경제민주화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비선실세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고, 민족문화를 비선실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데에만 그 힘을 다하였습니다. 국민이 바다에 빠져 시급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저에 머물러 있었고,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조차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게 한다면 국민들의 피로 일구어낸 대한민국 헌법은 휴지조각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15.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

가.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범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반의 경우를 말합니다. ‘범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범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다른 공직자와 달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반이 어떠한 것인지’는 1)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2)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나. 대통령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지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범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되며,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범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탄핵심판절차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은 법치국가원리의 기본요소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과 민주주의원리의 기본요소인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4),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범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공적인 행정기구와 행정절차가 아닌 최순실, 차은택을 비롯한 비선세력에게 공무상 기밀을 전달하여 밀실에서 국정 방향을 논의하고 이러한 비선세력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사적으로 부여받은 권력을 이용하여 국가정책 과정에 개입하고 인사와 예산편성에까지 개입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방치하여 법치주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청와대 수석 등에 지시하여 비선세력인 차은택 등이 광고회사를 강제로 인수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거나 전 노무현 대통령을 미화하는 영화를 제작하였다는 이유로 영화사 대표의 경영일선 퇴진을 압박하고 비선세력에게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창올림픽 위원장을 퇴진하게 하는 등 파렴치한 방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CJ 그룹의 이미경 이사의 퇴진이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평창올림픽 위원장 퇴진 등의 사례와 같이 정권실세들에게 잘못 보여 큰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미르재단 설립 이전부터 정권실세인 최순실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업을 지원하는 삼성그룹과 같이 정권실세에 유착하려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문체부의 인사에 최순실과 차은택 등이 개입하여 자신들의 사익편취에 협조하지 않은 행정관료들을 좌천시키는가 하면, 자신들에 협조할 수 있는 자들을 장·차관에 진출시키는 현상을 보며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충성문화와 줄서기 문화가 자리잡았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자격 없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고 전횡하게 함으로써 전제주의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개인적 연고자에게 마음대로 떠 넘겨 국가정책을 결정하거나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맡김으로써 민주공화국의 원리와 대의제 원리를 적극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들에 의한 국정농단을 지적하고 견제하려한 청와대 행정관들이 오히려 문건유출 등의 혐의로 처벌받고, 이러한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을 덮으려 한 세력들이 청와대의 요직을 차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수정권과 성향을 달리하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는 등 비정상적인 행정이 정권에 충성하는 자에 의하여 진행되어도 이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행정부 내부에서 작동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결정하는 내용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시점에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할 자들이 침묵하고 오히려 그러한 비정상적인 국정운동을 방치하는 직무유기 현상이 만연하였습니다. 정책영역에서도 합리적인 논의나 비판은 사라지고 대통령에 충성하는 자들이 주도하는 강경일변도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당 내부의 합리적인 비판세력이 경제민주화를 계속 추진하자 등 합리적인 비판 의견을 제기하면 여당 내부에서조차 합리적인 정책논쟁이 진행되지 않고, 대통령에 충성하지 않는 배신세력으로 낙인 찍혀



정치적으로 밀어내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이 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의 행정질서 원리를 적극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재벌기업과 노동자, 소비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국가정책을 국회에서의 공개적인 토론과 투명한 행정을 통하여 결정하지 않고 이와 같은 음습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통하여 결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 소비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은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이나 그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버렸습니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사회적 폐습과 불의가 만연하여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전문과 정신과, 특정기업에 의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 원리를 적극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 국민의 기본권 침해행위, 헌법상의 행정질서와 경제질서 원리를 적극적으로 위반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범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인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범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①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②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③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국민적 믿음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는 세무조사 무마, 계열사 합병 시 국민연금의 지원, 사면복권, 더 나아가 재벌들에 유리한 노동법개정이나 산업정책이나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을 기대하는 재벌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거나 제3자인 미르재단, 최순실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기업들로부터 사실상 강제로 대통령이 설립을 추진하는 미르재단이나 케이스포츠재단에 성금을 내도록 하는 부정부패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함에 있어 대통령이 직접 재벌들이 내야 할 성금을 할당하

고, 재단모금을 독려하기 위해 재벌총수들을 독대할 때는 각 재벌그룹별 중점 애로사항 등을 전달받기도 하는 등 대통령의 부정부패 가담행위의 죄질도 매우 나쁩니다.

그리고 최순실, 차은택 등의 비선세력들이 문화체육부의 인사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사익에 반하는 태도를 보인 공무원들을 좌천시키거나 사직하게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들을 장·차관에 임명하도록 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개인사업에 용역이나 위탁 등을 제공할 예산을 편성하게 하고 자신들이 사실상 지배·운영할 재단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동원시키는 등의 국정농단 행위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개입, 지원하여 국익에 반하는 행위도 하였습니다. 또한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접촉한 군사기밀이나, ‘아베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위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상 기밀, 외국에서의 연설문 등 공무상 기밀을 최순실 등 사인들에게 누설하는 등 명백하게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세력인 최순실, 차은택 등이 포스코 그룹 산하의 광고회사를 강탈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거나 정치적 반대세력인 전 노무현 대통령을 미화하는 영화를 제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경영자를 경영일선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거나 기업의 경영권행사에 개입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성실히 수행하리라는 국민적 믿음이 상실되었다는 점은 여론조사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11월 4주 현재 4%를 기록하고 있고(한국갤럽),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11월 18일 9.4%(리얼미터), 10월 31일 9.2%(디오피니언)로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촛불시위 이래 11월 5일에는 서울에서 20만명, 11월 12일에는 서울에서 100만명, 11월 19일에는 전국에서 95만명이 거리에 나와 촛불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을 기점으로 국내 100여개 대학교 학생회, 해외 한인 학생회, 대학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그 외 시민단체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11월 25일을 시작으로 숙명여대, 동국대, 서강대 등의 동맹휴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상황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투표를 통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함은 자명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가 전국시위와 시국선언, 여론조사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국민적 믿음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16. 결 론

이상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적 원리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법행위로 드러난 내용도 충분히 파면을 정당화할만한 사유에 이르므로,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절차에 의해 파면결정을 함이 타당합니다.



17. 보 론 : 몇 가지 쟁점

가. 탄핵소추서에 공소장 이외 위법행위를 적시할지 여부

탄핵소추서에 공소장 이외의 위법행위를 적시할지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검토했듯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탄핵소추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고, 새로운 사실을 추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중요한 탄핵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특가법상 뇌물죄(제3자 뇌물제공죄)의 경우 탄핵사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누락된다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를 탄핵사유로 삼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할 것입니다. 검찰의 보강수사 및 향후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둔다면, 적어도 현재 밝혀진 혐의에 대해서는 탄핵사유의 사실관계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법률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탄핵사유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일부 탄핵에 소극적인 인사들에게 전체 탄핵절차를 늦추거나 무력화시키는 시도로 이어질 우려도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로 제한함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국정농단사태를 중심으로 탄핵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은 불가피합니다.

나.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서의 입증전략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형사재판 절차에 준용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서에 기재된 탄핵사유에 대해서 향후 탄핵심판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의 전략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입증방법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재판 및 향후 기소될 관련 피고인들의 형사재판 증거자료를 어떻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제출할 것인지에 관한 입증전략을 세워야 합니다.⁹⁰⁾

둘째, 탄핵절차 중 진행되고 있는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뇌물죄와 같이 혐의 입증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탄핵소추서에 기재한 경우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에서 드러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증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회가 현재 예정하고 있는 국정조사 결과를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국정조사는 통상과 달리 좀 더 법률적인 내용을 깊이 다루어서 재벌들에 대한 신문결과에서 탄핵에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정조사로 부족할 경우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

넷째, 탄핵은 일종의 징계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절차에 준용한다고 하여도 신문기사와 같은 신뢰성 높은 자료는 충분히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검찰에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탄핵사유로 삼은 경우에는 신문기사를 증거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절차를 준용하여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절차에서 어떤 증인을 신청하고, 어떤 입증전략을 구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적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 국민의 지속적인 비판과 감시의 중대성

탄핵절차는 부득이 헌법기관이 이를 위임받아 진행한다고 하여도 이 역시 국민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엄중한 시기에는 국민들의 민의가 대의기관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탄핵절차를 감시하는 국민적 운동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에서 각 정파적 이해에 빠져서 중요한 대의를 놓

90) 참고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서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헌법재판소나 형사사건 재판부에서 이를 이유로 증거자료(특히 수사기록) 제출을 거절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법학자 김종철 교수의 견해로는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진행중인 형사재판에 개입할 수 없게 하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어서 본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고, 실제 기존에 진행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당시 재판이 진행중이던 형사재판기록과 증거를 재판부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한편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무부나 검찰청에 직접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지 않도록 감시하고, 나아가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기억하고 향후 선거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조직적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 역시 법적 공방이 이어지더라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민주주의의 현장 교육이 되도록 홍보와 지속적 감시활동이 필요합니다.

활시위는 당겨졌고, 화살은 과녁을 향했습니다.

온 국민의 합성과 지지 속에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남았습니다.

[보도자료][수정]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 2016. 11. 26. (토)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였고, 그 동안 검찰수사의 진행 과정을 감시, 비판하고, 전 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를 발표하여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5. 헌법재판소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만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운바 있는데, 이는 1)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2)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6. 위 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 제1항,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제2항,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제24조, 제67조, 행정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귀속시킨 헌법 제66조,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헌법 제78조, 문화국가 조성원리에 관한 헌법 제9조, 제22조,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국가의 재해에 대한 국민보호노력의무에 관한 헌법 제34조 제6항, 재산권 및 사유재산보장, 자유시장경제원리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19조 제1항, 제126조, 부서제도에 관한 헌법 제82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



의를 타파하도록 한 헌법전문, 경제민주화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바, 헌법수호를 위해서라도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2)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비선실세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였고, 민족문화를 비선실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데에만 그 힘을 다하였으며, 국민이 바다에 빠져 시급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저에 머물러 있었고,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조차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 분명하기에 탄핵으로 파면됨이 타당합니다.

7. 또한 민변은 비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바른 탄핵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비판과 저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자 “자진사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반성행위”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라

- 2016. 11. 29. (화)

본격적인 탄핵정국이 시작되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일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각 정당의 탄핵소추안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임은 지난 토요일 탄핵소추에 관한 의견을 공개하였고, 야당들은 헌법학자나 법률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토론회는 탄핵소추안을 공개하여 그 사유의 적정성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탄핵 사유에 대한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 불과했다. 지금의 탄핵 정국은 국민들의 촛불시위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소추안 작성에도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제 정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언론을 통해 전면 공개했다. 바람직한 조치다. 다른 정당들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정당들도 즉각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충분하게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 신속한 탄핵 절차의 진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정당들 사이의 협상과 절충만으로 탄핵소추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일부 야권은 그 동안 미적미적 눈치만 보다가 광장의 촛불이 한 달을 넘겨 200만으로 확산되자 그제야 탄핵절차에 돌입하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광장의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탄핵사유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국민의 요구와 정치적 각성은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야권이 탄핵소추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지금 광장에서는 탄핵정국에서 정치권이 단지 정파적 이해관계로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키지는 않을까 염려가 많다. 탄핵 역시 두 눈 부릅뜬 국민들의 각성되고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동의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광장의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는 국민의 명에 따라 퇴진 및 탄핵을 위한 제반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 2016. 11. 29. (화)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1. 29.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 고 하면서도, 자신이 사의를 추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한결같이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퇴진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담화를 이끌어 낸 것은 이백만 촛불의 분노와 투쟁으로서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승리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채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진퇴 문제”를 당사자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고 하는데,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퇴진을 결심했다면, “즉각 퇴진하겠다” 고 명백히 밝히면 된다. 향후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국회가 탄핵 소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정국에서 이루어진 애매한 입장 표명은 탄핵을 불발시키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임기 단축과 관련하여 개헌 논의를 제시하려는 포석이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헌정 문란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준엄한 명령에 따르는 것을 흔들림 없는 대원칙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안을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공을 넘기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황교안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라.

둘, 국회는 이번 담화를 이유로 탄핵안 발의 등 제반 절차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애초 예정했던 탄핵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및 과도내각 구성과 조기 대선에 관한 구체적인 결의안을 마련하여 의결하고 늦어도 12월 8일까지 대통령에게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답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탄핵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헌법을 짓밟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셋, 퇴진 절차와 무관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고, 보다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특검의 구성 또한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수사 지연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물론 국정농단·헌정문란의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우리 모임은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성명]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 2016. 11. 30. (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조승식 변호사와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조승식 후보는 대검 형사부장 출신이고, 박영수 후보는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인 것이다. 이러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사건에 대해 대통령, 재벌, 검찰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모든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특검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수사대상에는 정윤희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빠져 있다. 이러한 중요 의혹 사건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려면 특별검사가 특검법 제2조 제15호에 따라 그 앞의 조항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건과의 관련 사건으로 인지해야 한다. 특별검사가 추가로 인지 수사를 할 마음이 없으면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특검법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성패는 특별검사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도 이번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검찰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검이 과거의 인연에 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강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지 우려된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야 3당이 졸속적으로 만든 특검법에 있다. 그 법에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지나치게 좁게 제한한 것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특별검사 자격을 가지는 법조인이 매우 협소해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2명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그것도 고위직 출신으로만 고른 야3당의 편중된 선택 결과는 그것 자체로 또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매우 실망스러운 후보자 추천이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조승식, 박영수 두 후보자 중에서 한 사람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 중 누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더라도 검찰 고위직 경력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특검의 수사 진행 과정도 계속 주시해 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 2016. 12. 4. (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퇴진특위)’를 구성하여 전 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3.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를 거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12월 6일 열리는 1차 청문회는 8대그룹과 전경련 회장,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재벌청문회’입니다. 검찰은 재벌들의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 등에 대하여 재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재벌청문회는 재벌기업 총수의 입을 통하여 직접 재단 출연 등 ‘정경유착’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서 누락된 재벌기업들의 ‘부정한 청탁’과 출연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핵심적인 증인인 △전경련 증인 허창수, 이승철, △삼성그룹 증인 이재용, △현대자동차그룹 증인 정몽구, △SK그룹 증인 최태원, △CJ그룹 증인 손경식, △롯데그룹 증인 신동빈에 대하여, 각 그룹의 당시 민원사항 내역과 국정조사를 통하여 규명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5. 우리 모임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재벌그룹들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위 진실 규명 과제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의견서]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논평] 국민의 목소리가 닿지 못하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 2016. 12. 5. (월)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12/5)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에서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이라며 “경찰의 입장에서는 울곡로와 사직로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경찰청장의 위 발언이 우리 헌법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2조를 이유로 광화문 일대의 각종 집회·시위를 사실상 자의적으로 통제해왔다. 정 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는 금지하고 차별과 물대포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자의적 통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의 물결 앞에 무력해지고 있다.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시민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집회·시위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의 잇따른 결정을 무시한 채, 현재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각종 집회에 무의미한 금지통고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그러더니 급기야 청장이 직접 나서서 위와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문지마 금지통고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경찰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가로막으려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한 모든 집회·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며, 단순히 도로를 사용한다든지 야간에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시간·장소 등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의 핵심적 영역이고, 다수가 모이는 집회·시위의 본질상 어느 정도의 불편사항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은 수백만이 모였던 수차례의 집회에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와 시위를 행하였다. 결국 경찰은 소명되지 않은 막연한 우려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법원이 잇따라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로 인해 청와대 100미터 앞에서 집회가 개최되게 되었다. 정말 얼마나 긴 세월을 돌아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세월호 유족들이 그 곳에서 통곡을 한 것에는 절절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아직도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집회의 자유는 법원의 허가로 행사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유념해서 더 전향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청와대 앞보다 더 적절한 집회·시위 장소는 있을 수 없다. 경찰은 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목소리를 막아서는 안된다.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취재요청]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2016. 12. 6. (화)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국정농단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연일 촛불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입장 표명을 하여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4. 이에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내일(12/7)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회 탄핵 결의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기자회견 후에는 원내 4당에 이러한 뜻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후 원내 4당에 기자회견문 전달 예정

[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 2016. 12. 6. (화)

촛불의 염원 속에 이루어진 오늘 청문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은 마치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면서 정경유착의 진실규명에 관한 국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전경련이 청와대 메신저에 불과했다며 애써 그 역할을 축소하거나, 두 번에 걸친 독대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최고 그룹 총수들의 답변을 과연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규모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 신규 재단에 대한 출연행위를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핑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최순실 모녀에 회사 돈을 지원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시중 “죄송하다”, “부족한 게 많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도 도대체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언제 최순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 최순실 모녀 지원에 관한 미래전략실 개입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과 두 번에 걸친 독대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박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던 사실과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사실 및 ▲이와 별도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행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했다. 또 구본무 회장은 28년 전 일해재단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재벌총수들과 똑같이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 힘든 것이 한국 현실이라는 답변을 재현하기도 했다.

우리 헌정사는 청문회에서 불성실로 일관했던 재벌총수들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금원 공여의 취지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집행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데에 있었던 이상, 그



것만으로도 위 대통령의 직무와 그 금원의 공여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수된 금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1997. 0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나아가 관례화된 정치권에 대한 성금제공을 혼자서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어느 재벌총수의 변명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돈이 드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흐름과 양을 국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통해 통제하고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자금의 제공은 마치 지상의 수로를 따라 흘러야 할 물을 지하의 미로로 흐르게 하는 것과도 같아 허용될 수 없으며, 자기의 안전 내지 이익의 극대화를 동시에 도모한 기업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밝히기까지 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3 판결).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기억한다면 재벌총수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집단 기억상실증 환자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담은 답변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이들 재벌총수들을 제3차, 제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정경유착의 시작과 끝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오늘 청문회에서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이후 제3차, 제4차 청문회에서는 드러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삼성그룹 이재용과 재벌총수들은 우리 국민들이 촛불에 담은 강한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외면의 대가는 국민들로부터의 외면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논평] 재벌 총수들을 3,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 2016. 12. 7. (수)

13시간에 걸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하 ‘국정조사’ 라 한다) 1차 청문회가 끝났다. 우리 모임은 앞서 주요 재벌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참석한 청문회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 바가 있다. 과연 1차 청문회는 재벌 총수들로부터 실질적이고 유효한 답변을 얻어냈는가? 향후 있을 특검의 수사단서를 제공할만한 간접적인 증거라도 발견해냈는가?

어제(2016. 12. 6.)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한 재벌 총수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금을 출연하였다. 이미 증인들은 독대 등 기금출연 경위와 관련하여 한 차례 검찰조사를 받은 상황이었다. 또, 증인들은 청문회에 앞서 철저하게 답변 연습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보도된 사항들에 대한 의혹에 관한 나름의 모범 답안이나 회피성 답안을 준비하여 청문회에 임할 것이 뻔히 예상되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송구스럽다”, “제가 부족했다” 는 식의 동문서답을 반복하고, 주요 의사결정이나 보고 등이 있는 날과 관련하여서는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다” 며 대답을 회피하였다.

사정이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청문회 진행방식은 일반적인 청문회와는 달랐어야 했다. 재벌총수들에게 소위 ‘돌직구’ 질문을 하고, 재벌이 ‘부인’ 하거나 ‘모른다’ 고 대답할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당시 재벌들의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 개입’ 이 필요했으리라는 간접증거들을 모으는 데 집중했어야 했다. 그러나 청문회 위원들은 재벌총수들의 답변에 추가 질문을 통한 반박 및 사실 확인을 하기는커녕 스스로 준비해 온 질문을 읽은 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일쑤였고, 재벌총수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질의시간을 잡아먹는 전략을 구사해 귀중한 청문회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 위원별로 할당된 시간도 짧아 질문 도중 마이크가 꺼지는 등 심도 깊은 추궁이 어려웠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유연한 청문회 운영도 아쉬웠다. 심지어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청문회 위원인지 재벌 대변인인지 그 역할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재벌 총수들의 건강을 앞장서 염려하고 두둔하는 발언을 하여 빈축을 사기까지 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기금출연과 관련하여 ‘대가성’ 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기 전반에 걸친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인하고 이를 추궁하는 것이다. 그러나 1차 청문회는 사실상 검찰의 공소장이 밝히고 있는 범



죄사실 이상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국정조사는 검찰조사와는 다른 결을 가져야 한다. 재벌총수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부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모른다’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차후 확인해서 ‘정확한 대답을 준비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아직 3차, 4차 청문회가 남아있다. 위원들은 1차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이 동문서답하거나, 부인하되 해명이 없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들을 정리하여 재차 소환한 뒤 정확한 사실을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증인들은 ‘개인’으로서 청문회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대표’로서 청문회에 소환된 것이다. 개인적인 기억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관련한 의혹을 국민 앞에서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어 청문회에 소환된 것이다. 따라서 미진한 대답을 한 총수들을 재소환하여 질의하라.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확인받아야 한다. 3차, 4차 청문회에서는 재벌총수들에 책임 있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기를 촉구한다.

[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 2016. 12. 9. (금)

오늘 국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어떠한 변명이나 조건도 없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길이다.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놓고 보더라도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양심에 따라 정의를 선언해야 하는 최고위 법관임과 동시에 이 땅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기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 지엄한 주권행사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 묵히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심리를 진행 하고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 뜻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개시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안 의결은 중착점이 아닌 새로운 시발점이다.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알이 공개하고,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검은 돈을 통한 정경유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어떠한 공적업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특검은 즉각 피의자 박근혜를 소환조사 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나아가 특검은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과 정경유착의 주범 재벌들에 대하여 수사를 펼쳐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당선되었지만, “국민불행시대”만 열어 놓은채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하였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자행된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일상에서, 거리에서, 광



장에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 통치자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섬긴다. 결국 국민행복시대는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것도, 국회나 정치권이 선사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탄핵이 가결되었더라도 우리가 손에서 촛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거리와 광장에서 표출된 위대한 촛불의 힘,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박근혜 정권의 비열한 꼼수를 타파하였다. 우리 모임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새벽을 밝히는 촛불을 들 것이다.

[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 2016. 12. 15. (목)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진행되어야 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주권자는 국정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탄핵소추 이후 절차 진행의 속도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첫째, 국회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에 따라 신속히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구성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 이후에 아직까지 대리인단 구성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행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즉시 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국회의 느장 대응은 주권자의 시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조속한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단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탄핵소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합의다. 단순한 소송수행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지 말라.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고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제출 및 변론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어서 다소간의 입법 불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전반적인 입법취지와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탄핵심판절차의 당사자는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단순한 소송수행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추위원의 대리인단 구성을 비롯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의 방법은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탄핵의 소추와 취하는 국회만이 할 수 있을 뿐, 소추위원의 권한이 아닌 것처럼 대리인 선임도 국회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걸맞다.

그런데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이 법률상 소추위원이라는 점을 들어서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성동 위원장은 탄핵사유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대리인 선임 지명에 대해서 느장 대응을 했을 뿐 아니라, 모든 탄핵사유에 관한 공평심리 등을 주장하며 실질적



으로 탄핵절차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권성동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오인하고 정파적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법률상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만약 권성동 위원장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반복한다면, 우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교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국회의 합의는 야3당의 의견이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탄핵심판절차 진행에 있어서 법률상 당사자인 국회의 역할은 중대하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현재 탄핵소추 피청구인 박근혜가 소속당원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관한 국회의 합의에 있어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이 일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금 번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서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대리인 구성 역시 야3당의 합의된 의견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국민의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정의 혼란을 최대한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빠른 시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과 주권자의 명령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탄핵심판 결정은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징계처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특검 절차의 진행경과에 강박당하는 형식적 접근으로 일관하여 심판 결정을 지연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심판결정을 통해서 특검이 박근혜 피청구인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기능적 역할이다.

모든 판단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헌정질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이례적인 사안이고,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사국일수록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원칙에 기대어 판단을 할 때이다. 아울러 박근혜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국정혼란과 농단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할 것이다.

[취재요청]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불법개입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

-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12.20.오전 10시 30분 특검 사무실 앞, 기자회견 개최

- 2016. 12. 19. (월)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헌법질서를 농단한 여러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 고인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러 층위에서 헌법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업무지시를 한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유감스럽게도 특별히 민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불법공작의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4. 드러난 수많은 의혹 가운데, 우리 모임은 우선 민변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시도에 대하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형사고발하게 되었습니다.
5.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하여 징계를 기획하고,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한 의혹은 유신 시대 불법공작 정치의 재림이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작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6. 민변은 단순히 우리 모임과 모임의 회원이 사찰과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김기춘 실장 등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특검에서는 박근혜, 김기춘 등에 의하여 유린당한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7. 우리 모임은 고발장 접수 전에 고발의 사회적 의미 등에 관하여 12.20. 오전 10시 30분에 박근혜 특검 사무실(선릉역, 대치빌딩)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8.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논평] 박근혜 대통령, 할 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임하고 현재 심판에 출석하라.

- 2017. 1. 2. (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탄핵소추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특검은 수사를 행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신년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탄핵 소추된 상태이므로 대통령의 ‘신분’ 만을 유지할 뿐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라인을 동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의도를 잘 알고 있다. 현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압박을 가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박사모 회원들의 활동을 부추기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아직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는 결코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태도에 또 한 번 절망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에 여러 차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 수사에 응한 적은 없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특검 수사는 받았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 두고 볼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향후 탄핵 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주장을 밝힐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가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탄핵소추된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처럼 공식적인 수사와 현재 심리에는 제대로 출석조차 거부하는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이는 공식적인법적 절차보다 비선라인을 활용하여 국정을 위태롭게 운영한 행태의 연장선에 있다.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촛불을 보고서도 단한 치도 반성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기자간담회 전문을 보면 자기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향후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더니 긴 시간 동안 고작 그 내용을 변호인들과 준비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하게 기자 간담회를 한 이유가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과 현재의 탄핵 심리에 출석할 피고인들 및 증인들



에 대해 모종의 지침과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종래 국무회의 등에서의 발언을 통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는데, 그런 행태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만약 그런 의도로 행한 것이 라면 위 기자회견의 발언 내용은 위증교사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발언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일단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그 뜻을 알기 어려운 것이 태반이고, 겨우 그 뜻이 전달된 것도 허위이거나 모순되는 것들 투성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미용사를 부르고, 관사에만 머문 것이 드러나 있고, 세부 일정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도,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하는 것이나, 특정 기업을 봐 준 적이 없다거나, 특검이 자신을 ‘쫓고’ 있다고 밝힌 것은 그 인식이 저급하다 못해 천박스럽기까지 하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국민이 확인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 수준과 의사 표현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감수성으로는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기자간담회는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정지를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사법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박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할 말이 있다면, 그리고 나름 억울한 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헌법재판소 심판 기일에 출석하면 된다. 박 대통령이 서야 할 곳은 기자들 앞이 아니라 특검과 헌재 재판정이다.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 2017. 1. 11. (수)

1. 세월호 참사로부터 1,000일이 지나서 나온 대통령의 답변, 믿을 수 없다.

2014. 4. 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지났다. 참사 직후부터 대통령의 참사 대응의 적정성이 문제되어 왔고, 그간 국회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 업무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석명을 요구하자 1,0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법률실무상 1,000일이 지나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신뢰하기는 어렵다.

특히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일지(비망록)를 보면 2014. 7. 8.경 세월호 참사원인을 정리하면서 “長 : 청와대 보고, 그 과정의 혼선 ×”, 같은 해 7. 17.경 “장 : 민정- 대통령기록물 생산접수자료 ip 비공개대상자료, 법률적 근거, 정리. 외부 노출X”, 같은 해 7. 18.경 “長 : 4/16 동선, 위치 말씀 -답변서 작성 -문언, 국가원수 경호신경, 기침, 취침, 직무, 경내 계신 곳이 집무 장소, 경호상 알지도 알려고도 않는다 자료 제출 불가”, 8. 9.경 “국가원수의 경호 안전상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할 수 없음. - 사생활, 국가 안보 운운은 부적절”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미 검증되고 말뭇추고 짜여진 정보만을 공개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2.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대통령과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은 2014. 4. 16. 10:30까지 10:15, 10:22, 10:30 세 번에 걸쳐 “모두 구하라, 살살이 되어서 철저히 구조하라” 는 취지의 추상적인 지시를 하였을 뿐이다. 이후 오후 2:57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어떤 지시도 없다. 그 사이 세월호는 기울어 지다 못해 전복되었고 구조방법 역시 특공대 투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각도로 검토되고 변경될 수 밖에 없었는데, 대통령은 “106명 구조” 보고를 받은 10:40, “476명 탑승, 현재 133명 구조 완료” 라는 보고를 받은 10:57, “11:00 현재 161명 구조, 10:49 선체 전복(침몰 선체 사진 첨부)” 보고를 받은 11:20, “11:50 현재 162명 구조, 사망자 1명 확인” 보고를 받은 12:05까지, 본인의 특공대 투입 등에 대한 이행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이 10:30에 직접 그 지시를 하였는지, 각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도 보고



서만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전달방법’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어,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그 보고서들을 제대로 읽은 것인지, 보고서는 무시한 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11:20경 선체 전복 보고서가 올라가고 수백명의 생사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 사실을 대통령이 정말로 보고를 받고 인지했다면 왜 즉시 아무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과 대리인은 ‘당시 11:06 경기도 교육청이 전원 무사 구조란 내용의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11:25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란 문자를 재차 발송하고, 문화일보의 오보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혼란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식에 착오가 생겼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이다.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대로 “관련 보고를 계속 받았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후 01:07경에 있었던 사회안전비서관의 보고 이전까지는 전원 구조 오보가 내부 보고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할 여지가 없었거나 당장 정보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내부 보고가 아닌 보고서에 기재도 없는 전원구조 오보를 믿었다면, 이는 대통령이 정식 보고를 받는 대신 다른 일을 했거나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반증일 뿐이다. 즉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잘못된 보고는 오전부터 13:07경까지 전혀 없었고, 13:07경 1회, 13:13경 1회 뿐이었다. 따라서 전원 구조 오보가 상황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었다 해도 대통령이 13:07경 이전에 있었던 보고서를 제대로 읽고 하다 못해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이 설치된 청와대 내 안보실 등의 장소에 가서 직접 해경과 소통하며 해군 투입 여부, 배의 전복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구조방식 등에 대해 챙겼더라면 해경은 13:45경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를 바로 청와대에 보고했기 때문에 혼선도 바로 해소될 수 있었고 단 몇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 상황이다. 대통령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14:11경에는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것을 파악하고 ‘정확한 구조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15:00 부속비서관에게 중대본 방문 전화지시를 할 때까지 대통령은 수석회의를 주관하거나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이 있는 곳에 가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지 구조 상황 확인만 기다리며 계속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

또한 대통령은 15:00 이후 춘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15:35경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서 약 20분 머리 손질을 했고(미용사 체류시간 15:22~16:24), 그 미용 담당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1시간 정도 차로 이동해야 하는 청담동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14:20경~14:40경에 미용사를 불렀다는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14:11경 전원구조가 잘못되었고 수백명의 사람들이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상황파악만 지시한 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집무실에 있으면서 뭔가 다른 이유로 미용사를 불렀고, 오후 3:00경이 되어서야 중대본 방문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1분 1초를 다투는 재난 상황에서 이것이 대통령의 최선이라면 어떤 국민이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미 최후의 골든 타임까지 지나고 있는 그 시각에도 대통령의 느긋한 여정은 계속된다. 대통령은 머리손질을 하면서 15:45에는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말씀자료를 준비하여 보고를 받는다.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말씀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중대본에서 어떤 말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가. 또한 경호실에서는 긴급상황임에도 대통령 방문 준비를 완료하는데 1시간 30분을 소요했다. 대통령의 경호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수백명의 국민들이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머리를 하고 말씀자료 준비나 경호 등 통상적인 절차에 어떤 예외도 지시하지 않았고 아래 사람들은 대통령의 여유 있는 태도에 그대로 여유 있게 따랐다. 이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한 것인가.

3.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에 대한 현재결정문을 왜곡하지 말라.

대통령과 대리인은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을 근거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현재는 위 실시 부분에서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판단을 하였는바, 결론적으로 현재는 당시의 청구인이 주장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뿐이다.

이 사건은 청구인의 소추사유가 단순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상 생명권 보호의무 및 재난 관련 법령상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사안이다. 따라서 위 실시만 따로 떼어 헌법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대리인의 태도는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

4. 대통령은 왜 16:30까지 관저에서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을까.



대통령과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평소와 같이 전화, 이메일 등으로 보고서를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평일인 수요일, 그것도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발생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 계속 머무르며 한 번도 상황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상황 인지 이후에도 보고경로를 줄이고 구조 상황을 제대로 파악,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후 16:30경까지 머리손질을 포함, 계속 보고만 받으면서 단 한 차례도 관저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대통령은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 보고를 받고 머리손질을 한 것만으로 마치 최선을 다한 것인양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에게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통령에 대해 부여한 신임을 거두기에 족하다. 더군다나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중 공식 일정이 없었던 날이 상당수에 이르고, 각종 주사를 맞고, 최순실 등 비선들을 통해 연설문 수정을 하는 등 일국의 대통령이라고는 보기 힘든 방식으로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을 혼동해 온 것이 드러났는바, 긴박한 재난상황에서의 대응 실패는 대통령의 이러한 부적절한 생활 방식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중대본에서 한 구명조끼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대리인은 “배가 일부 침몰하여 선실내에 물이 침범하여 침수되었다”라고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선실내부에서)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하였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물은 것이어서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하여 사실을 왜곡, 오도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위 질문을 했을 당시는 오후 17:15~30경으로 대통령이 가만히 관저 집무실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해경청과 청와대 핫라인 내용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자 노력했다면 이미 배가 일부 침몰된 것이 아니라 “완전 전복”된 상황이고 오후 1시경부터 심해잠수를 시도하기 위해 해경들이 심해잠수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심해잠수에 용이한 바지선도 없고 해경들의 심해잠수능력도 일천하여 구조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의 10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직접 정확한 구조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않은 채, 그저 관저 집무실에 앉아서 들어오는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최악의 참사로 귀결된 것이다.

나아가 오후 17:15~30경에 오전 10시 30분에 지시한 특공대를 그제서야 언급하며 상황을 물었던 것은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보고

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또는 보고서를 방치한 채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상황변화를 몰랐던 것이 아닌지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5. 대통령은 국민들의 알권리도 침해했다.

대통령과 대리인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바 없고 오히려 국회 보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당일 행적 등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등의 원칙을 정했고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출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상 국민들의 알권리는 공익적인 사안일수록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은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국민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재난 대응의 적절성과 관련한 알 권리의 문제로 그 정보공개는 향후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과는 무관한 내용으로(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침해되는 보호법익은 없는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무려 1,000일 동안이나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국가 대개조의 기회마저 날려 버렸다. 그런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신임을 거둔지 오래이며 그 분노는 2016년 연인원 1,000만 명의 촛불로 명명백백히 드러난 바 있다.

6. 헌재는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답변을 1,000일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번 답변서를 통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대통령의 주장자제에 의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존재한다는 점만이 뚜렷해졌다. 따라서 대통령 대리인들의 추가 입증 노력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며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결정을 내려야 한다.



[성명] 삼성 이재용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

- 2017. 1. 13. (금)

바로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뇌물공여, 위증 등의 혐의로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귀가했다. 그간의 혐의를 인정하고 컷값을 달게 받길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강압에 의해 수백억원을 헌납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른바 ‘삼송구’로 국민들 모두의 뒷목을 부여잡게 만들었던 국정조사 청문회 때와 같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공생담합관계’라는 것을. 돈으로 매수된 권력이 경영권 승계, 규제완화, 사면 등 재벌의 뒤를 봐주는, 이 지긋지긋한 정경유착의 고리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귀가조치 함으로써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하나, 이제 구속은 시간문제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켜 경영권 승계의 기틀을 단단히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5조, 많게는 6조 규모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가해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은 ‘피해자’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이 대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로 주저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국의 고질적 병폐를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꼴에 다를 아니다. ‘법 앞의 평등’이 더 이상 돈과 권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 청문회, 특검에서까지 위증과 혐의부인으로 일관하였다. 국민들 앞에서까지 대담하게 위증 행각을 벌인 자의 증거인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삼성은 2007년 비자금 사건 당시 주요증거인 계좌와 자료를 대량 폐기하였고,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에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여 4억원의 과태료를 물었던 전례까지 있다.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죄는 뇌물공여 외에도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까지 처벌하니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합계 204억 원 외에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계약액인 220억 원까지 보태면 뇌물액수의 규모는 무려 424억 원 이상에 이른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중요하고도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간의 이목은 이제 삼성 등 재벌이 공여한 뇌물액과 뇌물죄의 대가로 얻은 재산 환수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결코 단발적이거나 예외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다. 수 십 년간 삼성이 조직적 로비체계를 갖추고 정계를 관리해 오다가 최순실

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표면에 드러난 사건일 뿐이다. 재벌이 뇌물을 준 대가로 경영권과 수 조원 상당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도, 막상 이를 환수할 수 없다면 범죄의 목적달성을 법이 수인하는 것에 다름없다. 범죄수익을 완전하게 몰수하지 않고서는 정경유착의 재발을 막을 수도 없다. 따라서 특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 소정의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보전절차조치를 피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총수일가의 황제경영과 사익편취,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노조파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침범, 나쁜 일자리 양산 등 재벌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행하는 불법·부당한 행위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다. 일각에서 이 사태의 본질을 ‘재벌의 탐욕’ 내지 ‘재벌 게이트’라 칭하고, 재계가 최순실을 매수해, 혹은 최순실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으로 보는 이유다.

임기 없는 권력인 재벌에 대한 개혁 없이 촛불이 염원하는 새로운 세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수사만이 재벌적폐 청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특검이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을 서둘러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법 앞에 예외 없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 2016. 1. 18. (수)

지난 1. 17.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죄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늘(1. 18.)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개최되었다.

우리 모임은, 특검이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뚫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다른 삼성 임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 및 삼성그룹 외에 다른 그룹에 대한 수사 진척이 더딘 점 등 향후 특검이 유념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는 하나,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우리 사회 법치주의의 고양과 확산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우리 모임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여부가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법원에 환기시키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있어서 불구속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범죄혐의의 상당성 및 중대성, 주거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시에 인신을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위 구속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먼저, 범죄혐의의 상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삼성전자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 최순실·정유라 모녀가 대주주인 독일 코레스포츠(비텍스포츠)에 지원을 약속한 213억 원, 합계 430억여 원이 뇌물에 해당하고, 위 뇌물 중 상당액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회사 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측에 돈을 지급한 명백한 사실, 해당 돈의 상당부분이 회사 돈인 점, 박대통령 지시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식가액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 및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이익은 약 5조 원, 많게는 6조 원에 이른다는 평가 등이 정도면 범죄혐의의 상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430억 원 상당의 뇌물과 경영권승계라는 이익이 맞교환되는 대가관계를 어느 뇌물 사건에서 볼 수 있었

던가?

다음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어떤가? 특검이 밝힌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는 법령상 그 형량이 매우 높고 실제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상 횡령만을 놓고 보더라도 횡령·배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통상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법정형이 높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석해 왔다. 재벌 총수가 설마 도주를 하겠나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특검의 활동 기간은 짧고 재벌 총수의 해외 체류도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제한된 기간 내에서의 도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보여 온 위증과 증거인멸의 역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삼성그룹의 의도를 놓고 보면, 이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한 언론사의 지적과 같이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최소한 4차례 말을 바꿨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삼성그룹과 일부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막고자 경제위기론 등을 무차별 전파하기도 한다. 그러나 1. 17. 오전 9시5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소식이 알려진 전 거래일(16일)보다 1.47%(2만7000원) 오른 18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심지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 등 금융전문외신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한국 경제에 호재라고 하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재용 영장이 재벌개혁 영장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과거 재벌 총수들의 구속 여부가 문제될 때마다 총수구속에 따른 경제위기론이 등장했으나 실제로 경제위기나 기업위기는 없었다. 오히려 기업운영의 투명성 향상, 사법신뢰 회복 등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법원은 기억해야 한다. 이처럼 재벌총수 구속에 따른 경제위기론은 그 자체로 엉성하고 함량 미달의 논리인 동시에 법원과 국민에 대한 협박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우리 형사소송법 그 어디에도 경제위기를 구속 결정에 있어 고려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에도 없고 법적 고려요인도 아닌 상황을 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려는 행태에 해당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권력사유화를 통한 법치주의의 무력화로 요약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최순실이 중심이 된 정부 뒤의 정부를 세워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할 공화국을 철저하게 사유화하여 국가를 치부와 권세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비상사태를 정상화하고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편은



오직 법치주의의 회복에 있다. 박근혜, 최순실 일당과 합세하여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법치주의 회복과 확립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경제위기론 등의 비규범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한다. 정의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보도자료] “유전무죄, 재벌앞에 무릎꿇은 사법부를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 2017. 1. 19. (목)

□ 일시·장소 : 1. 19.(목) 14:00, 서초동 법원·검찰 삼거리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남정수 퇴진행동 공동대변인

▶ 기자회견 취지발언 :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반박 및 규탄 발언 : 백승헌 (민변 박근혜정권퇴진특위 위원장)

▶이재용 및 재벌총수 구속촉구 발언

- 황상기 (반올림 /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 황유미 님 아버지)

-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 배춘환 (손잡고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김태연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위원장)

[기자회견문] 사법부는 돈 앞에 무릎을 꿇었고, 법치주의는 땅에 떨어졌다.

1. 19. 새벽 법원은 사실을 외면하고, 법과 정의를 저버렸다.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염원했던 정의와 법치주의는 거대한 경제권력 앞에 무력했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부정한 이유로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및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를 들었다.

첫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은 차고도 넘친다. 이건희 회장 투병 이후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은 현실화되었고,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일가에게 시급하고도 절실한 숙원사업이었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2014. 09. 이재용에게 승마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2015. 03.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총 228억 원을 정유라에게 지원하기로 한 ‘한국승마 중장기 로드맵’을 대한승마협회가 작성하고, 같은 해 06. 24. 삼성 박상진 사장은 문체부 김종 차관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준비가 끝났음을 보고하기까지 했다.

정유라 지원이 논의된 것과 같은 시기인 2015. 06.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켜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문형표 전 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합병비용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여러 전문기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자 이재용 일가의 숙원인 경영권 세습은 성공적으로 일단락되었는데, 바로 그 시점인 2015. 07. 박대통령과 이재용과의 단독면담이 행해졌다. 연이어 2015. 08.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220억 원의 지원계약이 체결되고,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가 뒤따랐으며, 최순실이 기획한 동계스포츠연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이어졌다.

박대통령이 삼성 이재용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했던 의지와 지시행위,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된 자금의 성격과 지원된 시기 및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대통령의 직무행위 범위를 넓게 보고,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종합하면, 이재용이 박대통령, 최순실측에게 제공한 430억 원의 지원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관한 특검의 소명은 충분하다. 이재용이 뇌물공여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이 보다 더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둘째, 뇌물죄에서의 대가성은 ‘판단’의 대상이다.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미 드러나 있다. 무엇을 어떻게 더 소명하라는 것인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은 정식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다.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속이 부정된다는 논리라면, 무죄를 다투는 모든 사건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

셋째, 재판은 오로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명시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 그것도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2016. 09. 최순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삼성 박상진 사장은 황급하게 독일로 넘어가지 않았던가! 게다가 삼성은 총수 일가를 위해서라면 증거인멸을 밥 먹듯 해왔다. 2007. 삼성 비자금 사건이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 등에서도 이미 삼성은 각종 계좌내역과 자료를 대량 폐기하면서 증거를 인멸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의자 이재용 구속에 따른 국민경제의 영향을 고려했다고 한다.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경제권력에 기생하는 추악한 모습이 왜 지금까지도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430억 원 뇌물수수혐의 피의자가 불구속재판을 받는데, 불과 7,800원을 흠쳤다고 구속된 피의자의 하소연을 법원은 무엇이라 설명하고 변명할 것인가?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었다. 특검은 주저치 말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경제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가 다시금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을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 2016. 1. 24. (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46일이 되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메꾸고자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측의 심판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자처하여 ‘장외변론’을 일삼는가 하면,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본질에서 비껴간 채 헌법재판소에서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를 대비하며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선동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청구인측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만 해도 그렇다. 이 중 상당수 증인들은 그야말로 시간끌기용 지연전술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러한 지연전술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의 신속성 역시 놓지 못할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특히 국정공백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탄핵심판은 형사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행위의 모두를 엄격한 증명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밝혀진 사실관계에 대해 계속 대통령의 직무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한다.

그렇다면 증거조사 절차 역시 공정과 신속을 조화시키는 현명한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리인측의 소송지연 전술에 대해 증거채부 결정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 판단에 불가피한 증인이 아닌 한, 모두를 채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입증취지와 증언하려는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증인채택을 하면 된다고 본다. 나아가 증인신문에서도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탄핵재판과 상관없이 대량의 질문을 하여 증인신문절차를 재판지연 수단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지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률가들의 조직인 우리 모임은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국민의 눈높이와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의 여러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증인채부결정에서도 재판부의 보다 현명한 판단을하기를 기대하고 당부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민의에 기반하여 진행된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다 책임있는 판단과 재판진행을 통해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길 바란다.



[성명]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

- 2017. 2. 2. (목)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에서 박대통령 측 대리인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짧은 심리 기간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기 종료되는 재판관의 후임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헌법기관의 결위사태가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박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은 그 의도가 분명하다. 단순히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탄핵심판 역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중순 이후로 ‘천천히’ 진행하여 후임 재판관 임명 이후까지 연장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국정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한 신속한 절차진행이 공정한 심판에 못지않은 중요한 가치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 따라서 박대통령 측 대리인이 신속한 심판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심판 지연책의 하나로 이와 같이 후임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절차를 주장하고 있음을 준엄하게 비판한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 무분별하게 편승할 경우 자칫 헌법기관(헌법재판소)의 결위를 막기 위한 중정이 되기 보다는 탄핵심판 지연에 동조하고, 다른 헌법기관(대통령)의 직무공백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장기화하는데 일조하여 결과적으로 헌정질서 혼란사태를 장기화하는데 악용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런 점에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의 후임 재판관 임명 관련 견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소추위원)는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탄핵심판 절차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후 적절한 시기에 후임 재판관 임명을 위한 추천절차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는 개시되어야 할 것이나,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만약 탄핵심판 절차와 병행하여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해당 후임 재판관 임명완료시까지 탄핵심판을 연장하려고 하는 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헌법기관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탄핵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은 헌법이 부여한 중차대한 임무이

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인 헌법재판소나 국회,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사리사욕이 아닌 헌법상의 의무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이를 기록하고 있다.



의 건 서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위 사건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현재까지의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지난 해 12월 9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시작된 탄핵심판이 벌써 두 달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간 변론준비기일 3회, 변론기일 11회를 거치면서 증인 18명을 신문했고, 상당한 양의 증거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앞으로도 4회 변론기일에 걸쳐서 19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중요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직무 정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재판부 및 관련 당사자들에게 경의를 보냅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적 관심과 열망 하에서 시작되었고, 전 국민과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용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달리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 온 의미있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남은 심리 기간 동안 더욱 애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최근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기 직전 1. 25. 9차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정상적인 구성을 하지 못한 채 진행된다면 심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적어도 3월 13일 이전에는 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에 반박하며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중대결심’ 운운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법률가들은 전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재판을 진행하시는 점을 지켜 보고 있다가, 위 논란을 보면서 이에 관한 저희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견은 탄핵심판의 당부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심판절차 진행 특히 피청구인의 심판지연에 대한 의견에 국한하고자 합니다.

2. 피청구인의 심판지연 관련 쟁점에 관한 의견

가. 피청구인 측 증인신청 심판지연 관련 의견

피청구인은 지난 1. 23. 8차 변론기일에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기존에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변론 준비기일에 전혀 신청하지 않았던 증인을 뒤늦게 신청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사실조회나 수사기록으로 충분히 확인된 재단 모금 관련 기업관계자들이나, 다른 증언으로 이미 밝혀진 내용에 대해 중복하여 증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 대리인은 9차 변론기일에 자신의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증거신청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3회에 걸친 변론 준비기일에 전혀 신청하지도 않았던 증인을 무려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뒤늦게 변론이 곧 종결될 조짐이 보이자 뒤늦게 신청하면서 자신이 신청한 증인 채택이 불발될 경우 공정성을 연계하여 ‘중대결심’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은 주장입니다.

피청구인 측은 당시 신청한 39명 증인 중 29명에 대해 기각결정이 되자, 이에 반발하며 10차 변론기일에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재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재신청한 증인들 중에서는 기존에 기각결정된 7명의 증인들(이재용, 최태원, 신동빈, 권오준, 구현모, 최상목, 방기선)은 물론이고, 기존에 이미 신문을 했던 최서원(최순실)과 안중범까지 다시 불러서 신문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11차 변론기일에서는 이 중 일부 증인을 채택하였고, 특히 최서원과 안중범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수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청구인 측이 피하고자 하는 것은 재판지연으로 보여집니다.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재판지연을 꾀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법원의 일반 재판에서도 사건 막바지에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고, 재판지연만을 노리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증인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은 자명한데, 이보다 더욱 더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심리지연을 통해 국정공백을 장기화하고 결과적으로 헌정질서의 위기 상황을 장기화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제 변론기일에 귀 재판부에서는 국회 소추위원 측의 변론종결기일 지정요청에 대해



재판관회의를 통해 논의해 보겠다고 답하셨습니다. 언론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 측에서는 추가 증인신청도 가능한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론종결에 이를 정도로 심리가 무르익지 않았다면 재판관님들의 판단에 따라 추가 심리를 진행함은 분명합니다만, 재판부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리지연을 목적으로 한 피청구인 측 추가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내려 주시고 변론종결일을 명확하게 지정해 주기 바랍니다.

나. 피청구인 대리인의 ‘중대결심’ 발언 관련

피청구인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9차 변론기일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추가증인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두고 ‘대리인 전원사임’을 하여 심판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을 밝힙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에서는 사인(私人)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수행을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심판이라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년하1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고 판시하여, 탄핵심판이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에 대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되고, 제3항 변호사강제주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실제 심판 운용 측면에서도 변호사강제주의를 적용함은 부당합니다. 즉 대리인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사임을 하거나, 피청구인이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국선변호인 선임제도(헌법재판소법 제70조)도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의 전원사임(해임)으로 부득이 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탄핵심판의 공전으로 인하여 국정공백이 무한히 늘어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미 상당기간 심리를 지속하여 심판진행을 해 온 사정을 고려하면 지금 단계에서의 대리인 사임(해임)으로 심판절차를 중단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청구인 대리인이 전원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변론권을 포기하면 헌법재판소는 정해진 법에 따라 심리를 진행

하고 결정을 선고하면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52조 및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4조).

대리인 전원사임이 무슨 대단한 심판지연 수단이 되는 양 주장하는 피청구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고 헌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다. 피청구인의 최종의견 진술 관련 의견

또 다른 지연책으로 언론에서 논란되는 것은 피청구인 대통령의 직접 출석 관련입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이에 대해 직접 밝힌 바는 없으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3조 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 이후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론종결을 앞두고 갑자기 최종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추가 기일을 요청할 경우 심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귀 재판부에서는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해당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 진술기회를 미리 고지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3조가 규정하고 있는 ‘증거조사 후의 의견진술’은 그 절차의 성격이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최종 증인신문이 종료되는 변론기일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라.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에 관한 의견

지난 10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및 국회에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촉구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여 헌법기관의 궤위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 대리인의 위 주장 취지가 향후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모두 거친 후까지 본건 탄핵심판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피청구인 측은 탄핵심판이 공정과 신속을 중요한 가치로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피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이미 중요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이 두 달 가까이 되는데 향후 이를 지속하여도 아무 상관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본건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탄핵심판 지연수단으로 악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지극히 부당하고, 헌정질서의 왜곡을 장기화하게 됩니다.

3. 결 론

이미 대통령의 직무정지, 국정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두 달여 되었고, 본건 탄핵심판은 상당부분 심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심판지연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해 오신 재판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본건 심판을 마무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지금 귀 재판부에는 수천만 국민들의 염원과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조속한 심리진행으로 정의를 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2016. 2.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자 회장 정연순

헌법재판소 귀중

[논평]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
특검 연장과 신속한 탄핵결정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다.

- 2017. 2. 17. (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성역으로 치부되어온 삼성에 대해 드디어 법치의 칼날이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이는 범죄자 이재용 개인에 대한 사법적 처단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시대의 요청과 경제권력보다 법치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은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여야 하고, 국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공정위를 비롯한 행정 기관들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우선하는 법집행을 해야 한다.

아직 남은 과제는 많다. 청와대에 의한 공작정치 의혹, 삼성 이외의 재벌들,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대표되는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청와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였고, 언론계와 전교조를 감시하였으며, 법원인사에 개입하고 관제데모를 일으키는 등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트렸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훼손하였다.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특검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또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현대자동차, 롯데, SK 등 재벌기업들이 무엇을 위하여 회삿돈을 내놓았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소위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 소수 검사들의 전횡의 면모를 밝혀 검찰을 부패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국헌을 문란시킨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의 범죄혐의, 정경유착의 비리의혹, 권력을 남용한 검찰 내부를 파헤치기에 특검 수사기간 70일은 턱없이 짧다. 따라서 현행 특검법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준엄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즉각 수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미온적일 경우, 국회는 즉각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뇌물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뢰죄의 피의자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헌법재판소의 조속



한 탄핵결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요청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지휘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국정 공백을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특검과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매주 촛불을 들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특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라.

[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 2017. 2. 21. (화)

특검은 지난 2017. 2. 16.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70일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특별검사법 제2조가 수사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조문 항목만으로도 14가지이다. 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15호)에는 그 범위를 아무리 좁게 해석하더라도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등 수 많은 사건들이 포함된다. 그런 데다가 청와대와 여당의 막무가내식 반발과 저항, 중요 증인들의 잠적과 도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재벌들의 행태를 고려하면 특검의 수사를 70일 내에 종결하라고 하는 것은 애초 부적절하고 또 불가능한 요구였다. 이에 우리 모임은 특검법 제정 당시부터 기본 수사기간을 최소 100일로 정해야 하고 그 이후의 수사기간 연장 권한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었다. 특검수사의 1차 종료시한 2월 28일을 앞둔 지금 우리 모임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수사 실태를 놓고 보더라도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적 공분을 부른 ‘세월호 7시간’의 실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뇌물혐의와 관련된 재벌들의 수사도 삼성그룹에 대해서만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 막 시작되었고,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에 대한 추적도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정유라는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의 소송 지연 전술 등 국헌문란에 앞장선 자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하면, 특검은 일부 수사가 진행된 사안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보강 수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못한채 특검이 종료될 형국이다.

지금까지 특검은 설연휴를 반납하면서까지 수사에 매진해왔다. 수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응원하면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석 198석의 야4당도 특검법 연장에 합의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저 “특검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만 하면서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특검 연장 반대 당론 채택은 자신들의 파멸을 재촉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민의에 복종하여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수사를 종료하라는 명령과 다름이 없는바, 이는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것이자 부패 권력을 옹호하는 것이다. 황교안 대행 자신의 책임을 감추기 위한 적극적 수사방해라는 의심도 거둘 수 없다. 미완의 수사는 추후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불의와 부패를 물고 올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진정 이런 결과를 원하는 것인가?

특검법의 취지는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에게 연장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애초 잘못이지만 그 근처에는 수사 대상이 감히 수사기관의 요구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지는 못하리라는 상식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수사 대상의 대행이 법률의 기본취지와 상식적 염원조차도 외면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즉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성명]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무충리직을 즉각 사퇴하라.

2017. 2. 27. (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파헤쳐온 특검의 종료를 하루 앞둔 2월27일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명령을 외면한 채 특검연장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위는 역사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행위로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재 특검은 그 어느 때보다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적지 않은 수사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에는 아직까지 미진한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집단에 대한 수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공작정치 등에 대한 의혹검증 등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수사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미 지난 2월 16일에 수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이었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묵묵부답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다가 특검 수사기간 종료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야 연장거부를 통보하였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행위이다. 특히 수사기간 종료 하루 전에야 연장승인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통한 특검 연장도 무력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까지 포함한 의도적 시간 끌기 행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의 연장승인 거부는 실질적인 직권남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검법상 대통령의 권한사항이고, 연장 거부 행위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적 지위에 있는 자인만큼 거부권 행사와 같은 중요한 권한행사는 극도로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특검의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미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두둔을 하는 등 수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방해 및 비협조로 일관해왔



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소추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사적 임무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게이트로 인하여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법치행정이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했었어야 하는 자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행정공백과 누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최대한의 인내력과 자제력을 보이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묵인해왔다.

그러나 또다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역사와 시민의 부름과 외침을 외면한 것을 두고,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승인 신청 거부를 철회하고, 즉각 사임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성명]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한다.

- 2017. 2. 28. (화)

특검 수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스스로 공언한 특검 수사를 끝내 거부했고,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을 공여한 다른 재벌 그룹들은 소환 한 번 당하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고, 청와대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공작정치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특검이 큰 성과를 남겼지만, 특검이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 역시 많이 남아 있다. 기왕 이런 성과를 유지하려고 해도 기소 유지와 보강 수사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또 무책임하다. 그런데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제(2월 27일)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하였다. 우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태가 매우 부적절함을 어제 준엄하게 지적하면서 위 조치의 철회와 사임을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긴 박근혜 체제의 최대 수혜자로서 자신의 권한과 기술로 법과 원칙을 짓밟아온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익한 일로 보인다.

이제 남은 방안은 특검법의 개정이다. 특검법을 개정하여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다 알다시피 이러한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을 보고 다수의 국민들이 환호하고 기대하였지만 위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모든 정당이 합의하지 않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자들을 비호하고 방조해 온 정당까지도 그 합의에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지만 그것이 지금 국회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방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다. 우리 모임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본 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은 우리 국회법에서 비상적·예외적인 입법절차이다. 헌정 질서가 수립된 이래 다수파에 의한 무리한 직권상정이 많았기 때문에, 국회법은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우 및 각 교섭단체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위 규정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위 규정이 남용될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었다. 그러나 우리는 위 규정이 어떤 경우에도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위 규정의 취지가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위 규정의 적용을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증진과 인권 신장에 꼭 필요한 법안이 기득권자들의 반발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대립과 혼란



속에서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는 위 규정이 부득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본다.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노력이 청와대의 조직적 방해와 은폐행위로 중단되었다. 온갖 의혹은 그대로인 채 진실규명을 둘러싼 국론 분열은 점점 가속화되어 법치주의의 폐기와 헌법 기관에 대한 폭력 사주가 공공연하게 예고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혼란과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안전이 전시, 사변과도 같은 직접적인 위협 아래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고심 끝에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 연장법안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의 국가비상사태를 촛불을 통해서 슬기롭게 대응하여 왔고, 특검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신에게 부여되어 있는 중차대한 책무와 권한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 2017. 3. 7. (화)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연장 불승인으로 말미암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특검의 못 다한 수사를 이에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과거 수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후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과거 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 6. 이재용 일가가 부당한 삼성물산 합병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였을 뿐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마치 삼성 이재용 일가는 치외법권인 것처럼 재벌에 대한 수사의지는 없었다.

둘째, 2016. 10. 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져도 검찰은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그리고 JTBC가 10. 24. 최순실 태블릿PC를 보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 25.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인 10. 27.에서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였다.

셋째, 검찰은 2016. 12. 11.까지 69일간 수사를 진행하였다. 특검의 70일과 거의 같은 수사기간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였다.

검찰은 다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새로 구성되는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기 특별수사본부와 그 구성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특검이 70일 동안 못한 수사를 별도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기존의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상태대로라면 본부장과 지휘라인만 존재하는 이름만 ‘특별수사본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금 검찰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삼성 이외의 재벌에 대한 수사, 그 외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다수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놓여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과거의 잘못과 한계를 탈피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여 조직을 혁신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성명]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 2017. 3. 10. (금)

헌법재판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결정을 선고했다. 현재의 탄핵 결정은 국민주권의 승리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파면한 현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모임은 현재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만 나온다는 것, 이 자명한 원리가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대통령과 특정 집단이 사유화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이다. 현재는 대통령 등 국가기관에 의해 헌법이 침해되는 경우 위헌적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헌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오늘 현재의 결정은 이와 같은 헌법보호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며, 그 결정의 효력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기속하는 최종적인 것이다.

오늘 현재는 △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 △ 뇌물수수를 포함한 형사법 위반 등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하여 내린 엄중한 결정이다.

이번 탄핵 결정은 촛불시민이 일구어낸 명예혁명이다. 연 인원 1,500만의 촛불시민은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하고 있는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는 ‘헌법시민’이다. 다만, 우리는 오늘 현재의 결정이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완성이나 종착점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호한 정치세력에 대하여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헌법위반, 법률위반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비호한 정치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이들 정치세력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 등 국가권력에 편승하여 대가를 주고받는 정치와 재벌 간 불법적인 정경유착의 적폐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특별검사에 의해 온전히 수행되지 못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계속되어야 한다. 검찰은 오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제공 혐의가 있는 재벌, 직권남용과 관련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 헌재가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수행의무 위반”의 탄핵소추 사유를 탄핵 결정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의 보충의견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과 달리 국가지도자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탄핵사유이다. 오늘 헌재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남용하여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피의자 신분의 특검 수사를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검찰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1,500만 촛불시민이 광장과 거리에서 외친 국민주권주의가 오늘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승리했다. 2017년 촛불혁명, 헌법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보도자료] 민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5대 수사과제 발표

- 검찰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매섭게 감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 2차 특수본의 성패는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공작정치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있음.
- 최순실의 자금세탁 정황, 우병우의 특별감찰 방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

- 2017. 3. 20. (월)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일(2017. 3. 21.) 박근혜 전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범죄혐의의 피의자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9.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각종 형사범죄 성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하였지만, 그 정도가 충분치 않았고 결국 특검이 수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역시 짧은 수사기간으로 말미암아 수사를 완료할 수 없었고 다시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 철저한 수사과 진상규명으로 국헌문란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거리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친 온 국민의 명령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5. 이에 민변은 검찰 2차 특별수사본부의 <5대 과제 수사과제>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첨부 민변 의견서 참조)

<검찰 2차 특수본 5대 수사과제>

- 1) 검찰 특수본의 제1차 수사에서는 재벌들이 협박을 당하여 자금을 공여한 직권남용 혐의로만 수사하였으나, 재벌들이 자금공여의 대가로 재벌별의 구체적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뇌물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 2) 공무상기밀누설죄 뿐만 아니라 보다 형이 무거운 군사상, 외교상 기밀누설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3) 청와대 공작정치와 관련하여, 김영한 업무일지 상 “VIP” 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오는 만큼 김기춘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것.

4) 최순실이 독일 등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자금세탁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5) 우병우 전민정수석이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과 비리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난만큼, 관련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

6. 박근혜 전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본인의 말을 뒤집고 그 동안 한차례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탄핵결정 이후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의자 박근혜의 증거인멸의 우려는 매우 크고, 이처럼 구속사유가 넉넉히 인정되는 바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7. 검찰특수본의 제1차 수사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었고, 결국 특검법 제정과 특검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70일(검찰의 1차 특수본 활동기간과 거의 같습니다.)의 수사기간 동안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에 임하였고, 상당한 양의 증거를 수집하면서 다수의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특검의 성과와 국민의 매서운 감시를 명심하고, 검찰 2차 특수본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의 건 서

- 서울중앙지검 2차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과제에 관한 의견 -

- 2017. 3. 20. (월)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즈 설립 모금행위로부터 촉발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합니다)은 특검수사 종료와 지난 2017. 3. 10.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전대통령”이라 합니다)의 탄핵결정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 사건의 본질이 과거 전두환 전대통령의 ‘일해재단사건’과 같은 정경유착에 있음을 주장하며 박대통령 주도하에 이루어진 여러 범행들에 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집중 조명해야 할 5대 수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오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적극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순 서>

I. “박근혜 전대통령” 뇌물죄, 군사기밀누설죄, 청와대 공작정치 수사	2
II. 삼성그룹 이재용 외 재벌들에 대한 뇌물죄 등 수사	8
III.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수사의 필요성과 의미	11
IV. 최순실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행위 수사촉구	15
V. 우병우 전민정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	16
VI. 결 론	18

18. “박근혜 전대통령” 뇌물죄, 군사기밀누설죄, 청와대 공작정치 수사

가. 박전대통령이 받아야 할 수사과제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제1차 수사에서 박전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된 최순실, 안종범 등과 공모하여 재벌기업들을 협박하여 미르재단, K-Sports 재단, 최순실 등에게 자금을 공여하도록 한 직권남용죄와 청와대 행정관의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대한 공범

으로 의욕하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를 통하여 재벌들이 단순히 박전대통령에 대해 협박을 받아 자금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각 재벌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법제도의 변경이나 구체적 지원행정을 요구하며 자금을 공여한 사실을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박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만이 아니라 포괄적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로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난 제1차 수사에서는 기밀누설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형이 가벼운 공무상기밀누설죄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누설된 기밀의 내용에는 군사상,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는 것도 있어 이 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김영한 전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진 김기춘 전비서실장의 문화계, 언론, 법조계, 종교계, 교육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공작정치에 대해서는 김기춘과 조운선 등의 직권남용 부분만이 수사되었으나, 위 업무일지에는 VIP라고 하여 대통령이 직접 사찰이나 공작정치를 지시한 부분도 있어 박전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러한 공작정치를 지휘한 직권남용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박전대통령에 대해서는 1) 재벌들의 뇌물죄에 대한 공범, 2) 공무상기밀누설만이 아니라 군사상, 외교상 기밀누설죄, 3)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직권남용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하며, 이미 청와대에서부터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폐기하고 특검의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등 증거인멸의 혐의가 뚜렷하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합니다.

나. 박전대통령은 최순실과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을 지배·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은 재단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과 임원 선임 등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 최서원은 2015. 9.말경부터 10.경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하였고 같은 달 하순경 문화재단의 명칭을 ‘미르’라고 정하였으며, 위 재단 이사장을 ‘김형수’, 사무총장을 ‘이성한’, 이사를 ‘이XX’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및 정관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안종범은 2015. 10. 21.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 이사장은 김형수, 이사는 장XX, 이XX, 송XX, 조XX, 김XX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이성한으로 하라.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최상목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015.10.26. 서울 서초구 XXXX에서 재단법인 미르의 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이 상견례를 하는 한편, 이XX 등 전경련 관계자는 500억 원을 출연하는 각 그룹사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전경련에서 준비한 정관 및 마지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았다.

또한 이재용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재단설립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습니다.

이재용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순실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최순실은 피고인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대통령은 2016. 2. 15. 소위 ‘안가’에서 피고인 이재용에게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에 협조해 주어 고맙다.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포함하여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하여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이러한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상 최순실, 이재용에 대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미르재단 정관의 성안과 임원 선임은 박전대통령의 지시·승인 아래 최순실이 실무를 진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박전대통령-안종범(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경제금융비서관)의 지시 내용에 따라 전경련이 설립 서류(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등) 작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출연기업들은 전경련이 준비한 서류들에 날인함으로써 정관 작성 등 법인설립행위를 하였습니다. 즉, 재단법인의 경우 주로 출연자들이 해당 재단을 경영·지배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박전대통령과 최순실은 민원 해결에 대한 대가로 재벌들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출연금을 받아 미르, 케이스포츠 각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이들을 장악·지배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립 후 대통령과 최순실에 의한 재단 인사와 운영의 전횡, 대통령의 국외

순방등과 관련하여 두 재단이 협력사업의 주체로 등장하는 사정(한불 융합요리 시식 행사, 아프리카 K-meal 사업, 이란 K-타워 건립사업, 태권도 시범단(K스피릿) 공연 등), 대통령 지원 하에 더블루케이를 통해 롯데, 포스코 등을 상대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점도 대통령의 재단 지배를 보여 주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퇴임 후 재단으로 올 것이라고 들었다”는 케이스포츠 재단 박현영 과장의 국정조사 증언까지 감안하면 이는 자명합니다.⁹¹⁾

다만, 박전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무엇을 뇌물로 받은 것인가에 관해 출연금이 뇌물이라는 견해(제3자뇌물수수)와 재단 그 자체가 뇌물(단순뇌물)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판례가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며 그 대상을 넓게 보고 있는 이상 어느 경우이든 박전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에 큰 장애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전대통령은 이전 정권에도 유사한 형태의 모금행위가 있었음을 강변하기도 하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모금행위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기부금 또는 출연금 모금 사례와 달리, 정책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사실상 특정인이 재단을 사유화하여 그 운영을 전횡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재단의 정책상 필요성과 사업 계획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심의 및 입안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출연금 할당 및 정관 작성 등 설립행위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라도 기업들의 자발적 의사와 협조를 얻는 대신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립과정은 물론 설립 후에도 대통령과 최순실이 재단들을 사실상 지배했습니다. 따라서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모금행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기부금 등 모금 사례들과는 뚜렷이 구별됩니다. 따라서 뇌물죄 성립을 부정하는 박전대통령의 변명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자 거짓논리를 만들어 낸 것에 다름 아닙니다.

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수사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는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최순실은 박전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위한 사전 시나리오를 받아보았고, 그 안에는 군이 복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 접촉했다는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순실에 대한 형사재판에는 이러한 범행과 관련한 공소사실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검찰은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에 관한 최순실 및 박전대통령과의 혐의유무 및 공모관계를 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91) 2016. 12. 26.자 JTBC '퇴임 대비용' 증언 파장...뇌물죄 수사 단서 될 수도



라.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직권남용죄 수사

김영한 전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진 김기춘 전비시설장의 문화계, 언론, 법조계, 종교계, 교육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공작정치에 대해서는 김기춘과 조윤선 등의 직권남용 부분만이 수사되었으나, 위 업무일지에는 VIP라고 하여 대통령이 직접 사찰이나 공작정치를 지시한 부분도 있어 박전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러한 공작정치를 지휘한 직권남용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 구속수사의 필요성

1) 중대 범죄혐의의 부인 및 증거의 조직적 인멸·조작행위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혐의의 상당성), 증거 인멸 염려 혹은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구속사유 심사를 위해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우선 박전대통령의 범죄혐의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뇌물죄로서 그 액수의 과다로 인해 가중처벌이 예상됩니다. 범죄혐의는 비단 뇌물죄에 그치지 않고, 국가기밀누설, 최순실 모녀 지원을 위한 여러 직권남용행위, 불법의료행위 등 국정농단과 관련한 여러 범행들의 정점에 박전대통령이 있으며(범죄의 중대성), 관련자들 대부분이 구속기소될 정도로 박전대통령의 혐의는 상당합니다(혐의의 상당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전대통령은 이 사건 발생초기부터 거짓으로 일관하였고, 최순실, 안종범 등과 주요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거나 전경련 이승철에게는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조작까지 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 수준이 아니라 증거를 실제로 인멸하고 있습니다.

2)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안종범, 문형표 등 구속된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고려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종 등이, 특검에 의해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문형표 등 어느 때 같으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위 공직자나 재벌 총수가 각 구속기소되었으며, 박전대통령은 이들과 공범관계에 있음이 여러 수사과정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비록 헌법은 불구속수사를 천명하고 있으나,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공작정치, 비선의료 범행 등 박전대통령은 바로 그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하는데 앞장선 장본인이자 시작과 끝이라는 점에서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이 행한 여러 수사성과에 비추어, 박전대통령의 뇌물혐의와 국정농단(헌법재판소는, 박전대통령의 최순실 및 그 측근에 대한 지원행위가 사익을 취하기 위한 위법한 행위이고, 문건유출행위도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소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임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공작정치, 비선의료 등의 공모관계는 분명합니다. 또 박전대통령은 중대범죄에 대한 혐의가 상당하고, 일관하여 범의를 부인하며 증거를 조작·인멸한 흔적이 있으며, 피해자나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가 행해질 우려와 김기춘, 이재용, 최순실 등 공모자들이 이미 구속기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속수사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19. 삼성그룹 이재용 외 재벌들에 대한 뇌물죄 등 수사

가. 여러 재벌들이 독대 당시 제시했던 부정청탁의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특검은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에 대하여, 최순실 모녀에 대한 각종 지원행위 외에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제공된 출연금 역시도 삼성이 당면했던 민원(경영권 세습)과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에 해당하고, 위 이재용이 이를 위해 회사자금을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며, 국회에서의 증언이 허위로 행해진 점 등을 들어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비롯하여 2015. 07. 및 2016. 02.과 03. 박전대통령과 독대를 하며 민원을 제시했던 다른 재벌들(SK, 롯데, CJ, LG 등)에 대한 뇌물공여죄 및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죄 등에 대한 수사는 특검의 제한된 수사기간과 인력으로 인하여 개시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가 촛불민심의 중심추를 이루었던 점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출연행위와 각 재벌들의 민원해결 사이의 대가관계가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그룹 이재용 외에 위 재벌들에 대한 뇌물죄 등 수사 역시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재벌들의 뇌물공여 당시의 재벌이 당면했던 구체적인 민원성 현안과 박전대통령의 개입정황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01] 단독면담 전 제출한 주요현안과 대통령 말씀자료

2015.	주요현안	대통령 말씀자료
-------	------	----------



07.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 - 친환경차 및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 노동5법·원샷법(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 조속한 통과⁹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10. '시정 연설'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경제 활성화법 처리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ii)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iii)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 2016. 2. '대국민 담화문' 발표(노동개혁법 처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
CJ그룹 (손경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 - 지주회사의 손자·증손회사 지분 소유 규제 완화⁹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법안 국회 통과 설득 - CJ도 언론과 국민에 적극 알려 공감대 확산
SK그룹 (김창근/최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⁹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점 특허 상실은 야당 주도로 관세법이 개정된 데 기인 - (2016년) 3월경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
LG그룹 (구본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에너지 신사업에 한전 참여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이 제주도 에너지 신사업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음
롯데그룹 (신동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렛 의무휴업 확대 반대 -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제로 변경 - 그밖에 신동빈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수사 대상, 세무조사 예정 등 수사 관련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렛 의무휴업 도입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 신중히 접근해야 - 면세점 특허 상실은 야당 주도로 관세법이 개정된 데 기인 - (2016년) 3월경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

92) 2016. 12. 21.자 미디어오늘 특검 향한 목소리 “삼성 뒤에 숨은 현대차 정몽구도 구속”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094#>

93) 2017. 01. 04.자 한겨레 [단독] 박대통령 한화 독대 말씀자료 “면세점 황금티켓 뺏으니 재단지원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348388&sid1=001>

94) 2016. 11. 16.자 중앙일보 [단독] 박대통령, 총수 독대 때 ‘민원성 현안’도 들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877985>

나. 재벌들의 뇌물공여 행위 및 회사 자금 유용행위에 대한 수사

박전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은 공모하여, 각 그룹별로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거나,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집행하거나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대 혹은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이재용(삼성그룹),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손경식(CJ그룹), 최태원(SK그룹), 구본무(LG그룹) 등 각 그룹의 회장들로부터 ①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박전대통령과 최순실이 지배하는 재단법인 미르에 합계 486억 원 상당의 출연금을, ② 2016. 02.경부터 2016. 08.경까지 위 박전대통령과 최순실이 지배하는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합계 288억 원 상당의 출연금을, 각 교부받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위 정몽구 등 각 그룹의 회장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습니다.

또한, 위 정몽구를 비롯한 각 그룹의 회장들은 각 그룹의 경영 및 자금지출 등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들인바, 각 그룹 내 각 기업의 자산이 불법적인 뇌물로 제공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박전대통령과 최순실이 지배하는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게 위 각 출연금 상당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박전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각 출연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각 기업들에게 각 출연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다. 소 결

이 사건은 공론의 장에서 공개된 토론과 논쟁을 거쳐 채택되어야 할 경제정책이 정경유착의 음습한 통로를 통해 채택된 결과 경제질서의 왜곡은 물론 법과 정의를 실종시켰으며, 더 나아가 국가정책의 신뢰 자체를 상실시켜 우리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확산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검찰과 특검에 의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자, 자신들이 청와대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강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여자들의 의사형성의 자유가 완전히 제압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기업들이 직무관련-대가성을 인식하고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위 재벌들을 뇌물공여 및 공여된 자금이 회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수사의 필요성과 의미

가. 고 김영한 업무수첩을 통해 드러난 청와대 주도의 공작정치



특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김기춘, 조윤선 등을 구속 기소하였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외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공작정치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고 김영한 업무수첩을 통해 청와대가 ① 언론에 대한 사찰과 통제(KBS 이사회 사장 임명개입, 정윤희 문건 관련 세계일보 탄압 등), ② 사법부 사찰과 공작(상고법원 설치 등 현안을 이용한 법원 길들이기, 판사들 성향 파악 등), ③ 국정원의 장·차관 공공기관장 및 정치·종교·민간인 사찰, ④ 교육계 사찰과 공작(전교조 지지 교육감 사찰, 전교조 동향파악 등)을 주도하고, ⑤ ‘우병우 팀’을 동원하여 어용단체의 고발을 이끌어낸 의혹 등이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의 공작정치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개입한 분야, 구체적인 의혹 그에 따른 적용 혐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02]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구체적 의혹과 적용혐의

개입분야	구체적 의혹	적용혐의
언론에 대한 사찰과 부당통제	○ KBS 이사회 사장 임명에 개입	- 이사회 이사들의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죄 혐의
	○ 세계일보 ‘정윤희 문건 보도’와 관련한 공작 및 일요신문과 시사저널 등 정부비판 보도에 대한 처리	- 청와대는 문건의 내용을 전면 부인,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문건의 유출만 수사하여 조응천과 박관천을 공부산기밀누설죄로 고소, 통일교 계열사 세무조사
	○ 산케이 신문의 “세월호 7시간 대통령” 보도와 산케이 지국장 기소 공작	- 산케이신문 처리를 지시하여 언론의 자유 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과 공작	○ 법원에 대한 사찰과 공작	- 상고법원 설치 등 현안을 이용한 법원 길들이기, 검찰총장, 대법원장 등 고위직에 대한 사찰,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영장청구 등에 활용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판사를 배제 등 사법권독립의

		침해 혐의
	○ 재판결과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	-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관련 여론 전 교사 및 헌법재판소 내부 논의사항 쟁점 미리 파악 등 직권남용 및 삼권분립, 법치주의원칙 훼손 등 혐의
	○ 대한변협에 대한 사찰과 공작	-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에 개입하거나 집행부 구성원에 대한 사찰, 통합진보당 해산과 세월호사건 변호사들의 성향 파악, 보수 변호사단체와 커넥션 이용 등 직권남용 및 삼권분립, 법치주의원칙 훼손 등 혐의
	○ 민변에 대한 탄압을 청와대에서 지휘	- 민변 집행부에 대한 사찰 및 민변변호사의 수임내역과 민변자금 등을 사찰, 일부 변호사 징계공작 등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혐의
국정원을 통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사찰	○ 국정원이 장·차관 공공기관장, 정치인, 종교계와 언론, 민간인 사찰	- 총리실 TF와 국정원이 협력하여 경찰과 국정원이 팀을 구성해 사찰하도록 지시, 국정원만이 아니라 국세청, 공정위 등도 사찰과 공작에 동원하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위반 및 제18조, 제19조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교육계 사찰과 공작	○ 전교조 지지 교육감에 대한 사찰과 공작	- 진보교육감의 활동을 통제할 시스템 구축시도, 인사에 대한 사찰, 정치적 공격 지시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 전교조 법외노조화	- 전교조 동향파악, 교육현장에서 이념대결 조장, 반합법, 비합법적인 방법 동원하여 전교조에 대응



		하도록 지시하여 직권남용, 업무 방해 등 혐의
문화계 사찰과 공작(※ 유일하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건만 수사되어 관련자 구속)	○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에 대한 수정압력 및 광주비엔날레 전시 무산	- 행사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방해, 청와대의 직권남용, 강요, 업무 방해죄 혐의
	○ 영화 다이빙벨 방영 차단과 처벌	- 청와대에서 영화 방영, 탄압을 직간접적으로 지시 - 영화제작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활동을 축소 은폐하려는 청와대의 개입과 공작	○ 카카오톡, 아고라 등에 대한 감청 협조 등 사찰과 공작 및 인터넷 비판글에 대한 검열강화	- 극우단체를 통해 세월호특별법 반대운동 및 카카오톡 유포를 활용하도록 지시하여 직권남용죄 혐의
	○ 세월호 7시간 비공개 결정	-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무효죄 혐의
	○ 세월호 관련 감사원 감사 개입 정황	- 감사원 독립을 침해하여 직권남용죄 혐의

나.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수사의 필요성과 의미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하여 법을 우습게 알고,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남을 사찰하고 불법적인 공작을 하는 행태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헌법 침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바, 청와대 공작정치와 관련한 수사는 한 치의 허점도 없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상과 이데올로기 탄압 및 편향된 가치관의 세뇌라는 유신시대의 폐습이 부활함에 따라 자체 검열 등 양심과 사상 및 예술의 창작행위가 위축되고, 관제 데모와 여론왜곡의 심화현상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는 등 정권 내내 공작정치의 폐해가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었으며, 급기야 공작정치의 목적이자 과정인 개인과 정권에 대한 숭배는 이제 도를 넘어 박전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적 헌정질서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도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수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한정된 범위에 머물지 말고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언론, 종교계, 법조계, 교육계,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공작부분 전반에 대해 이루어져 합니다.

아울러 청와대가 언론계나 고위 공직자, 종교계 등에 대한 사찰에 있어서는 국정원을 동원한 혐의도 있으므로,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함 점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1. 최순실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행위 수사촉구

가. 특검수사에서 드러나 자금세탁 혐의

특검은 최순실의 자금세탁에 관한 정황 중 삼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정유라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금원을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으로 합계 5,979,686,유로(77억 9,735만 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독일에서의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독일검찰의 수사착수

그런데 최순실이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독일에 몇 개의 회사를 세웠다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위 회사들이 사실상 최순실의 자금세탁 용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⁹⁵⁾.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에서 최순실과 관계된 한국인 3명과 독일인 1명을 포함한 4명의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현행 범죄수익 환수제도를 통한 수사

특검이 독일 검찰로부터 최순실의 자금 세탁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만큼, 특검이 삼성과 관련된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한 액수를 넘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 일가의 숨겨 놓은 부정축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검찰은 현행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라. 소 결

95) 2016. 12. 14.자 이데일리 안민석“최순실 독일서 자금세탁, 수천억대 추정”



나라의 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심지어 국가권력과 재벌 그리고 권력실세가 공모하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장래에 이러한 국가적인 엄청난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최순실의 독일에서의 자금세탁 혐의가 일부 인정 된 만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에 대한 나머지 자금세탁 혐의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어 최순실이 부정축재한 재산을 몰수·추징해야 할 것입니다.

22. 우병우 전민정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

가. 우병우에 대한 특검의 수사 및 혐의

특검은 우병우에 대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검수사를 통해 나타난 우병우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2016. 3월~6월 경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6명을 산하단체 등으로 내려 보내는 등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점, ②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른바 ‘좌파 성향’으로 낙인찍은 CJ 계열사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 퇴직시킨 점(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③ 2016. 10월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가운데 우병우가 청와대의 각종 대책 회의를 주도하면서 사태 무마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개입한 점(직무유기 혐의 적용), ④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의혹을 내사하고 자신이 연루된 ‘정강’ 횡령 의혹,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에 관한 감찰에까지 나서자 이를 중단시키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점(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적용), 2016. 12. 22.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2017. 1. 9. 열린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⁹⁶⁾(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적용), 이상입니다.

나. 우병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96) 2017. 2. 22.자 일요경계 ‘최순실 비호·직권남용’ 우병우 영장기각..결국 법정서 진실 가리나

특검수사는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으로 한정되므로, 우병우 개인 비위 등에 관한 혐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병우에 대한 영장기각은 이 점과도 관련이 있으며, 같은 이유로 검찰은 우병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검개시 전 검찰의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황제수사’ ‘검찰의 자기식구 감싸기’ 비난 등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만약 향후 우병우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난날과 똑같은 비판이 국민들로부터 제기된다면 더 이상 검찰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병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라며, 그것만이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3. 결 론

진실의 가장 힘겨운 적은 거짓(lie)이 아니라 신화(myth)라는 말이 있습니다⁹⁷⁾. 현 정질서 유린과 국정파탄을 통해 국민의 삶을 도탄으로 몰아넣은 박전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공작정치를 통해 모든 추종자들에게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이 의도된 불순세력에 의해 공작된 것임을 강변하며 거짓신화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칼로 사람을 죽인 자가 내가 아니라 칼이 죽인 것이라고 하는 변명과도 같습니다.

이제 검찰이 신화를 걷어내고 거짓을 밝혀 진실을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 03.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정 연 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특별수사본부 귀중

97) J.F.케네디는 1962. 06. 예일대 졸업식 연설에서, 진실의 가장 커다란 적은 계획적이고, 부자연스러우며, 눈속임의 거짓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그럴듯하며, 비현실적인 신화(The great-enemy of the truth is very often not the lie - deliberate, contrived and dishonest but the myth-persistent, persuasive and unrealistic.)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명] 법원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 2017. 3. 27. (월)

오늘(2017. 03. 27.)에서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모임은 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혐의의 상당성), 증거 인멸 염려 혹은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속사유 심사판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혐의와 수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기도 하다.

우선, 피의자 박근혜는 이미 구속된 삼성그룹 이재용으로부터 수백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뿐만 아니라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다른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도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뇌물수수액 역시도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니 가중처벌로 말미암은 범죄의 중대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비단 뇌물죄와 각종 이권개입 등 경제사범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서도 드러나듯이 군사상,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물론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청와대 공작정치로 요약되는 다양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씨줄과 날줄로 복잡하게 얽혀진 모든 범행의 시작과 끝의 정점에 피의자 박근혜가 있으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기춘, 조운선, 이재용 등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 대부분이 구속된 이상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혐의의 상당성은 충분하다.

더구나 피의자 박근혜는 사건 발생 초기 공언했던 국민들과의 약속조차 어기며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전면 거부했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방해했다. 최순실, 안종범 등 공범자들에게 주요증거를 인멸하도록 조직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상당히 포착되는 등 증거 인멸 염려 수준이 아니라 증거를 실제로 인멸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불구속수사원칙을 천명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더라도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공작정치,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등 헌정질서 파괴, 유린에 앞장선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오히려 불구속사유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이제 막 바다위로 인양된 세월호 7시간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 또

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는 자명하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적 상황 등 비규범적인 사유들을 들어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체했고, 일각에서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이유로 신중론을 펼치기도 하고 있으나, 재직 중 헌정질서 파괴와 유린의 주범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 까지 당한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비법률적인 특혜를 고려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우리 모임은 법원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이재용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여 국민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법원은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최초영장청구 당시 수뢰자에 대한 수사미진을 이유로 기각하였었는데, 지금은 증뢰자와 수뢰자의 실체가 날날이 드러난 이상 수뢰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이 천명한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법원이 ‘강자에게는 약하게, 약자에게는 강하게’ 법을 적용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법리 판단을 한 것을 법원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권력과 법률은 오직 국민의 뜻에 의해서만 정당화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명]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우리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 2017. 3. 31. (금)

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법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다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실된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모임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지 않고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우리 모임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였던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평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이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몰염치한 행태이다. 그가 누리고 행사한 지위와 권한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가 초래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고려한다면, 그는 국민들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한다. 우리는 그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품격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요청한다.

오늘 우리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한 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구속까지 되는 이 상황에 대해 법률가인 우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공범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성명] 검찰특별수사본부 2기의 재벌 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 2017. 4. 19. (수)

2017. 4. 17.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하였다. 같은 날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이하 2기 특본)가 발표한 수사결과에 의하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삼성그룹에 관련해서는 뇌물수수죄를, 롯데그룹에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SK그룹에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요구죄를 인정하였다. 현대자동차 그룹과 cj 그룹 등 다른 재벌 그룹에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의 대가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재벌그룹의 총수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하였고, 최태원 SK그룹은 불기소처분 하였다. 그가 뇌물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는 재벌기업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로서, 재벌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처벌하면서 뇌물을 준 재벌기업 총수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검찰은 재벌총수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끝내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특검이 거둔 수사성과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피고인 박근혜와 각 재벌총수의 독대가 있었던 점, 독대 당시 재벌들이 갖고 있던 당면과제가 대화 주제였던 점,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로 민원해결 노력이 있었다는 점, 민원해결 대가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출연금이 지원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다수 있는데도 재벌총수들을 기소하지 아니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납득되기 어렵다.

즉, 검찰이 추가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언론보도로 확인된 수사결과만 가지고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128억원을 지원한 현대차그룹, 111억을 지원한 SK그룹, 13억원을 지원한 CJ그룹, 45억을 지원한 롯데그룹 총수에 대하여 뇌물공여죄로 기소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경영권승계 대가로 삼성이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것을 뇌물로 보아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하고도 다른 재벌들의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와 조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게다가 검찰은 SK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지원을 끝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SK는 80억 원 지원을 거절하며 30억 원이라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뇌물은 주기로 약속만 해도 처벌되며, 이러한 법리에 따라 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뇌물죄로 기소되어야 한다.

지난 박영수 특검이 대가성 입증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재벌 기업과 국민연금 등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과 달리 2기 특본은 재벌총수들의 뇌물죄 수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렇다 할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게다가 추가수사 없이도 재벌총수들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할 만한 증거가 널려 있는 데도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재벌총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 위원회

4. 퇴진특위 좌담회



<퇴진특위 좌담회>

일 시 : 2017. 3. 13. 3. 20. (2일)⁹⁸⁾

장 소 : 민변 사무처 대회의실

참 석 사 회 : 백승현,

좌 담 : 권영국, 강문대, 윤복남, 백주선, 신장식, 김준우, 김종보, 박정만, 김남근,
김도형, 좌세준, 김도희, 유정찬, 오세범, 김성진, 이현아

정 리 : 김종보, 유정찬

24. 탄핵 사태의 원인과 경과

백승현 우리 민변은 퇴진특위를 구성하여 이번 탄핵정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퇴진특위 구성원들 모두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다. 이번 탄핵사태를 되돌아보면서 서로의 의견과 감회를 나누고, 향후의 과제를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 또한 우리 민변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먼저 이번 탄핵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신장식 우선 발단은 지배계급의 내부분열이 제공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내부분열로 드러난 폐단에 더하여 그 동안 심화된 불평등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탄핵사태를 밀고 갔다.

권영국 신장식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일상과 경제적 문제에 있어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 매우 공감한다. 특히 이번에는 잘 움직이지 않았던 청년들, 청소년들도 대거 참여하였는데,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정유라의 입학, 학사비리 문제가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가장 민감했던 우리 교육문제에서의 불평등이 실제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상당한 불만이 표출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집권층의 내부 분열이 상당히 기회가 되었다. 보수언론이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존속유지를 위해 내부 대립을 폭로한 것이 아닌가 싶다.

강문대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어떤 근원적인 모순의 심화 축적으로 이 사태가 발단된 것 같지는 않다. 즉 우리 사회의 병폐가 갈등 정국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 점들은 훗

98) 2017. 3. 13.과 3. 20. 2일에 걸쳐 좌담회를 진행했으나, 정리작업에서는 하나의 좌담회 형식으로 재구성하였음.

불이 꺼지지 않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했다. 마중물이라기 보단 군불을 때우는 요인들이었다고 본다. 그러면 마중물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 언론보도가 아주 극적으로 벌어졌는데 그 극적인 보도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많이 결합이 되어있었다. 강남 졸부 아줌마가 그 백그라운드였다는 것도 우리 국민의 정서상 자존심상 잘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 거기에 사교육 문제까지 초기에 많이 제기가 되어있었고,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납득되지 않는 의문들이 많이 깔려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좀 드러나지 않았겠느냐 싶다.

그 다음 단계에서의 직접적인 요인들은 조선일보나 보수언론들의 태도가 의외로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국민들에게 상당한 확신과 자신감을 줬던 게 아닌가 싶고, 검찰의 대응 태도도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초기에 사과를 해서 국민들의 의문점들이 확신으로 바뀌고 국민적 분노가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것 같다.

백승헌 이대 사건이나 촛불집회로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이 충격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외였던 두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검찰의 태도가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막으려던 것에서는 조금 나아간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공중과 공영방송은 오히려 침묵하는 반면에 종편 보수언론 등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측면이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

강문대 저도 정말 그게 궁금하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조선일보의 우병우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그러다가 박근혜한테 밀렸다. 그런데 그 때 이미 최순실에 대한 취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뭔가 반격을 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고 있었고,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에서 한겨레가 보도를 했다. 우리로서는 조선일보가 한겨레에 무슨 소스를 제공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그 앞 단계에서 우병우 보도에서 촉발된 어떤 갈등이 조선일보의 그 다음 단계에서의 입장을 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바로 한자공부 란에다가 ‘하야’라는 단어를 처음 쓴 게 조선일보 아닌가. 그리고 연립정부가, 내각연합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 시작한 것도 조선일보가 먼저 했다. 그래서 나는 여기가 진보 쪽보다 훨씬 더 빨리 이야기가 되고 있다 싶었다. 그럼 저쪽은 뭔가 다른 공공이가 있거나 박근혜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거나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냐 라고 의문을 가져왔다.



김준우 저도 경제 불평등 문제가 집약된 상태에서 심화된 박근혜 정권의 위기가 부정부패사건과 만난 것이 탄핵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본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임계지점에 이르러 식물정권에 가까운 상태였는데, 게이트로 인하여 퇴진이 빨라졌다.

고민이 되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박근혜를 끌어내는 방식이 탄핵심판이었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 정권의 위기는 87년체제의 한계를 의미도 있었는데, 이것이 ‘탄핵’이라는 87년 헌법에 의해서 그 흠결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한 것이라는 역설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현실화가능하다는 점에서 87년 헌법과 체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될 수도 있어서 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조선일보였고, 이 때문에 박근혜 게이트의 폭로가 지배계층의 권력 재편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촛불과 사회운동이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고, 그 때문인지 탄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통한 조직적 성과는 별로 없었다는 점도 있는 듯하다. 그래서 촛불의 측면에서보자면 이번 탄핵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 같다. 2002년에 시작한 촛불은 2008년에도 있었다. 그 15년의 역사에서 우러나는 “촛불의 성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해답에 대답을 잘 못하겠다. 정권교체 또는 약한 정도의 헌법 개정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박정희 신화가 대중적으로 일정하게 견인 성과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평가하고 남길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세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신장식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검찰이 전과 다르게 대응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볼 때, 근본적으로 작년 총선 결과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작년 총선에서 모두가 새누리당이 180석은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새누리당은 원내 제1당을 놓쳤고, 민주당 등 야당이 150석 이상이 되었다. 보수진영에서는 정권재창출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었고, 그런 우려의 한 축이 사실은 정밀수술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제 턴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정밀한 외과수술을 하면서 개헌이라는 큰 이슈를 던지고, 그걸 통해서 보수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시민들에 의해서 정밀 외과수술이 아니라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 뒤집어 보자 라는 쪽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결국 국민들이 만들어 준 총선

결과는 지배계급이 전과 다른 태도를 보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다.

백주선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국정운영이 펼쳐진 것, 즉 기본권을 제한하고, 상식 밖의 외교정책을 펼치고, 남북 관계를 파탄내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쌓인 결과라고 보고 있다. 최순실 사태는 어느 누구도 쉽게 이 박근혜 정부를 옹호해주거나 변명해주기 어려울 정도로 가장 상식 이하의 국정운영이었고, 그 치부가 드러났으며, 이후의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개되었다. 박근혜측은 계속 부인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면서 거짓말했던 게 밝혀졌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것 같다. 사실은 조금 예민했던 사람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상 국정을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겠지만, 이 사태에 이르러서 정말 대다수가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전과 달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였고, 촛불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도 주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끝내 8대0으로 탄핵결정 인용하면서 전체 제도 중 잘 작동하는 것은 잘 작동하는 대로, 부족한 것은 개선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었다. 이러한 점들이 이번 사건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작용되었다고 본다.

권영국 왜 조선일보와 검찰이 변했을까? 사실 조선일보는 이걸 시도했었다. 우병우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권력 내부의 모순이나 문제를 완화시키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게 이제 청와대의 아주 강경과에 의해서 사실상 오히려 조선일보가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 이걸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보수진영은 박근혜 정권을 그냥 두면 보수정권의 재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보수정치에서 박근혜 일당을 분리시켜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특히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폭로하는 일등공신으로 나섰다.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의 태도를 보자. 검찰은 맨처음 이 사건을 접수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1개월 정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가 JTBC, TV조선 이런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의 추이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3만 20만 100만으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여론이 급반전이 되었다. 검찰은 자신들이 스스로가 뭔가 이제 사고를 전환해서 정의를 세우겠다는 입장에서 출발했다기 보다는 아마 이것도 검찰의 존립하고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겠다는 생각, 즉 최소한 자기들이 해야 할 직무를 하지 않으면 이제 검찰의 위상이 훼손되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검찰의 태도가 바뀐 것이라 생각한다.

윤복남 아까 김준우 변호사 얘기 관련하여 한마디 드리고 싶다. 이번 사태가 87년 체제가 유효하게 작동함을 입증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국민의 힘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을 기존 법적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87년 체제가 이번 탄핵심판 과정을 통해서 시스템이 완비된 걸 입증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돌이켜 살펴보면, 사실 원래 촛불집회 초반에는 탄핵을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수적인 인적 구성인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했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이니 하는 제안이 나왔는데 어찌 되었건 국회의원들이 떠밀려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이후에는 헌재조차도 국민들에 의해 많이 떠밀려왔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결정문 자체에는 특검 관련 언급이 한마디도 없지만 특검수사나 최순실 재판에 관련하여 헌재재판관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뉴스를 보고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개헌이나 87년 체제의 극복과 같은 주제가 우리의 숙제로서 제시되는 것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태를 통해 87년 체제의 유효성이 보증되어 걸림돌이 된다는 식의 생각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후 의논되더라도 이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다.

김종보 이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박근혜가 너무 무능했다는 점이 아닌가 싶다. 박근혜 주변은 옛날부터 박근혜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워낙 인기 좋고 워낙 이용해먹기 좋으니 가지고 놀았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것 같다. 이미 2007년 이명박과의 한나라당 내부경선에서도 최태민 일가와와의 밀접한 관계를 다 알고 있었는데 쉬쉬했고, 김기춘, 최경환 이런 사람들이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는데도 쉬쉬했다. 결국 박근혜가 통제를 벗어나니까 조선일보가 나선 게 아닌가 싶다. 어쨌든 자가당착이 가장 크게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 같다. 또한 주체적으로 평가하면 저희 민변이 박근혜 정권 내내 줄기차게 싸워왔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믿는다.

백승헌 지금 말씀들을 정리해 보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구조적 요소와 계기적 요

소가 항상 작동을 하게 된다. 구조적 요소의 측면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 난맥사항들이 굉장히 누적되어 왔다. 보수 안에서도 그것을 감추거나 옹호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축적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심도 2016년 총선에서 일부 드러났지만,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민심은 내적으로 훨씬 더 이반되어 있었던 것이다. 계기적 요소의 측면에서, 이대 학사비리사건이 가지는 평등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지점이 감지되었다. 또한 태블릿PC 보도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릴 정도였다. 설마 이 정도였을 줄이야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계기적 요소들이 촉발을 하면서 민심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이 현재까지 이끌어 오는 데는 제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지만, 그 제도적인 것을 밑에서, 옆에서, 뒤에서 밀어붙이고 끌어올린 국민의 힘이 가장 큰 것이라고 본다.

25. 촛불집회의 의미와 과거 촛불집회와의 차이점

백승헌 촛불의 형태로 드러난 민심의 폭발 과정, 그리고 쉽게 지치지 않았던 민심의 꾸준한 확산을 따로 평가해 봐야 할 것이다. 촛불집회의 의미를 평가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촛불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촛불은 87년 이후에 국민의 민심을 전하는 저항의 방식으로 꽤 많이 활용되어 왔다. 어떤 경우는 성공했고 어떤 경우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번 케이스의 촛불의 의미 또 과거의 촛불과 무엇이 달랐던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보자.

백주선 이전에도 촛불집회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무엇보다 역할분담이 매우 잘 되었고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다. 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퇴진행동이 구성되어서 그쪽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잘 확보해 놓았고, 그동안은 청와대 근처도 못 갔었는데 적극적인 소송대응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가 입체적이고 그 사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도록 퇴진행동이 열심히 노력했다. 국민들도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화적으로 참여했다. 마치 축제처럼 온 가족이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하였던 것이 큰 힘이 되었다. 또한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SNS 활용이 큰 역할을 했다. 그전에도 카페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모임, 대학 동창모임 아니면 무슨 동아리모임 이런 것들이 SNS로 다시 재조직이 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활기차게 정보가 교류되고 실시간으로 집회의 내용, 장소, 역할 분담 등이 SNS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기에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더라도 자연스



롭게 정보가 습득되고,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고, 함께 참여한 그 경험을 나누고, 내가 이번에 못가면 다음 주에 가도 그 자리에서 충분히 어색하지 않게 참여할 수 있었다. 이처럼 SNS라는 공간이 잘 활용되었던 점이 과거의 촛불과는 다른 것 같다.

강문대 명망가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기획되거나 진행되지 않았던 점도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 같다. 실무 단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맡으면서 다양한 시민들이 집회의 주체 중 하나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상 말하는 민중단체와 시민단체의 협력과 공조가 원활하게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내부적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큰 마찰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또한 2008년 촛불투쟁의 경험이 남아있었던 것 같다. 그 때 성과도 있고 패배의 기억도 있는데, 2008년처럼 하면 안된다는 생각들이 백그라운드로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태에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고 절박했다. 어떤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크게 작용을 했고, 이러한 절박함이 퇴진행동이나 참가단체들을 견인하는 요인이 되었다. 집회를 기획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탁월했고, 시민들도 성실했다. 날씨도 받쳐준 것 아닌가 싶다. 이명박 때는 집회 한 번 하려면 비가 왔던 기억이 많이 난다.

권영국 “헌법 제1조가 현실화된 것이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촛불집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2000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올라간다. 그 때 이후 촛불집회의 경험들이 사실 축적되어 왔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월드컵 때 시청광장을 메웠던 젊은 활기가 일정 부분이 잠재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번에는 축제처럼 밝고 즐거운 분위기가 연출되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기존 민중단체 중심의 집회시위 분위기와 완전히 달랐다. 이 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14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위해 1년 동안 모은 게 크게 보면 13만인데, 이번에는 232만까지 갔다. 이것은 조직 동원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숫자였다. 결국 ‘주권자 의식이 폭발한 것’이고, 주권자 의식을 갖는 시민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재탄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자기 주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마비상태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공감했다.

그 다음으로 촛불집회가 경찰과의 충돌 없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비폭력이라

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숨어있는 부분, 즉 법원의 역할을 잘 봐야 할 것이다. 법원,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집회의 영역을 계속적으로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만약에 광화문광장 집회신고에 대해 법원이 예전과 똑같이 결정했다면, 과연 이정도로 촛불집회가 확대될 수 있었을까 의문스럽다. 법원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권력에 장악되었다가 이 사건에서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번에는 법원도 국민들들 국정농단의 심각성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다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분노와 공감대가 촛불집회의 확대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장식 이번 촛불집회가 과거 촛불집회와 다른 부분은, 첫째, 정치적 목표가 처음부터 ‘규탄’ ‘반대’ ‘개인의 안전’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퇴진’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제시되었다는 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집회가 거듭될수록 5만, 100만, 200만이 모여면서 대통령의 사과, 새누리당의 반성, 탄핵소추결의안 통과 등 정치적 효능감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즉, 처음부터 목표 자체가 정치적 집회였고 정치적 효능감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주권자라는 의식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은 기존의 사회운동과는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 예측된다.

두 번째, 촛불집회에서 어떤 목표나 슬로건을 정해 나감에 있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거나 딱 반 발짝 앞서나가는 수준으로 정해나갔던 점이다. 퇴진행동이 매우 잘 한 부분이다. 국민들이 요구한 슬로건에 딱딱 맞추어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화 측면에서 보면, 2008년만 해도 무슨 인터넷 삼국이니 뭐니 해서 카페 안에서 스스로를 막 조직화해서 나오기는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직화가 동창회, 동네모임 등 자기 생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기에 200만이 촛불집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슬로건과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를 조직화하는데 SNS의 힘이 굉장히 컸다. 너도 나가고 나도 나간다는 사실을 서로간의 SNS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최신 집합행동론에 보면 너도 집회 나가고, 나도 집회 나가고, 내가 집회 나가는 것을 너도 알고, 니가 집회 나가는 것을 나도 안다라고 하는 이런 공유지식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집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SNS를 통해서 그런 공유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크게 생겼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이번 촛불집회와 같이 정치적 효능감을 인식한 국민들이 향후의 사회운동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회운동이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권영국 이번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보면 ‘내가 나를 대표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의 집회는 수직적으로 조직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퇴진행동이 가장 잘했다고 보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공간을 열고, 슬로건도 대중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반 발짝 앞서나가는 정도의 수준에서, 또는 그대로 반영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수평적 네트워크를 존중했던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다. 결국 적어도 ‘자기를 대표한다’는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공간을 열었던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지점이다.

백승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해주셨다. 그런데 이런 점들이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하는 방식으로 이 의미가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촛불집회의 동력을 앞으로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의 정치가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 국민의 정치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촛불집회는 소위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제도화해 나가고 법의 제정이나 법의 운용 과정에서도 관철해 나가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정리될 것이다. 촛불은 민심의 바다였다. 하지만 바다는 있었는데 바다의 파도를 제도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26. 1차 검찰 수사

백승헌 탄핵사태는 크게 형사적인 부분과 현재의 탄핵심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검찰수사가 이어질 수 것이고, 또 특검이 될 수도 있기는 하다. 먼저 검찰수사의 의미와 한계, 특검의 성과를 이야기하고, 향후 1차 검찰수사가 끝나고 2차 특검이 끝난 3차 수사의 과정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이야기해보자.

먼저 검찰수사의 의미와 한계, 이것은 어찌 보면 이번 수사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드러났던 정윤희, 우병우, 기타 등등 까지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한 번 봐줬으면 좋겠다.

김종보 참여연대가 탄핵사태를 일자별로 정리해놓았다. 타임라인을 보니 9월 20일에 한겨레가 터트리면서 사태가 굉장히 급속도로 촉발되었는데, 9월 21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을 하였고 이때 형사8부 한웅재 검사한테 배정을 했다. 그런데 그 전인 2016년 6월에 기존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도

참여연대와 민변이 고발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무시당했다. 고발인 조사만 하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하였다. 어쨌든 검찰은 들끓는 민심을 계속 눈치보았고, 결국 특수본을 통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그런데 그 한계는 역시 이재용을 피의자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참고인으로 몰래 불러서 조사하고 돌려보냈을 뿐이다. 결국 특검에 이르러서야 이재용이 피의자로 정식으로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았다. 이런 걸 볼 때 검찰은 여전히 믿을 만한 곳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느꼈고 이런 점이 뚜렷한 한계가 아닌가 싶다.

윤복남 지금 와서 벌어진 일을 되짚어 보면,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를 피의자로 공소장에 썼다는 사실 자체가 검찰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어차피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계 내에서는 아무리 권력의 누수가 예상되는 집권 후반부라고 하더라도 직접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칭했다는 것은 거의 마지막 수단일 것이다. 물론 뒤집어 말하면 나머지 체제 부분, 정경유착이나 고질적인 문제는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지점에 아쉬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어야 할 것 같다.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다. 이미 검찰 특수본 1기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집을 하나 다 완성을 해냈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특검이 끼어들어 가지고 새로운 집을 제시했다. 이게 과연 향후 재판에서 매끄럽게 잘 연결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제 검찰은 기존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모순에 빠질 수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죄 프레임을 리모델링하여 뇌물죄로 고치는 일도 법리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러면 결국 특수본 2기도 선별적으로 수사하여 그냥 적당한 데까지만 치고 말지 않겠나하는 점이 걱정된다.

권영국 검찰수사의 성과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다. 비록 여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대단한 성과이다. 그러나 한계는 죽어가는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점에서 드러난다. 결국 가장 살아있는 권력인 재벌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프레임을 짜버렸고, 이걸 상당한 한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백승헌 검찰이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 미진했다 안했다는 문제 보다는, 이명



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왔다는 의심을 해 온 점에 더 주목해야 할 것 같다. 구체적으로 이번 국정농단의 두 가지 대표적인 사전 사건, 하나는 정윤희 문건 파동 사건에서 오히려 검찰은 제보자들을 역으로 수사하고 기소했고, 또 하나는 우병우 사건에서 우병우를 수사한다고는 했지만 역으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수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9월 말부터 검찰이 변했는가를 보면,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민심의 바다가 워낙 압도적이었다는 것, 또 하나는 구체적 폭로행위가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이 결국 검찰의 수사를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특검의 가능성이 분명해지면서부터 검찰의 수사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특검의 존재 자체가 검찰로 하여금 그나마 기본 수사를 하게 했고, 이는 특검의 구체적 성과에 앞서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7. 특검 수사, 기소

백승헌 이때까지 열일곱 번의 특검 중에 이번 특검의 성격과 지위는 매우 특수했고 성과도 특별했다. 향후 이런 유사한 또는 권력형 비리에 있어서 검찰이 미진했을 때 특검이 주요한 대안으로서 자리매김 한 것 같다. 특검의 구체적 개성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검 역시 상황과 제도의 산물이라고 볼 때, 이번 특검은 왜 성공을 할 수 있었는가, 왜 성과를 낼 수 있었는가 등을 검토해보면 좋겠다.

김준우 이번 특검의 특징 중 하나는 이 게이트를 깨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 특히 열정을 가진 젊은 법조인이 외부에서 참여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쨌든 특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활약은 추후 공수처 도입에 있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신장식 검찰수사가 특검으로 이어진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채동욱 마저 찍어내는 우병우 라인, 다른 하나는 검찰의 공식라인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윤석열 수사팀장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가 검찰총장하고도 직거래를 안 하고 자기 라인으로 직거래를 하는 그런 검찰의 무너진 상황 자체가 특검으로 이어졌고, 특검이 오히려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우병우 사단 라인에 대한 일정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히 성과 중 하나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결국 검찰이라는 자기 조직 내부의 논의라는 것, 검찰이 존재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수사 기소권 등의 검찰 권한을 여전히 검찰이 갖게 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한 것 같다. 사실 이 사건이 지나면서 공수처 이슈가 약간 물밑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 이 부분은 검찰이 피의자 박근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내적인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 방향, 즉 무엇을 수사할 것이고, 어디에 전력을 집중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했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문제에 있어 박영수 특검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못했습니다’라고 밝히게 되었다.

권영국 특검이 성공한 것은 결국 민심이라고 본다.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 성원이 엄청났다. 당초 박영수 특검의 개인 이력에 따라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우려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국민들의 엄청난 관심과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본다. 사실 개인적으로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검사를 파견요청하면서 수사팀장으로 지명하는 것으로 보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게 되었다. 되짚어 보면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국민들이 가장 요구했던 것이 바로 뇌물죄였는데, 특검 현판을 거는 날 바로 그 시간대에 뇌물죄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특검이 검찰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삼성 뇌물죄에 전력투구했던 것이 결국은 성공의 요인이 되었고 본다. 이번 특검이 아니었으면 아마 삼성과의 뇌물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특검의 또 하나의 성과는 블랙리스트 문제를 밝혀낸 것이다. 어떻게 보면 특검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역으로 보면 그들이 좀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에서 기억나는 장면 중 하나는, 특검이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말단 직원들의 전화기 휴대폰을 다 압수해가는 장면인데, 이걸 보면서 검찰의 의지에 따라서는 아무리 주요 인물들이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실제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검찰수사의 모범을 보여주는 수사였다고 평가한다.

또 다른 그들 중 하나는,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이 저지되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한 장면이다. 법원이 결정한 영장을 가지고 와서 또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자가당착이었다고 본다. 오히려 훨씬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원으로 책임을 떠넘겨 버린 것이다.

특검도 분명한 한계를 보였다. 우병우 라인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친정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을 매우 주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벌에 대한 수사도 삼성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나머지 재벌에 대한 수사를 거의 방기하다시피 했던 것이 아쉽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비선진료 문제, 세월호 관련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이재용이 구속된 것, 즉 삼성에 대한 신화가 깨진 것은 매우 큰 성과이다.

윤복남 다른 재벌과 차별해서 삼성만 수사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최종 수사결과를 두고 두 달가량의 수사기간에 그래도 SK나 롯데를 건드리기라도 했으면 좋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사하다 중단하면 아예 기소도 못하기에 제한된 수사기간에서 특검이 나름 선택과 집중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검을 위한 변명은 아니지만, 이런 면도 고려해야 적당한 평가가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 세월호 관련 수사는 특검법상 15가지 특검 수사대상에 명백하게 포함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 자체의 한계일 수 있다고 본다.

백주선 이번 특검 수사를 보면서 검사장 직선제가 의미 있는 검찰 개혁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즉 상층부라든지 외부의 압력을 막아주면서 수사경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검사를 적절하게 배정한다면 그 힘을 가지고 충분히 현직의 대통령이든 현직의 어떤 권력기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막거나 파헤치는 큰 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면에서 특검이 어떤 단초 내지 신뢰의 근거를 제공했다고 본다.

김도형 여러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특검의 성과는 분명 인정될만 하다. 사실 특검 무용론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번 박영수 특검을 거치면서 특검무용론이 제거되면서 향후 또 특검에 기대게 되는 것은 신중해야 될 것 같다.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탄핵국면이 지난 다음에 조금 더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신장식 지금 시점에서는 세월호와 우병우 검찰 수사가 양쪽에 다 진행되지 않은 내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다만 팩트로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다. 그래도 이런 지적들을 기억하면서 추후에 냉정하게 다시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즉, 단순히 시간의 한계나 내부적인 역량

의 한계로 평가하기 전에 꼼꼼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좋은 평가가 많은데, 이러한 평가가 더 센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까봐 주저되기도 한다. 사실 특검법 얘기를 하면서도 압수수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권력에 대해서는 더 세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검찰권이 자제되어야 하는데, 특히 강제수사권과 관련해서 더 센 검찰 이런 식의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향후 검찰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과제로 남는다.

백승헌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재벌과 검찰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삼성에 대해 뇌물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시킨 측면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부분은 기본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한계에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진척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특검은 수사의지가 있다면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검찰이 뒤늦게라도 수사에 박차를 가했던 것은 특검의 존재 때문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출범함 특검은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감시에 따라 검찰이 못한 것을 더 밝혀내야만 했다. 그런 의미에서 견제와 균형, 권한의 분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훨씬 깊어진 것이고, 검찰의 구도를 바꾸는 방법이 반드시 권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도 중요하고 제도도 역시 동시에 개혁되어야 한다.

28. 검찰 2기 특수본의 과제

백승헌 특검기간이 연장되어야 마땅했다. 수사의지가 더 큰 특검에게 맡겨졌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왔다. 더군다나 탄핵이 이루어진 후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다시 검찰로 돌아왔다. 검찰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수사가 되어야 될 이런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지 간단히 요약해 정리해보면 좋겠다.

김종보 모든 분들이 동의하셨듯이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더 진행되어야 하고, 남은 재벌들에 대한 수사, 우병우에 대한 수사, 기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미진한 부분이 수사되어야 할 것이다. 특검 수사결과에 비교적 잘 정리된 것 같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 볼 때, 검찰에



수사진행에 대한 언론브리핑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감시해낼 것인지 고민이 든다.

김준우 저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수사도 청와대 기록 압수수색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출입기록이라든가 누구를 별도로 대면 했는지 여부라든가 이런 기록들이 전부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면서 더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압수수색, 그 다음 피의자 신문조사, 그 다음이 구속, 이렇게 가서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줄속으로 가지도 않으면서 정확한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권영국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다. 첫번째로 주범과 범행 장소에 대한 수사가 없이 검찰수사가 마무리 된다면 이건 정말 몸통수사 안 하고 주변만 건드리는 것이다. 몸통은 결국 박근혜일 수밖에 없기에, 박근혜에 대한 정확한 수사는 범행 장소인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 등의 증거수집 절차가 될 것이다.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두 번째는 청와대의 공작정치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김영한 업무일지에 나타난 공작정치는 너무나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반드시 캐내야 할 제2의 게이트이다. 만약에 검찰이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박근혜로 한정해서 미봉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우병우 라인에 대해 칼을 대야 한다. 결국 검찰개혁과 관련된 우병우 라인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정확하게 봐야 할 것이다. 네 번째가 재벌에 대한 수사다. 결국 정경유착을 끊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수사일 수밖에 없는데, 특검의 수사 결과를 되돌리려 하거나 또는 다른 재벌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재벌에 대한 문제를 미봉하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도끼눈을 뜨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윤복남 네 개 과제 모두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일 어려운 게 특히 박근혜 수사인데 대선일정 때문에 조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수사는 검찰 내부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재벌 수사는 시늉은 하겠지만 제대로 마무리를 못한 채 종결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검찰도 권력 후반기에 조직 보존 차원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은 있으나, 검찰 2가 특수본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지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제2특검법이 답인지 고민이 되는데 제2특검을 어느 타이밍에 시작하고, 또 대선국면에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 발의가 과연 될 것인지

의문이 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급속하게 대선에 휩쓸리지 않을까 싶다. 지금 제시된 수사과제들에 대해 검찰이 적절한 수준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끝날 거 같은 우려가 있다.

권영국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적폐청산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방치하면 우리 사회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갈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이고, 현실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강문대 지금까지 논의된 향후 과제는 당연히 옳은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전체 일정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고, 민변의 대응책이나 법률적 대응책이 무조건 신속하게 하는 것만을 전제로 정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든다. 어쨌든 모든 수사가 원칙적으로는 빨리 하는 게 좋지만 과제를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동력을 꺼트리지만 않는다면 조금 템포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뀐 뒤에 수사를 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신장식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려고 하면서 실제로 많은 부분을 빼놓고 국민들의 감정만 해소할 수 있는 쇼를 하고, 실제 재판에서는 그냥 무기력하게 대응해서 결국 허무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의미에서는 박근혜 구속수사에 있어 구속사유가 있는지 의구심도 있다. 오늘 국정기록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 있다고 해석을 했는데, 황교안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하고, 세월호 7시간 문제와 관련해서 30년 동안 묶어버릴 것 같다. 지금 당장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 더군다나 도주의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구속했다가 그냥 날아가거나 또는 영장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좋은 건가, 향후에 박근혜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는 데 좋은 건가. 오히려 불구속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집요하게 꾸준히 수사하고, 법정에서 징역을 선고받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검찰이 지금 쇼를 할 것 같기에 오히려 차분하고 꼼꼼하게 우리가 과제를 차근차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 곧장 구속해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과제를 분명히 해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추구하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백승헌 이 부분은 특별검사와 검찰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특별검사는 선택과 집중을 했다. 그러나 검찰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검찰 2기 특수본은 철저하고 포괄적으로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삼성과 다른 재벌을 달리 처



리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부정이 된다.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 권력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의 검찰에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철저하고 평등한 수사를 통한 정의의 실현일 것이다. 결국 기본적으로는 드러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검찰조직 내부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포괄성과 철저함을 요구해야 하고, 정치권이나 민심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29. 형사재판

백승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윤복남 최순실 등 국정농단 재판에 관련하여 정보를 정리해 보니 최초 검찰이 기소한 것은 3건이고, 특검이 추가기소한 것이 8건이다. 총 11건의 관련 재판이 있다. 우리가 모니터링한 재판은 그 중 최순실 재판, 즉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3명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20회 가량 모니터링했다. 나머지 차은택 관련한 포레카 강요미수 사건은 피고인이 5명인데 이것은 일종의 파생사건이다. 장시호 재판은 역량상 부담으로 모니터링에서 제외했다. 그 이후에 추가로 기소된 사건들은 언론을 통해 본 정도다. 이재용, 김기춘, 이대비리 사건이다 특검 기소한 사건이다. 지금 와서 살펴보면 공판대응팀의 활동 범위는 전체 사건에 비해 상당히 협소하다. 대신 이러한 형사재판에서의 쟁점은 탄핵심판에서 모두 나온다. 즉 탄핵심판에서 문제된 공무상 비밀누설, 2개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출연금을 권한남용으로 모금한 행위, KD코퍼레이션 소개건이나, KT, 현대자동차 등을 통한 개별적인 특혜조치 등 탄핵심판에서 파면의 근거가 되었던 사안들은 위 형사재판에서 다 나오는 쟁점들이다.

재판 진행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므로 생략한다. 지난 주까지 28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검찰측 증인신문은 4월 초까지도 예정되어 있는 것 같다. 약 40명 정도가 신청된 증인인 것으로 보인다. 40명 가량의 증인신문을 마치면 재판은 마무리될 것이다. 그러나 특검에서 최순실에 대해 뇌물죄와 업무방해 신건을 기소해서 같은 재판부에서 병행심리가 시작되었다.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까지 포함된다면, 얼마만큼 길어질지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2개의 만기가 있다. 하나는 1심 재판의 만기로서 기소 후 6개월이기 때문에 6월 초가 최순실 구속만기다. 다른 하나는 특검법상의 재판기간 3개월의 만기인데, 5월 28일이다. 따라서 5월 28일까지는 추가기소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박근혜의 기소 시점에 따라서 사건 병합 여부는 달라질 것이다. 지난 주 신문기사에 따르면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뇌물죄 관련 공소장 정리

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적 청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검찰 2기 특수본의 활동 개시와 더불어 기존 검찰의 공소유지 태도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 특검과 검찰이 협의해서 사건을 같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법리적인 논쟁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강요죄에서의 강요 인정여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논쟁이 향후 예상된다. 한편, 뇌물죄 관련하여 추가로 고려할 점은 특수본이 재벌수사를 하면서 SK나 롯데 등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이 쪼개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예전에 우려했던 삼성 관련 사건은 뇌물죄로 병행심리가 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SK나 롯데에 대한 수사가 늦어질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늦어도 5월말까지 기소를 해야 하고, 만약 그 이후가 되면 1심 판결 이후라서 다시 뇌물죄로 기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공소유지와 관련성을 수사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검찰은 최순실의 직권남용과 뇌물죄의 관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특검의 추가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1개의 행위로 보아서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백승헌 김기춘, 조운선의 예술계 블랙리스트 건, 이대 정유라 학사비리 관련 건 역시 재판에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쟁점을 정리 하고, 향후 쟁점이나 남겨야 할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김기춘 건에 대해서는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작성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조운선은 잘못되었으나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무죄 변론을 하고 있다. 같은 무죄주장을 하더라도, 그 쟁점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나. 소위 법꾸라지라고 하는 김기춘은 이 행위 자체가 일종의 재량 범위 내이고,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논리에 대해서 지적해주길 바란다.

권영국 블랙리스트를 만든 의도나 기준이 실적과 같은 명확한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런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용적인 기준 없이 단순히 비판적이거나, 반대편 캠프에 참여했다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했거나, 이러한 사유로 분류가 이루어졌고 명단이 만들어진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매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예술가들을 일축시키고 배제하기 위해서 명단이 만들어 졌다는 것이 명확하다. 김기춘 측은 여러 가지 논리 주장을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백승헌 합법적인 행위이면 왜 비밀스럽게 이루어졌는가, 구체적 행위 실행자들인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이 모두 불법성을 인정하고 심지어 문체부 이름으로 사과까지 한 점에 대해서는 법감정상 틀림없이 처벌돼야 할 것 같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재량권도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구체적인 관여정도는 우리가 수사기록 전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남근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다. “성향파악을 위해서 그런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어느 정권이나 하는 일이다 그게 뭐가 문제냐”,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이나 혜택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 파악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다. 만약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이나 혜택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임이 입증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적 쟁점이 거의 없을 것 같다.

권영국 부당노동행위 사례에서 보면, 직원이나 노동자들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직원들을 성향별로 분류해 놓고 이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따질 때 회사측은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분류만 해놓았다”고 발뺌을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줬느냐이다. 여기에 따라서 보통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여기에 기반한 실행행위 등이 산재해 있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것에 비추어 보면 리스트에 기재된 모든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그러한 불이익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신장식 2008년에 미국산쇠고기 파동 지적 단체 4천개 가량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안준 사례가 있다. 그 당시 당연히 줄 수 있는 보조금을 안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다. 만약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행정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직권남용이 성립 될 여지도 있다고 본다.

김준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정치적 지향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가 있다. 법리적으로 다소 적용범위나 쉼이 다를 수 있겠지만 블랙리스트 건의 불법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백승헌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노동법이나 행정법에 이런 것들

이 하나의 위법한 근거가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행정법 노동법 상의 법리와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주위적이나 예비적이나에 대한 쟁점이 있지만, 재벌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해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삼성 이하 특혜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재벌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뇌물죄 기소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된 의견은 어떤가.

윤복남 신문기사에 따르면 삼성 쪽 변호인은 절차위반, 특검 자체의 합법적인 구성 여부 등 온갖 쟁점들을 다 짚었다. 뇌물죄 본안사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일종의 초반 기싸움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외였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이의를 제기하나 할 정도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삼성 쪽이 치열하게 법률적 주장을 하는 것을 보이고,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다.

백승헌 현재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박근혜 문제하고도 통한다.

윤복남 삼성 공소장에 대해 하나만 덧붙이면 보통의 뇌물죄는 대가관계가 명확한 반면, 이번 건은 대가관계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대규모 박탈 형태로 진행된 것을 기소한 것이어서 기존 판례와 비교해 보면 입증 난이도가 꽤 높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리서치도 하고, 잘 살펴봐야 한다.

김남근 삼성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점은 처음에 영장청구를 할 때에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지원을 했느냐가 그것과의 대가성, 관련성에 대해서 했는데 그 하나의 단일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처음 삼성이 최순실을 지원한 시기는 굉장히 앞서있고, 국민연금이 지원한 건은 그 때 시점은 시차가 있다 보니까 대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특검이 방향을 정하면서 삼성이 경영권 승계 전반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면서 돈을 냈다고 하면 앞뒤가 맞는다.

신장식 직권남용의 피해자라는 것이 원래 검찰의 공소사실이고 지금은 뇌물죄 공범이라고 하면 양립가능하다고 본다.



백승헌 포괄적 뇌물과 대가관계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변에서도 후속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면 모니터와 법률적인 견해를 제공하는 준비도 필요하다.

신장식 홍라희의 전격적인 사퇴 등을 봤을 때, 여전히 이재용은 자신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승헌 앞으로 재벌에 대한 수사가 된다면 지금 일부 재벌이 추가 기소가 되더라도 전체 금액 부분의 주위적 예비적 관계도 나뉘져 있다. 재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권남용만 적용되고 있다.

김준우 줬던 돈을 돌려받은 회사들은 뇌물이 안먹혀서 미안하다 라는 의미로 돌려받은 것이다. 오히려 대가관계를 기대한 고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액수가 다소 적었거나 민원이 없었던 기업들은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권영국 독대를 하면 면담자료를 만든다. 우리가 아직 독대할 때 만든 면담자료를 확인해 보지 못했다. 박근혜는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면담을 했을 것이다. 우선은 실제로 몇 개의 재벌들이 면담을 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독대하는 시기가 다른데 실제로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가관계가 불분명한 뇌물죄보다 이번 것이 더 죄질이 나쁘다. 이번 일은 정경유착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다. 검찰은 구조적인 정경유착이 이뤄지는 내막을 파악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몇몇 재벌을 단발적으로 처벌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백승헌 재벌들마다 혐의와 입증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재벌 별로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김남근 재벌들 전부를 수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몇 개 재벌을 특정해서 해야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권영국 출연금 자체가 뇌물이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재벌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것을 정경유착의 구조적인 폐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단순히 기업과의 관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옹호하면 안된다.

김남근 정경유착을 근절하자는 주장은 다른 문제라고 본다. 검찰에게 정경유착까지 근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백승헌 5개의 재벌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드러났다. 여기에 대해 재벌을 피해자가 아닌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 과제가 있다. 또 권영국 변호사의 말을 종합해 보면, 전경련의 매개행위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뇌물죄의 공범으로 전경련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박근혜에 대한 기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최순실의 공소사실과 상당부분이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의 입을 통한 입증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상태이고,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속문제도 국민들의 관심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 달라.

백주선 그 동안 수사를 회피한 전력으로 봤을 때 박근혜가 구속될 확률은 80%가 넘는다고 본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형사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던 내용이 형사사건에서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고,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될 것이다.

강문대 박근혜에 대해서도 뇌물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청구할지는 잘 모르겠다.

백승헌 국민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이라는 특권 뒤에 숨어서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에서 파면이 된 이후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에 상당수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신병이 그렇게 핵심적인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일부 걱정이나 소수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서 의견 말해 달라.

김준우 저는 구속수사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된다. 박근혜가 묵비권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보여서 즉시 구속한다고 하여도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묵비를 계속 한다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여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백승헌 수사회피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하나는 자료제출을 안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소극적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수사, 기소된 것은 극히 일부이다. 더 많은 부분이 추가로 발견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아까 말한 우선관계에 대해서는, 권력에 대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나 파면돼서 국정에 관여할 수 없는 전 권력자에 대해서는 신속함 보다는 철저함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권영국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박근혜가 주범이기 때문에 공모자들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만 구속이 안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실체를 파헤치려고 하는지 그 의지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은 수사초기의 정보수집방법이고, 지금 과정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논리로 수사권을 스스로 제한하면 안 될 것이다.

신장식 지금 나와 있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정농단의 범위를 드러내는 것이다. 혐의를 입증하는 것과 국정농단의 범위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인신구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백승헌 권한대행이 기록물을 못 보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정할 기록물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김남근 검찰 수사는 기소를 위한 것이다. 수사로 밝히는 진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상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윤복남 차기 정권에서 할 일과 지금 시기에 할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선을 앞둔 지금 시기에 적폐청산을 완전히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온 국민이 나서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차기정부에나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밝힌 수사방침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대선에 영향력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인데, 이 점이 마음에 걸린다. 수사 및 기소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4월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 전에 국민들에게 쇼하듯 일정하게 맞보기로 보여주고 적절한 시점에서 멈추는 장면이 분명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헌 이런 복잡한 시기에 복잡한 정치적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비정치적인 것이다. 어떤 형태든 간에 정치적으로 고려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30. 탄핵심판

백승헌 탄핵심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사건이 터진 후부터 시민들의 요구는 즉각 퇴진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탄핵 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과 대리인들의 태도, 현재의 모습 등등은 우리가 우리 사회의 헌법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했다. 탄핵은 인용되었으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 가장 반헌법적인 국정 농단사태를 과거와 달리 기존의 규범체계 내에서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탄핵과정은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초의 퇴진 운동부터 탄핵 결정의 여운이 남아있는 지금까지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야기해보자.

권영국 처음 퇴진행동 내부에서는 국회나 헌재 등 국가기관에 무언가를 맡기는 것에 대해 큰 거부감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퇴진 요구로 의견이 모아졌고,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전체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논란이 심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야당 지도부를 면담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두 야당 대표가 자기들은 확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소추를 한 주 유보했다. 논란 속에서 국민들 232만이 광장에 나왔고, 이 힘이 결국은 국회를 압도적으로 의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을 잠재우고 탄핵을 인용시킨 것도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열망들이었다. 국회부터 헌재까지 탄핵을 이끌어낸 것은 국회의원들과 헌법재판관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이것이 국민주권주의를 실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신장식 국민들이 광장에 나온 것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것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인가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나를 잘 대리하라’라는 요구 외에 집단적인 정치적 요구는 사실상 없었다고 본다. 보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절제를 잘 했고 위대하다’고 볼 수도 있고, ‘현재의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볼 수도 있다. 향후 우리가 광장에 나온 사람들과 정치적인 고민을 할 때 자기 뜻만을 관철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을 것이다.

김남근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만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번 촛불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가 잘 결합된 사례라고 생각한다. 대의제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직접민주주의가 국민들의 뜻을 이끌어 나갔다.

신장식 사회운동이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그 지점인 것 같다. 광장의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것이 사회운동이 집중적으로 추구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또한 광장이 아니라 골목골목까지 직접적인 정치적 의사표출이 대의민주주의에 잘 어우러 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영국 주의 깊게 봐야 할 두 가지 부분이 있다. 하나는 절차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주체의 문제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가 잘 결합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먼저 이 행동들이 철저하게 제도 내에서 이루어졌다. 집회 신고를 통해서 법원의 집회 허용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 졌고, 소소하게 벗어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켜졌다. 적어도 제도와 절차 내에서 촛불 행동이 쫓 관철되어 왔는데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남는다. 광장에 수백만이 모여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힘만 가지고도 정치권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직접적으로 권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향후에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제도권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주체의 문제다. 이번에는 퇴진행동이라는 각종 사회단체의 모임이 공간을 열고, 실제로 모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드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향후를 보면 정치적 단체와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시민사회 쪽의 주체 형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백승헌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의 양 날개로 난다. 그리고 그것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번에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가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다. 헌재 역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헌재 구성의 다양성, 민주성 보장 방안 등도 앞으로의 헌법 개정 과정 등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것이 희귀한 사례이다 보니 대통령 직무대행의 과정이나,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 등 법적으로 미비한 점들이 있다. 일반적이지 않은 권력 이양과정에 있어서의 제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세범 주체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번 촛불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성공시킨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대선국면으로 넘어가는 이 때에, 주체가 대선후보들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끝까지 주체로 서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 고민이 있다. 직장과 생활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면 훌륭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민변은 전문성을 갖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조직과 풀뿌리 민주주의 육성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

신장식 촛불국면과 탄핵심판 국면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이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단초가 열린 것으로 본다. 그 일환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어떻게 나를 대리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를 대리해 줄 수 있는 행정, 사법의 시스템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준우 백승욱 교수의 2008년 촛불에 대한 평가 중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다. “촛불이 축제였지 해방이었나? 촛불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끝이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려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무언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나 구호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촛불은 비록 이전과 달리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남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다.

어쨌든 보수가 계획하고 있던 거국중립내각→개헌→재집권이라는 시나리오가 격퇴되었다는 점에서는 촛불이 이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촛불국면에서 제시한 과제들이 정치권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그리고 삶이 바뀌려면 법도 바뀌어야 하는데 어떤 법을 어떻게 바꿀지에 관해서 합의가 명료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부디 촛불로 생겨난 가능성들이 다음 정부의 헛발질로 무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31. 탄핵국면에서 민변의 역할에 대한 평가



백승헌 민변의 역할에 대해 평가해보자.

오세범 민변 퇴진특위에서 시시각각 성명서를 내는 것에 굉장히 놀랐다. 이것이 민변의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싶다. 또한 이번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집회금지를 취소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함으로써 결국 이재용을 구속하게 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김남근 직접민주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변호사들의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집회가 계속 불법이라고 공격당하는 상황 속에서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집회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국면이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흘러가는 것이어서 민변이 문제제기를 하고, 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본 사안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강문대 민변이 국민들의 신뢰를 가지고 적시에 선도적인 역할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점은 운동이 체도로, 생활로 스며들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운동진영에는 아직도 수렴하는 것을 거부하고, 혁명적으로 발산해야 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방향이 제도권으로, 생활로 수렴되지 않으면 체계화된 사회에서는 의미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법률가들은 그 쪽에 초점을 맞춰서 수렴해 나가는 쪽으로 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영국 헌법적·법률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탁월하게 잘 수행했다. 또한 반대쪽의 무리하고 엉뚱한 법 논리를 내왔을 때 이것에 대한 반박도 잘 해낸 것들이 운동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나아 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논란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남근 민변의 역할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일단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법률가로서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요구는 여기까지가 아니라고 본다. 그 다음으로 재벌주도의 경제체제 개혁 등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것들은 탄핵으로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제도개혁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 외에 많은 개혁들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 부분까지 법

를가들이 놓치지 않고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준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점과 숙고할 쟁점이 나뉠 것 같다. 대체적인 평가는 내용적으로 민변이 잘했다는 것이다. 민변 퇴진특위는 전문가단체로서 법리적 검토 등을 충실히 하면서 시민사회운동의 원군이 되었고 언론에도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해 줬다. 또 국회에도 민변 특위가 기여한 것도 있다. 어느 정도 압박이나 필요한 콘텐츠를 가져다 주면서 탄핵소추가 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 같다. 최근에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으로 활동하신 탁경국 변호사님이 탄핵소추 나와서 얘기하신 것이, 세월호 관련해서는 검찰이나 특검에서 별도로 받아볼 수 있는 기록이나 자료가 많이 없었는데 민변이 그동안 꾸준히 축적해온 자료들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의 경우 실제로 우리가 제시한 법률 의견서 등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궁금하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제출한 자료에게 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그냥 운동의 당위적 정언 명제를 법률적 문서로 만들어낸 정도로만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언젠가는 특검에 있었던 분들의 말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동적으로 지금 강문대 변호사님과 권영국 변호사님이 완전 다른 얘기를 해주신 것도 같다. 강문대 변호사님은 법의 지배가 확산되는 것이 법률가의 의무고, 그러면 사회운동의 과제에 있어서도 법의 지배를 기피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률가 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으로 보이고, 권영국 변호사님은 퇴진행동 법률팀 활동에서도 드러나듯이 다소의 선도적인 투쟁의 영역까지 법률가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두 의견이 대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둘다 숙고해야 할 중요한 쟁점인 것 같다.

윤복남 이번에 최순실 공판 모니터링을 하는 도중 팀원들과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았는데 모두 힘들어 했다. 막상 현안대응을 하면서 제도개선의 큰 축을 짚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사실 이번 민변 퇴진특위의 대응은 수사대응, 공판대응 등 모두 단기 대응이었다. 따라서 제도개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지금부터의 주요과제일 수 있다. 우리가 이걸 게을리 해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앞서 권변호사님 의견에 대해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가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우리가 멈췄던 지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나 힘을 얻을 때 도움이 될 때도 있었다. 아쉬움도 있지만, 그 때 여러 분들이 의논하



여 멈춘 것이 합리적 다수가 합의한 어느 선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백승헌 특위 활동을 되돌아보면 신속했다는 것과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활동을 해온 것이 자랑스럽다. 시민 개인으로서의 역할과 전문가로서의 역할 중 어느 것이 앞선 것인가는 항상 고민이 되어온 문제이다. 이것은 민변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적절히 이견을 조정하면서 민변이 할 수 없는 일은 변호사 전체의 이름으로 또는 퇴진행동 또는 개별 변호사의 이름으로 해왔던 다른 방식이 앞으로 조금 더 민변의 성장에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백주선 적폐청산이 참 어려운 말이다. 경제적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폐 청산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행의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부와 권력, 기회가 편중되는 것을 시정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대의제민주주의에서 느낀 갈등과 한계를 오롯이 다 표현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주요 사안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박정만 적폐청산이라고 할 때 무엇을 적폐로 볼지 10대 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실현 가능한 과제를 정리해야 한다. 사람마다, 운동 단위마다 그 과제들이 다를 텐데 그것들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촛불 동력의 유지 방안과 관련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는 형국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편이다. 전문 정치인에게 일을 맡기고,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을 소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촛불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촛불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김성진 이번 게이트의 핵심은 재벌들이 울고 싶은데 최순실과 박근혜가 뺨을 때려준 격이다. 재벌들이 돈으로 정치권력을 사고 싶은데 정말로 싸게 정치권력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구조를 보면 재벌들을 봐주는 정치권력이 지금까지 핵심이었다. 재벌들이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권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상화 시키는 데에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벌들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경제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작은 재벌들에 대한 형사처벌이고, 궁극적으로는 재벌들의 과도한 지배력을 정상화해야 한다. 적폐 중의 적폐는 재벌들을 비대화이고, 그것을 정상화 하는 것이 적폐 청산이라고 생각한다.

신장식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는데 100만명이 모이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식의 방법은 해답이 아니라고 본다. 직접민주주의는 중요하지만 심의, 숙의 없는 쪽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오해라고 본다. 심의와 숙의가 빠진 채로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적폐청산이 자칫하면 허수아비와 싸우는 꼴이 될 우려도 있다.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위한 싸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유주의, 법치주의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불평등이다. 이 두 가지로 미래를 위한 적폐청산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윤복남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은 왜 제도개선 논의로 잘 안 나오는지 의문이다. 이번 국정농단의 문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보충의견과 같이 의원내각제 같은 제도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 이외에도,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과다한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즉 감사원, 검찰총장 임명 등 감시권력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의 제도개선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문화에 관련해서도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이사회 의결을 대안으로 의논하기도 하는데, 포스코의 경우 재단법인 출연시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따라서 좀 더 치열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번에 문체부의 내부고발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조치라고 보아지면서도 더 나은 제도적 대안이 무엇인지 차분히 살펴보면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김남근 적폐청산을 많이 간과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차기정권이 적폐청산만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차기정권의 수행 과제에 의문을 가질 것이다. 국민들은 적폐청산을 바라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바라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활동에만 매진해서는 안 된다. 민변도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사회 개혁에 대한 것들을 같이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적폐청산의 가장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은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적폐청산의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백승헌 지금 우리사회는 선거때만 민주주의에서 항상 민주주의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대의민주제 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제 또한 발전을 시켜야 한다. 또한 기업문화와 공무원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항시적 과제이다. 항시적 과제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간의 과정을 통해 책임감도 같이 느꼈다. 이런 것들을 민변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 활동에도 반영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권영국 일상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하다는 것에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주장을 견지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일상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주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김준우 적법행정을 안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수록 민변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진다. 그러나 다가오는 한반도 위기나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법률가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미래에 준비를 해 놓지 않는다면 민변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정책개혁과제는 굉장히 많지만 이것들을 대중화 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것을 민변이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32. 퇴진특위 활동에 대한 소회

백승헌 민변 퇴진특위에 대한 소회에 대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김도희 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일이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지나고 보니, 정말 색깔과 매력과 개성이 다른 선배변호사님들로부터 단시간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나는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하려고 왔는데, 4개월을 지나고 보니 오히려 내가 그 동안 도전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고 성장했던 것 같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좌 중 생일축하한다. (일동 박수)

윤복남 11월 초에 열린 민변 비상시국회의에 해외출장 중이라 나오지 못했는데, 이후 퇴진특위 활동을 보면서 성명서가 이렇게도 빨리 나오나 싶었다. 아까 모자이크란 말이 나왔는데, 아주 좋아하는 말이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 개인이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특검이나 탄핵대리인으로 참여할 기회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 것 같다.

바깥 진지에서 지속적으로 살피는 역할이 없었다면, 안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할 수 있었을까 싶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용적으로 더 기여하는 것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위원장님 말씀 중 사람이 남는다는 말씀이 가슴이 와 닿는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활동했던 것, 10여년 이상 민변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민변과 이 국면에서 만난 것이 너무 뿌듯하고 좋다. 변호사 운동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시기만큼 변호사 운동이 빛을 발할 수 있나 싶다. 그래서 87년 체제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직은 선부르지 않나 싶다. 불꽃처럼 몇 달을 산 것이 자랑스럽다. 지금은 마무리하지만 이번 활동을 하면서 맺은 끈끈한 정과 유대감이 나중에 또 큰 힘이 될 것이다. 추후 개인적으로는 적폐청산보다는 희망을 만드는 일, 예컨대 화두 중 하나로 직접민주주의, 정치개혁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일에 더 힘을 쏟고 싶다.

김종보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친다. 김남근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고발장 작성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번 국면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이르렀다. 우리 모임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인데, 부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내는 모든 과정이 더 많은, 더 높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일 것이다. 우리 특위는 단기적으로 박근혜로 표상되는 구악을 퇴출시키는데 집중하였는데, 그 이후의 일은 민변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할 것 같다. 그 일원 중 한 명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제가 드디어 10만원 회원이 되었는데,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모시고 함께 운동한다는 것이 행복하고, 수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어떻게든 조화를 이루어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 민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매우 급진적이어서 탄핵이 아닌 방법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탄핵이란 적법 절차를 통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해진 것이라는 견해도 존중한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고 싱크탱크로서의 민변이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작은 힘을 보태겠다.

박정만 오더를 열심히 수행했을 뿐이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이 아니라 신화라는 말이 있다. 거짓된 신화를 걷어내는데 역할을 하신 많은 변호사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영광이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고, 앞으로의 과제이다. 신상에 변동이 있지만, 주어진 의제에 열심히 참여하겠다.

윤복남 여담 하나만 하겠다. 탄핵소추의견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그 때 원래 3일 안에 쓰기로 한 일정이었었는데, 갑자기 김남근 변호사님이 하루 안에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 때는 밤새면서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맞았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김남근 오더라기 보다는 결의를 모아서 한 것이다.

오세범 앞으로 민변의 할 일로서 개헌특위를 만들면 좋겠다. 새로운 국가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또한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복과 기쁨이다. 너무 행복하고 기뻐다.

신장식 퇴진특위 시민참여팀에서 활동하면서 변호사로서 기여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 향후 민변이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한 것이 아닐까 싶다. 영장 기각시 즉각 천막을 치는 민변과, 밤새 의견서를 쓰는 민변. 이것이 분화·발전되어야 할 것인지, 모자이크처럼 따로 또 같이 민변이라는 한 울타리에서 나가야 할 것인지, 실천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든다. 지금까지는 퇴진특위에서 종합적으로 선배님들께서 잘 조정해주시면서 활동하였는데 향후의 활동 방식으로서의 고민이다. 또 하나는 정권교체의 시점에서 민변이 권력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은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실질적 변화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으로는 원칙적인 자세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추동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 이는 아까 말한 민변의 실천방식과 결부되는 고민이기도 하다. 얼마 안 되면 닥칠 고민일 것 같다.

김성진 감회가 깊다. 특검도 우리가 제시한 의견을 많이 동조했다. 민변이 나침반 역할, 등대 역할을 했다. 우리의 역량이 모인 결과이고, 보람을 느낀다. 고맙고 민변의 회원인 것이 자랑스럽다.

백주선 사실 퇴진특위에 들어가기에 시간과 역량이 부족했는데, 사무처 차원에서 총장님과 함께 활동할 것을 결의했다. 위원장님부터 후배 변호사님들까지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모여 비상하고 역사적인 국면에서 역량을 발휘한 것을 볼 수 있어 기뻐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요즘 아들이 아빠가 사극을 본다고 나이 먹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역사 현장에 있을 수 있어 좋았다. 이번 탄핵은 전세계적인 혁명의 역사에서 독특한 지위를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거리를 주는 것 같다.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을 회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기쁘다.

김준우 퇴진특위에서 많은 것은 못했지만, 그나마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과

교감하고 호흡하는 임무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어쩌면 민변처럼 사회운동에서 2008년 이후에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 조직도 잘 없을 것 같다. 오히려 큰 굴곡 없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이례적인 것 같다. 웃으면서 좋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잘 할수록 민변에 대해서 그릇을 더 넓히려는 내외적 요구와 민변의 그릇이 넓어지는 것이 운동 전반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의 긴장사이에서 고민도 든다. 한 편 새롭게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종전에 정부와 민변이 맺는 관계가 이전과는 또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도 든다. 어쨌든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었다.

유정찬 큰 일을 처음하다 보니 능숙하지 못했다. 보석 광맥을 만난 것 같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 뿔내지도 않고 과하게 빛나지도 않으면서 서로 어울리면서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평생 보지 못한 장관을 본 것 같다.

백승현 유정찬 간사가 이제야 민변을 알게 된 것 같다. 제가 알고 있는 민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국사회와 헌법에 대해 세계 최고의 권위기관이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우주 유일의 기관이다.

유정찬 마무리를 짧게 하겠다. 더 나은 세상에서 각자의 빛이 더 아름답게 빛날 거라고 생각한다.

이현아 고생 많으셨다. 사실 특위 변호사님들 볼 때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특위에 진짜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 텔레그램방을 보면 잘 몰랐던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집회현장에서도 많이 뵈었고, 열정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에 감명 받았다. 올해 모범위원회 상은 특위가 받겠구나 싶었다. 너무 고생 많으셨다. 언제 어디서든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 주말 쉬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

오세범 말을 많이 안 해도 느낌이 있다. 이현아 간사님을 볼 때 보석같은 단단한 느낌을 느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유정찬 간사님을 처음 봤지만, 참 사람이 묵직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

김남근 민변의 저력이 이런데 있구나 느꼈다. 앞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 활동을 이끌어 가고, 뒤에 계신 분들이 앞서 가신 분들을 많이 응원하고 지지하는 조직인 것 같다. 격변기에는 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우려를 많이 했다. 그런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앞서 나가신 분들도 뒤에 있는 회원분들을 생각하고, 뒤에 계신 분들도 앞의 분들을 우려하면서 민변이 세



상을 바꾸는데 기여를 하는 점에서 응원하는 모습이 잘 어우러져 아름다웠던 것 같다. 갈등과 대립의 우려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이 다른 단체에도 모범이 되고, 하나의 기풍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강문대 자긍심과 자괴감을 느꼈다. 탄핵을 이끌어내는 집행부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이 생긴다. 다른 한편으로 큰 일에 앞서 내가 부족하다는 점도 많이 느꼈다. 전체 그림을 보면서 후배들과 함께 사태를 해결하는 돌파력이 놀라웠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사태에 대한 통찰력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총장으로서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보다 역량을 집중시키겠다.

백승헌 내가 회장할 때의 기억이 난다. FTA, 삼성특검, 정권상실, 촛불. 이런 사건들이 내 임기 때 일어난 일이다. 정권을 잃은 남편 회장에서 정권을 되찾는 부인 회장이면 좋겠다는 농담도 했다. 하지만 민변 30여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때는 노무현 정권 1, 2년차였던 것 같다. 나중에 가면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힘들었다. 부안 방폐장, 이라크 파병. 탄압보다 힘든 것은 유혹이다. 그럴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고 걱정이 있다. 다른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깡그리치가 선거를 치르면서 내세운 모토가 “미국과의 계약”이었다. “우리는 미국과 계약을 한 것이다, 미국을 바꾸겠다. 보수혁명이다” 이런 이야기다. 법률적인 이야기다. 사실 법률은 보수의 무기인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과 계약을 맺은 것 같다. 깡그리치가 선거에서 이기고 200여개의 법안을 냈다. 이게 미국과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도 적폐청산과 새로운 사회를 위해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개혁이라는 것이 원론적인 것이 되기 쉬운데, 실제로 가능한 만큼 만들어내는 역량이나 책무가 주어진 것이다. 저도 정말 많이 배웠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

- 끝 -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 위원회

5. 사진



- 2016. 11. 2. 민변 비상 시국모임



- 2016. 11. 11.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



- 2016. 11. 26.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



- 2016. 11. 26.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결의문 낭독



- 2016. 11. 26. 제 5차 촛불집회,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집회



- 2016. 11. 26. 제 5차 촛불집회



- 2016. 12. 8.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법조계 사찰 관련 내용 분석 공개 기자회견



- 2017. 1. 20. 세월호 1000일



- 2017. 1. 20.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



- 2017. 1. 21. 민변 탄핵버스킹



- 2017. 1. 21. 민변 탄핵버스킹



- 2017. 1. 21. 민변 탄핵버스킹



- 2017. 1. 21. 제 13차 촛불집회



- 2017. 1. 21. 제 13차 촛불집회



— 2017. 1. 23. 이재용 영장기각 이후 특검수사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 2017. 1. 31. 이런 변이 있나 특집 이재정, 박주민, 이광철 출연



- 2017. 2. 4. 이재용 구속 촉구 집회



- 2017. 2. 21. 재벌총수 고발장 특검 접수 공동기자회견



- 2017. 3. 10. 탄핵인용 결정



- 2017. 3. 11. 제 20차 촛불집회 집회 모금 자원봉사



- 2017. 3. 11. 제 20차 촛불집회



- 2017. 3. 14. 탄핵스트 파이널 공개방송



- 2017. 3. 17. 마무리 좌담회



- 2017. 3. 20. 특위 해산 뒤풀이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 위원회

6. 타임라인

날 짜	정 국	민 변	시민사회
2016년			
9. 20.	*한겨레, 미르,K스포츠 재단 단독 보도	* '미르팀' 구성. 정경유착 의혹에 따라 뇌물 및 배임 등으로 형사고 발 준비. 자료입수를 위해 국회와 협조 시작	
9. 29.			*투기자본감시센터, 안중범, 최순실, 재벌총수 등 뇌물 및 배임 고발
10. 5.	*서울중앙지검, 형사고 발건 형사8부 배당		
10.18.	*경향신문.최순실의유령 회사비밀에대한의혹제 기		
10.19.	*jtbc. 최순실이 대통 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하고 수정했다고 보도		
10.24.	*박근혜.개헌연설 *jtbc.태블릿pc보도		
10.25.	*박근혜.1차대국민사과. *jtbc,드레스덴연설문사 전유출폭로		
10.26.	*여야최순실게이트특검 총론합의 *검찰,이승철,최순실,차 은택자택등압수수색		*이화여대, 부산대, 건국대, 한성대 시국선언.
10.27.	*세계일보.최순실과의단 독인터뷰공개. *롯데그룹이최순실에게 115억원전달한정황드러 남. *장시호1년사이정부로 부터6억7000만원받은 정황드러남.	* 민변 의견서 발표 - '박근혜 최 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 와 수사촉구사항' (누적 조회수 2 만 상회)	*한국외대,숙명여대,한양대,성 균관대,경희대,중앙대,카이스 트,한남대,상명대,조선대,서경 대,국민대,대진대,동덕여대,성 공회대,제주대,충신대,감리교 신학대,서울신학대,인천대시 국선언. *성균관대, 경북대학교수시국선 언.
10.28.	*TV조선, 최순실이 강 남 샘플실에서 대통령 의 옷을 만드는 영상 공개.		*서울대, 서울대로스쿨, 고려대 로스쿨, 연세대, 동국대, 홍익대, 인하대, 서울교대, 서울과기대, 서강대, 세종대전북대, 장로회 신학대, 단국대용인, 가톨릭대, 서울여대, 한국전통문화대, 전 주대, 충남대, 충북대, 서울시립 대, 한신대, 성공회대, 신학생시 국연석회의시국선언. *전남대, 충남대학교수시국선언.
10.29.	*차은택이문체부장관인	*1차 범국민 행동 참가	*1차촛불집회.5만명참가(이하



날 짜	정 국	민 변	시민사회
	사에개입하려고한정황 드러남. *검찰청와대압수수색시도		주최측추산) 한양대로스쿨, 한동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기도대학생협의회, 공주교대, 공주사대,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시국선언.
10.30.	*최순실.귀국. *새누리당지도부.거국중립내각구성건의.		*강원대로스쿨, 전남대로스쿨, 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안동대, 목포대 시국선언.
10.31.	*최순실.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이정현.비박계의원들의 지도부사퇴요구거부. *jtbc.장시호와평창올림픽사이의관련성보도. *검찰.최순실체포.		*포항공과대, 한예종, 인천가톨릭대신학대학, 명지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한양대에리카, 하녹산업기술대, 한남대, 대전대, 서강대로스쿨, 전남대, 경북대, 경북대로스쿨, 동국대경주캠퍼스, 경상대, 경인교대, 순천대, 경기도대학생협의회, 영남대, 한국교원대, 군산대, 호원대, 부산외대, 한국복지대, 동아대시국선언. *광운대, 한신대, 덕성여대, 한양대, 인하대, 부산대, 광주여대, 순천대, 조선대, 목포대, 호남대, 광주대, 동신대, 경상대, 가톨릭대 교수시국선언.
11.01.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특검추진합의. *한겨레.최순실청와대왕래한정황보도. *sbs.최수실공군주력기선정과사드배치, 군인사개입의혹보도. *대통령지지율9.2%로 집계.	*민변성명서발표-'검찰은즉시청와대에대한압수수색을재개하라' *민변논평발표-'청와대는최재경인정수석임명을당장철회하고, 새누리당은야3당의특검법안을조건없이수용하라'	*한국항공대, 울산과학기술원, 단국대천안캠퍼스, 청주교대, 송실대, 동덕여대, 고신대, 원광대, 목원대, 성신여대, 나사렛대시국선언. *원광대, 인천대, 동아대교수시국선언.
11.02.	*박근혜, 신임국무총리김병준내정 *검찰.최순실이상성그룹으로부터거액을받은정황포착. *검찰.안종범긴급체포.	*민변 '비상시국회의' - 시국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성 결의	*가천대, 청주대, 충북대, 서원대, 충청대, 꽃동네대, 우석대, 계명대, 제주대로스쿨, 대구가톨릭대신학대학, 광주가톨릭대, 선문대, 고대세종캠퍼스, 홍익대세종캠퍼스시국선언. *한남대, 서강대, 창원대, 강원대 교수시국선언.
11.03.	*박근혜.2차대국민사과."내가이러려고대통령을했나자괴감들고괴로	*민변성명서발표-'헌법유린현정파괴박근혜대통령은퇴진하라!' *민변논평발표-'검찰은봐주기수사	*강원대, 한국교통대, 동의대, 성균관대(자연과학캠퍼스), 고려대총학생회, 인제대, 전남대여

날 짜	정 국	민 변	시민사회
	위", 검찰조사수용할것이라 밝힘. *대통령 지지율5%로 집계. *최순실 구속 *검찰, 정호성 긴급체포	로 꼬리자르기의 두려리가 되려는가?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적용누락을 비판한다.'	수캠, 대구교대, 부산교대, 광주교대, 제주교대, 한일장신대 신학대학원, 한양대, 전주교대, 대전가톨릭대, 중앙대, 아주대, 동명대, 신라대, 부산여대, 고신대, 울산대, 성결대, 인하대 시국선언. *건국대, 충북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위덕대, 경주대, 서라벌대, 경남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제주교수네트워크, 중앙대, 한양대, 전주교육대학교, 부경대, 경성대, 서원대 교수 시국선언.
11.04.		*민변 논평 발표-'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민변 논평 발표-'지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시기이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라.'	*충북대 로스쿨 시국선언. *성공회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시국선언.
11.05.		*2차 범국민 행동 참가	*2차 촛불집회. 30만명 참가. 경찰의 도로행진금지에 대해 법원에 집행금지가 처분 신청. 인용. *백석대, 상명대, 순천향대, 한국기술교육대 시국선언.
11.06.	*우병우, 검찰출석, 황제조사 논란 *안종범, 박근혜와 재벌총수들의 만남 일정이 기록된 다이어리를 검찰에 제출.		
11.07.	*김무성, 박근혜 탈당 요구.		*부경대, 평택대 시국선언. *서울대, 목원대, 안동대학교 교수 시국선언.
11.08.	*검찰, 차은택 긴급체포 *검찰, 삼성전자, 마사회 압수수색 *박근혜, 정세균 국회의장 회동	*1차 특위 전체회의 *민변 논평 발표-'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극동대 시국선언. *세명대, 신라대, 영남대, 침례신학대 교수 시국선언.
11.09.	*야3당 김병준 총리 거부 *검찰, 이재만 안봉근 자택 등 압수수색	*특위 집행부 회의	배재대, 경남대 시국선언. 고려대 교수 시국선언. 전국 1500여개 단체가 참가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발족
11.10.	* 검찰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공식 발족	*동서대, 한국해양대, 호서대, 창원대, 부산대, 경성대, 동명



날 짜	정 국	민 변	시민사회
		*'대통령의중대범죄와퇴진그리고그 이후헌정질서의검토와오색' 토론회 개최 *민변논평발표-'대통령의중대범죄 행위, 수사를위해서도퇴진이반드시 필요하다.'	대, 한림대, 진주교대, 동아 방송예술대 시국선언. *한국해양대, 한국교원대, 호서 대, 창원대, 부산대, 한림대, 한신 대교수시국선언.
11.11.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 결함	*전국14개지방변회소속변호사3288명.시국선언.'헌정질서와법치주의회복을위한변호사시국선언' *강릉영동대시국선언.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국민대, 이화여대, 강릉원주대학교수시국선언.
11.12.		*3차범국민행동참가 *인권침해감사단.22인의회원참여. 접견대응23건	*3차 촛불집회. 106만 명 참가.
11.14.	*추미애.영수회담제안후 철회. *여야.특검법안합의.	*2차특위전체회의 *민변특위논평발표-'박근혜대통령의7대중범죄는오로지7대수사원칙에 의해서만밝힐수있다.' *민변사법위논평발표-'청와대의사법부길들이기의혹에대한철저한규명을요구한다.'	
11.15.		*민변논평발표-'100만촛불민심을거스르는줄속합의특검법을반대한다!' *민변특위성명발표-'박근혜는100만 촛불이비추국민의뜻에따라즉각퇴진하라' *민변특위논평발표-'대통령의변호인유영하변호사의기자회견문에대한민변의논평-대통령은즉각퇴진하고 적극적으로검찰수사에임하라'	*한국외대, 연세대, 배재대 교수 시국선언.
11.16.		*민변 특위 논평 발표 - '최순실 기소, 뇌물죄가 핵심이다. 대통령을 소환하라.'	
11.17.	*국회, 특검법 통과, 국정조사 의결	*민변 특위 논평 발표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여 수사하라.'	*전주대 교수 시국선언.
11.18.		*민변 특위 카드뉴스 발표 - '꼭 바로 수사하라 - 대통령의 7대 중 범죄를 밝힐 7대 수사원칙'	
11.19.	*청와대.오보바로잡기게시판생성. *김연아,박태환등스포츠스타들에대한압박의혹	*4차 범국민 행동 참가	*4차촛불집회.96만명참가. *퇴진행동.1차와글와글시민평의회'시민이주인이다'개최.

날 짜	정 국	민 변	시민사회
	제기됨.		
11.20.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최순실,안정봉,정호성 3인 기소	*민변 논평 -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 - 중대범죄 혐의 확인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한다 -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11.21.	*김종 문채부차관 구속	*3차특위전체회의 *민변특위발표-'검찰의최순실등3인 수사결과발표에대한민변의견서'	
11.23.	*경향신문,청와대비아그라구매의혹제기. *청와대에서프로포폴과 거의유사한기능을하는 약품을구입한내역보도 됨. *검찰,국민연금공단압수 수색	*민변 특위 성명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검찰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	
11.24.	*검찰, 롯데, SK 압수 수색	*민변 특위 카드뉴스 발표 - '검찰 공소장 어딘가 허전하다.'	
11.26.		*5차범국민행동참가 *박근혜대통령퇴진전국변호사결의대회결합 *인권침해감시단.12인의회원참여. *접견대응40건 *민변특위의견서발표-'박근혜대통령탄핵소추관련검토의견서'	*5차촛불집회.190만명참가. *퇴진행동.2차와글와글시민평의회'광장의분노,시민주권어떻게세울것인가'개최.
11.28.	*박근혜. 검찰의 대면 조사 거부.	*4차 특위 전체 회의	
11.29.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	*민변특위성명발표-'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당은탄핵소추안초안을조속히공개하여국민들에게의견을구하라.' *민변성명발표-'박근혜대통령은즉각사퇴의사를분명히하고,국회는국민의명에따라퇴진및탄핵을위한제반절차를흔들림없이진행하라.'	*한세대 시국선언.
11.30.	*박근혜. 박영수 특검 임명.	*민변 특위 성명 발표 -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총파업 *서울대학생.1500여명동맹휴업. *퇴진행동.1차총파업-시민불복종선언문및대국민참여호소문발표.
12.01.	*야3당탄핵안12/2처리결렬 *특검,윤석열검사영입		*홍익대학교수시국선언. *퇴진행동.국민연금손해배상소송청원인모집기자회견.'국



날 짜	정 국	민 변	시민사회
			민연금손해끼친자들에게책임 을묻는다.'
12.02.	*국회, 탄핵안 12/9 표결 결정	*민변 특위 카드뉴스 발표 - '대 통령 4월 퇴진론의 꿈수 ~4월의 비밀~'	
12.03.	*국회, 대통령 탄핵 소 추안 발의.	*6차 범국민 행동 참가	*6차촛불집회.232만명참가. *경찰추산최대규모촛불집회. *정부수립 이래 사상 최대 규모.
12.04.		*민변 특위 발표 - '국정조사 재 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12.05.	*서울시교육청, 정유라 고등학교 졸업 취소 결 정	*5차특위전체회의 *민변논평발표-'국민의목소리가달 지못하는성역이있어서는안된다.경 찰은청와대인근에서의집회,시위를 보장하라.'	
12.06.	*국정조사1차청문회.재 벌기업총수들대거출석. *재벌총수대다수사실상 청와대의강제모금사실 을인정.	*민변 특위 논평 발표 - '재벌총 수들은 국민의 영원을 외면하지 말 고 진실을 밝혀라.'	*경상대 시국선언.
12.07.	*국회, 국정조사2차청문 회. *김기춘전비서실장.최순 실을몰랐다고진술한후 주식갤러리의누군가에 의해거짓말임이 밝혀져 위증이있음을시인. *고영태.최순실이대통령 연설문을수정한것이맞 다고진술. *청와대.세월호참사당일 오후3시22분경,대통령 이20여분간머리손질을 했다는사실을인정.	*국회에서모이자-국회탄핵결의,박 근혜즉각퇴진촉구기자회견및기자회 견문전달 *민변특위논평발표-'재벌총수들을 3,4차청문회에재소환하여진실을밝 히도록해야한다.'	
12.08.		*박근혜 즉각퇴진 - 응답하라 국 회 비상국민행동' 참가	
12.09.	*국회, 대통령 탄핵소 추안 가결	*민변 논평 발표 - '박근혜 대통 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12.10.		*7차 범국민 행동 민변 집중	*7차 촛불집회. 104만 명 참가.
12.12.		*6차특위전체회의-민변특위카드뉴 스발표 '탄핵의매직넘버'	
12.14.	*국정조사3차청문회. *박영선.최순실과노승일		

날 짜	정 국	민 변	시민사회
	의통화녹음공개.		
12.15.	*국정조사4차청문회. *조한규전세계일보사장. 청와대가대법원장을사 찰했다고폭로	*민변 특위 논평 발표 -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 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12.17.		*8차 범국민 행동 참가	*8차 촛불집회. 77만 명 참 가.
12.19.	*최순실. 첫 재판.	*특위토론회'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 의권한행사의범위에관한헌법적쟁점 및대응방안' 발제:정태호경희법전문교수	
12.21.	*박영수 특검. 수사 개 시.		
12.22.	*탄핵심판1차준비기일. *국정조사5차청문회.(우 병우청문회) *노승일.국정농단노트북 이또있다고증언.	*탄캐스트 1회 발표 - '최순실-안 종범-정호성 재판 방청기'(윤복남 출연)	
12.24.	*특검. 김중, 최순실 등을 소환조사.	*9차 범국민 행동 참가	*9차 촛불집회. 70만 명 참 가.
12.25.	*자로. 세월X 업로드.		
12.26.	*국정조사 6차 청문 회.(구치소 청문회)		
12.27.	*탄핵심판2차준비기일. *새누리당분당.	*7차 특위 전체 회의	
12.28.			*설 합동차례와 떡국나눔
12.29.		*탄캐스트 2회 발표 - '대통령 강 제수사 가능한가'(조수진 출연)	
12.30.	*탄핵심판 3차 준비기 일.		
12.31.		*10차 범국민 행동 참가	*10차촛불집회.110만명참가. *누적연인원1000만명돌파.
2017			
01.01.	*박근혜. 청와대 출입 기자 간담회 개최.		
01.02.	*정유라.덴마크올보르에 서체포됨. *이정현.탈당.	*민변 특위 논평 발표 - '박근혜 대통령, 할 말이 있다면 특검 수사 에 임하고 현재 심판에 출석하라.'	
01.03.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 박근혜 불출석.		
01.05.	*탄핵심판2차변론기일. *박근혜측.촛불시위는국 민의민심을대변하지않 으며대한민국에대한선	*탄캐스트 3회 발표 - '현재 탄핵 결정은 언제?'(이재화, 김영주 출 연)	



날 짜	정 국	민 변	시민사회
	전포고라고주장.		
01.07.		*11차 범국민 행동 참가	*11차 촛불집회. 64만 명 참가.
01.09.	*국정조사7차청문회. *조윤선.청와대블랙리스트인정.	*8차 특위 전체 회의	
01.10.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01.11.		*민변 특위 성명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01.12.	*탄핵심판4차변론기일. *이재용.피의자자격으로 특검출석	*민변성명발표-'삼성이재용을구속 수사하고,범죄수익환수하라.' *탄핵스트4회발표-'청와대공작정치 의전모'(김남근,오지원출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퇴진행동 박근혜 체제 적폐청산 6대 긴급현안 해결 국회대토론회
01.14.		*12차 범국민 행동 참가	*12차 촛불집회. 14만 명 참가.
01.16.	*탄핵심판5차변론기일. 현재.형사재판을준용할 뿐모두따르지는않는다는입장밝힘. *특검.이재용구속영장청구.	*9차 특위 전체 회의	
01.17.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01.18.	*특검.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민변특위성명발표-'법앞에외었다.법치주의확립을위해피의자이재용을구속하라.' 탄핵스트5회발표 '특검중간성적공개'(권영국,류하경출연)	*퇴진행동. 촛불혁명 완수 호소문 발표.
01.19.	*탄핵심판7차변론기일. *법원.이재용구속영장기각.	*민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 기자회견 - "유전무죄, 재벌앞에 무릎꿇은 사법부를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이재용 구속 촉구 법률가 노숙 농성 시작
01.21.	*김기춘, 조윤선. 구속.	*13차범국민행동참가 *민변탄핵버스킹	*13차 촛불집회. 35만 명 참가.
01.23.	*탄핵심판8차변론기일. *대통령측.39명의증인을신청.현재대부분기각. *청와대가자유총연맹의 관제데모를요구한문자가공개됨.	*11차 특위 전체 회의 - 민변 특검 중간평가 쟁점 좌담회 개최 '박근혜 게이트 특검 어디까지 왔는가'	*퇴진행동 주최, 법률가 노숙 농성단 주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영장재청구 촉구 촛불집회 시작

날 짜	정 국	민 변	시민사회
01.24.		*민변 특위 논평 발표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 지휘가 필요하다.'	
01.25.	*탄핵심판9차변론기일. *박한철,3월13일전까지 최종결론내려야한다고 밝힘. *최순실,특검에소환되어 억울하다고통곡.이에특검사무실청소부."염병하네"라고소리지름. *정규재TV,대통령인터뷰공개."이번사태는오래전부터기획되고관리해온것같다."		*퇴진행동 주최, 법률가 노숙 농성단 주관.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규탄 및 영장재청구 촉구 촛불집회 종료.
01.26.		*탄캐스트6회발표 '법원, 특검, 현재의임무'(박정만,오민애출연)	
01.31.			*퇴진행동 주최, 법률가 노숙 농성단 주관.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 주제가 있는 촛불" 시작.
02.01.	*탄핵심판10차변론기일. *대통령측,헌법재판관의 임기를이유로탄핵심판선고기일을미리정하는것은공정성에의문이제기될수있다고문제제기.		
02.02.		*민변특위-민변국회의원간담회 *민변특위성명발표-'재판관임명이 탄핵심판지연의도구가되어서는안된다.-대통령대리인단주장에대한반박' *탄캐스트7회발표-'이런변이있나'(박주민,이재정,이광철출연)	
02.03.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청와대. 거부.		*퇴진행동 주최, 법률가 노숙 농성단 주관.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 주제가 있는 촛불" 종료.
02.04.		*14차범국민행동참가 *이재용구속촉구집회참가	*이재용구속촉구법률가노숙농성종료 *14차촛불집회.42만명참가.
02.06.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밝혀진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의	



날 짜	정 국	민 변	시민사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고발 기자회견	
02.07.	*탄핵심판11차변론기 일. *헌법재판소.변론기일을 22일까지로지정.*2월내 선고불가능해짐.		
02.08.	*박근혜. 특검의 대면 조사 거부.	*민변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 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 출하는 민변 의견서'	
02.09.	*탄핵심판12차변론기 일. *강일원주심재판관.대통 령측의주장에대해추궁. *노승일. 서석구. 변론에 서논쟁.	*민변의견서발표-'박대통령이재벌 들로부터수수한뇌물죄수사관련의견 서' *탄캐스트8회1부발표-'특검과헌재 필독방송'(김종보,윤복남출연)	
02.10.		*탄캐스트 8회 2부 발표 - '박근 혜게이트 흑막의 실체'(김종보, 윤 복남 출연)	*퇴진행동. 대국민 호소문 발표 - '2월 총집중으로 박근 혜 없는 봄을 만들시다.'
02.11.		*15차 범국민 행동 참가	*15차 촛불집회. 80만 명 참가.
02.13.		*12차 특위 전체 회의	
02.14.	*탄핵심판13차변론기 일. *이정미.증인들이잇따라 불출석.증인들을직권으 로취소.불필요한증인신 청모두기각.		
02.16.	*탄핵심판14차변론기 일. *이정미.24일변론종결 할계획을밝힘.대통령측. 반발.	*탄캐스트 9회 발표 - '블랙리스 트의 역사와 진실(조영선 출연)	*퇴진행동 주최, 법률가 노 숙 농성단 주관. 이재용 구속 촉구 철야집회
02.17.	*이재용 구속.	*전국변호사비상시국모임.헌재신속 결정촉구서명및기자회견(1510명연 명) *민변특위논평발표-'피의자이재용 에대한구속결정은지극히온당하다.' *민변특위카드뉴스발표-'영화,드라 마로보는박근혜범죄의재구성'	
02.18.		*16차 범국민 행동 참가	*16차촛불집회.84만명참가. *촛불권리선언을위한시민대토 론개최
02.19.	*특검. 우병우 구속영 장 청구.		
02.20.	*탄핵심판15차변론기	*13차 특위 전체 회의	

날 짜	정 국	민 변	시민사회
	일. *김평우.고성을지르며재 판부에항의.		
02.21.	*국회 법사위. 특검 연 방법안 불발.	*민변 특위 성명 발표 - '황교안 권한대행은 즉각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	
02.22.	*탄핵심판16차변론기 일. *김평우.헌법재판관들에 대한격한언사를쏟아냄. *우병우구속영장기각.	*탄캐스트 10회 1부 발표 - '삼성 공화국의 명암'(최강욱, 김용민 출 연)	*특검 연장을 위한 긴급 시 민행동
02.23.	*특검법 직권 상정 무 산.	*민변특위'중간활동보고및회원토론 회'개최 *탄캐스트10회2부발표-'탄핵심판의 마지막'(최강욱,김용민출연)	*퇴진행동.긴급호소문발표-' 국회의장님!국민의영원을들어 주시기바랍니다.' *퇴진행동.대국민호소문발표 -'조금만더!'
02.25.		*17차 범국민 행동 민변 집중	*17차 촛불집회. 107만 명 참가.
02.26.	*박근혜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 사를 헌법재판소에 전 달. 피신청인 본인의 진 술은 없는 것으로 확정.		
02.27.	*탄핵심판17차변론기 일. *황교안.특검수사기간연 장요청불승인.	*14차특위전체회의 *민변성명발표-'황교안권한대행은 특검연장거부를철회하고,국무총리 직을즉각사퇴하라.'	
02.28.	*특검 수사 종료.	*민변 특위 성명 발표 -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연장법의 직권 상정을 촉구한다.'	
03.01.		*18차범국민행동참가 *탄캐스트11회1부발표-'특검의미래 '(이재화,김도희출연)	*18차 촛불집회. 30만 명 참가.
03.02.		*탄캐스트 11회 2부 발표 - '탄핵 열차는 계속된다'(이재화, 김도희 출연)	
03.03.			*퇴진행동. 호소문 발표. - '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 없는 봄을 맞이합시다!'
03.04.		*19차 범국민 행동 참가	*19차 촛불집회. 105만 명 참가.
03.06.	*특검 수사 결과 발표.	*15차 특위 전체 회의	
03.07.		*민변 특위 논평 발표 -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날 짜	정 국	민 변	시민사회
03.08.	*헌법재판소. 10일에 탄핵심판의 선고할 것을 밝힘. *대통령기록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	*탄핵캐스트 12회 발표 - '박근혜에게 이트 완전정복'(김용민 출연)	
03.10.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민변 성명 발표 -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	
03.11.		*20차 범국민 행동 참가	*20차 촛불집회. 70만명 참가. * 주 최 측 추 산 누 적 인 원 16,581,160명 *2017 촛불권리선언발표
03.13.		*특위 마무리 좌담회 및 해산 회의	
03.17.		*탄핵캐스트 13회 1부 발표 - '탄핵 AND'(강문대, 탁경국 출연)	
03.18.		*탄핵캐스트 13회 2부 발표 - '탄핵 AND'(노승일, 김덕진 출연)	
03.20.		*민변 의견서 발표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5대 수사과제'	
03.21.	*검찰. 박근혜 소환.		
03.25.		*21차 범국민 행동 참가	*21차 촛불집회. 박근혜 구속을 주장. 10만 명 참가.
03.27.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민변 성명 발표 - '법원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03.31.	*박근혜 구속.	*민변 성명 발표 -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우리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